統一研究論叢

第3卷2號 1994

民族統一研究院

目　次

統一硏究論叢　　第3卷 2號 1994

〈기획논문〉 김정일체제와 남북한 관계 전망

김정일체제의 支配理念 …… 全相仁… 1
김정일정권의 經濟政策 전망 …… 朴淳成… 31
김정일정권하의 軍事政策 전망 …… 鄭永泰… 55
김정일체제의 對南政策 전망 …… 全賢俊… 85
김정일체제의 등장과 日·北韓 관계개선 전망 …… 全東震…111
북한의 社會變動 : 제2사회의 형성 전망을 중심으로 …… 徐載鎭…133

〈연구논문〉

북한의 基本權 保障의 제도적 문제점 …… 張明奉…169
사회주의 經濟體制 轉換과 남북한 통합 …… 金瑩允…205
사회주의체제 쇠퇴기의 신좌파의 이론적 좌표 :
　밀리반드, 라클라우 및 무페의 사회변혁이론을 중심으로 … 金聖哲…243

Abstract…… 269

金正日體制의 支配理念

— '우리 식 사회주의'의 민족주의적 성격을 중심으로 —

全 相 仁*

◁目 次▷

Ⅰ. 서 론
Ⅱ. 북한 민족주의의 역사적 연원
1. 북한 사회주의혁명의 민족주의적 토착화
2. 주체사상의 민족주의적 내면화
Ⅲ. 사회주의 이념의 퇴조와 민족주의의 전면화
1. '조선민족제일주의'와 '우리 식 사회주의'
2. '민족대단결'원칙과 민족문화유산 복원사업
Ⅳ. 결론 : 김정일체제하 지배이념으로서의 민족주의

Ⅰ. 서 론

1980년대 말 사회주의권의 붕괴에 의한 세계체계의 대변혁은 1970년대 이후 경제적 침체상태를 지속한 북한체제의 입장에서 볼 때 雪上加霜이었다. 최근 몇년 동안 북한은 아마도 한국전쟁 이후 최대의 시련에 처했음에 틀림없다. 위기 국면을 극복하고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북한은 대외적으로

* 民族統一硏究院 責任硏究員

는 핵개발 카드를 사용했다. 그리고 대내적으로는 최고 권력의 부자세습을 감행했다. 1994년 가을 현재 북한은 적어도 외형적으로 볼 때 지난 10년간의 방황과 위기로 부터 '성공적'으로 벗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일성의 사망 이후 북한에는 김정일에 의한 권력승계가 무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핵문제를 '해결'한 북·미간의 제네바협상도 결과적으로는 탈냉전시대에 북한의 존재 근거를 인정해 주는 꼴이 되었다.

국제사회로 부터 체제유지의 보장을 얻은 가운데 북한은 김정일체제하에서 제2기의 역사를 출범시키고 있다. 객관적으로 볼 때 북한이 당면하고 있는 과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 김정일의 권력기반을 강화하면서 자신의 정통성을 공고화하는 일이며, 둘째는 시급한 민생문제의 해결과 경제발전을 위해 대외적 경제협력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문제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북한은 정치적 지배이념을 재정립하는 것이 매우 시급한 과제로 부상할 것이다. 왜냐하면 한편으로 맑스·레닌주의가 세계사적으로 퇴조하고 김일성 마저 사라진 마당에 그동안 북한을 이념적으로 지탱해 왔던 주체사상이 새로운 변용을 시도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적 개방정책이 자본주의 세계체계와의 관계개선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북한 사회주의의 내용적 본질을 재정비하도록 요구하기 때문이다.

물론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를 표방하는 사회주의는 민족주의와 이론적으로 공존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존사회주의 체제는 모두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의 기본단위를 계급이나 세계가 아닌 민족범주에서 발견한 것이 사실이다. 북한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북한은 정권수립과정에서 민족범주를 사회주의혁명의 수단적 도구로 설정하고 민족주의에 필적하는 정치적 수사를 구사하면서 사회주의혁명의 토착화를 모색했다. 그리고 1950년대 중반 이후 북한은 주체사상을 지배 이데올로기로 제시하면서 계급적 관점과 민족적 입장을 '사회주의적애국주의'의 개념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융합했다.

그러다가 1980년대 중반 이후 북한은 민족적 동기를 전면에 부각시켜 왔다. 이 시기는 김정일에 의한 권력승계의 공고화 과정과 밀접하게 연관

되어 있었으며, 실지로 민족주의의 전면적 제기에는 김정일 자신의 노력이 지대했다. 그리하여 김일성과 김일성의 발언속에는 사회주의의 시련을 민족주의의 강조로 보완하려는 노력이 자주 나타났고, 심지어 계급을 민족의 하위개념으로 인식하여 민족의 이익을 계급의 이해에 선행시키는 경우가 자주 등장하기도 했다. 최근 북한 지배이념의 화두가 '우리 식 사회주의'나 '조선민족제일주의,' '민족대단결'과 '민족문화의 발전·계승' 등으로 대표되는 배경도 바로 사회주의와 민족주의간의 이념적 결속을 지향하는 것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경향은 김정일체제하에서 보다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연구는 김정일체제하 북한의 지배이념을 민족주의의 강화라는 측면에서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다. 서론에 이어 제II장에서는 북한 민족주의의 역사적 연원을 다룰 것인 바, 제1절에서는 사회주의 정권수립 과정에서 부터 한국전쟁 까지 북한 사회주의혁명의 민족주의적 토착화 과정을, 제2절은 한국전쟁 이후 1980년대 중반까지 주체사상의 형성과 발전에 관련하여 '사회주의적애국주의'에 입각한 북한 지배이념의 민족주의적 내면화를 고찰하고자 한다. 제Ⅲ장은 1980년대 중반 이후 주체사상의 이론적 변용과정에서 김일성, 특히 김정일에 의한 민족주의적 동기의 강화 내용을 설명한다. 제1절에서는 '조선민족제일주의' 및 '우리 식 사회주의' 이론의 등장과정을, 그리고 제2절에서는 '민족대단결' 원칙과 민족문화 유산 복원사업의 내용을 분석할 것이다. 제Ⅳ장은 결론으로서 북한이 지배이념으로서 민족주의를 강화할 수 밖에 없는 배경과 그것이 향후 김정일 지배체제하에서 어떻게 계승 확대될 것인가를 고찰한다.

Ⅱ. 북한 민족주의의 역사적 연원

1. 북한 사회주의혁명의 민족주의적 토착화

사회주의정권 수립 초기 북한은 이념적으로 맑스·레닌주의를 지향하고 궁극적으로 사회주의 세계혁명을 기대하면서도, 내용적으로는 일제 식민지 유산의 척결과 한반도 통일을 최우선적 과제로 삼으면서 민족국가라고 하는 정치적 형식의 완성을 추구했다. 해방 이후 북한에서 나타난 민족주의적 성격은 물론 당대의 사회주의 건설이 즉흥적으로 제기한 것은 아니었다. 조선조 멸망을 전후하여 생성되고 일제 식민지 치하에서 그 역량이 축적된 저항적 민족주의 운동이 해방공간에서 표출된 측면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며, 또한 당시 제3세계 일부 신생독립국가에서 자본주의 세계체계와의 단절을 통해 반제국주의 노선을 취하고 자주적 발전노선을 정립하고자 하던 시대적 경향과도 무관하지 않았다.

물론 당시 김일성이 민족주의를 공언했던 것도 아니고 그 자신 그럴만한 처지에 있지도 않았다. 왜냐하면 소련의 북한 점령이라는 외생적 변수와 함께 사회주의 혁명의 大義가 민족주의라는 언술을 원칙적으로 금기시했기 때문이었다. 사실상 김일성은 "민족주의자들에 대한 환상"을 줄곧 경계하는 입장에 서 있었다.[1]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 그는 스스로를 "어떤 다른 나라를 쳐다보는 공산주의자인 것이 아니라 우리 인민에게 의거하고 조선민족과 조선인민을 위하여 싸우는 공산주의자"라고 설명했다.[2]

민족주의와 공산주의자간의 공통분모를 발견하려고 했던 김일성은 공산주의운동에 있어서도 민족애와 애국심은 불가결한 요소라고 인식했다. 김일성은 "공산주의자들이야말로 나라와 민족을 열렬히 사랑하는 참다운 애국자"라고 주장했다.[3]

김일성은 일제시대를 "식민지반봉건사회"로 규정하고 해방 이후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의 수행을 통하여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를 가진 조선민족"의 긍지를 발휘할 것을 강조했다.[4] 곧, "식민지노예

1) 김일성, "새 조선건설과 민족통일건설에 대하여"(각 도당책임일군들앞에서 한 연설), 1945.10.13.「김일성저작집 1」(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79), pp.329~338.
2) 김일성, "해방된 조선은 어느 길로 나갈 것인가"(신의주시군중대회에서 한 연설) 1945.11.27. 윗책, pp.449~458.
3) 김일성, "민족운동가들과 한 담화," 1945.11.5.「김일성저작집 1」, pp.388~393.

근성과 낡은 봉건적 관념"의 철저한 숙청, 그리고 "자주적인 립장"의 견지에 의한 "완전한 민족적독립"의 추구를 통해 "조국의 륭성한 발전과 민족의 무궁한 번영"을 이룩할 것을 주장했던 것이다.[5] 이를 위하여 그는 각 계각층의 "애국적민주력량"이라는 슬로건을 애용했다. 다시 말해 "전민족적리익을 중심에 놓고 모든것을 이에 복종시키는 원칙"하에서 "오직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온 겨레가 정견과 신앙의 차이, 재산과 지식의 유무를 가리지말고 하나로 굳게 뭉쳐 건국사업에 떨쳐나설" 것을 요구한 것이다.

덧붙여 김일성은 "민족산업" 혹은 "민족경제"의 건설과 "민족군대"의 양성, 그리고 "민족문화"의 발전을 자주, 그리고 구체적으로 언급했다.[6] 어떤 의미에서 이것은 해방 직후 북한이 사회주의 혁명 보다는 민족국가 건설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진 것 처럼 보이게 한다. 아니면 최소한 북한이 일국 사회주의혁명을 프롤레타리아 세계혁명에 선행시켰던 것만은 분명하다. 김일성에 의하면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와 민족주의적 노선은 상호 모순적인 것이 아니라 보완적인 공생관계에 놓여있는 것이며, 전세계 노동자계급의 이익은 개별 국가의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민족적 이해의 확대를 위해 노력할 때 가장 잘 실현되는 것이었다. 그는 "진정한 애국주의는 프로

4) 김일성, "해방된 조국에서의 당, 국가 및 무력 건설에 대하여"(군사정치간부들앞에서 한 연설), 1945.8.20.「김일성저작집 1」, pp.250~268.

5) 김일성, "새조선 건설과 공산주의자들의 당면과업"(지방에 파견되는 정치공작원들과 한 담화), 1945.9.20.「김일성저작집 1」, pp.269~279 ; 김일성, "진보적민주주의에 대하여"(평양로농정치학교 학생들앞에서 한 강의)," 1945.10.3.「김일성저작집 1」, pp.280-303.

6) 김일성, "우리 나라에서의 맑스-레닌주의 당건설과 당의 당면과업에 대하여"(북조선공산당 중앙조직위원회창립대회에서 한 보고)," 1945.10.10.「김일성저작집 1」, pp.304~328 ; 김일성, "우리 나라의 민주주의적발전과 완전자주독립을 위하여"(평양시군중대회에서 한 연설),「김일성저작집 2」(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79), pp.220~226 ; 김일성, "민주주의조선림시정부를 세우는 것과 관련하여 모든 정당, 사회단체들은 무엇을 요구할 것인가"(북조선민전산하 정당, 사회단체 열성자대회에서 한 보고),「김일성저작집 3」(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79), pp.304~320 ; 김일성, "조국의 경제토대를 튼튼히 닦기 위하여"(흥남지구인민공장에서 한 연설),「김일성저작집 4」(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79), pp.165~170 ; 김일성, "민족문화유산을 잘 보존하여야 한다"(묘향산 박물관 및 휴양소 일군들과 한 담화),「김일성저작집 5」(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pp.281~286 등을 볼 것.

레타리아국제주의와 분리될수 없으며 부르죠아민족주의와는 근본적으로 상반된다는것을 확신"했다.[7]

1945년 8월, 북한의 최고실력자로 부상한 김일성은 3대 당면 과업으로 建黨과 建國, 및 建軍을 제시했다.[8] 이 가운데 "중앙주권기관" 수립을 목표로 한 건국사업은 1946년 2월에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가 발족하는 것이 그 시발이었다. 그것은 해방 정국에서 출현했던 북한 단독정권의 원형이었고 1948년 9월에 정식으로 수립된 근대적 사회주의 민족국가, 곧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초석이었다. 김일성에 의하면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는 "어떤 외국의 정치적간섭에 의하여 외국으로 부터 수입된 정권형태인것이 아니라 조선인민의 창의에 의하여 우리 민족 자체가 창설한 것"으로, 그것은 "해방된 조선민족이 낳은 가장 사랑하는 아들"로 인식되었다.[9]

그러나 김일성이 주장하는 건국과정에서의 자주성은 비판적으로 수용되어야 한다. 그동안 김일성의 권력장악 과정을 설명하는데는 그동안 북한의 소비에트화를 기도했던 소련의 역할을 강조하는 입장과[10] 김일성 스스로의 노력에 보다 높은 비중을 두는 견해가 제기되어 왔으나,[11] 북한의 국가건설 과정에서 보여진 소련의 영향력이 "핵심적"인 것들 가운데 하나였음은 점차 분명해지고 있다.[12] 사실상 김일성은 소련에 대해서 "피압박민족의 해방운동을 성의껏 도와주는 이웃나라"로 인식했다. 또한 그는 "쏘련과의 친선 강화"를 강조하면서 "이 의로운 벗에게 너무 수고를 끼치지 말고 우리자체의 힘으로 하루속히 새 정권을 세워야"한다고 역설한 바 있다.[13] 이

7) 김일성,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와 조선인민의 투쟁," 1952.4.25. 「김일성저작집 7」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pp.170~182.
8) 김일성, "해방된 조국에서의 당, 국가 및 무력 건설에 대하여," 앞글.
9) 김일성, "8 15 해방 2주년 평양시 기념대회에서 한 보고," 1947.8.14. 「김일성저작집 3」, pp.369~391.
10) Dae-Sook Suh, *Kim Il Sung : The North Korean Leader* ; Robert Scalapino and Chong-sik Lee, *Communism in Korea* 참조.
11) Bruce Cumings, *The Origins of the Korean War I & II* 참조.
12) Hak Soon Paik, 'North Korean State Formation, 1945-1950," Vol. I & II, PhD Dissertation, Univ. of Pennsylvania, 1993 볼 것.
13) 김일성, "새 민주주의국가 건설을 위한 우리의 과업" (평안남도인민정치위원회에서 베푼 환영연에서 한 연설), 1945.10.18. 「김일성저작집 1」, pp.361~364.

는 김일성에 의한 건국 노력이 의지면에서는 자주적이었을지 모르지만 현실적으로는 소련의 도움에 의존하고 있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의 발족을 기점으로 하여 북한은 1947년 초까지 대대적인 '위로 부터의 사회혁명'을 추진했다.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토지개혁이었다. 1946년 3월 5일에 발표된 「북조선토지에 관한 법령」은[14] 기존 봉건적 사회질서의 물적 토대를 와해시키는 신호탄이었다. 이어서 같은 해 6월 24일에는 「북조선 로동자 및 사무원에 대한 로동법령」이, 7월 30일에는 「북조선 남녀평등권에 대한 법령」이, 그리고 8월 10일에는 「산업, 교통운수, 체신, 은행 등의 국유화에 대한 법령」이 각각 공포되었다.[15] 이로써 북한은 기존의 전통적 사회관계를 해체하여 사회주의체제를 지향하는 법적·제도적 기초를 마련했다. 이어서 1948년 9월 8일에 발효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헌법」은 비록 형식적인 것에 불과한 것이었지만 신분과 계급 및 성별의 차이를 불문하는 인민주권 대표원리를 완성시켰다.

반제반봉건사회혁명의 '성공적'인 추진을 바탕으로 하여 김일성은 한반도의 통일을 위한 주체세력임을 자임했다. 그에 의하면 민족통일의 문제는 남한을 '미제국주의'로 부터 해방시키는 것이었다. 김일성은 "미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예속화정책을 반대하며 그것을 철저히 분쇄하기 위해서는 북조선에 창설된 민주기지를 결정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16] 1950년 초에 김일성이 "국토의 완정과 조국의 통일을 위한 투쟁"을 강조할 무렵,[17] 북한의 대남 전쟁준비는 사실상 끝났다. 그러나 김일성의 "조국해방전쟁"이 준비과정에서 부터 전후 복구에 이르기 까지 소련이나 중국을 비롯한 "사회주의형제국"들의 강력한 지원에 의존했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다. 그는 전쟁의 시작에 앞서 스탈린과 모택동의 승인과 지원을 약속받았고, 유엔군의 참전으로 전황이 불리해진 상황에서는

14) 「김일성저작집 2」, pp.101~104.
15) 「김일성저작집 2」, pp.273~279, 327~328, 338~339.
16) 김일성, "우리 나라에서의 맑스-레닌주의 당건설과 당의 당면과업에 대하여"; 김일성, "모든힘을 민주기기의 강화와 조국의 통일독립을 위하여" (북조선로동당 제2차대회에서 한 결론), 1948.3.29. 「김일성저작집 4」, pp.245~260.
17) 김일성, "1950년을 맞이하여 공화국 전체인민들에게 보낸 신년사," 1950.1.1. 「김일성저작집 5」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pp.352~357.

중국 인민지원군의 결정적인 도움으로 回生했던 것이다. 또한 전쟁이 끝난 뒤 복구과정에 참여하고 있던 사회주의 형제국들의 역할을 김일성은 "전세계로동자들의 국제주의적의무"라고 말했다.[18]

1945년의 해방으로 부터 1950－53년의 한국전쟁에 이르기까지 북한 사회주의혁명의 민족주의적 토착화는 제국주의의 배격을 통한 대외적 민족자결권의 확립과 강력한 국가 건설에 의한 대내적 주권의 확보, 그리고 半봉건적 사회구조의 해체에 의한 민족경제의 형성을 지향했다는 점에서 설명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의 민족주의는 민주적 차원으로 발전하지 않았다. 북한의 '인민민주주의혁명'은 사회주의혁명 과정에서 국가가 대내적 정통성의 확립을 위해 일방적으로 실시한 정치적 동원의 양태를 띠었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의 민족주의가 추구한 민족통합의 원칙도 제한적인 수준을 넘지 못했다. 우선 민족범주의 설정에 있어서 김일성은 "각계각층의 애국적민주력량" 결집을 호소하면서 실제로는 "무원칙한 〈대동단결〉"을 지양하면서[19] 농민과 노동자계급을 중심으로 하는 계급적 편향성을 갖고 있었다.

김일성은 또한 해방 전까지 한국을 지배하던 일본과, 해방 이후 남한의 정권수립을 후견하던 미국을 비판하면서 반제국주의적 배타성을 내면화했다. 북한의 민족주의는 제3세계의 저항적 민족주의 속성을 내재한 결과, 민족자주권의 명분으로 국제적 고립을 자초함으로써 민족주의의 대외개방적 성격을 간과했다. 동시에 북한은 소련을 위시한 사회주의권에 대해서는 자주적 원칙을 견지하지 못했다. 북한은 또한 민족통일을 지향하면서도 남한을 征服의 대상으로 간주했다는 점에서 비판되어야 한다. 북한은 민족통일을 위해 사회주의 형제국들의 지원으로 남한의 동족을, 그것도 무력으로 병합하고자 기도함으로써 민족사에 씻을 수 없은 역사적 과오를 범했다.

---

18) 김일성 "5·1절경축연회에서 한 연설," 1954.5.1. 「김일성저작집 8」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pp.382-384.

19) 김일성, "해방된 조국에서의 당, 국가 및 무력 건설에 대하여" ; 김일성, "우리 나라에서의 맑스-레닌주의 당건설과 당의 당면과업에 대하여" ; 김일성, "친일파, 민족반역자에 대한 규정," 1946.3.7. 「김일성저작집 2」, pp.113~114. 이는 당시 이승만이 제시한 "뭉치면 살고 흩으지면 죽는다"는 식의 대동단결 원칙과 대조적이다.

2. 주체사상의 민족주의적 내면화

한국전쟁이 끝난 직후 북한 사회주의정권은 대내외적으로 심각한 위기상황에 직면했다. 첫째로 한국전쟁에서의 '패전'은 김일성에게 정치적 부담이 되었다. 둘째로 전쟁으로 인하여 북한전역은 초토화되었고, 그 결과 인적 물적 자원이 대거 고갈되었다. 셋째, 북한은 '戰犯' 國家로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세계로 부터 철저히 고립되었다. 넷째, 1953년 스탈린 사망 이후에 나타난 사회주의권의 내부적 동요도 북한정권에 대한 유해한 환경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김일성은 이러한 복합적인 위기국면을 오히려 기회로 활용하여 개인적 권력강화와 사회주의 건설에 박차를 가했다.

1950년대에 김일성은 무엇보다도 "사상사업에서 주체확립을 위한 투쟁"에 주력했다.[20] 1955년 말, 김일성은 교조주의와 형식주의의 퇴치를 통한 주체의 확립을 역설했으며,[21] 이어서 1960년대에는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튼튼히 세우기 위한 결정적투쟁이 전개"되었다.[22] 1965년 4월에 김일성은 "사상에서의 주체, 정치에서의 자주, 경제에서의 자립, 국방에서의 자위"를 주장함으로써 주체이론에 대한 체계화를 처음 시도했다.[23] 그리고 1967년 5월에 열린 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15차 전원회의는 "전당을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는데서 결정적인 전환의 계기"가 되었다.[24] 또한 같은 해 7월 6일 김일성이 "전당이 하나의 사상, 당의 주체사상으로 무장하고 이에 기초하여 단결"할 것을 요구함으로서 "주체사상"이라는 말은 최초로 공식화되기에 이르렀다.[25]

---

20) 「조선로동당력사」 p.392.

21) 김일성, "사상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할데 대하여" (당선전선동일군들앞에서 한 연설), 1955. 12.28. 「김일성저작집 9」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pp.467~495.

22) 「조선로동당력사」, p.456.

23) 김일성,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의 사회주의건설과 남조선혁명에 대하여" (인도네시아의 알리 아르함 사회과학원에서 한 강의), 1965.4.14. 「김일성저작집 19」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82), pp.278~329.

24) 「조선로동당력사」, p.432.

주체사상이 1950－60년대 북한 사회주의 발전에 크게 공헌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주체사상을 통하여 북한은 한국전쟁의 폐허로 부터 경제건설의 기초를 마련할 수 있었고, 김일성 유일지배체제를 확립하며 또한 사회주의권 동요의 여파를 차단함과 동시에 중·소분규를 틈타 대외적 자주성을 나름대로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다. 마침내 북한은 1970년에 제5차 당대회를 열고 1950～60년대의 성과를 바탕으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위한 투쟁에 돌입했다.[26] 이때 개정된 조선로동당 규약은 "맑스－레닌주의와 우리나라의 현실에 그를 창조적으로 적용한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을 자기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고 규정하기에 이르렀다.[27] 이어서 1972년에 12월에 공포한「사회주의헌법」역시 "맑스－레닌주의를 우리 나라의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한 조선로동당의 주체사상을 자기 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고 명기했다.

이 무렵 주체사상은 질적으로도 변모하기 시작했다. 1960년대의 이른바 '4개 노선' 중심의 '지도적 원칙'으로 부터 주체사상은 보다 독자적이고 보다 심오한 "사람중심의 철학적 원리"로 격상하게 된 것이다. 특히 김정일의 부상은 주체사상의 양적 확산과 질적 전환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무엇보다 김정일은 '3대혁명소조운동'을 주도하면서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에 앞장섰으며,[28] 1974년 4월 14일에 조선로동당 제5기 제9차 당중앙위원회는 김정일의「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을 전원회의 결의 형식으로 채택하기에 이르렀다.

주체사상의 탈맑스－레닌주의화 혹은 김일성주의화는 1980년 조선로동당 제6차 당대회에서 "맑스－레닌주의의 창조적 적용"이라는 기존의 입장이 포기됨으로써 더욱 뚜렷해졌다. 제6차 당대회는 당규약 개정을 통하여 "조선로동당은 오직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 혁명사상에 의해

25) 김일성, "간부들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며 혁명화하기위한 사업을 강화할데 대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4기 제21차 전원회의에서 한 결론),「김일성저작집 25」(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83), pp.144～185.

26)「조선로동당력사」, p.458.

27) 김일성,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김일성저작집 25」, pp.232～256.

28)「조선로동당력사」, pp.474～475.

지도된다"고 선언했고, 이와 더불어 동대회는 주체사상의 "전면적승리를 …… 시위"하기에 이르렀다.[29] 그 이후 1980년대의 주체사상은 김정일의 손에 의해 "전면적으로 집대성하여 전일적으로 체계화"되는 단계에 접어들었다.[30] 1982년 3월 31일, 김정일은 김일성의 70회 생일에 즈음하여 「주체사상에 대하여」라는 "고전적론문"을 발표했다.[31] 또한 1985년에 「위대한 주체사상 총서」 전 10권이 출간되는 것을 계기로 하여 주체사상은 철학적 원리와 역사이론, 그리고 정책노선과 지침 등을 하나의 체계속에 포함하는 독자적인 사상체계의 형태로 완결되었다.

주체사상이 갖고 있는 민족주의적 요소는 크게 보아 다음의 세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소위 '사회주의적애국주의'의 개념이다. 주체사상은 민족주의가 북한의 사회주의적 발전에 용해될 수 있는 이념적 전환의 기초를 마련하면서 민족주의를 주체에 관한 이론의 하위개념으로 내면화했다. 주체사상이 "사회주의적애국주의"라는 레닌식 개념을 도입한 것은 바로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다. "사회주의적애국주의"는 "사회주의, 공사주의를 지향하는 로동계급과 근로인민의 애국주의이며, 그것은 계급의식과 민족적 자주의식을 결합시키고 자기 계급과 제도에 대한 사랑을 자기 민족과 조국에 대한 사랑과 결합"시키는 것이라고 하여[32] 노동자, 농민을 중심으로 한 계급주의적 세계관을 강하게 반영하고 있다.

반면에 민족주의는 "대내적으로 근로대중의 계급적이익을 떠난 '전민족적리익'을 내세움으로써 로동계급을 비롯한 광범한 근로대중이 자기의 진정한 계급적리익과 민족적리익을 자각할 수 없게"함으로써 "결국 계급적 모순을 은폐하고 로동계급이 자기의 근본리익을 위하여 투쟁할 수 없게" 하는 것으로 비판되었다.[33]

'사회주의적애국주의"에 나타난 계급성은 주체사상이 추구하는 "혁명적군

29) 「조선로동당력사」, p.531.
30) 「조선로동당력사」, p.543.
31) 조선로동당출판사,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문헌집」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pp.8~81.
32) 사회과학출판사, 「정치사전」 (평양 : 사회과학출판사, 1973), pp.600~603.
33) 「정치사전」, pp.430~431 ; 사회과학원철학연구소, 「철학사전」 (평양 : 사회과학출판사, 1985), p.253.

중관점"에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여기서 군중이라 함은 "기본군중 즉 로동자, 농민들" 및 그들의 "동맹자들"을 뜻한다. 따라서 "혁명적군중관점"은 주체사상의 계급론적 기반을 명백히 반영하면서 "사회주의적애국주의"로 이르게 하는 이론적 고리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주의적애국주의" 개념이 주체사상의 계급론적 및 국제주의적 성격을 내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여전히 민족을 자주와 발전의 핵심 단위로 중요시했다. 사실상 주체사상은 계급과 민족을 동렬에 놓고 양자를 공히 '사회적 집단'이라는 의미로 파악하고 있다. 이 가운데 계급은 사회적 구조에 있어서 기본요소이며, 민족은 사회생활의 기본단위라는 입장이다.[34] 북한은 오랫동안 민족의 개념을 독자적으로 정의하지 못하고 언어, 지역, 경제생활, 문화와 심리 등에서 공통성을 가진 역사적으로 형성된 사람들의 공고한 집단이라는 스탈린의 그것을 그대로 답습했다. 그러나 1973년 부터 민족의 구성요소에 "혈통"을 새롭게 추가한 사실은[35] 나름대로 고유하고도 구체적인 민족관을 설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둘째는 사회주의 혁명과 발전의 민족자주적 원칙이다. 북한 주체사상의 지도적 원칙 가운데 핵심은 자주성의 원칙이다. 1955년에 사상에서의 주체가 처음 제기될 무렵 김일성은 "우리 혁명승리의 결정적요인은 우리자체의 힘"이라고 말했으며[36] 1965년에 행한 연설에서 "사상에서의 주체, 정치에서의 자주, 경제에서의 자립, 국방에서의 자위"가 북한 사회주의 혁명의 목표라고 선언했다.[37]

여기서 자주는 정치, 외교 전반에서 완전한 민족자결을 지향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립은 기본적으로 자력갱생 원칙에 의한 민족경제건설을 뜻한다.

34) 「위대한 주체사상 총서 2 : 주체사상의 사회력사원리」(평양 : 사회과학출판사, 1985), p.58.

35) 「정치사전」, p.423.

36) 김일성,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당면과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 제3기 제1차회의에서 한 연설) 1962.10.23. 「김일성저작집 16」(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82), pp.441～495.

37) 김일성, "국가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자주, 자립, 자위의 혁명정신을 더욱 철저히 구현하자"(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4기 제1차회의에서 발표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정강), 1967.12.16. 「김일성저작집 21」(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83), pp.481-548.

또한 자위는 국방에서 구현되는 자주와 자립정신이다. 결국 북한의 이른바 "4개노선"은 주체사상의 지도적 원칙으로서 1960년대 이후 북한의 민족적 사회주의 발전의 길잡이가 되었다.

북한은 이러한 "4개노선"을 발판으로 하여 민족적 자주와 남북통일, 그리고 사회 경제발전 문제에 접근했다. 어떤 의미에서 주체사상이 구현하고자 하는 "4개노선" 정신의 궁극적인 목표가 민족적 자주성의 실천이라고 볼 수 있다. 북한이 집착하는 자주성은 사실상 단순한 지도적 원칙의 문제 때문만이 아니다. 그것은 철학적 원리로서 인간의 본질적 특성일 뿐만 아니라 사회역사 원리로서 역사의 본질적 내용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리하여 북한의 주체사상은 민족의 생명을 자주성로 인식하는 사상으로서 강력한 배타적 내지 저항적 민족주의의 속성을 띨 수 밖에 없었다. 민족통일의 문제 역시 북한의 주체사상은 김일성이 주장한 것 처럼 "조선의 통일은 어디까지나 조선민족의 내부문제"라고 인식했다.[38] 북한은 통일문제를 북한 자체의 자주권 확립과 동일한 차원의 것으로 인식했던 것이다.

주체사상의 민족주의적 요소로 지적할 수 있는 또 한가지는 북한의 지배구조가 한국의 전통적 권위주의를 모방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북한은 형식적으로 사회주의 정치체제임에도 불구하고 주체사상이 설정하는 권력관계는 한국 전통사회의 지배양식과 흡사하다. 이는 주체사상이 유교를 근간으로 한 한국 전래사상에 상당한 맥을 잇고 있다는 것, 소위 "조선의 혁명전통"을 계승하고 있다는 점, "수령론"과 "후계자론"을 중심으로 세습적 왕조체제를 지향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사회정치생명체론"에 의거하여 가족을 메타포로 한 유기체적 지배관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에서 쉽게 확인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북한은 과도기적인 프롤레타리아 독재체제를 거쳐 궁극적인 목표는 공산주의사회의 건설이라고 주장하면서도, 내용적으로는 전통적 권위주의체제에 더욱 가깝다고 말할 수 있다.

주체사상에서 권력관계의 전통적 권위주의가 가장 노골적으로 나타나는 대목은 수령론과 후계자론이다. 1969년에는 수령이 혁명과 건설의 향도인

38) 김일성, "현정세와 우리 당의 과업."

당·정권기관·근로단체들을 지도하는 최고 뇌수라는 혁명적 수령관이 정리되었으며,[39] 후계자론에 의하면 수령에 대한 충성과 그 후계자에 대한 충성은 동일한 것이다. 수령의 후계자는 "수령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해나가는 혁명의 최고지도자"인 것이다. 수령론은 후계자론과 함께 '왕권신수설'에 입각하여 사실상 한국 전통의 전제군주제를 북한에서 부활시켰다고 볼 수 있다. 한편 1980년대에 들어와 김정일이 제시한 '사회정치생명체론'은 유교원리에 입각한 전통적 사회질서 형성을 더욱 더 뚜렷이 복원시키고 있다.[40] 그는 수령과 당, 그리고 인민대중의 상호관계는 혼연일체로서 "유기적이며 전일적인 관계"라고 주장했다. 김정일은 이어서 1986년 7월 15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간부 앞에서 한 담화에서 (소위 「7·15논문」) '사회정치생명체론'을 북한의 새로운 통치모형으로 구체화시켰다.[41] 이것은 내용적으로 볼 때 유교적 가족국가관을 극명하게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곧, 사회정치생명체론은 정치적 생명을 매개로 하여 북한사회 전체를 '사회주의 대가정'으로 만들고자 하는 가족주의적 통치원리를 제시함으로써 유교적 전통과 크게 공명하고 있다.[42]

Ⅲ. 사회주의 이념의 퇴조와 민족주의의 전면화

1. '조선민족제일주의'와 '우리 식 사회주의'

1980년대 후반에 이르러 북한은 한국전쟁 이후 최대의 시련에 직면했

39) 이종석, "조선로동당의 지도이념과 구조 변화에 관한 연구 : 주체사상과 유일지도체계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3), pp.104~105.
40) 조선로동당출판사,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문헌집」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pp.8~81.
41) 김정일, "주체사상 교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조선로동당출판사,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문헌집」, pp.144~169.
42) 스즈끼 마사유끼, "북한의 사회정치생명체론," 박한식 (편), 「북한의 실상과 전망」 (서울 : 동화연구소, 1991), p.244.

다. 우선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내부적 한계과 잇따른 경제적 失政에 따라 북한경제는 1970년대 이후부터 누적된 저성장과 침체의 연장선에서 위기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또한 1985년 고르바초프 집권 이후 소련의 변화와 거기서 연유한 사회주의권의 세계적 종말 분위기는 북한의 국제적 고립을 심화시켰다. 이와 덧붙여 자본주의 체제의 세계적 완성을 목전에 두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세계의 대북한 압력도 가중되었으며, 남한내 일각에서 흡수통일론 혹은 흡수통일 불가피론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1980년대 중반 이후 북한 지도부는 경제적인 측면에 있어서 기존의 정책 노선에 대한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인식했으며, 대외정세를 인식하는데 있어서 "제국주의자들의 반사회주의적공세"를 심각히 우려했다.

가중된 외우내환속에서 북한은 국가의 존속과 김정일 세습체계의 공고화에 최대의 역점을 두면서 주체사상의 틀안에서 "조선민족제일주의"와 "우리 식 사회주의"이론을 개발하여 체제의 수호 및 회생을 시도했다. "조선민족제일주의"와 "우리 식 사회주의"에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논리는 북한 사회주의체제를 매우 방어적인 측면에서 합리화하고 있다는 점이다.[43] 다시 말해 1989년 동구 사회주의체제의 붕괴와 1991년 소연방의 해체는 북한 사회주의를 새롭게 채색할 필요성을 제고시켰던 것이다. 그리고 이들에 의해서 북한의 민족주의는 그 이전의 내면화 상태로 부터 전면화를 모색하게 되었다.

1985년은 민족주의에 대한 북한의 인식이 반전을 기록한 해였다. 이때 부터 북한에서는 김정일의 교시를 인용하여 민족과 민족주의를 해설하는 새로운 논문들이 대거 출판되었다. 먼저 이들은 "민족의 징표"를 정의하는데 있어서 계급론적 입장을 완화하는 대신, 혈연과 언어의 중요성을 크게 부각시켰다. 예컨대 "사람들로 하여금 민족으로 결합하는 공통성에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기본적인 것은 피줄, 언어, 지역의 공통성이며 그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것은 피줄과 언어의 공통성"이라고 보았다.[44] 또한 "자

43) 김성철, 「주체사상의 이론적 변화」, (서울 : 민족통일연구원, 1993), p.70.

44) 리규린,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독창적으로 밝히신 민족의 개념에 대한 리해," 「사회과학」 (1986년 2월호), p.6 ; '정론 : 민족의 징표," 「남조선문제」 (1985년 10월호), p.14 ; 최길산, "우리당이 밝힌 민족문제에 관한 리론" 「남조선문제」

주성을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은 민족국가단위로 진행되며 인민대중의 운명도 민족 및 국가적범위에서 개척되여나간다"는 입장에서 "국경이 있고 민족의 구별이 있으며 사람들이 민족국가를 단위로 하여 살아가는 한 인민대중의 운명은 나라와 민족의 운명과 떼어놓고 생각할수 없다"고 못박았다.[45]

이와 같이 민족에 대한 개념을 새롭게 정의한 다음 북한은 민족적 자부심과 우월감을 과시하고자 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김정일은 1986년 7월 15일, "우리민족제일주의" 혹은 "조선민족제일주의"를 주장했다.[46] 그는 "내가 우리민족제일주의를 주장하는것은 자기민족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정신과 높은 민족적자부심을 가지고 혁명과 건설을 적극적으로 해나가야 한다는것입니다. 자기민족을 깔보고 남을 맹목적으로 숭배하는 사람들은 자기 당과 인민들에게 충실할수 없으며 자기나라 혁명에 대하여 주인다운 태도를 가질수 없읍니다….우리는 언제나 자기나라의 구체적현실에서 출발하여야합니다….우리는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우리 식대로 해나가야 하겠다는 확고한 각오를 가져야 합니다"라고 말했던 것이다.

김정일은 그러나 "우리 민족이 제일이라 하는 것은 결코 다른 민족을 깔보고 자기 민족의 우월성만 내세우라는것이 아닙니다"하고 하여 "조선민족제일주의"의 배타적 성격을 부인하기도 했다. 그는 또한 "우리 공산주의자들이 민족주의자로 될수는 없다"고 말하여 민족주의라는 용어의 직접적인 사용은 여전히 기피했다. 그는 애국주의라는 말을 선호했는 바, "공산주의자들은 참다운 애국주의자인 동시에 참다운 국제주의자"라고 말했던 것이다. 결국 김정일에 의하면 "우리민족제일주의를 주장하는 것은 자기 민족을 귀중히 여기는 정신과 높은 민족적 자부심을 가지고 혁명과 건설을 자주적으로 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동구 사회주의가 붕괴되던 1989년 말에 김정일은 "조선민족제일주의"를 당 중앙위원회에서 행한 한 연설에서 재차 확인했다.[47] 그는 "조선민족

(1986년 2월호) 참조.

45) 리규린,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독창적으로 밝히신 민족의 개념에 대한 리해."

46) 김정일, "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47) 김정일,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을 높이 발양시키자," (당 중앙위 책임일군들 앞에서

제일주의정신은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제도에 사는 긍지와 자부심"이라고 정의하고 북한을 "사회주의모범의 나라"라고 자찬했다. 김정일은 세계에서 북한이 "사회주의를 으뜸가게 세워놓았다는것은 참으로 우리 민족의 크나큰 자랑이 아닐수 없"다고 자부하고 "우리 인민은 사회주의를 자기가 선택한 길을 따라 자체의 힘으로, 자기 식으로 건설한것으로 하여 그에 대하여 남다른 애착을 가집니다"라고 주장했다. 북한은 "오늘 일부 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좌절된후 이 나라들의 경제가 더욱 심한 진통과 위기를 겪고 있는것은 제발로 걸어나가는 자립적경제건설로선을 견지하지 못하고 자본주의시장경제를 도입한 후과"라고 평가했다.[48] "조선민족제일주의"는 그러나 주체사상과 마찬가지로 궁극적으로는 김일성 김정일 지배체제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귀결되었다. 왜냐하면 "우리민족제일주의의 원천력에서 근본핵을 이루는것은 가장 위대한 수령과 지도자를 모신 우리 민족의 긍지와 자부심"이기 때문이다.[49] 다시 말해 "우리 민족이 자기 민족을 세상에서 제일이라고 자랑할수 있는것은 인류가 처음으로 맞이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높이 모시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50] "조선민족제일주의"에 대한 한 방송해설은 "민족의 위대성이 영토의 크기나 인구수에 의해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민족이 모시고 있는 수령의 위대성과 당의 영도의 현명성, 민족이 지닌 지도사상의 위대성과 사회제도의 우월성에 의해 규정되며 여기서도 수령의 위대성이 결정적 요인으로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51] 그 까닭은 "수령은 민족사회 집단의 최고 뇌수이며 단결과 영도의 중심"이기 때문이다.

한편 "우리 식 사회주의"라는 용어는 이미 김정일이 "조선민족제일주의"를 논할 때 등장한 것이나, 김정일이 사회주의 체제의 대변혁을 목격한

한 연설), 1989.12.28. 김정일,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문헌집」, pp.248~273.

48) 김재서,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은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의 공고성과 우월성을 물질적으로 담보하는 정당한 로선," 「경제연구」(1992년 3월호), pp.5~7.

49) 고영환, 「우리민족제일주의론」 (평양 : 평양출판사, 1989), p.138.

50) 김영진, "당의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어나가는것은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을 높이 발양시키기 위한 결정적담보," 「철학연구」(1992년 1월호), pp.19~23.

51) 「평양방송」, 1994.2.1.

다음인 1991년 5월 5일에 발표한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 이후 널리 사용되게 되었다.[52] 이 논문에서 그는 계급을 초월하고 세계변화과는 무관하게, 민족이 사회주의 체제의 가장 으뜸가는 단위임을 분명히 했다. 김정일은 "나라와 민족은 사회력사적으로 형성된 사람들의 공고한 결합체이며 운명공동체"라고 말하고, "혁명과 건설은 나라와 민족을 단위로 하여 진행되며 사회적집단의 리익, 인민대중의 리익도 나라와 민족을 단위로 하여 실현되여 나갑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리하여 "인민대중은 나라와 민족을 떠나서는 자기의 자주적요구를 실현해나갈수 없"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논리적으로 볼 때 "인류력사상 가장 우월한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는 조선민족제일주의의 형성과 발양을 위한 사회적기초로, 그 요인"으로 되는 것이다.[53]

몇달 뒤 김일성은 김정일의 주장으로 부터 한 걸음 더 나아갔다. 김일성은 "민족은 력사적으로 형성되고 발전하여 온 사람들의 공고한 집단이며 사회생활 단위"라는 기존의 입장을 확인하면서도, "개별적계급계층의 사상과 리념을 옹호하고 리익을 실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더 중요한것은 민족공동의 위업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54] 보다 획기적인 부분은 "계급과 계층은 민족의 한 부분이며 어떤 계급과 계층도 민족공동의 리익을 떠나서는 자기의 리익을 실현할수 없"다는 논리하에서 "민족이 있고서야 계급이 있을수 있으며, 민족의 리익이 보장되어야 계급의 리익도 보장될수 있"다고 주장한 대목이다. 이로서 민족은 단순히 혁명과 발전의 기본 단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급에 선행하는 이해관계의 주체라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더욱이 김일성은 같은 맥락에서 "부르조아민족주의"와 "진정한 민족주의"를 구분하기 시작했다. 그는 "원래 민족주의는 민족의 리익을 옹호하는

52) 김정일, "인민대중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 김정일,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문헌집」, p.343.
53) 장석소, "조선민족제일주의형성의 중요 요인," 「철학연구」 (1993년 2월호), pp.12~16.
54) 김일성, "우리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자"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책임일군들과 조국통일 범민족연합 북측대표 성원들과 한 담화) 1991.8.1. 「로동신문」, 1991.8.5.

진보적인 사상으로서 발생"하였으나, "그후 자본주의가 발전하고 부르조아지가 반동적지배계급으로 되면서 자본가계급의 리익을 옹호하는 사상적도구가 되었"다고 말하고, 이런 의미에서 "부르조아민족주의는 참다운 민족주의와 대치되는 사상"이라고 설명했다. 김일성은 "놀고 먹는 자들이" 아닌 한, "정신로동을 하든 육체로동을 하든 자기 민족을 위하여 유익한 일을 하는 사람"은 "참다운 민족주의자가 될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단일민족국가인 우리나라에 있어서 진정한 민족주의는 곧 애국주의"라고 말하고, "참다운 애국자"는 또한 "세계혁명에 충실한 참다운 국제주의자"라고 덧붙였다. 김일성은 "이런 의미에서 나는 공산주의자인 동시에 민족주의자이고 국제주의자"라고까지 말했다.

이처럼 계급성과 국제주의를 초월한 민족주의가 전면에 부상되면서 "조선민족제일주의"에 입각한 "우리 식 사회주의"는 북한이 1980년대 말과 1990년대 초의 대외정세적 위기를 극복하는 이론적 지주가 되었다. 1991년 5월, "우리 식 사회주의의 필승불패"가 선언된 것에 이어서, 1992년 4월에 있었던 헌법개정에서 북한은 주체사상이 맑스 레닌주의를 계승하고 있다는 구절을 아예 삭제함으로써 "우리 식 사회주의"를 더욱 강조했다. 김일성은 또한 "사회주의는 곧 우리인민의 생활이며 생명"이라고 말하면서, 맑스 레닌의 것도 아니고 러시아나 중국의 것도 아닌 "우리나라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강조했던 것이다. 결국 북한은 1980년대 후반 이후 사회주의와 민족주의를 일치시키는 "우리 식 사회주의"를 제시함으로써 북한 체제의 독자성과 자주성을 재확인했던 것이다.

2. '민족대단결' 원칙과 민족문화유산 복원사업

"조선민족제일주의"와 "우리 식 사회주의" 논리에 의한 북한의 민족적 동기 강조는 무엇보다도 "민족대단결"에 의한 통일원칙을 제시하는데서 가장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물론 북한이 그동안 남북관계 개선문제에 관련하여 민족개념을 사용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예컨대 1972년 남북한 7·4공동성명에서 "조국통일 3대원칙"의 하나로 "자주" 및 "평화"와 함

께 "민족대단결"의 원칙을 천명한 바 있으며, 7·4공동성명이 사실상 무력화되고 난 다음 1973년 6월 23일에 김일성은 "고려연방제"를 제의하면서 남북 각계각층 인민과 각 정당 사회 단체들로 구성되는 "대민족회의" 소집을 제안하기도 했다. 남북대화가 중단된 이후 1979년 1월 19일, 박정희 대통령이 "무조건적 당국대화"를 제의했을 때도 북한은 다시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명의로 예의 "전민족회의" 소집을 요구한 바 있다. 또한 1980년에 개최된 제6차 조선로동당대회에서 북한은 "고려민주련방공화국 창립방안"을 제시하면서 통일의 3대 원칙으로서 자주, 평화, 그리고 민족대단결을 재확인하였다.

물론 "대민족회의" 개최에 관한 북한의 제의는 남한에 의해 한번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민족대단결"도 통일 3대 원칙의 하나에 불과하여 민족적 동기 역시 상대적으로 낮은 상태였다. 그러나 1991년 김일성이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책임일군들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북측본부 성원들을 상대로 한 담화에서 부터 "민족대단결"의 비중은 크게 높아졌다. 김일성은 "조국을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통일하는 문제는 우리 민족의 대단결을 떠나서는 생각할수 없다"고 전제하고 "민족대단결은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의 근본전제이며 또한 본질적내용"을 이룬다고 설명하면서, "조국통일위업을 실현하는데서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중요한 것은 우리 민족의 대단결을 이루는것"이라고 부언했다.[55] 이로써 민족대단결은 자주와 평화에 선행하는 통일원칙이 된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1993년 4월 7일,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5차회의는 김일성이 직접 작성하였다는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을 채택하였다.[56] 정무원 총리 姜成山은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전민족대단결강령을 채택할데 대하여"라는 의제와 함께 남한정부에 대한 "4개 요구사항"을 덧붙였다. 그 이후 북한은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을 대남정책의 새로운 기조로 삼고 있으며, 여기에는 역대 "대민족회의"에서 보다 훨씬 강도 높은 민족주의적 修辭가 담겨져 있다. 그리

55) 김일성, "우리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자," 「로동신문」 1991.8.5.
56) 「로동신문」 1993.4.8.

하여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은 "조선민족제일주의," "우리 식 사회주의" 논리의 연장선에서 현단계 북한의 정세관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은 그 전문에서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전민족이 대단결하여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민족의 운명을 우려하는 사람이라면 북에 있건 남에 있건 해외에 있건, 공산주의자이건 민족주의자인건, 무산자이건 유산자이건, 무신론자이건 유신론자이건 모든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 단결"할 것을 요구했다. 그리고 "힘있는 사람은 힘을 내고 지식있는 사람을 지식을 내고 돈있는 사람을 돈을 내여 모두다 나라의 통일과 통일된 조국의 륭성번영을 위하여 특색있는 기여"를 하자고 호소했다. 결국 전민족대단결의 의의는 민족 전체가 지역과 계급, 정견과 신앙을 차이를 초월하여 조국의 통일과 통일조국의 번영을 위해 '무조건 뭉치자'는데서 찾아지고 있다.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의 제1항은 민족대단결의 목표를 밝히고 있다.[57] 전민족대단결의 목표는 무엇보다도 "자주적이고 평화적이며 중립적인 통일국가를 창립"하는 것이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북과 남은 현존하는 두 제도, 두 정부를 그대로 두고 각 당, 각계각층의 모든 민족구성원을 대표할수 있는 범민족통일국가"를 수립하는 연방제이다.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의 제2항은 민족대단결의 이념적 기초에 관한 것이다.[58]

그것은 "민족애와 민족자주정신"으로 설명되고 있는데, "전민족은 각자의 운명을 민족의 운명과 하나로 련결시켜 민족을 열렬히 사랑하고 민족의 자주성을 생명으로 지키려는 하나의 뜻으로 단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하여 "사대주의와 민족허무주의를 배격"하고자 하는 "민족애와 민족자주정신"은 사실상 민족주의 그 자체라고 볼 수 있다. 민족대단결의 원칙은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 제3항의 내용이다.[59] 민족대단결의 원칙은

57) 김창운, "민족단합의 대헌장(1), 자주적인 통일국가창립은 민족대단결의 총적목표" 「로동신문」 1993.4.24.
58) 리대영, "민족단합의 대헌장(2), 전민족대단결의 리념적기초" 「로동신문」 1993.4.26.
59) 조해성, "민족단합의 대헌장(3), 조국통일위업에 모든것을 복종시켜야 한다," 「로동신문」 1993.4.28.

"공존, 공영, 공리를 도모하고 조국통일위업에 모든것을 복종시키는" 것이며 "북과 남은 서로 다른 사상과 리념, 제도의 존재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서로 침해하지 말고 함께 진보와 번영을 누려가야" 할 뿐 아니라 "지역적, 계급적 리익에 앞서 전민족의 리익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의 제4항 부터 제10항까지는 민족대단결의 方途를 보다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제4항은 "동족사이에 분렬과 대결을 조장시키는 일체 정쟁을 중지"할 것을,[60] 제5항은 "북침과 남침, 승공과 적화의 위구를 다같이 가시고 서로 신뢰하고 단합"할 것을,[61] 제6항은 "민주주의를 귀중히 여기며 주의주장이 다르다고 하여 배척하지 말고 조국통일의 길에서 함께 손잡고 나가야" 함을,[62] 제7장은 "개인과 단체가 소유한 물질적, 정신적 재부를 보호"하여 "그것을 민족대단결을 도모하는데 리롭게 리용하는 것을 장려"할 필요성을,[63] 제8항은 "접촉, 래왕, 대화를 통하여 전민족이 서로 리해하고 신뢰하며 단합"할 것을,[64] 그리고 제9항은 "조국통일을 위한 길에서 북과 남, 해외의 전민족이 서로 련대성을 강화"할 것을,[65] 끝으로 제10항은 "민족대단결과 조국통일위업에 공헌한 사람들을 높이 평가"할 것을[66] 각각 주장했다.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의 발표 이후 북한은 민족주의적 정서의 제고

60) 리현도, "민족단합의 대헌장(4), 동족끼리 정쟁을 중지하고 단결해야 한다" 「로동신문」 1993.4.30. 참조.

61) 엄일규, "민족단합의 대헌장(5), 민족의 화합과 신뢰를 도모하기 위한 지침" 「로동신문」 1993.5.2. 참조.

62) 리형진, "민족단합의 대헌장(6), 전민족을 애국투쟁으로 불러일으키는 위대한 기치," 「로동신문」 1993.5.4. 참조.

63) 류 광, "민족단합의 대헌장(7), 누구에게나 접수될수 있는 민족단합의 기치," 「로동신문」 1993.5.6. 참조.

64) 송철영, "민족단합의 대헌장(8), 폭넓은 대화를 마련하기 위한 강령적지침," 「로동신문」 1993.5.8. 참조.

65) 호영길, "민족단합의 대헌장(9), 민족단합을 위한 획기적인 방도," 「로동신문」 1993.5.10. 참조.

66) 김창운, "민족단합의 대헌장(10), 전민족을 폭넓은 단합의 길로 떠미는 추동력," 「로동신문」 1993.5.12. 참조.

를 통해 주민들에 대한 정치사상적 통제를 도모하는 한편,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민족적 동기를 전례없이 강화하고 있다. 예를 들어 북한은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이 나온 직후인 1993년 4월 10일에 평양시 군중지지대회를 개최한 것에 이어 각 시 도별 군중지지대회를 열었으며, 당 정 고위인물과 각종 사회단체들을 동원하여 이에 대한 지지를 확산시켰다. 또한 4월 12일에는 이 강령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공식문서로 배포하였고, 4월 24일에는 楊亨燮 최고인민회의 의장 명의로 남한의 정부 당국자, 정당 대표자, 재야단체 등에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의 실천을 위한 "7천만 겨레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발송한 바 있다.

조국통일과 관련하여 민족대단결 원칙을 전례없이 강조하고 있는 것과 더불어 북한은 민족문화 유산의 계승 발전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북한은 정권수립 당시 사회주의혁명의 토착화를 위해 민족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는 했다. 그러나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의 추진과 다른 사회주의국가와의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연대성을 위해 구시대와의 단절은 사실상 불가피했고 따라서 민족문화가 크게 부각될 수 있는 처지를 확보하지 못했다. 1950년대 중반부터 주체사상이 전면적으로 등장하면서 민족전통과 민족문화가 다소 강조되기는 했으나, 김일성 유일지배체계가 확립되기 시작한 1960년대 이후 개인우상화가 고조되면서 민족문화에 대한 관심은 다시 상대적으로 둔화되었다.[67]

그러나 최근에 들어와 북한은 "조선민족제일주의"와 "우리 식 사회주의"의 기치 아래 민족문화의 복원사업에 열중하고 있다. 보기로 1992년 5월, 김일성은 황해도 개풍군에 있는 고려태조 왕건의 무덤을 방문하고 "왕건이 우리 나라의 첫 통일국가를 세운 사람"이라고 말하고 왕릉의 증축공사를 지시했다. 김정일 역시 이 왕건왕릉의 改建에 깊이 간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공사는 1994년 1월 31일, 왕건의 생일 1117돌을 기념하여 완성되었다.[68] 왕건왕릉의 개건식에서 개성시인민위원회 위원장 림수만은

67) 이종석, "단군왕릉 발굴과 북한의 민족주의," 「통일한국」 (1994년 4월호), pp.68~71.

68) 「로동신문」 1994.2.1.

"고려태조 왕건왕릉이 개건된것은 단군이 고조선을 세워 우리 민족이 국가시대, 문명시대에 들어선 이후 동방의 강성대국 고구려와 발해를 이어 첫 통일국가인 고려에 이르는 민족사의 전통을 후손만대에 물려줄수 있는 또 하나의 귀중한 력사적 문화재보를 마련한것"이라고 말했다.

림수만의 개건사에서 알 수 있는 것 처럼 북한은 한반도에 존재했던 국가들 가운데 고조선과 고구려, 발해, 고려 등에 높은 점수를 주고 있다. 왕건왕릉 개건에 앞서 북한은 1993년 5월에 고구려 시조 동명왕릉의 증축공사도 완료하였으며,[69] 특히 고구려는 "우리 나라 력사에서 우리 민족이 가장 강하였던 시기"로서, "근 1,000년을 헤아리는 자기의 력사에서 수십차례의 외세의 침공을 당했으마 그때마다 불굴의 투지를 가지고 싸움으로써 민족적자주권을 영예롭게 고수"한 것으로 높이 평가되었다.[70] 또한 1992년 5월에는 발해유적 발굴조사사업을 연해주에서 대대적으로 벌인 바도 있다.

북한이 전통문화의 유산을 복원 발전시키는 노력을 경주하는데 있어서 가장 주목할 만 일은 고조선의 단군왕릉 발견과 檀君實在說의 주장이다. 북한은 우리 민족의 유구성을 입증하는 증거로서 단군신화를 말해왔지만 단군을 어디까지나 신화속의 인물로 보았을 뿐만 아니라 단군조선과 단군은 봉건사가나 민족주의사가에 의해 실재한 고대국가, 실재한 인물처럼 왜곡 과장되었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71] 그런데 북한은 1993년 9월 28일 "단군의 유골과 유물"이 출토되었다고 발표하고 이어 개천전을 하루 앞둔 10월 2일, 사회과학원은 "단군릉 발굴보고"를 발표했다. 그리고 「로동신문」은 사설을 통해 단군 유골 및 유물의 발견은 평양이 "조선민족의 발상지이며 우리 민족의 국가형성과 발전의 중심지였다"는 사실을 뜻하는 것이라고 특별히 강조하고, 모든 당원과 근로자들이 "조선민족제일주의"를 깊이 간직하고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72] 또한 1993년 10

69) 「로동신문」 1993.5.30.

70) 최창빈, "고구려는 대외관계에서 시종일관 자주권을 고수한 나라," 「력사과학」 (1993년 1월호), pp.40~46.

71) 사회과학원 력사연구소, 「력사사전 1」, (평양 : 사회과학출판사, 1971), pp.472-473.

월 12－13일, 평양인민대학습당에서는 단군릉 발굴결과에 대한 학술대회가 열렸다.

북한 사회과학원의 단군릉 발굴 보고문에 따르면,[73] "종전의 신화적, 전설적 인물로 간주되어온 단군이 실재한 인물이었다는것이 과학적으로 밝혀졌으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실지로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를 가진 동방의 선진문명국이었다는것이 명백해졌다"고 한다. 평양시 강동군 강동읍의 서북방 대박산 동남쪽 경사면에서 발견된 단군릉에는 단군과 단군부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86개의 뼈가 출토되었으며, 남자뼈에 대한 연대측정의 결과 지금부터 5천 11년전의 것이라는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었다고 했다. 그리고 단군은 "평양에 수도를 정하고 동방에서 처음으로 조선 곧 고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우는, 실로 우리 민족사에서 하나의 획기적인 사변"을 이룩한 것으로 미화되었다. 보고서는 결론적으로 단군유골의 출토를 계기로 하여 "단군의 후예로서의 우리 민족의 긍지와 자부심은 더욱더 높아"짐에 따라 "북과 남, 해외의 모든 동포들은 같은 민족이라는 물보다 진한 피의 동질성을 우선시 하면서 분단의 비극을 조선민족의 넋, 민족의 폭넓은 도량으로 끝장내는데 중요한 기여"를 하자고 선동했다.

단군릉 발굴을 즈음하여 열린 북한 사회과학원의 학술대회 역시 단군실재설을 통해 고조선의 도읍지가 평양이었다는 사실을 밝히고, 단군의 후예로서의 단일민족이 민족대단결을 이룩하여 조국통일을 앞당기자는 주장으로 일관했다. 예컨대 사회과학원의 박진욱은 단군의 유골이 발견된 의의는 "단군이 죽은 것과 따라서 그가 도읍한 것이 평양이었다는 것이 밝혀진데 있다"고 주장하고 "우리 혁명의 수도 평양의 유서깊은 력사"를 자랑했다.[74] 김일성대학의 현명오 역시 "과거 사회에서 왕들의 무덤을 수도 부근에 쓰는것이 대체로 하나의 관례"라고 지적하면서 "강동의 단군릉이 절대적인 단군의 무덤이라고 확정"했다.[75] 그리고 사회과학원의 전영률은 "단군 및

72) 「로동신문」 사설, "당과 수령의 령도를 받들고 유구한 민족사를 빛내어 나가자," 1993.10.4.

73) 북한문제조사연구소, 「북한의 단군릉 발굴관련자료－사회과학원 보고문 및 학술논문」 (서울 : 북한문제조사연구소, 1993).

74) 박진욱, "단군릉 발굴 정형에 대하여," 윗책, pp.26～33.

수도 문제에서 얻은 성과"를 통해 "단군은 조선민족의 원시조이고 오늘의 조선민족은 그의 후예라는 인식"하에서 7천만 동포가 "민족대단결의 기치 아래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로 나설 것을 강조했다.[76]

한편, 북한은 1993년 12월 9~11일,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6차회의를 열고 "민족문화 유산을 옳게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을 더욱 개선 강화할데 대하여"라는 결의를 채택했다. 당 중앙위원회 비서 김기남은 보고를 통해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이 민족국가를 단위로 하여 벌어지고 있는 우리시대의 력사적조건에서 민족문제는 인민대중의 운명을 좌우하는 공동문제의 하나로 제기되고 있"다고 전제하고, "민족에 대한 립장은 민족유산에 대한 립장에서 중요하게 표현되며 민족문화 유산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은 곧 민족적자부심과 민족제일주의의 중요한 표징"이라고 주장했다.[77] 그는 "계급과 계층은 민족의 한 부분"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진정한 공산주의자는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참다운 애국자"라고 덧붙였다.

김기남은 이어서 "남조선위정자들"이 "신라정통설을 유포시키면서 민족문화의 이질성을 억지로 날조 선전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북과 남 사이의 판이한 대결을 이루고 있는 현 실태는 민족문화 유산에 대한 태도가 곧 애국자와 매국자를 가르는 시금석"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고조선중심의 고대사와 고구려중심의 중세사체계가 확립"됨으로써 북한 지역에 민족사 정통성의 중심이 있음을 강력히 시사했다. 그는 특히 단군릉 발굴을 통해 "조선사람의 기원문제, 우리 민족의 시원문제가 빛나는 해명을 보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산수수려한 평양은 인류의 발상지로, 민족문화의 중심지로 조선민족의 성지로 온세상에 이름떨치게 되"었다고 자랑했다

그는 "민족문화 유산은 반드시 그것이 창조되어온 민족의 발전력사와

75) 현명오, "첫 문명국가인 고조선의 수도 단군의 도읍지는 바로 평양이었다," 윗책, pp. 68~72.

76) 전영률, "김일성의 단군 및 고조선과 관련한 교시는 력사연구에서 새로운 전환의 계기를 열어 놓은 강력한 지침," 윗책, pp.17~25.

77) 허문영, 「1993년 12월 당 중앙위 전원회의 및 최고인민회의 결과분석」 (서울 : 민족통일연구원), 부록 2, pp.32-56.

연관시켜 보면서 그속에 있는 진보적이며 인민적인 것을 정확히 가려내고 주체적인 립장에서 옳게 계승 발전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민족적 형식에 사회주의적내용을 담아야"하는 "사회주의민족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다시 말해 "문화건설에서 복고주의와 민족허무주의적 패난을 다같이 배격하고 주체성의 원칙과 노동계급성의 원칙, 역사주의적원칙을 철저히 구현"하자고 요구했던 것이다. 그에 의하면 "민족문화 유산을 옳게 계승 발전시키는 분야에서도 사회주의를 지키면 승리이고 버리면 죽음"이라는 것이며, 따라서 민족문화에 대한 문제를 "단순히 학술상의 문제이거나 실무적인 문제가 아니라 자주시대의 기본 요구와 민족자주노선과 관련된 중대한 정치적 문제"로 비약시키고 있는 것이다.

Ⅳ. 결론 : 김정일체제하 지배이념으로서의 민족주의

김일성 생전의 말기, 그리고 김정일 후계체계의 공고화기에 크게 강조되어온 북한의 민족주의는 김일성 사후 김정일에 의한 권력승계가 착실히 진행되고 있는 시점으로 이어지고 있다. 사실상 김일성 사망 이후 북한의 김정일 정권이 취한 가장 가시적인 업적 가운데 하나가 최근 단군릉의 완공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민족주의의 부각 역시 김일성으로 부터 김정일로 승계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김정일치하에서 민족주의의 전면화는 더욱 더 뚜렷해질 전망이다.

최근 북한이 전면화하고 있는 민족주의 혹은 민족적 동기의 강화 배경 및 의도는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다. 무엇보다 우선 그것은 북한이 현재 처하고 있는 체제적 위기를 반영하는 것이다. 가중되는 경제적 침체와 사회주의권의 몰락에 따른 국제적 고립의 심화는 북한으로 하여금 방어적 입장에서 주체사상의 새로운 이론적 변신을 모색하게 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조선민족제일주의"에 입각한 "우리 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강조함으로써 북한은 현존사회주의체제의 범세계적 붕괴현상에 대응하고,

"전민족대단결" 원칙을 통해 남한에 의한 소위 '흡수통일론'을 사전에 차단하자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내우외환속에서 김정일 세습체제의 안정적 구축을 위해서도 북한은 민족문화의 전통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북한이 작금에 민족적 동기를 강조하는데는 보다 시급히 당면한 현안들에 대처하자는 전술적 목적도 연관되어 있을 것이다. 예컨대 북한의 핵개발에 대한 국제적 의혹을 호도하고 그것을 민족내부의 문제로 전환시키고자 하는 의도도 결코 배제할 수 없다. 또한 경제적 失政에 따른 주민의 불만을 전통문화 계승에 따른 민족적 긍지로 무마할 필요성도 느꼈을 것이다. 아울러 북·미간 제네바 협상 타결을 통하여 북한 핵문제가 '해결'된 이후 경제적 개혁과 개방에 대비하여 남한 및 해외교포 자본을 도입할 목적으로 민족대단결을 주장할 수도 있을 것이며, 특히 대외개방 과정에서 파생될 수 있는 외부사조의 침투를 민족주의적 정서를 통해 사전에 예방하자는 고려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이 현재 시도하고 있는 민족주의의 전면화가 보다 점증적이고도 적극적인 측면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필요도 있다. 우선 민족적 동기의 강화가 추진되기 시작한 것이 지금까지 10년에 가까울 정도로 나름대로의 장기적 일관성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그것을 현 국면의 타개를 위한 전략적이고도 일시적인 미봉책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런 점에서 1993년 4월에 제시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은 1950년대 전쟁전략의 실패 이후 북한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추구해 온 남한에 대한 패권적 혁명전략을 수정하는 대신, 남한과의 현상유지적 경쟁전략으로 선회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북한은 차제에 기존(혹은 현존) 사회주의와의 이론적 결별을 통한 "우리 식 사회주의"를 지향함으로써 민족주의에 입각한 통치이념을 적극적으로 형성해가는 과정에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북한은 그동안 주체사상을 전개하면서 그것의 탈맑스·레닌주의화를 꾸준히 진행시켜 왔던 바, 민족주의를 통해 사회주의와 가장 친화력이 강한 이념적 모색을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니면 주체사상에 내재되어 있던 기존의 민족

주의 노선을 표면화, 활성화함으로써 북한의 지배 이데올로기를 계급축으로 부터 민족중심으로 전이시키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더군다나 이제 북한으로서는 김일성 없는 김일성주의를 지속시켜야 할 입장이다. 따라서 민족주의의 강조는 주체사상의 지속을 위해서도 필요불가결한 요소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이 김일성 사후에도 민족주의를 강화할 필요성은 다음과 같은 것들에서 찾아질 수 있다. 첫째, 김정일체제의 공고화를 위하여 카리스마의 제도화가 전통적 지배의 정당성 구축을 중심으로 실현될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카리스마는 혁명적이고 一回的이며 불안정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 카리스마의 승계는 불가피하게 제도화 혹은 일상화의 틀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데, 북한의 경우 전통적 지배양식으로의 복귀는 민족주의의 틀안에서 김정일의 권력세습을 용이하게 하는 변수로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에서 김정일의 정치적 정통성은 민족주의적 정서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에 크게 의존할 것이다.

둘째, 김정일체제하 북한은 비록 방법과 폭 및 시기의 문제를 미정으로 남기고 있기는 하지만, 경제적 회생을 위해 일정한 개혁과 개방을 목전에 두고 있다. 개혁과 개방은 본질적인 측면에서 지금까지의 폐쇄적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수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기존의 경제운용 원칙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적 형식논리가 필요했다고 볼 수 있다. 이때 민족주의는 북한 지도부의 자기변신을 합리화할 수 있는 준거틀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제3세계에 산업화 과정에서 흔히 나타나는 것 처럼 경제발전을 위한 견인차로서의 민족주의를 북한이 재차 활성화하려는 시도일 수도 있는 것이다. 이를 경우 북한의 민족주의가 개방형 민족주의로 연결될 소지가 엿보이기도 한다.

빈 면

김정일정권의 경제정책 전망

朴 淳 成*

◁目 次▷

Ⅰ. 경제의 위기상황과 전망의 문제의식
Ⅱ. 김일성정권 말기의 경제정책 변화
1. 상황판단과 전략적 방침
2. 성장전략 및 자원배분원리
3. 경제조직 및 경제관리
4. 정치적·이념적 통제 강화
Ⅲ. 김정일정권 하의 개혁·개방 전망
1. 김정일노선과 김일성노선
2. 개혁·개방의 장래
3. 비판으로서의 전망
Ⅳ. 맺는 말

Ⅰ. 경제의 위기상황과 전망의 문제의식[1)]

북한의 경제체제는 현재 모순적 상황에 놓여있다. 1990년대 초부터 본

* 民族統一硏究院 責任硏究員

** 필자는 논문을 미리 읽고 도움을 주신 민족통일연구원의 최수영박사께 감사드린다.

1) 의학에서 처음 사용되었던 '위기'라는 용어는 그 어원에서 이미 탈출가능성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기의 극복이 체제의 유지로 귀결될 것인가 아닌가는 개별 체제의 대응에 달려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전망은 당연히 위기의 현황과 체제의 대응, 그리고 그에 따른 위기상황의 발전과 해소 가능성을 분석의 주요대상으로 한다.

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경제적 침체를 탈피하기 위하여 체제개혁과 함께 개방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는 당위의 불가피성과 개혁·개방이 자립적 민족경제건설이라는 북한식 사회주의경제체제의 근본원리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당위의 불가능성이 북한의 경제체제 자체를 막다른 지점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경제체제가 처해 있는 모순적 상황은 북한 지도부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정책적 딜레마로서 작용한다. 동구사회주의권의 급속한 체제이행의 역사 및 중국의 개혁·개방을 통한 점진적 체제전환의 경험은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 노선의 현재형으로서의 '우리식 사회주의 건설 노선'과 경제회복을 위한 '개혁·개방노선'이 현실적으로 양립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줌으로써, 북한 지도부가 경제정책 및 사회체제운영전략에 있어서 일종의 선택불가능 상태에 빠져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한다.

역사적 정통성을 카리스마 형성에 적절히 이용할 수 있었던 시대가 끝나고, 이제 북한의 위정자는 새로운 방법에 의해 자신의 정권에 대하여 정통성을 부여할 수 있어야 한다. 물론 김정일을 정점으로 한 북한의 지도부가 정통성과 관련하여 당장 어떠한 도전을 받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외부에서 판단되고 있듯이 경제침체가 지속·심화되어 경제적 위기상황으로 전화된다면, 현정권은 정권차원에서의 정통성 뿐만 아니라, 체제 자체의 정당화 문제에서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반면, 예상되는 위기상황으로 몰리지 않기 위하여 북한이 선택할 수 있는 정책은 매우 제한되어 있다. 개혁·개방이라고 불리우는 정책 역시 현재의 북한에게는 체제위협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판단된다. 80년대 초반의 개혁·개방에 대한 청사진은 80년대 말 동구의 사회주의체제 붕괴를 거치면서 더 이상 실용성이 있는 대안으로 인식되지 않고 있다. 북한은 심지어 중국식 개혁·개방정책조차 체제유지에 미칠 영향에 있어서 의심이 가는 경제발전전략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같다.

결국 북한 지도부의 딜레마는, 정권의 정통성 유지 및 체제의 정당화를 위하여 새로운 경제발전전략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선택되어야만 할 경제정책이 체제의 근본원리와 배치된다는 사실에 기인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

을 고려할 때, 김정일정권의 경제정책은 선택의 폭에 있어서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간단히 말한다면, 김정일정권의 경제정책은 최근의 역사적 경험을 통해 실현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사회주의체제유지와 경제발전의 동시실현'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달리 말해, 체제유지와 개혁·개방간의 적절한, 그러나 존재불가능이 이미 증명된 것처럼 보이는, 균형점을 찾아내는 것이 김정일정권의 경제정책 결정에 있어서 최대의 과제인 것이다.[2] 본 논문은 기본적으로 이러한 시각에 기초하여 김정일정권의 경제정책을 전망해 보고자 한다.

그러나 북한 사회의 내적 운동원리와 이에 기초한 체제유지 문제에 중점을 두는 분석틀은 두개의 다른 시각에 의해 보충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는 북한 현정권의 경제정책을 남북한관계를 염두에 두고 분석하는 시각이다. 북한은 결코 세계체제에 독자적인 개별구성원으로 참여하고 있지 않으며, 남한이라는 적대적 상호의존관계에 있는 태생적 대립물을 매개로 세계와 관계를 맺고 있다. 또한 남한의 경제적 성장과 정치·사회적 안정은 북한에게는 일종의 존재위협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즉, 남북한간의 적대적이고 상호부정적인 의존관계로 인하여, 북한은 남한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자신의 모든 정책들을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다. 특히 80년대 말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반도 상황이 남한의 힘의 우위에 기초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상황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북한의 경제정책은 반드시 남북한관계와 점점 더 영향력이 커질 남한의 대북한정책에 따라 결정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김정일정권의

2) 엄밀하게 따져본다면 체제유지와 개혁·개방 간의 균형이란 다음을 의미한다. 북한경제의 자생력 회복과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개혁·개방이 불가피하나, 체제유지를 위해서는 개혁·개방이 적절한 수준에서 통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체제유지를 위한 경제력 회복과 경제발전의 수준을 결정하고 그 수준에 맞추어 개혁·개방의 정도를 결정하는 한편, 개혁·개방의 정도가 그 자체로서 뿐만 아니라 경제성장에 따라 미치는 영향에 의해 체제변화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는 선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볼 때, 체제유지와 개혁·개방의 균형점을 찾아내기 위하여는 다양한 변인간의 복잡한 관계를 동태적으로 분석하여야 할 것이다.

경제정책 전망을 남북관계와 남한의 대북한정책 및 통일정책과 관련시켜 분석하려고 노력할 것이다.[3)]

둘째는 북한의 경제정책 변화를 '체제이행'이라는 세계사적 추세에서 바라보는 시각이다. 북한은 국가사회주의경제체제의 자본주의경제체제로의 이행이라는 역사적 추세의 마지막 단계에 놓여있는 국가인지도 모른다. 사실 북한의 경제정책 변화는 이러한 이행의 관점에서 면밀히 분석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는 북한의 변화를 세계체제의 변화와 관계짓는 일인 동시에, 분단체제 극복의 방향성을 예측할 수 있게 하는 연구작업이기 때문이다.

이상의 문제의식에서 본 논문은 김정일정권의 경제정책 전망을 다음과 같은 순서로 개진하고자 한다. 먼저 김일성정권 하에서 이미 나타나기 시작한 북한 경제정책의 변화를 검토할 것이다. 이는 김정일정권의 경제정책을 전망하기 위한 회고 및 현황파악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경제정책 변화의 방향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김정일노선의 김일성노선과의 연속성과 차별성을 검토한 후, 김정일정권의 경제정책을 전망하고 평가한다. 글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위에서 제시된 세가지 문제(북한체제의 유지 가능성, 남북관계 전망, 북한체제의 이행)에 대하여 간단히 검토할 것이다.

II. 김일성정권 말기의 경제정책 변화

1. 상황판단과 전략적 방침

제3차 7개년계획…기간에 이전소련과 동구라파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좌절되고 세계 제국주의와 반동세력의 반사회주의적 공세는 유례없이 격화되었다.

3) 이 점은 또한 북한에 대한 연구가 단순히 객관적 대상물에 대한 연구의 차원을 넘어, 통일을 전제로 한 주체와 객체의 보다 복잡한 대립적 의존관계에 기초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하고 있다.

…90년대에 들어서면서 연이어 일어난 엄중한 국제적 사변들과 복잡한 사태들은…우리의 경제건설에 큰 피해를 주었을 뿐 아니라 전반적 경제발전의 속도와 균형을 조절할 수 없게 하였으며 제3차 7개년 계획을 원래 예견한대로 수행할 수 없게 하였다.…우리당은…앞으로 2, 3년간을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완충기로 하고 이 기간에 농업제일주의, 경공업제일주의, 무역제일주의로 나갈데 대한 전략적 방침을 제시하였다.[4]

북한의 당중앙위원회 제6기 제21차 전원회의(1993.12.8)에서 발표된 조선로동당의 사회주의경제건설에 대한 현황분석과 정책방침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당중앙위원회는 제3차 7개년계획(1987~93)의 좌절을 인정하고, 그 원인을 세계적 정세파동에 따른 대외경제관계에서의 변화에서 찾고 있다. 둘째, 변화된 국제정세 하에서 경제적 좌절을 극복하기 위하여 3년간의 경제건설의 완충기를 설정하고,[5] 이 기간동안 농업제일주의, 경공업제일주의, 무역제일주의라는 전략적 방침에 기초해 경제정책을 수행한다.

김정일정권의 경제정책을 전망하기 위한 기초작업으로서, 당중앙위원회의 보고내용을 좀더 엄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제3차 7개년계획의 좌절은 한마디로 목표달성의 실패로 요약된다. 그러나, 계획수행에 있어서의 차질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진전이 이룩되었으며 우리식 사회주의의 경제적 물질적 토대는 더욱 공고화되었다는 것이 북한의 공식입장이다. 특히,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 보고에는 계획기간 동안 각 분야에서의 '성과들'이 장황하게,

4) 중앙방송, "제3차7개년계획(1987~1993)수행정형에 대한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 보도"(1993.12.9.06 : 10). 허문영, 「1993年 12月 黨 中央委 全員會議 및 最高人民會議 結果分析」(서울 : 민족통일연구원, 1993.12), pp.16~29에서 재인용.

5) 김일성은 1994년 신년사에서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는 당중앙위원회 제6기 제21차 전원회의에서 결정한대로 앞으로 3년동안을 완충기로" 한다고 발표하였다(「로동신문」 1994.1.1). 북한은 이미 1960년 최초로 완충기를 설정한 후, 수차례에 걸쳐 완충기와 조정기를 재설정해 오고 있다. 경제계획의 역사에서 "所謂 緩衝期란 高速度 經濟發展에서 나타난 큰 不均衡狀態를 극복함으로써 다음의 展望計劃執行을 위한 準備段階이다."(趙鳳彬, "朝鮮經濟槪論." 韓國開發研究院 北韓經濟研究 센터, 「北韓社會主義 經濟體制의 制度的 分析」(서울 : 한국개발연구원, 1992), p.16.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추상적으로 소개되고 있다.

북한의 공식적 발표와는 달리 북한경제에 대한 남한에서의 평가에 따르면, 제3차 7개년계획의 좌절은 실제에 있어서 북한경제의 심각한 경제적 위기를 의미한다.[6] 단순히 중요 계획지표에서의 목표미달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 아니며, 보다 근본적으로는 재생산구조의 혼란에 따른 경제력의 저하가 북한 경제의 위기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북한이 제3차 7개년계획의 수행에 있어서 차질이 발생하였음을 공식적으로 밝히고 완충기를 3년으로 설정하였다는 사실은 북한의 지도부가 경제상황을 결코 낙관하고 있지 않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물론 여기에는 일상생활에서 직접 경제적 곤란을 겪고 있을 북한 주민에 대한 당의 공신력을 더이상 떨어뜨릴 수 없다는 절박한 정치적 판단도 작용하였을 것이다.

북한은 경제계획이 실패한 원인을 세계적 정세파동에서 찾고 있다. 구소련 및 동구에서의 사회주의의 좌절과 세계제국주의와 반동세력의 반사회주의적 공세라는 국제환경이 제3차 7개년계획 기간동안 북한에서의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방해하는 장애와 난관으로 작용하였다. 북한 자신의 분석에 따르면, 먼저 사회주의권의 붕괴는 세계사회주의시장의 붕괴를 초래하였으며, 그 결과 북한의 대외경제관계에서도 경제협조와 무역거래는 부진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정치적·군사적·경제적 책동이 심화됨에 따라, 북한은 방위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경제적으로 많은 부분을 국방에 돌리지 않으면 안되었다. 이에 따라 북한은 "경제성장속도를 조절하고 경제규모를 줄이면서 그 어떤 조건에서도 자체의 힘으로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하는 혁명적 방침"에 따라 경제계획을 추진해 왔던 것이다.[7]

당중앙위원회의 분석은 북한경제 침체의 보다 근본적 원인이라고 할 수

6) 북한경제의 위기상황에 대한 국내의 평가로는 통일원과 한국은행에 의해 발표되는 북한에 관한 통계자료를 들 수 있다. 또한 국내 북한연구자들의 평가로는 韓國開發硏究院, 「北韓經濟動向 : 1994年度 上半期」(1994.8)를 참조할 수 있다.

7) 참조 "제3차 7개년계획(1987~1993)수행정형에 대한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 보도" (93.12.9.06 : 10, 중방).

있는 ①경직된 경제제도에 의한 효율성 저하, ②부적합한 발전전략, ③불합리한 자원의 낭비에 따른 국가재정의 악화 등을 언급하고 있지 않으나, 두가지 근본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첫째는 급박한 세계정세로 인하여 국방부문으로 자원이 편중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지적함으로써, 대외적 체제안보의 확보에 대한 강렬한 욕구와 함께 비군사부문(특히 농업과 경공업부문)에서의 투자재원의 필요성을 드러내 보였다.[8] 둘째는 세계사회주의시장의 붕괴에 따른 경제협조와 무역거래의 부진이 북한경제에 미친 영향을 인정함으로써, 자력갱생의 중요성을 재강조하는 동시에, 역설적으로 무역의 중요성을 강조할 수 있는 근거를 갖게 되었다. 따라서 당중앙위원회가 완충기를 설정하고, 농업·경공업·무역제일주의를 전략적 방침으로 제시한 것은 계획실패의 원인분석과 경제정책의 대안제시에 있어서 일관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농업·경공업·무역제일주의를 기초로 한 완충기 동안의 북한의 전략적 방침의 보다 구체적 내용은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7차회의(1994.4.6~8)에서 6개항으로 결정되었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완충기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채택된 6개항의 결정은 ①농업제일주의, 경공업제일주의, 무역제일주의의 철저한 관철, ②인민경제의 선행부문인 석탄공업과 전력공업, 철도운수의 공고화와 금속공업의 지속적 발전, ③경제조직사업의 강화와 경제관리 철저, ④혁명대오의 일심단결 강화와 자력갱생의 혁명적 기풍의 발양, ⑤국가와 경제기관 지도일군의 책임성과 역할 제고, ⑥구체적인 집행대책의 정무원 위임 등이다.[9]

최고인민회의에서 확정된 완충기 경제전략의 내용은 크게 보아 ①성장전략 및 자원배분원리, ②경제조직 및 경제관리의 원리, ③정치적 이념적 통제 강화 등 세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각 부분의 구체적 내용을 아래에서 검토해 보자.

---

8) 이러한 맥락에서, 북한이 핵문제 발생 이후 미국에게 자신의 체제 및 안전을 공식적으로 인정·보장해 주기를 요구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9) 참조 全賢俊, 「北韓 最高人民會議 第9期 第7次會議 結果分析」(서울 ; 민족통일연구원, 1994), pp.5~6.

2. 성장전략 및 자원배분원리

북한은 선행부문 주도에 기초한 성장전략에서 인민생활을 중요시하는 균형성장전략으로 노선변경을 확정하였으며,[10] 이에 따라 자원의 배분에 있어서도 당연히 농업과 경공업 부문에 투자를 늘이도록 하였다.[11] 북한의 사회주의계획경제에서 완충기 자체가 선행부문의 급속한 발전에 의존하는 사회주의경제건설의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한 기간임을 고려할 때, 이러한 변화는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90년대 중반의 완충기 동안 추진될 새로운 성장전략과 자원배분원리에 특별한 주의를 집중하는 까닭은 북한의 경제적 현실이 특히 인민생활에서의 생활필수품의 결핍으로 특징지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단적으로 표현해 본다면, 지금까지 완충기는 불균형조정을 위한 기간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1994년부터 3년에 걸친 완충기는 정권 및 체제 자체의 정당성을 위협할 수 있는 북한 주민의 저하된 생활상태를 최소한의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주력하는 시기로 인정된다.

여기에서 문제는 인민생활향상이라는 최우선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농업·경공업제일주의가 무역제일주의 및 선행부문 공고화 목표와 양립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무엇보다도 주요 전략적 방침간의 양립가능성을 위협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투자재원의 부족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주의적 북한경제에서 일차적 투자재원의 성격을 지닌 재정규모는 1993년도(결산기준)에 비하여 1994년도(예산기준)에 3.2% 증가하였다. 이러한 1994년도의 예산편성은 북한 예산규모의 추이로 보았을 때 1993년도에 이어 긴축재정원칙에 기초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북한경제에서의 투자재원의 원천적 부족을 그대

10)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 노선'에 대한 북한의 공식견해는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병진적으로 발전시킨다'는 것이다.

11) 북한의 1994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농업부문에 대한 투자는 1993년도에 비하여 6% 증가하였으며, 경공업부문에서는 5.4%, 대외무역부문에서는 4.1% 증가하였다. 참조 李侑洙, "北韓의 經濟政策과 財政運用變化," 韓國開發硏究院, 「北韓經濟動向 : 1994年度 上半期」(서울 ; 한국개발연구원, 1994).

로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부문별 재정지출 구조를 살펴보면, 직접적 투자재원인 인민경제비의 1994년도 총세출규모에서의 비중은 전년도와 동일(67.8%)하다. 위와 같은 사실은 북한의 투자재원이 수요의 증가에도 불가하고 일단 절대량에 있어서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음을 확인해 준다.[12]

한편 인민경제비 내에서의 각 부문별 지출규모를 살펴보면, 농업(6%)·경공업(5.4%)·대외무역(4.1%) 부문에 대한 지출이 석탄(3%)·전력(3%)·철도운수(3%)·금속공업(2.6%) 부문에서 보다 다소 높은 비율로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농업·경공업·무역제일주의를 반영한 것으로 판단된다.[13] 반면에 선행부문에 대한 지출의 증가율이 1993년도에 비해 떨어진 사실로부터 북한이 석탄공업·전력공업·철도운수의 공고화와 금속공업의 지속적 발전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결국 북한의 1994년도 예산지출의 규모와 구조를 검토하면, 북한은 완충기 동안의 새로운 성장전략을 달성할 수 있을 정도의 투자재원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또한 자원배분원리에 있어서도 구체적 정책대안을 형성하고 있지 못함을 알 수 있다. 군사비에 대한 지출 증가율이 여전히 타분야에 비해 높다는 사실은 이를 확인해 준다.

투자재원의 부족을 탈피할 수 있는 방안으로 북한이 강구하고 있는 전략적 방침은 대외무역의 확대이다. 대외경제관계에서의 변화를 계획실패의 주원인으로 설명하고 있는 북한에게 무역제일주의라는 방침은 결코 부당하지 않다.[14]

---

12) 참조 북한 최고인민회의 예·결산보고 각년도 ; 統一院, 「北韓槪要」, 1992 ; 統一院, 「週刊 北韓動向」, 제171호, 1994.4.

13) 그러나, 부문별 재정지출의 절대액을 정확히 추정할 수 없으며 또한 전통적으로 선행부문에 대한 투자가 우세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출증가율에 근거하여 북한의 산업분야별 실질투자의 경제적 의미를 엄밀히 분석하기는 곤란하다고 할 수 있다.

14) 자립주의적 원리에 기초한 북한경제에서 대외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높지 않다. 그러나, 식량, 에너지, 기계 및 운수장비 등에 대한 수입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대외경제관계의 악화는 북한에게 심각한 타격을 주었다. 참조 徐載鎭 외, 「南北韓 國力趨勢 比較硏究(改訂版)」(서울 : 민족통일연구원, 1993), pp.352~99.

그러나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 노선에 근거한 북한의 전통적 대외경제정책에 비추어 볼 때,[15] '대외시장 개척, 수출품생산기지 강화, 수출품의 질 상승과 생산확대, 가공무역 등을 통한 수출증대'[16]를 핵심적 내용으로 하는 무역제일주의를 북한이 3대 전략적 방침의 하나로 채택하였다는 사실은 중대한 변화를 의미한다. 특히 무역제일주의가 자유경제무역지대 설치라는 본격적 개방정책과 맞물려 추진됨으로써 북한경제에 있어서 무역제일주의라는 전략은 단순히 외화 획득 및 투자재원 확보라는 의미를 뛰어넘어 북한의 경제체제 자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사실 북한의 지도부는 이러한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하여 무역제일주의라는 전략적 방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자력갱생의 원칙과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있는 것이다.[17]

결국 성장전략과 자원배분원칙과 관련한 북한 경제정책의 문제는 두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부족한 투자재원를 확보하고 이를 보다 적절히 배분하는 일이며, 다른 하나는 대외무역확대의 파급효과를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 노선의 테두리 안에서 통제하는 일이다. 김정일정권이 과연 이에 대한 구체적 정책대안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3절에서 살펴볼 것이다.

3. 경제조직 및 경제관리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7차회의에서는 '경제조직사업의 강화와 경제관리 철저'를 완충기과업의 3번째 수행원칙으로 결정하였다. 즉, '당의 경제전략

15) 金尙謙, 「北韓의 交易現況과 對外經濟政策」(서울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4), pp. 61~6.

16) 김일성, "1994년 신년사."

17)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7차회의에서 채택된 6개항 결정의 4번째 항목이 '혁명대오의 일심단결 강화와 자력갱생의 혁명적 기풍의 발양'이라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김일성의 1994년 신년사에서도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으로 사회주의총진군을 힘있게 다그치자!"는 것이 '당의 부름'이요, '인민의 전투적구호'라고 강조되고 있다. 한편, 「로동신문」은 사회주의가 실패한 나라에서의 사회문제와 자본주의의 모순을 쉬지 않고 기사화하고 있다.

의 요구'에 맞추어 '대중의 혁명적 열의와 창조적 적극성을 발양'시킬 수 있는 '경제조직사업과 생산지휘'를 추진한다는 혁명적 대중노선의 전통이 그대로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세가지 정도의 정책적 변화가 확인된다.[18] 먼저 가장 큰 변화는 농업분야에서 추진되고 있다. 농업부문에서의 조직 및 관리에서의 변화는 ①협동적 소유의 전인민적 소유로 전환, ②군단위의 협동농장을 국가기업소와 연계하여 농업연합기업소로 개편, ③농업연합기업소 및 그에 속한 국가기업소 및 국영농장들의 독립채산제 운영 및 2중독립채산제 실시 등이다. 군단위의 경영원칙에는 변함이 없으나, 협동농장을 독립채산제에 기초한 농업연합기업소로 전환함으로써, 북한은 '생산수단의 합리적 이용'과 '농업근로자들의 생산열의 발양'을 통하여 궁극적으로는 농업생산성을 높이려고 하는 것이다. 즉, 북한은 현재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를 매개로 한 국가의 통제에 의하여 자율성과 효율성이 상실된 협동농장을 독립채산제와 2중독립채산제를 실시할 수 있는 전인민적 소유의 농업연합기업소로 개편함으로써, 농업에서의 경영효율성과 함께 농업과 공업의 유기적 연관성을 높이려고 한다.[19] 다소 역설적으로 보이는 농업부문 조직·관리체계에서의 변화된 정책은, 만일 성공적으로 실현되기만 한다면, 그간 문제가 되었던 농업과 공업에서의 소유관계의 차이를 해소하는 동시에 농업에서의 경제적 효율성도 달성하도록 해 줄 것이다.[20]

---

18) 김일성, "사회주의 농촌테제의 기치 높이 농촌문제의 종국적 해결을 위하여, 전국농업대회에 보낸 서한(1994.2.24)," 「로동신문」, 1994.2.25.

19) 池海明, "緩衝期(1994~96年) 北韓의 經濟戰略 分析," 韓國開發研究院, 「北韓經濟動向 : 1994年度 上半期」(1994.8), pp. 9~12. 전인민적 소유에 기초한 농업연합기업소에 대한 북한 이론가들의 논문으로는 최명규, "농촌경리에 직접 복무하는 국가기업소를 창설하고 그 역할을 높이는것은 사회주의농촌건설의 합법칙적요구," 「경제연구」(평양 ;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4년 1호 ; 서재영, "소유형태에서의 도시와 농촌의 차이가 성과적으로 극복되고있는것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건설의 빛나는 승리," 「경제연구」(평양 ;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4년 2호를 참조. 한편, 협동농장의 농업연합기업소로의 개편에서 나타나는 '전인민적 소유화'를 중시하면서, 이를 「우리식 사회주의」 내지는 경직된 '농업집단화정책'의 지속으로 파악하는 해석으로는 全賢俊, 「北韓 最高人民會議 第9期 第7次會議 結果分析」, p.9를 참조.

다음으로 조직·관리에서의 중요한 정책변화를 반영하는 것은 비농업분야 생산·경영단위에서의 조직·관리형태의 변화이다. 농업제일주의를 위하여 농업연합기업소 형성이라는 변화를 가져온 것처럼, 북한은 경공업·무역제일주의를 위하여 1993년 당중앙위원회 제6기 21차 전원회의 이후 공장·기업소의 대폭적인 조직개편을 실시하였다. 조직개편작업의 기본방향은 중공업과 경공업간의 불균형 시정 및 생산단위 조직운영상의 비효율성 제거를 위한 생산체제 조직·관리면에서의 정비이다. 중공업부문의 비효율적 생산단위들은 연합기업소에서 종합기업소나 일반공장으로 축소되었으며, 반면 경공업·무역부문에서 경영상태가 양호한 생산·경영단위들은 조직규모가 확대되어 자율권이 좀더 주어졌다. 뿐만 아니라, '총국'보다 한단계 높은 '연합총국'이 신설된 것으로 확인된다. 이러한 생산·경영단위에서의 변화는 1980년대 중반부터 추진되어 오던 국영기업의 분권화경향을 좀더 확대하는 '내부적 대수술'로 이해될 수 있다.[21]

마지막으로 지적할 수 있는 조직·관리체계에서의 변화는 증산절약투쟁의 강화라고 할 수 있다. '경제의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노동력, 설비, 자재를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내부예비를 남김없이 동원하여 생산을 최대한 늘인다'는 증산절약운동은 북한의 사회주의경제건설사에 있어서 항상 추진되어 왔던 정책이지만, 생필품의 부족과 자원의 부족이 뚜렷한 현재에 있어서 그 의미는 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특히 1984년부터 실시되어온 '8·3인민소비품 생산운동'이 북한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22] 증산절약운동이 '8·3인민소비품 생산운동'과 함께 1994

20) 아울러 이는 북한경제가 자력갱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 줄 것이다. 그러나 전인민적 소유에 기초한 농업연합기업소가 북한경제의 근대화와 개방화라는 기본방향과 양립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없다.

21) 참조 통일원 정보분석실, 「주간 북한동향」 제167호('94.3.6~3.12). 1980년대 중반의 기업조직 확대에 의한 연합기업소의 설립 및 연합기업소에서의 2중독립채산제의 실시 그리고 독립채산제의 확대실시는 한편으로는 사회주의적 관료조직에서 발생하는 '위계적 주인-대리인' 문제를 해소하여 경영·관리자의 책임을 높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율성의 확대를 통하여 경영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池海明, 「北韓의 國營企業·協同農場 管理制度와 인센티브 構造」(서울 : 韓國開發硏究院 北韓經濟硏究센터, 1993) 참조.

년도 김일성의 신년사에서 강조되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증산절약투쟁은 사회주의계획경제에서 발생하는 연성예산제약 문제를 해결하고, 아울러 경영관리자에게 경영에서의 합리성을 요구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합리화 및 효율화로 요약되는 조직·관리체계에서의 변화가 북한경제에 미칠 영향은 체제유지에 긍정적이지만은 않을 것이다. 분권화와 시장기구의 발전을 내포하고 있는 조직·관리체계의 변화는 개방화와 결합될 때 북한경제체제 자체를 장기적으로는 변화시킬 가능성이 있다.[23] 따라서 이에 대한 대비로 북한은 아래에서 확인되듯이 경제분야에서의 정치적 지도 및 주체사상교육을 강화하는 것이다.

4. 정치적·이념적 통제 강화

위에서 살펴본 북한 경제정책 변화의 전반적 특징은 한편으로는 보다 강력한 국가단위에서의 관리를 필요로 하는 재정운용원칙과 혁명적 경제조직사업 강화에 기초하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적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각 경제단위에 자율성을 높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북한 지도부로서는 국가관리체계에서의 중앙집권화와 생산·경영단위에서의 분권화를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정치적으로 모색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사실은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7차회의의 결정사항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

22) '8·3인민소비품 생산운동'의 기본원리는 '군중적으로 내부예비를 동원'하여 '주민생활의 질을 향상'하는 것이다.(최인덕, "군중적운동으로 인민소비품생산을 늘이기 위한 당위원회의 조직정치사업," 「근로자」, 513호 (평양 : 근로자사, 1990.1), p.80) 참조 최수영, "북한의 경제정책, 현황과 전망"(1994년 9월 29일 한세정책연구원 & 한국경제신문사 공동주최 남·북한 경제협력을 위한 정책세미나 발표문). 북한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8·3인민소비품 생산운동'에 의한 공업생산액은 3.5배, 판매유통액은 4.1배로 늘어났다.(「內外通信」 보도판 제9071호 1994.8.3) 또한 북한은 1994년 9월 이후 인민생활향상정책의 일환으로 상업봉사부문 노력경쟁운동인 '정춘실운동'을 활성화하고 있다.(「內外通信」 제9153호, 1994.9.28 ; 제9165호 1994.10.6)

23) 특히 북한경제는 국가부문(사회주의부문)과 사적부문(시장경제에 기초한 제2경제부문)이라는 두 부문으로 이중구조화되면서, 장기적으로 이행의 과정을 겪게 될 것이다.

북한은 '혁명대오의 일심단결 강화와 자력갱생의 혁명적 기풍의 발양'이라는 결정에 따라, 주체사상교육 및 사회주의의 우월성에 대한 교육을 늦추지 않고 있다. 또한 사회주의적 관료제도의 비효율성을 제거하려는 목적으로 국가와 경제기관의 지도일군들의 책임성과 역할 제고를 강조한다. 즉, 북한은 개혁·개방의 진전과 병행하여 경제체제에 있어서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강조하면서, 주민에 대하여 정치적·이념적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적·이념적 교육의 실효성이 이미 그 한계에 도달하였다고 보았을 때, 당과 정부를 중심으로 한 정치적·이념적 교육의 강화는 오히려 정권의 정당성을 약화시킬 위험이 있다. 특히 당 간부와 군·관료 조직에서의 부패형 일탈행위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사회의 지도계층에 의한 정치적·이념적 통제의 강화는 사회 전반의 실질적 통합력을 저하시키는 역할만을 하게 될 것이다.

한편 경제정책의 구체적 집행대책 수립에 있어서 정무원의 역할을 강조한 여섯번째 결정사항에 따르면, 경제정책의 실질적인 운용에 있어서 전문·기술관료들의 자율권이 확대되고 관료들의 적극적 참여가 권고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이는 경제적 위기의 상황에서 관료들의 책임을 강조함으로써 혹 재연될지도 모르는 경제정책 실패에서 당이 져야할 책임을 미리 최소화해 놓으려는 의도를 지닌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김일성정권 말기의 북한경제정책의 변화방향은 한편으로는 경제정책 및 생산조직·관리에서의 경제적 효율성 원리에 기초한 합리화 및 경제의 개방화, 다른 한편으로는 정치적·이념적 원리의 경제적 원리에 대한 지배의 강화로 요약될 수 있다.[24] 이러한 두가지 대립적 경향으로부터 나타날 북한체제의 갈등내포적 변화는 앞으로 북한 지도부에게 하나의 커다란 짐이 될 가능성이 크다.

경제에서의 합리화 및 개방화의 추구는 북한경제가 효율성을 획득하면 할수록 더욱 더 정책결정 및 경제운용에 있어서 분권화와 자율화를 요구하

24) 사회주의권의 붕괴는 정치적·이념적 통제의 필요성에 대한 북한 지도부의 경각심을 일깨워주었다고 할 수 있다.

고, 궁극적으로 북한 사회주의경제건설의 기본원리인 자립적 민족경제건설 노선을 부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반면, 김일성사상에 기초한 '우리식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정치적·이념적 통제의 강화는 경제의 합리화·개방화(즉 개혁·개방)가 추진되면 될수록 정권과 체제의 정당화를 위하여 보다 엄격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미 일어난 경제정책의 변화에서 예상할 수 있는 북한체제의 장래변화에 대하여 김정일정권은 과연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또한 경제정책에 있어서 어떠한 변화를 구상하고 있는가를 다음 절에서 살펴보도록 하자.

Ⅲ. 김정일정권 하의 개혁·개방 전망

1. 김정일노선과 김일성노선

김정일정권의 경제정책을 전망하는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질문은 '과연 김정일정권이 김일성정권 말기의 경제정책을 이어받을 것인가'이다. 만일 이 질문에 대한 답이 긍정적이라면, 김정일정권의 경제정책 전망은 이미 가시화되어 나타난 김일성정권 말기의 경제정책으로부터 상황의 변화를 고려하여 유추해 낼 수 있다. 이는 또한 김정일정권의 전반적 정책이 합리적일 것이며, 따라서 예측가능할 것이라는 점을 상정할 수 있게 해준다. 만일 부정적 답변에 기초한다면, 김정일정권의 경제정책 전망은 새로운 접근법에 의하여 이루어져야만 보다 현실성을 가지게 될 것이다.

김일성정권 말기 북한의 경제정책변화는 대·내외 정세변화 및 위기적 경제현실에 대응하여 이루어졌다는 점과 경제적 합리성의 추구와 체제의 유지라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는 점에서 일단 김정일정권 하에서도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덧붙여 김정일 자신이 이미 80년대부터 북한 최고결정자 중의 일인으로서 그리고 공식적 후계자로서 정치적 권력을 실질적

으로 행사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김일성정권 말기에 변화·채택된 경제정책은 근본방향 및 핵심내용에 있어서 지속성을 가지고 추진될 것이다.

그러나 김정일노선의 김일성노선에 대한 연속성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경제정책은 김정일정권 하에서 점차적으로 새로운 형태로 변화되어 갈 것이다. 한편으로는 김정일이라는 새로운 '지도자'의 정치적·이념적 특성으로부터 변화의 원인이 제공될 수도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변화된 경제정책의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북한의 사회·경제적 변화가 대·내외 정세변화와 맞물려 변화의 원인을 제공할 수도 있다.

김정일 개인의 정치적 특성을 고려할 때, 그는 무엇보다도 상속받은 카리스마를 자신의 정치적 인격에 완전히 체화하여, 정권의 정통성을 확고히 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북한의 주민들은 그들의 새로운 지도자가 상속된 카리스마와 함께 현실의 경제적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능력을 가지고 있기를 원할 것이다.[25] 이러한 이중적 요구는 김정일의 정책적 선택을 매우 좁힐 가능성이 있다. 김정일정권은 사회주의체제 공고화 및 주체사상 실현을 과거보다 훨씬 더 엄격하게 추구하는 동시에 경제적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한층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중적 목표의 달성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며,[26] 따라서 김정일정권의 경제정책은 당분간 커다란 변화없이 김일성정권 말기의 기본노선에 따라 결정·추진될 것이다.

한편, 김일성 사상을 계승·발전시킨다는 기본취지 하에 형성된 김정일

25) 카리스마의 상속자가 진정한 의미에서의 '완전한 상속자'가 되기 위하여는 '상속된 것'과 함께 '새로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새로움이란 특히 상속기 이전의 절대자의 능력이 한계에 도달하였을 경우나 카리스마의 승배자들이 현실에서의 변화를 내면적으로 원하고 있을 경우에 더욱 필요하다.

26) 사회주의체제유지와 경제성장이 선험적·사변적으로 모순적인 것은 아니다. 그러나 국가사회주의 및 그 변형태들의 실험에 의해 분명히 확인된 사실은 명령형·수령형 사회주의계획경제체제가 유지될 수 없으며, 또한 시장사회주의경제체제로 불리우는 다양한 형태의 국가사회주의의 변형태들 역시 사회체제로서의 자생력이 없다는 점이다. 한편 북한에서의 사회주의체제유지와 경제성장이라는 두가지 목표간의 갈등은 당간부를 중심으로 한 보수주의자들을 한편으로 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직접적으로 겪고 있는 주민들과 개혁주의자들을 다른 한편으로 하는 사회집단들간의 갈등을 의미한다.

사상은 뚜렷한 차별성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다만 몇가지 측면에서 주목받을만한 점이 드러난다.[27] 우선적으로 주체사상에 있어서 김정일은 김일성에 비해 의식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에 기초하여 감성적·도덕적 의무감을 중시한다. 이에 따라 김정일은 사회주의체제 붕괴 원인을 설명함에 있어서 사상의식을 강조하거나, 제국주의의 모순을 설명함에 있어서 도덕적 측면을 부각시키기도 한다.

반면, 경제정책과 직접 관련된 부분에서 양자의 노선차이는 거의 발견되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1980년대에 들어와서 김정일은 후계체제를 구체화시킨다는 차원에서 경제분야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따라 김정일의 다음과 같은 견해가 경제정책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판단된다. 개혁·개방에 따라 구소련과 동구 사회주의체제가 붕괴된 사실에 영향을 받아, 김정일은 체제의 개혁·개방에 대하여 신중하고 조심스러워 졌으며, 정치적·이념적 통제에 대하여 보다 엄격해졌다. 또한 1990년대에 들어와서는 사회주의체제의 평가에 있어서도 경제적 측면에서 보다는 심리적·도덕적 측면에서의 우월성을 강조하기 시작하였다.

김정일의 주체사상에 대한 독특한 해석과 경제정책과 직접 관련된 견해는 이미 김일성정권 말기의 경제정책 변화에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경제적 합리화의 추구와 함께 체제유지를 위한 정치적·이념적 통제의 강화라는 상반되는 경제정책변화의 특성에 잘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상반된 정책목표의 동시추구'라는 경향은 김정일사상에 비추어 보았을 때 앞으로 더욱 강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개혁·개방이라는 정책노선의 차원에서, 김정일정권의 경제정책은 김일성정권 말기의 정책방향에 대하여 연속성을 유지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현실적으로 주요한 변수라고 할 수 있는 김정일정권의 불완전성, 북한경제의 위기성 그리고 북한의 대외관계를 고려할 때, 이미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김정일정권은 일시적으로 다소 경직된 경제정책을 고수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

27) 金炳魯, 「金正日著作 解題」(서울 : 民族統一硏究院, 1993).

2. 개혁·개방의 장래

김정일은 김일성 사후 처음으로 정치·경제·사회 등 전반에 걸친 자신의 사상을 「로동신문」(1994.11.4)에 "사회주의는 과학이다"는 제목하에 논문의 형태로 발표하였다. 김정일정권의 성격과 방향을 감지할 수 있게 해주는 지표들이 부족한 상황에서 김정일의 논문은, 비록 내용의 추상수준이 높음에도 불구하고,[28] 김정일정권을 전반적으로 판단하고 북한의 미래를 전망할 수 있게 해주는 기본자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와다 하루끼는 '이제까지 구축된 이론이 거의 모두 담겨져 있는' 김정일의 논문에 나타난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 '근대합리성의 강조'를 들고 있다. 그에 의하면, 이러한 점은 논문의 제목에 이미 잘 반영되어 있으며, 또한 중세적 정치철학으로 평가되는 수령=최고뇌수론과 충효일심론이 빠져있다는 사실에서도 확인된다. 합리성의 강조와 함께 강조되고 있는 두가지 점은 '인민대중의 물질적 복지의 충족'과 '인덕정치'이다. 물질적 복지의 충족과 관련하여, 와다 하루끼는 '이것을 실현하는 새로운 방법은 언급돼 있지 않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그의 판단에 따르면, "경제면에서의 개선을 약속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인덕정치'를 강조하면서 '간부들의 세도와 관료주의, 부정부패에 반대하는 투쟁을 촉구하고' '간부들의 특수계층화도 비판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어야 한다고 그는 주장한다. 따라서, "극히 신중하기는 하지만 김정일의 개혁정치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이 와다 하루끼의 결론이다.[29]

그러나, 와다 하루끼 자신도 인정하고 있듯이 김정일의 개혁정치, 즉 경제정책에서의 개혁·개방은 결코 구체적이거나 새롭지 못하다. 특히 경제

28) "부친의 정치를 충실히 계승할 것을 서약했으며, 그런 기대를 받고 있는 김 비서는 넉달이나 지나고 나서 연설이 아니라 신문 논문으로 제일성을 알렸다. 게다가 사회주의론이라는 추상성이 높은 논제이다. 이것은 벌써 후계자의 곤란한 입장을 엿볼 수 있게 한다."(와다 하루끼, "김정일의 개혁 첫걸음," 「한겨레신문」, 1994.11.14)

29) 와다 하루끼, "김정일의 개혁 첫걸음."

정책에 있어서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이거나 새로운 방법이 전혀 제시되지 않고 있다. 이는 김정일정권의 경제정책이 당분간은 김일성정권 말기의 노선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게 한다.[30] 따라서 주목하여야 할 점은 '상속된 정책이 어떻게 정책의 결과 및 조건의 변화에 따라 진화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현재, 김정일정권은 김일성 사후 주민들이 동요할 것을 두려워하여 기존의 통치규범에 따라 사상교육 및 이념적 통제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31] 경제분야에서도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 노선을 고수할 것을 강조하면서, 자력갱생 및 '우리식 사회주의'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미 추진되고 있는 경제분야에서의 조직·관리의 분권화 경향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 북한은 노동당의 경제부문에 대한 지도를 강화해 나갈 것임을 밝히고 있다.[32] 이는 정무원 주도에 의한 경제운용원리의 실질적 확립이라는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7차회의의 결정을 부정하는 것이며, 또한 분권화에 따른 자율성 및 효율성 증대를 지체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보다 중요한 점은 김정일정권이 사회주의 이념을 강화하고 그에 기초하여 정치적·이념적 통제를 늦추지 않을 때 발생하게 될 경제정책 및 사회·경제체제운용원리에서의 일관성의 상실이며, 그에 따른 혼란의 발생이다.

무엇보다도 북한경제에서 발생할 가장 심각한 혼란은 북한 내부의 경제정책입안자, 경제정책수행자 및 최종경제행위자로서의 주민들간의 의사소통의 혼란을 들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개별 주체들은 자신들의 행위원리 결정에서 이념(우리식 사회주의 고수)과 현실(개혁·개방을 통한 합리화) 사이의 혼란에 점점 더 직면하게 될 것이다. 특히 당 및 정무원의 관료화된 하부 조직세포들이 겪게 될 혼란은 북한경제의 전반적 효율성을 올려줄

30) 김일성 사후 북한의 언론들은 기존의 농업·경공업·무역제일주의에 기초한 완충기 경제전략을 혁명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로동신문」, 1994.7.23 ; 중앙방송 1994.7.26~7 ; 평양방송 1994.7.27) ; 통일원 정보분석실, 「주간 북한동향」, 제187호('94.7.24~7.30). 참조.

31) 「內外通信」 보도판 제9118호 1994.9.2. 참조.

32) 평양방송 1994.11.9 ; 「內外通信」 보도판 제9218호(1994.11.9) 참조.

동원체제를 형성하는 데 어려움을 낳을 것이다.[33]

경제정책에서의 일관성의 상실은 북한이 바라는 해외자본의 유치에 있어서도 상당한 지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해외의 직접투자가들은 북한의 정책적 비일관성에 주목함으로써 투자행위에서 보다 신중해질 것이다.[34] 사실 북한정권의 대외개방·경제협력 담당자들은 개방노선의 확고성을 강조하면서 투자유치를 추진하고 있으나, 북한의 언론이 계속적으로 '자력갱생,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 사회주의 경제관리제도의 우월성' 등을 주장함으로써,[35] 해외투자유치에 있어서 실질적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같다.

결국, 김정일정권은 기본방향에 있어서 김일성정권 말기에 변화된 경제정책을 따르겠지만, 당분간은 정치적·이념적 경직성의 강화에 따른 개혁·개방의 소극성을 벗어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북한핵문제에 관한 북·미간의 기초협상 타결 이후 개방의 가속화 가능성은 조금씩 커지고 있다. 따라서 개방의 전반적 성격, 개방이 북한 내부의 체제개혁과 갖게 될 연관성, 나아가 개방·개혁이 체제이행으로 연결될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편, 앞에서 북한의 내부적 개혁은 전통적 통치규범과 동원원리에 의하여 당분간 견제받을 것임을 확인하였다. 개혁에서의 이러한 전략은 개방에서도 작용할 것이다.

북한 경제개방의 실질적 목표는 선진국과의 경제관계 개선을 통한 기술습득·자본획득이다. 그러나 이러한 목표가 갖는 정치적 의미는 적지 않을 것이며, 따라서 북한은 개방전략에 있어서 두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다. 첫번째는 개방의 실질적 폭을 자유경제무역지대라는 특정한 지역에 제한하고 있다. 두번째는 선진자본주의국가 및 남한보다는 중국 및 비동맹국가·개

33) 북한 경제체제의 개혁·개방에 있어서 최종적으로 보수적 성향을 발휘할 집단은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당, 군, 정의 관료적 하부 세포조직일 것이다.

34) 현재에도 외자도입관련 법령정비에 기초한 제도적 조건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경제적·기술적 입지조건의 열악성 및 계약·기업경영에서의 정치적 통제로 인하여 외자유치에서 그다지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

35) 北韓問題調査硏究所, 「北韓主要政策論調」, 제27권 제9호(1994.11) 참조.

발도상국가와의 남남협력에 기초한 국제관계개선을 경제개방의 '공식적' 전략으로 내세우고 있다.[36] 결국 김정일정권 하의 북한의 개혁·개방의 장래는 지역적·정치적으로 봉쇄된 이중적 개방전략에 의해 기본적으로 결정될 것이다.

3. 비판으로서의 전망

이제 김일성 말기의 경제정책에 비하여 '원칙면에서' 다소 경직되어 보이는 김정일정권 개혁·개방정책의 결과를 전망하고, 김정일정권의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를 시도해 보자.

북한의 개혁·개방정책과 비교해 볼 수 있는 사회주의국가의 경험은 크게 보아 ①구소련의 개혁·개방에 의한 급속한 체제붕괴와 ②중국의 정치·경제분리에 기초한 개혁 및 경제특구를 통한 개방에 의한 경제성장의 달성이라고 보여진다. 북한은 구소련의 경험으로부터 정치적·이념적·문화적 통제가 개혁·개방과정에서 체제유지를 위하여 가지는 의미를 확인해 내고 있다. 반면, 중국의 개혁·개방의 경험으로부터는 정치우위원리 및 경제특구운영을 배우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경제정책은 이미 김일성정권 말기부터 크게 보아 개혁·개방으로 방향을 잡았던 것이며, 이는 대체적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북한은 중국의 개혁·개방에서 두가지 중요한 사실을 간과함으로써, 중국의 경험으로부터 잘못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 있다. 첫째, 중국의 경우 경제특구는 기술·관리·지식·대외정책의 '창구'로서 활용되고 있으며, 따라서 경제특구는 '내륙으로 전파될' 경제개혁의 실험기지이다. 둘째, 중국 지도부의 '사회주의초급단계론'에도 불구하고,[37] 중국의 개혁·개방은 결국 국가사회주의경제체제의 시장경제로의 이행을 의미한다. 즉, 중국의 개혁·개방정책은 사회주의체제유지를 위한 전략으로 이해되기 보다는 통제된 점진적 체제이행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흔히 강

36) 「內外通信」 보도판 제9079호(94.8.9) 및 제9198호(94.10.27) 참조.
37) 채희준, 「중국의 경제개혁 현황과 그 한계」(서울 : 극동문제연구소), 1991 참조.

조되고 있는 '정치우위'의 원리는 이미 '사회주의 이념에 기초한 공산당의 사회 전부분에 대한 통제'를 의미한다기 보다는, '정치와 경제의 분리'에 기초한 '경제 혹은 경제행위의 결과에 대한 정치의 외부적 통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렇게 볼 때,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경제성장을 가져오고 있는 중국의 개혁·개방은 어느 시점에 가서 '정치우위'의 원리조차도 거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38]

구소련과 중국의 경험에 비추어보았을 때, 북한의 통제되고 봉쇄된 개혁·개방정책은 중국의 개혁·개방정책을 따르는 동시에, 그것을 보다 정교화한 정책이라고 판단될 수도 있다. 그러나 북한은 중국과 비교하여 두가지 불리한 조건에 놓여있다. 먼저 경제상황으로 보았을 때 북한은 이미 개혁·개방의 시기를 놓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39] 다음으로 적대적 의존관계가 지배하는 한반도 내부에 남한이라는 강한 대립적 존재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의해 북한의 개혁·개방에 따른 사회적 동요는 즉시 체제동요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다.

이상의 분석에 기초하였을 때, 후계체계로서의 김정일정권이 안고 있는 한계로 인하여 다소 경직화된 북한의 경제정책은 조만간에 그 한계를 드러낼 것으로 판단된다. 무엇보다도 단기적이고 일차적인 한계는 개혁·개방의 소극성으로부터 나타날 것이다. 북한이 현재 겪고 있는 생활수준의 저하와 투자재원의 부족은 극복되지 못하고, 북한경제는 위기의 한계상황으로 몰리게 될 것이다.

만일 김정일정권이 소극적 개혁·개방의 한계가 드러나기 전에 대내외적 정권의 안정을 굳건히 하고 적극적 개혁·개방으로 나아간다면, 북한경제

38) 봉건체에서 자본주의시장경제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던 정치적 변동의 역사는 결코 역사의 유물일 수만은 없다.

39) 북한의 경제개방화는 이미 1970년대부터 시작되었으며, 최근의 대외개방전략은 1980년대 중반의 합영법 제정에 기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자유경제무역지대 설치를 핵심내용으로 하는 1992년 이후의 경제개방화는 전혀 새로운 개방전략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흔히 경제사 및 경제성장론에서는 후발국이 가질 수 있는 장점을 강조하고 있으나, 북한의 개혁·개방의 경우에는 후발국의 단점이 두드러질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는 없다.

는 보다 본격적으로 체제이행의 문제를 맞게 될 것이다. 이 경우, 이미 김일성정권 말기부터 시작된 북한의 경제정책, 나아가 국가사회주의경제체제에 있어서의 일반적인 개혁·개방정책의 한계가 노골화되면서, 북한은 보다 근본적으로 체제변혁과 통일에 대한 중·장기적 전망을 세우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Ⅳ. 맺는 말

북한경제에 있어서 완충기 동안의 개혁·개방정책이란 위기를 순조롭게 극복하기 위한 방안인 동시에 위기를 앞으로 북한체제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로 삼겠다는 의지를 반영하고 있는 정책이다. 이런 의미에서 완충기란 전략적 방침에 있어서나 구조조정에 있어서나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가장 적절한 시기라고 판단된다. 사실 이런 의미에서 성장전략, 자원배분원리, 경제조직·관리원리 등에서 추진된 김일성정권 말기의 새로운 경제정책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이라고 판단되었다.

그러나 정권교체로 인하여 다소 경직화된 김정일정권의 경제정책기조를 분석할 때, 완충기가 개혁·개방에 의한 재도약의 기회로 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이러한 점에서 북한이 현재 보여주고 있는 '정치우위의 강화'는 조만간 '정치와 경제의 본격적 분리'로 회귀할 것으로 판단된다.[40] 이와 함께, 국가부문(전통적인 계획경제부문)에 종속되어 있는 제2경제와 자유경제무역지대의 경제활동이 자율적이고 독립된 경제영역으로 확대되어 갈 때,[41] 북한의 경제정책은 본격적으로 사회주의계획경제에서 자본주의시장

40) '정치우위'라는 표현을 쓰면서 중국과 북한의 연구자들은 종종 이를 국가사회주의경제체제의 보편적 특징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앞에서 말했듯이, 정치우위라는 표현은 국가사회주의경제체제의 개혁이 시작하면서 나타나기 시작한 말이다. '사회주의가 달성된 소련에서는 정치가 불필요하다'는 스탈린의 주장을 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

41) 즉, 북한에서 현재 강조하고 있는 '하나의 대가정'으로서의 북한경제는 분화되어 갈 것이다.

경제로의 이행을 준비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42]

그러나 전망에 비추어 본 북한 경제정책의 딜레마가 결코 남한의 통일정책에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북한의 경제체제가 한계상황에 다가갈수록, 경제정책이 비현실적인 이념중심의 사고에 의해 지배될수록, 남북한관계는 발전하기 힘들며, 이에 따라 통일을 지향하는 남한 정부 역시 딜레마에 빠지게 될 것이다. 이러한 점에 유의한다면, 남한 정부는 북한이 자신들의 경제상황과 체제원리에 대하여 세계사적 시각위에서 객관적 질문[43]을 던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어야 할 것이다. 사실 이러한 남한 정부의 태도는 북한에게 직접적으로 경제지원을 해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며, 이러한 사고에 기초할 때에만 남북관계는 통일을 위한 과정으로서 의미를 가질 것이다.[44]

---

42) 그러나 자본주의체제 이후 북한에게 열려있는 길이 과연 무엇인지는 알 수 없다.

43) 이제 북한 지도부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보다 객관적으로 자신에게, 그리고 서로간에 던져 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어디에서 와, 어디에 있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가." 북한에서 강조하고 있는 두가지 물음법은 정서적 물음법과 자문자답법이다.(림호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몸소 보여주신 물음법의 본보기", 「문화어학습」(평양,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4년 2호. pp.9~10.) 그러나, 북한의 지도부는 현실을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비판하기 위하여, 답이 미리 주어져 있지 않은 비판적 질문을 서로간에 던져야 할 것이다.

44)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전문에 나타난 기본정신을 참조.

김정일 政權下의 軍事政策 展望

鄭 永 泰*

◁目 次▷

Ⅰ. 序 論
Ⅱ. 김일성 政權下의 北韓安保 基本論理構造
Ⅲ. 김일성 政權下의 北韓 軍事政策 展開 樣相
Ⅳ. 김정일 政權下의 北韓 軍事政策 展望

Ⅰ. 序 論

일반적으로 많은 제3세계 국가들은 정통성 위기와 관련하여 國家安保와 政權安保間의 重複·相殺關係의 특성을 보이고 있다. 제3세계 국가들에 있어서 국가안보와 정권안보간의 구분이 불분명해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국가안보가 정권안보를 위한 도구로 이용되어온 사례가 많다. 특히 정통성을 결핍한 정권의 위정자들은 정권에 대한 위협관리를 주된 정책목표로 삼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같은 목표를 위해서 가상의 적과 외부의 위협을 창출 또는 과장할 뿐만 아니라 대외적 침략행위를 수행하기도

* 民族統一硏究院 硏究委員

하며, 경직된 국가안보 이데올로기의 운용을 통해 국민을 통제해 나간다. 또한 국가안보의 미명하에 전국민과 시민사회를 통제·동원하여 정권위협의 확산을 구조적으로 봉쇄하고자 한다.[1] 결국 이러한 국가들에 있어서는 정권안보를 위해서 국가안보가 현실적으로 요구하는 이상의 과도한 군사력과 공격적인 군사태도 견지를 필요로 한다.

북한과 같은 一人獨裁體制의 경우에 있어서도 예외는 아니다. 즉 북한에 있어서 이제까지 國家利益(national interest)보다는 權力 擔當者(people in power) 즉 김일성 개인이익을 중심으로 이제까지 대부분의 정책이 수립되고 시행되어온 경향이 강하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특히 북한 군사정책의 수립·시행에 있어서도 국가안보의 개념에 더하여 정권안보 개념이 중요하게 작용해 왔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은 김일성 唯一政權의 지배기회를 최대한 강화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對南 武力赤化統一 戰略을 위한 공세적인 군사정책을 필요로 해왔다. 북한은 이에 더하여 '미제국주의'의 직접적 위협 그리고 군사동맹관계를 맺어온 중국 및 구소련의 정치·군사적 압력 및 간섭 가능성 등과 같은 정권안보 차원의 위협에 대한 防禦政策을 구축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또한 북한은 全社會의 兵營化를 통한 대내적 체제공고화를 위해서도 적극적인 군비강화정책을 필요로 해왔다. 특히 북한은 이를 위해서 '미제국주의'의 위협에 대한 위험성과 對南 武力赤化統一의 당위성을 인민들에게 과장·고취시켜왔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의 정권안보 구축을 위한 이러한 군사적 필요성은 자연히 공세적이면서 동시에 국가능력에 비해서 과도한 군사적 안보관리능력의 강화를 동반하는 군사정책을 추구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일국의 안보정책 또는 군사정책은 국가체제의 특성에 따라 다양성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겠다.

지금 북한은 김일성이 사망함으로써 새로운 정권탄생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김정일의 권력승계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김정일 중심

1) 문정인, "탈냉전과 제3세계 국가안보의 재조명-'소프트 웨어'를 중심으로 한 접근," 「현대사회」 (1992 봄·여름), p.98.

으로 모든 정책이 이루어 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몇가지 의문이 제기된다. 첫째, 새로 탄생하게 될 김정일 정권은 과연 김일성 정권과 차별화를 시도할 것인가? 둘째, 그 차별화는 어떠한 형태가 될 것인가? 셋째, 김정일 정권은 그의 아버지 김일성이 추구해왔던 정권안보 중심의 군사정책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본고의 목적은 이러한 질문에 초점을 맞추어 김정일 정권하의 북한 군사정책의 지속성과 변화를 고찰하고자 하는 것이다.

Ⅱ. 김일성 政權下의 北韓安保 基本 論理構造

국가안보 개념은 일반적으로 방위적, 수세적 또는 소극적인 의미로 파악된다.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는 경우(북한의 군사적 대남적화전략)에 있어서도 배후적인 기본논리는 마찬가지로 방위의 범주를 넘지 못하고 있다.[2] 이와 같이 국가안보가 본질적으로 방위적인 것이라 한다면 안보문제는 威脅이라는 현실적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그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위협을 얼마나 객관화할 수 있느냐의 문제는 안보공감대 형성을 좌우한다. 위협이 잠재적이든 현재적이든 그것에 관련된 사항이 국가안보 논리 체계상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는 사실은 배제할 수 없다. 안보논리상 중요하게 여겨지는 또다른 하나는 발견되었거나 거론되고 있는 위협에 대처하여 무엇을 보전시켜야 할 것인가 하는 국가안보의 客體的 側面이다. 위협이 제기된다고 하는 사실은 그 위협이 겨냥하고 있는 要諦가 있다는 뜻이다. 일반적으로 주권국가들은 대부분 위협의 발생을 감지하게 되면 그것이 목표로하는 대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국가의 방위활동을 하게된다. 이와 같이 국가안보의 객체적 측면은 현실적 위협론과 더불어 해당 국가의 안보개념의 형성에 있어서 기본토대가 될 만

2) 정준호, 「국가유형별 안보론적 해석에 관한 연구」(서울 : 국방대학원, 1990) pp.3-6.

한 것이다. 위협과 안보대상은 실제로 '누구'에 의해서 간파되고 인식되어야 비로소 여기에 관련된 제반행위가 실시될 수 있다. 그 '누구'를 파악하는 것이 곧 국가안보의 주체적 측면을 이해하는 것이다. 이러한 안보의 주체는 국가유형별로 국민일반이 될 수도 있고 정부 또는 일인 통치자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상에서 국가안보의 이론적 기본 체계는 3가지 측면 즉 威脅, 安保對象(客體), 安保行爲者(主體)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북한안보 역시 세가지 국면 즉 安保의 主體, 客體 그리고 威脅 등의 기본 논리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중심으로 북한안보의 기본 논리구조의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1. 北韓安保의 主體 : 김일성

安保의 主體라 함은 안보에 관련된 諸行爲의 담당자를 지칭하는 것이다. 안보란 國家安全保障(national security)을 줄인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안보의 담당자가 國家임을 함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국가가 안보의 담당자라고 하는 것은 국가만이 유일한 관련 담당자를 지칭하는 것은 아니나 국가를 최우선적인 대상으로 상정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안보에 관련된 위협의 실체를 평가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는 일이라든가, 위협의 대상이 무엇이며 그것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실제의 권한을 국가가 소유하고 있음은 일반적인 상식에 속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지칭하는 국가는 어떤 의미에서 매우 추상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다. 안보를 국가가 담당한다거나 대표한다고 할 때 국가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지가 분명하지 않다. 실제로 국가유형에 따라서 국가를 명분으로 하는 담당자 또는 담당층은 다양하게 존재한다. 한 사회가 갖는 특정 권력구조, 정치제도 및 정치문화에 따라서 그 담당자가 특정개인으로 존재하는 君主일 수도 있으며 보다 더 보편적인 근대적 의미의 정치제도하에서는 內閣 또는 政府일 수도 있다.

그러면 북한의 경우에 있어서는 어떠한가? 북한은 노동당을 중심으로

하는 권력구조를 가지고 있다. 노동당이 모든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하여 지도적인 핵심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북한의 권력구조는 곧 노동당의 권력구조를 의미한다. 이러한 黨優位의 원칙에 의하여 노동당은 북한의 모든 권력의 원천이 되고 있으며 다른 모든 국가기관들은 노동당의 정책노선을 집행하는 법체계를 가지고 있다.[3] 그러나 북한 통치방식의 특징은 북한사회의 모든 면을 철저히 감독하고 통제하는 노동당의 독재체제라기 보다 김일성 개인의 獨裁가 黨을 초월하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김일성은 그의 일인독재 우상화체제를 통하여 수십년간 북한을 통치해왔다. 김일성은 지금까지 수령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당총비서, 국가주석, 그리고 군통치권(현재는 김정일에게 정식으로 이양되었음)을 한 손에 장악한 일인독재체제를 성공적으로 유지해왔다. 수령은 "노동계급의 당과 국가를 창건하고 혁명전통과 당의 지도사상을 창조한다. 당이 노동계급의 계급적 조직의 최고형태라면 수령은 당의 최고령도자이며 프롤레타리아독재체계의 총체를 령도하는 전체인민의 통일 단결의 중심이다."[4]

이와 같이 김일성이 모든 권력구조의 정점을 점유하고 있는 정치체계는 맑스가 말하는 권력엘리트의 그것 보다 훨씬 더 통합된 權力의 複合體를 장악하고 있다. 이것은 프리드리히(C. J. Friedrich)와 브르제진스키(Z. Brzezinski)의 표현을 빌리면 전체주의적 독재의 극단적 변형이라 하겠다.[5] 김일성은 이같은 강력한 전체주의의 劃一的인 意思決定構造에 힘입어 그에 대한 개인숭배를 이끌어 냈다.[6] 김일성을 정점으로한 절대적 권력체계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대중조작은 바로 획일적인 권력구조에 힘입은 바 크며, 실제로 북한 공산주의자들은 김일성 개인우상화를 위해서 항일유격 및 혁명신화를 날조하거나 역사를 왜곡하면서 金日成家의 혁명전통을 조작하여 왔다. 김일성에 대한 이러한 절대적 우상화의 결과, 김일성 수령의 의사는

3) 極東問題研究所 編, 「北韓全書」 上卷(서울 : 極東問題研究所, 1974), p.101.
4) 「정치사전」(평양 : 사회과학출판사, 1973), p.324.
5) 황성모 외, 「北韓體制研究」(서울 :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7), p.95.
6) 안드레아스 크라체크 외, 「서구마르크스주의자들이 본 북한사회」(서울 : 중원문화, 1990), pp.14~15.

곧 最高權을 의미한다. 김일성이 전쟁을 하거나, 동맹을 맺거나, 영토를 병합하고, 어떠한 외교정책을 채택할 경우 그것은 유일적 영도라는 측면에서 북한인민들에게 쉽게 받아들여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 북한 당국은 북한인민들로 하여금 김일성 자신이 국가를 대신하여 "착취와 억압으로 부터 해방된 노동자, 농민, 병사 그리고 근로 지식인들의 이익을 방어하고 보호한다"고 철저히 믿게 하고 있다. 따라서 이제까지 북한안보의 주체를 구성해 온 것은 김일성 개인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北韓安保의 客體 : 김일성 唯一支配政權

安保의 客體란 무엇이냐 하는 질문은 전통적으로 국가안보의 이름으로 국가가 현실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과 관련된다. 그것은 무엇(안보 객체)을 保全함으로써 국가가 存立(국가안보)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對內의 諸價値,'[7] "국가의 영토, 정치제도, 문화,'[8] 그리고 '사회구조를 둘러싼 국가체계'[9] 등을 外部威脅 또는 潛在的 敵들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安保이다. 이와 같이 다양한 형태로 대변되고 있는 안보의 객체들은 국가이익이라는 개념으로 구체화 될 수 있다. 한 국가가 옹호 또는 보전하려고 하는 국가이익은 구체적인 실상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안전보장(국토의 안전 또는 이념 및 체제의 안전)과 번영(경제발전 및 복지향상)으로 표현될 수 있다.

북한의 핵심적 국가이익은 김일성 지배체제의 보존,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 독립유지, 남북통일 및 경제적 번영[10] 등으로 표현되고 있다. 그러나

---

7) Morton Berkowitz and P. G. Bocks, eds., *American National Security : A Reader in Theory and Prectice* (New York : The Free Press, 1965), p.x.

8) Hans J. Morgenthau, "Another Great Debate : The National Interest of the United States," Berkowitz and Bocks, eds., *American National Security*, p.35.

9) Morton A. Kaplan, *System and Process in International Politics*, 2nd ed., (New York : John Wiley Sons, 1967), p.152.

10) 레빈, "북한의 대외 군사관계," 이홍구·스칼라피노 공편, 「北韓과 오늘의 世界 : 80년대의 대외적응」(서울 : 法文社, 1986), pp.285~86.

우리가 여기서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은 그것이 어떠한 실질적인 내용을 담고 있느냐 하는 것을 판단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국가안보의 실질적인 객체는 특정국가가 당면하고 있는 현실속에서 구체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떤 형용사나 미사여구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적인 내용은 별개로 존재할 수 있다. 또한 이 때문에 여러 국가들이 유사한 표현을 쓰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체적인 실상간에는 다소간의 차이가 불가피하게 나타날 수 있다.[11] 그렇기 때문에 안보의 객체를 단순히 논리상으로 그럴듯하게 묘사한 것으로만 파악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공식적인 표현은 自己合理化에 목적을 두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명분상으로만 내거는 안보의 객체는 실질파악을 오히려 곤란하게 만들 수도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세계에서 유래없는 김일성우상체제 강화의 특징을 보이고 있는 북한의 실상을 고려해 볼 때,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 독립유지, 남북통일 및 경제적 번영 등은 김일성 유일지배체제를 보존·확대하기 위한 수단적 요소들로 간주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이 우선적으로 보전·확대해야만 한다고 생각되는 것은 김일성정권 자체이다. 또한 이러한 사실은 국가안보의 객체를 "그 국가체계내의 주어진 사회구조"로 인식하는 카플란(Morton A. Kaplan)[12]의 논리측면에서도 입증된다. 북한의 국가체계내의 사회구조는 곧 김일성을 정점으로한 노동당이 지배하는 唯一支配體制로 구조화 되어있기 때문에 북한안보의 객체는 김일성 唯一支配體制가 된다. 이렇게 볼 때 유일지배체제를 기본으로 하는 북한사회구조를 유지하는 것이 바로 북한 안보의 목표인 것이다.

3. 北韓安保에 대한 威脅

한 나라의 安保에 대한 위협은 국내외의 군사·비군사면으로부터 발생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리고 위협은 단지 외부로부터의 위협 뿐만 아니라 내

11) 정준호, 「국가유형별 안보론적 해석에 관한 연구」, p.23.
12) Kaplan, *System and Process in International Politics*, p.152.

부로부터 기인하는 위협도 무시할 수 없다.[13] 국내에서 일어나는 위협의 유형으로는 정치불안 및 사회혼란, 경제적 불안정, 범국민적 신뢰의 동요, 군부내의 동요 등을 들 수 있다. 외부적 위협이라고 한다면 기존 국가체제에의 도전 내지는 저지를 추구하는 외부적 세력 및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 전통적으로 볼 때 외부로부터의 위협이 국가안보개념의 지배적 요소였으며 이에 따라 국가안보의 구성요소는 자연히 군사위주 또는 군사편중적인 것으로 인식되어왔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제3세계의 中小國家들은 군사·비군사를 포함한 국내외적 위협요소를 안고 있는 취약한 안보적 현실에 직면해온 것이 사실이다. 북한의 김일성 유일지배체제(안보객체)는 외부적 위협 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다양한 내부적 위협에도 직면해 온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은 내부적으로 주체사상을 이용하여 집단내의 정치적·사상적 측면의 이질적 요소를 제거하여 동질화 시키는 데 주력함으로써 주민통합과 일체성을 유지하는 데 성공하였다고 볼 수 있다. 북한안보에 대한 정치적·사상적 측면의 내부적 위협을 제거하는 데 있어서 주체사상의 기능은 매우 효율적이었던 것이 사실이다. 또한 북한은 안보의 내부적 위협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데올로기 이용 외에도 군사적 수단을 필요로 해왔다. 실제로 북한은 對南 武力赤化統一의 당위성과 외부 특히 미제국주의의 전쟁위협을 과장하여 국방자위에 기초한 군비증강을 정당화하고 전사회를 兵營化 함으로써 내부적 안정을 유지해 왔다. 북한이 직면하게된 대외적 안보위협은 남한과 미국을 포함한 자본주의 국가들 뿐만 아니라 중국 및 구소련으로부터의 직·간접적 위협을 포함한다. 북한은 남한을 북한의 무력적화통일의 대상이자 직접적인 위협세력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 역시 북한의 대남무력적화통일 노력을 저해하는 세력일 뿐만 아니라 북한의 공산주의 국가적 현상유지의 붕괴를 노리고 있는 직접적인 위협세력으로 간주되고 있다. 또한 북한은 구소련의 팽창주의 정책을 경계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13) 최경락·정준호·황병무 공저, 「국가안전보장론－존립과 발전을 위한 대전략」(서울 : 法文社, 1989), pp.29～35.

중국의 직간접적인 정치·군사적 간섭의 위험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자 노력해 왔다. 북한은 자본주의 세계체제에 대응해서 설립된 COMECON(Communist Econmic Conference)의 회원이 되는 것을 거부했다. 북한이 COMECON에도 가입하지 않은 것은 自國이 경제적 측면에 있어서나 정치적 측면에 있어서도 동구국가들 경우처럼 구소련의 전일적 지배와 통제의 대상이 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려고 한 시도로 판단된다. 또한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북한은 中·蘇紛爭 이후부터 獨自路線을 고집하면서 자주성을 강조함으로써 중국으로부터의 안보적 위협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해왔다. 북한이 중국과 구소련에 대해서 "큰당과 작은당은 있으나 높은당과 낮은당, 지도하는 당과 지도받는 당은 있을 수 없다"[14] 고 선언함으로써 중국과 구소련에 대한 북한의 위협인식을 간접적으로 표명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북한의 대외적 위협세력에 대한 인식은 기본적으로 남한 및 반미제국주의에서 출발한 것임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실질적 측면에 있어서 북한이 구소련과 중국에 대해서도 排他主義的 特性을 보여온 것을 고려할 때, 구소련 및 중국 역시 김일성 유일지배 정권 유지의 주요 위협세력임에 틀림없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볼 때 북한 安保의 主體, 客體, 威脅 등의 세 가지 국면 모두가 김일성 유일지배 정권의 安保에 집중된다는 사실을 알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김일성 유일지배정권의 안보를 위해서 북한은 대남적화 목표 뿐만 아니라 대내적 위협요소 및 미국을 포함한 주변 강대국의 직간접적인 대외적 위협요소를 축으로 하는 안보관련 정책을 수립해야하는 부담을 안고 왔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안보정책의 한 수단인 군사정책[15]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수립되어 왔음을 부인할 수 없겠다. 그러면 실제로 이상과 같은 안보논리구조를 유

14) 「김일성 저작선집 4」(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68), pp.346~47.

15) 일반적으로 군사정책은 국가안보정책의 주요한 한 수단으로서 국가안보와 직결된 국가의 군사적 행위를 의미한다. 외부적 위협으로부터 국가안보를 보존하는 구체적인 핵심수단으로서 군사정책이 입안·수립된다. 달리말하면 국가안보는 군사정책의 거시적 목표가 된다. 이선호, 「國家安保戰略論」(서울 : 정우당, 1990), p.38. 그러나 북한의 안보는 김일성 정권안보에 집중되고 있는바 북한의 군사정책은 자연히 이러한 김일성 정권안보의 유지·확대를 위한 수단적 측면에서 수립·시행되어 온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지해온 북한이 과연 어떻게 그들의 군사정책을 전개해 왔는가를 분석해 보기로 하자.

Ⅲ. 김일성 政權下의 北韓 軍事政策 展開 樣相

북한의 안보논리구조를 고려해 볼 때 북한의 군사정책 역시 김일성 정권의 독점적 이익을 대내외적 위협으로부터 보호·발전시키기 위하여 수립·시행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이 지금까지 과도하리 만큼의 군사력을 지속적으로 증강해오면서 공세적 태세를 유지해온 것은 바로 김일성 유일지배체제의 보존 및 확대라는 정권안보 측면에서 이해된다. 실제로 지금까지 북한은 김일성 政權安保를 구축하기 위하여 ① 대남적 차원에 있어서 무력적화통일의 궁극적 달성을 통한 김일성정권의 지배기회를 최대화하고, ② 대내적으로 군비증강 및 전사회의 병영화 등과 같은 군사적 조치를 통하여 내부체제의 공고화를 기하고, ③ 국제적 측면에 있어서 중국 및 구소련에 대한 자주성을 확보하며, 동시에 미제국주의의 위협으로부터의 직접적인 방어능력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군사정책을 수행해 왔다.

1. 對南 武力赤化統一 戰略 : 김일성 政權의 支配機會 最大化

북한은 1948년 국가수립 이래 한국을 韓民族의 대표를 겨루는 경쟁적 위치에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의 안보에 직접적으로 위협이 되는 존재로 인식하여 왔다. 그러므로 정부수립 이후 이제까지 북한 김일성 유일지배정권의 중심전략은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였다. 김일성 정권은 일단 남한을 무력적화 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한반도에 있어서의 지배기회를 최대화 하려고 노력하였다. 그 결과 북한은 대남적화통일을 북한인민의 최대임무로 상정하여왔다. 북한은 당면목표의 하나로 남한을 포함한 전국적 범위에서의 민족해방을 공식적으로 천명함으로써 그들의 대남적화

통일 의지를 숨기지 않고 있다. 물론 이러한 북한의 공공연한 대남적화통일 의지의 표명은 내부체제 단속을 위해서 지나치게 강조되어온 측면을 간과할 수는 없겠으나 김일성 유일지배정권의 강화를 위해서 남한의 적화통일을 통한 정통성 확보의 필요성에서 기인한 것이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

북한은 대남무력적화통일을 성취시킴으로써 김일성정권에 대한 주요 위협적 존재를 제거하여 김일성 유일지배기회를 확장하고자 노력해 왔으며 그 노력의 일환으로 군사적 도발, 정치·경제적 경쟁 및 군비경쟁 등을 수행해 왔다. 물론 1950년 북한의 전면적 군사도발은 미국의 개입으로 실패로 끝났으나 정치적·경제적 경쟁과 군비증강전략은 끊임없이 추구되어 왔다. 특히 북한은 군사비 지출을 지속적으로 증대시켜 軍需産業을 과도하리만큼 확충·발전시키고 군비증강을 지속적으로 견지해오고 있는 실정이다.

전반적으로 볼 때 북한의 군사적 기본입장은 변함없이 강력한 對南 攻勢的 樣相을 견지하여 왔다. 1950년의 전면적 도발이나 그 이후의 지속적인 군사력 증강, 휴전선 일대의 땅굴 구축 그리고 크고 작은 대남 군사도발 및 테러 등 실질적 움직임의 차원에서 북한은 군사적으로 도발적이며 공격적 전략을 고수해온 것이다.

북한은 이러한 대남적화 공격전략을 위해서 강력한 군사력을 필요로 해왔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김일성은 1954년 12월 23일 인민군군정간부회의에서 "조국의 통일독립을 이룩하는 데서 중요한 문제는 인민군대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조건을 막론하고 군대를 강화함이 없이는 조국통일을 실현할 수 없으며 조국의 독립과 안전을 지켜낼 수 없습니다"라고 천명함으로써 군사력 강화의지를 밝혔다.

2. 內部體制 鞏固化를 위한 強兵政策

북한은 "한나라의 경제적 자립과 정치적 독립을 군사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국가안보를 위한 주체사상의 실천"[16]이라고 함으로써 군사적 방위능력이 다른 영역을 위한 필수 조건이며 모든 정책결정에 있어서 우선권을

부여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은 그들의 주체성이 자주국방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에게 있어서 주체사상을 기반으로한 강국으로서의 높은 명성을 세계적으로 과시하기 위해서는 가장 가시적인 역량표출인 무장능력의 강화가 필수적인 것이다. 특히 북한은 자주국방력 강화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한 국가가 스스로 방어할 힘이 없는 나라는 발언권이 없다. 만일 한 국가가 국가방위를 다른 국가에 의존한다면 그 국가들의 눈치를 살펴야 하며 자유로이 의사를 표시할 수 없게 된다. 지각있는 자는 누구나 현재 국제정치 분야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에서 이러한 경우를 쉽사리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17]

북한은 이러한 國防自衛를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 지침으로서 4대군사노선을 펴오고 있는 데 그 내용은 전인민의 무장화, 전국토의 요새화, 전인민군의 간부화, 군장비의 현대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북한의 이러한 국방력 강화의 제 조치는 일차적으로 대외적인 군사적 위협에 대한 防衛手段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전사회의 병영화를 통한 사회통제 및 國際的인 發言權의 증대를 위한 수단 측면에서도 고려되었을 것이다. 특히 북한은 강력한 국방력으로 "조선이라는 작은 나라가 세계에서 높은 권위와 존엄을 떨치고"[18] 있다는 사실을 과시하고 이를 통해서 대내체제의 안정화를 구축해온 것이다. 북한은 그들의 증강된 군사력을 바탕으로 제3세계 국가들의 인민해방전쟁을 위한 지원, 이들 국가들에 대한 무기수출 등을 통해서 북한주민들로 하여금 타국가들을 원조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서도 자부심을 갖도록 한 것 또한 사실이다.

결국 북한은 強兵政策에 의한 "전군, 전민, 전국이 무장한 강대한 나라" 그리고 "그 어떤 군사대국도 조선의 자주권을 함부로 건드릴 수"[19] 없는

16) Chang Ha Kim, *The Immortal Juche Idea* (Pyongyang : Korean Workers' Party Press, 1987), p.324.
17) Ibid., p.325.
18) 「민주조선」, 1993.5.8.
19) 위의 책.

주체나라임을 강조하여 국제적 위신을 증대하고 대내적으로는 전사회의 병영화를 통한 사회통제를 정당화함으로써 김일성 정권의 공고화를 추구해온 것으로 볼 수 있다.

3. 對 中國·舊蘇聯 斷折戰略 과 國防自衛政策

북한은 사회주의권의 두 강대국으로부터 심리적·정신적 개입의 간접적 영향 뿐만 아니라 군사적 침공과 같은 물리적 개입의 위협을 일찍부터 인식해온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주체사상이 그들의 중·소관계의 맥락에서 斷折戰略(delinking)으로 이해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20]

1953년 3월 스탈린 사망 몇달 후부터 스탈린의 우상숭배가 후르시쵸프에 의해 격하되기 시작하였으며[21] 이러한 후르시쵸프의 수정주의 영향은 동구사회주의권에서 먼저 폭발적으로 일어났다. 폴란드, 헝가리, 유고슬라비아와 같은 동구사회주의 국가들에서는 일찍부터 反蘇民族主義 감정과 수정주의가 팽배해 있었기 때문에 후르시쵸프의 수정주의 성향의 정책표방은 결국 이러한 反蘇感情과 수정주의를 공식적으로 촉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1956년 당원, 지식인, 학생, 공장 노동자에 이르는 모든 사회집단과 계급들에게 대중적으로 확산되어있던 불만이 폭발하여 전국적 혁명운동으로 발전한 헝가리의 대규모사건은 결국 소련군대에 의해서 진압되었다.[22]

---

20) 서재진, "主體思想과 民族主義의 關係," 民族統一硏究院, 「統一理念으로서의 民族主義」(서울 : 民族統一硏究院, 1993), pp.61~71.

21) 후르시쵸프는 1956년 20차 당대회에서 인류의 진보적 지도자, 세계의 영감, 소비에트 인민의 아버지, 과학과 학문의 거장, 군사적 천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천재 등의 최고의 찬사로 숭배되었던 스탈린이 사실은 과대망상증에 걸린 고문광이요, 대량 살륙자, 소련을 재앙으로 몰고 간 군사적 무식쟁이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난하였다. Leszek Kolakowski, *Main Currents of Marxism* (Oxford : Oxford University Press, 1978), pp.450~51.

22) 伊東孝之, "동구혁명과 비스탈린화," 「격동의 동구현대사」(서울 : 좋은책, 1990), p. 197.

북한은 이러한 일련의 국제적 사태에 직면하여 2가지의 위협에 봉착한 것으로 보인다. 하나는 스탈린 격하운동과 우상숭배 비판에 대한 심리적·정신적 위협이요, 다른 하나는 동구사회주의권의 사태에 소련이 무력으로 개입한 것과 같은 소련의 물리적 위협 가능성이다. 물론 북한은 소련의 무력개입을 '소련의 국제주의적 원조'라고 표현함으로써 소련의 위협에 대한 내심을 숨기고 있으나 실제로는 이러한 소련의 개입을 크게 염려한 것으로 보인다. 1963년 10월 28일 "사회주의를 옹호하자"는 제하의 로동신문 사설은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원조를 준다는 자만심으로 그것을 정치적 간섭과 경제적 압력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와 무관하다. 자본주의 나라간에 적용되고 있는 것과 같은 부대조건이 붙어있는 '원조,' 내정간섭을 전제로한 '원조'는 사회주의 나라간에는 있을 수 없으며 또 절대로 있어서는 안된다. 사회주의 나라의 원조는 그것을 받는 각각의 나라의 주권과 독립을 강고히 하고 사회주의 진영의 강화발전을 위한 것으로 되어야 한다."[23]

또한 북한은 개인숭배비판 운동과 수정주의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이러한 심리적·정신적 개입을 사전에 억제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다.

"어떤 당의 결정이나 조치는 그 당 내부에서만 의무적인 것이지 결코 다른 당의 활동을 규제할 수 없다. 특히 소위 개인숭배반대 운동을 다른 당에 내리 먹이려 하고 그것을 간판으로 해서 형제당, 형제나라의 내정에 간섭하며 그들 나라의 당지도부를 전복하기 위한 활동을 하는 것은 절대로 허용되지 않는다. 확실히 개인숭배반대 소동에 의해 수많은 형제당이 소용없는 열병을 앓고 국제공산주의 운동이 커다란 손실을 입는 것이 현실이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일부사람들에 의해 개인숭배반대 소동은 계속되고 있다. 이런 행동은 국제공산주의 운동에서 배격해야 한다."[24]

결국 북한은 외부의 물리적 개입과 외부사조의 침투에 직면하여 차단과 단절 그리고 독자적인 사상무장 및 물리적 힘의 축적을 필요로 하였다. 이

23) "사회주의 진영을 옹호하자," 「로동신문」, 1963.10.28 사설.

24) 위의 글.

러한 상황하에 오늘날 북한의 모든 정책의 지침이 되고 있으며 대외적 단절 및 폐쇄성을 요구하는 주체사상이 맹아된 것이다. 이와 같이 외세의 개입과 외부사조 유입으로부터 김일성 정권보존을 위한 이데올로기로서 주체사상이 등장했다는 사실은 북한이 구소련으로부터 느꼈던 위협을 시사해 준다. 특히 북한은 1980년 2월 6일부터 7일까지 불가리아의 소피아에서 개최된 「사회주의국가의원동맹 대표자협의회」에서 소련의 아프카니스탄 침공을 지지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공동성명에 조인하지 않음으로써 소련의 아프카니스탄 침공에 거부감을 표시한 것은 그 침공을 북한의 안보에 대한 잠재적 위협요인으로 인식하는 위기의식을 반영한 것이다.[25]

한편 중국은 소련의 수정주의를 북한과 같이 비난하였지만 中國式의 社會主義 建設을 위하여 文化革命을 추진하였다. 이것 역시 동구의 市民蜂起나 다름없는 밑으로부터의 상층 엘리트에 대한 저항의 형태를 나타냈다. 북한은 이러한 사태에 직면하여 敎條主義의 반대를 천명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중국의 文化革命을 비난하였다. 북한이 중국의 문화혁명의 극단적인 성격에 심한 불안을 느낀 것은 사실이며 이러한 문화혁명의 여파가 북한내로 파급되는 사태를 원치 않았던 것이다.[26] 실제로 북한은 "남의 경험을 기계적으로 모방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면서 "공산주의자들이 형제당들의 경험을 배우는 목적은 그것을 자기 나라 혁명에 도움이 되도록 하자는 데 있다"고 함으로써 중국의 敎條主義를 추구하는 내부의 세력들에 제동을 걸었던 것으로 보인다.[27] 1967년 1월부터 중국이 홍위병을 통하여 공공연히 북한을 비난한 데 대해 북한은 이에 맞서 중앙통신사 성명으로 중국의 북한 비난벽보에 대해 반박하였으며 그후에도 압록강, 두만강에 확성기까지 동원하여 중국을 대대적으로 비난하였다. 물론 이러한 중국·북한 갈등관계는 1969년 7월 1일 「로동신문」을 통하여 "세계평화와 안전을 위해 중국인들과 하나의 전선에서 싸울것이다"라고 천명 함으로써 약 4년만에 해빙되기 시작하였다.

---

25) 정진위, 「北方3角關係」(서울 : 法文社, 1985), p.175.
26) 위의 책, p.145.
27) 「로동신문」, 1966.8.12.

그 후에 있어서도 북한은 중국의 實用主義 대내외정책이 북한내에 직접·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불안감을 느껴왔음에 분명하다. 특히 중국의 스탈린주의 및 모택동주의 정책비판이 북한내부의 테크노크라트로 파급되는 사태를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중국의 이데올로기 퇴조와 모택동 개인숭배에 대한 비판이 김일성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임은 두 말할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28]

또한 중국·인도 국경분쟁, 중국·월남전쟁 등을 통하여 북한이 비록 중국의 입장을 지지하였지만 내심으로는 소련의 아프카니스탄 침공 못지않게 중국의 大國霸權主義에 대한 북한의 안보위협 인식은 대단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은 이러한 사회주의 大國霸權主義에 대한 위협의식을 베트남의 캄보디아 침공에 대해 主權尊重, 大小霸權主義 反對 등을 골자로 하는 統一團結戰略을 강조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29]

특히 북한은 이러한 위기의식과 관련하여 과거에 "어떤 사람들은 원조에 빙자하여 형제당, 형제국가의 내정에 간섭하며 자기의 일방적인 의사를 강요하고 있다.…더우기 소위 〈개인미신반대〉 운동을 다른 당들에게 내리먹이려 하며 그것을 간판으로 하여 형제당, 형제국가들의 내정에 간섭하고 이나라들의 당지도부를 전복하기 위한 활동을 감행하는 것은 절대로 허용될 수 없다"[30]고 지적한 바 있다. 그 맥락은 중국·소련을 겨냥한 대국주

28) 정진위, 「北方3角關係」, p.193.

29) 북한은 1979년 1월 구소련의 지원을 받은 베트남의 침공으로 캄보디아의 프놈펜이 함락되자 1979년 1월 12일자 「로동신문」 사설을 통해 "베트남의 캄보디아에 대한 침공은 캄보디아에 대한 엄중한 침해일 뿐만 아니라 사회주의 위업에 대한 배신이며 국제법과 평화에 대한 도전"이라고 규탄하면서 "지배주의에 대한 반대"와 "폴포트 정권에 대한 계속적인 지지"를 선언하였다. 「로동신문」, 1979.1.12 ; 북한 당국의 베트남 침공에 대한 공개적 비난은 대부분의 사회주의국가들이 극도로 자제해온 전례와 비교해 볼 때 대단히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며 동시에 이것은 북한 자신이 캄보디아와 마찬가지로 타 사회주의국가 특히 국경을 함께하고 있는 중국 및 구소련으로부터 고유의 주권이 유린되는 상황에 대해서 매우 우려하고 있다는 사실이 간접적으로 표현되었다는 가설을 설정할 수 있다. Robert Charvin, Albert Marouani, *Les Relations Internationales des Etats Socialistes* (Paris : PUF, 1981), p.34, p.44 참조.

30) 「로동신문」, 1963.10.28.

의자들의 내정간섭 및 대국주의자들의 '응당한 반격'에 대한 경고 이기도 하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북한은 중국·소련으로 부터 비록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크게 의존해 오면서도 자주성을 강조하여 물리적으로나 정신적·심리적 차원의 간섭을 최대한 배제하고자 노력해온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을 고려하여 볼 때 북한의 自主路線은 중국·소련의 대국주의의 영향을 최소화 또는 완전히 벗어나 김일성 유일지배체제 수호노력의 일환이며 이는 군사부문에 있어 국방의 자위정책과 연결됨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북한의 國防自衛 정책은 두 가지 내용을 함축하고 있다. 그것은 대남무력적화통일을 통한 "남조선 해방"과 "남조선을 강점하고 있는 미제국주의자들의 침략책동"으로부터 그들의 "혁명의 전취물을 튼튼히 보위하며 조선에서 평화를 수호하기 위하여 국가의 방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하는 데 있어서 중·소의 군사원조를 최소화하여 자체의 역량에 보다 의존하고자 하는 의도와 북한에 대한 중·소의 무력개입 위협으로부터 스스로 보호하고자 하는 의미를 동시에 담고 있다. 전자의 경우 북한은 군사원조를 볼모로한 중·소의 대국주의적 간섭의 가능성을 배제하고자 하는데 주목적을 두고 있다. 이에 대해서 김일성[31]은 "오늘 국제공산주의 운동에서는 자기의 견해와 로선을 다른 당들에 강요하며 그것을 접수하지 않는다하여 압력을 가하고 내부문제에 간섭하는 현상들이 계속되고"있음을 우려하였다. 아울러 "우리 당도 대국주의자들의 내정간섭을 받은 쓰라린 경험을 가지고" 있음을 솔직히 시인하고 "우리는 앞으로도 온갖 내정간섭을 반대하고 대국주의를 경계하여야" 할 것을 강조하였다. 북한이 자주노선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군사력을 크게 강화했다는 점은 후자의 입장을 잘 설명하는 것이라 하겠다.

4. 對美·日 防禦政策

판문점 휴전협정 이후 북한은 미국에 의해서 제도적 차원에서 뿐만 아니

31) 「김일성 저작선집 4」, p.348.

라 군사적 차원에서 이중으로 포위되어 왔다. 미국은 북한을 국제적으로 완전고립시켜 왔으며 유엔기구의 무대에서 북한을 '평화파괴'국가로 낙인찍히게 하였다. 또 다른 한편으로 북한은 한·미 상호방위조약(1953.10) 뿐만 아니라 미·일안전협정(1960.1)에 의해서 군사적으로나 전략적으로 완전히 포위되었다. 사실상 미·일협정은 한국의 안전이 일본의 안전에 필수불가결하다는 원칙에 기반을 둔 한국 관련조항[32]을 담고 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한·미·일 정치·군사동맹의 복잡한 체계가 형성되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한국동란중이나 이후 미국의 여러 정치지도자들의 강경한 조치를 통하여 북한을 정치적, 군사적 그리고 외교적으로 고립시킨데 대한 평양정권의 태도이다. 1961년 4월 17일 북한은 북한 외상 박성철이 유엔총회 의장에게 보낸 전문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미국정부는 명백하게 유엔헌장을 유린하였으며 유엔의 권위를 계속적으로 해치고 있다.…미국정부는 유엔의 이름을 사취하여 한국전을 감행하였으며 동시에 남한을 점령함으로써 한국의 평화적 통일을 방해하고 있다. 유엔기구는 헌장의 정신에 따라 미국의 군대는 물론이고 모든 외국군대를 남한으로부터 철수토록하는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 한국의 문제는 한국인들에 의해서 해결되어야만 하며, 한국인들의 내부문제에 어떠한 외세의 간섭도 인정될 수 없다."[33]

여기에서 북한의 미국에 대한 한결같은 강경자세와 적개심이 그대로 표출되고 있다. 북한은 특히 미국에 의해서 주로 부추켜지고 있는 적대세력

32) 동조약 제4조에 "일본국의 안전과 극동에서의 국제 평화 및 안전에 대한 위협이 발생할 때는 언제나 양국(미·일)중 어느 일방 체약국의 요청에 의해 협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시에 동조약 6조에는 "일본국의 안전에 기여함과 아울러 극동에 있어서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기여하기 위해, 미합중국은 그 육군, 공군 및 해군이 일본국에서 시설 및 구역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한다"고 밝힘으로써 한국을 포함한 극동에서의 안전을 위해서 미국과 일본은 상호 협력의지를 구체화 하였다. 鄭光河, 「일본방위정책의 이상과 현실」(서울 : 慶南大學校 極東問題硏究所, 1989), p.293 일본의 방위관련 조약 및 문서 참조.

33) Documents officiels de l'assemblee generale de l'Organisations des Nations Unis, Annexes, Point 21, 15 me session (New York, 1960-1961), p.2.

들에 둘러싸여 안보적 결핍을 심하게 인식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의 이러한 안보적 결핍 인식은 한국내의 미군주둔의 현실에서 보다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 사실상 미국의 개입으로 한반도 무력통일의 꿈이 좌절된데 대한 피해의식에 사로잡혀있는 북한에게 있어서는 미군의 한반도 주둔이 그들 안보의 최대 위협요소일 뿐만 아니라 한반도 적화통일의 가장 큰 장애물이었던 것이다. 북한의 미국에 대한 위협인식은 김일성 자신의 솔라즈(Solaz)의원과의 대화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내가 이자리에서 남침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하더라도 당신은 내말을 믿지 않을 것이다. 만약 당신들이 우리는 침략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한다 하더라도 우리들은 당신의 말을 믿지 않을 것이다."[34]

북한은 미국이 상호방위조약을 근거로 미군을 주둔시킴으로써 근본적으로 아시아에서의 헤게모니 장악을 위한 전진기지로서 남한 뿐만 아니라 북한까지 영구히 정복하는 것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같다. 그러나 북한의 이러한 직접적 對美 威脅認識 외에도 남북한 상호간의 무력충돌시 미국의 확고한 개입의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북한은 그만큼 더 큰 안보의 결핍을 수반하고 있는 셈이다. 지하시설물 설치, 군사기지와 주요산업시설 요새화, 핵무기를 포함한 대량살상무기 개발 등은 기본적으로 북한의 대미 안보위협 인식을 잘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북한과 일본의 전략관계는 미국의 위협과 같이 직접적 이라기 보다는 미·일 안전보장체계와 한·미상호안보체계간의 관계성 속에서 파악되어야 한다. 물론 일본이 한국을 정복하여 오랫동안 지배하여온 역사를 고려하여 볼 때 일본의 직접적 위협에 대한 북한 당국의 인식이 전혀 배제될 수 없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러한 인식은 부차적인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일본이 자국으로 하여금 완전한 의미에서 지역방위의 능동적 역할을 수행토록 하는 정치·군사적인 구체적 조치를 취하려는 징후를 크게 보여오지는 않았지만 지금까지의 군사력 구축만으로도 북한을 불안케하는 요소로

34) Stephan Solaz, "The Korean Conundrum, A conversation with Kim Il Sung," *Report of Study Mission to South Korea, Japa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nd North Korea, July 12~21, 1980* (U. 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81) 참조.

작용할 수는 있다. 그러나 북한은 그것보다는 일본이 한국과의 경제교류를 통해 한국의 경제 특히 방위산업을 강화시킴으로써 군사력 증강에 일조하고 있는 데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나아가 이러한 경제관계를 넘어선 한·미·일 군사적 연대성 강화에 실질적인 위협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북한은 극동에서 일본, 미국 및 남한이 안보협력체제를 형성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우려의 목소리를 높여왔다. 이는 미·일협력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우려에 더하여 한국과의 상호유대 강화조짐에 보다 직접적으로 기인한 것이다. 1981년 1월 9일 노동신문의 "사악한 도발계획"[35]이라는 제목하의 논평기사에서 북한은 일본이 군수회사를 통하여 남한에 "암암리에 다수의 곡사포 및 박격포들과 대포의 부품들을 공급하였으며" 또한 "중화기의 제조를 위한 기술문서들을 제공하였"음을 비난함과 동시에 이러한 일본의 지원에 힘입어 남한의 '괴뢰도당'을 전쟁과 파시즘, 특히 북한에 대한 "모험에 찬 군사도발"의 획책이 고무될 수 있음을 경고하였다.

또한 북한은 한·미합동 팀스피리트 훈련을 비난하면서 일본이 이러한 도발적 연습의 基地가 되고 있으며 일본이 동훈련의 참가부대라는 것은 "한국에서의 새로운 전쟁을 위한 미제국주의자들의 준비에 일본이 직접 참여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36]이라고 강변함으로써 또다른 일본의 위협요소를 지적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북한의 미국과 일본에 대한 직·간접적 위협인식은 남한에 대한 직접적 위협인식과 연결될 때 보다 심화된다. 한국이 미국 및 일본과 밀접한 군사적 연대를 강화할 때 북한의 김일성 유일지배체제 유지에 있어서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은 분명하다. 이에 대해서 북한은 미·일의 직간접적 위협을 완화시키기 위한 한 방법으로 對美·日關係를 개선하려는 실질적 노력과 함께 군사적으로는 군사강대국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방위체계를 발전시켜 나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4대군사노선의 하나인 전국토의 요새화 및 군장비의 현대화는 북한이 美·日을 포함한 강대국들의 군사적 위협에서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防禦政策의 일환으로 보인다.

35) 「로동신문」, 1981.9.1.

36) *Pyongyang Sinmun*, January 11, 1981 in *FBIS*, Jan. 12, 1981.

실제로 북한은 전국토의 요새화 노선에 따라 비무장 지대의 요새화는 물론 주진지 및 주요전략기지 요새화와 더불어 자연지리적 조건에 적절하게 북한 전역을 거의 防禦施設化하고 공중공습으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생산시설 역시 최대한 지하화하기까지 하였다. 그리고 군장비의 현대화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의 핵개발 의혹이다. 핵무기가 사용상의 利點 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보유함으로서 상대방의 위협을 억지할 수 있다는 점의 효용성을 고려할 때 북한의 핵개발은 韓·美·日 안보체제, 특히 美國의 위협을 무력화 시키는 방어전략 구축에 있어서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김일성 정권하의 군사정책 양상을 고려해 볼 때, 북한은 기본적으로 "공격적 방어"[37] 군사정책을 수행해 온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군사정책은 김일성 정권안보 차원의 한반도 무력적화통일전략을 위해서나 대내외적 위협 즉 주변 4강의 직·간접적인 정치·군사위협으로부터의 방어를 위해서는 최선책이었는지는 모른다. 그러나 小國(small state)인 북한이 이러한 군사정책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연히 북한의 경제를 침체시켜올 정도의 경제적 부담을 감수하지 않으면 안된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면 김정일 정권은 이러한 自繩自縛型의 지나친 군비부담을 요구하는 "공격적 방어"정책을 지속할 것인가? 아니면 이의 변화를 시도한다면 어떠한 형태를 띨 것인가?

Ⅳ. 김정일 政權下의 北韓 軍事政策 展望

1. 김정일 政權下 北韓安保의 基本 論理構造

북한사회의 중심축을 형성해 왔던 김일성 개인이 사망하고 지금은 김정

37) Peter Hayes, *Pacific Powder keg : American Nuclear Dilemmas in Korea* (Lexington : Lexington Books, 1991), pp.141-52.

일이 그 자리를 메꾸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정일의 권력승계 작업은 이미 1970년대 초부터 본격화 되었다. 실제로 김정일은 1973년 조선노동당의 조직 및 선전선동 비서, 1974년에는 당정치위원으로 취임함으로써 북한 권력의 핵심기구인 당을 통제해 나가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였다. 특히 1980년 10월 10~14일까지 개최된 조선노동당 제6차대회에서 김정일의 당적 지위가 공식화 되었다. 우선 김정일은 동대회 기간 중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정치위원회 위원, 당중앙위원회 비서국 비서, 당중앙군사위원회 군사위원으로 선출됨으로써 권력의 전면에 부상하였다.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는 제6차 당대회에서 신설된 기구로서 당규약에는 "전원회의와 전원회의 사이에서 당중앙위원회 명의로 당의 모든 사업을 조직, 지도"하는 기능과 임무를 가졌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은 정치국 상무위원회와 정치위원회로 구성되는 비상설기관으로서 政策批准 및 決定機關이다. 국가권력 고위층에 해당되는 인물들이 여기에 소속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당정책과 정책입안에는 자문형식의 협의체적 의미만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정치국은 비상설결정심의기구로서 상징적 기구에 불과하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일을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으로 선출하게 된 것은 권력승계를 위한 김정일의 당적 지위를 확정하고 실질적인 당의 책임자로서의 역할을 제고시켜 후계자로서의 면모를 과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신설 당시 5명(김일성, 김일, 오진우, 김정일, 이종옥)으로 구성된 정치국 상무위원회에서 김정일이 서열 5위를 점했으나 이듬해 김정일은 김일성 다음의 序列 2위로 격상됨으로써 명목상 북한에 있어서 제2인자적 지위를 과시하게 된 것이다.

이에 반해 비서국은 "필요시 당 인사 및 당면문제 등 당내문제를 토의, 결정하며 그 결정의 집행을 조직·지도"(당규약 제3장 26조)함으로써 당 사업의 실무기구로서의 기능을 다하고 있다. 비서국은 당중앙위원회의 당 행정실무집행기관으로서 모든 정책노선과 당의 견해는 이 기구로부터 출발하도록 되어 있는 상징적 최고정책입법기관이다. 비서국에는 총비서(김일성)가 있고 바로 아래 조직화를 담당하는 조직비서와 사상개조를 담당하는 선전선동비서가 있다. 당 제6기 제1차 전원회의 이후부터 김정일이 비

서국 비서로 선출되어 이를 직접 관장해오고 있다. 조직 및 선전선동비서(김정일) 휘하에 여타 부문 담당비서들이 존재하고 있으나, 북한은 民主主義的 意味를 부각시키기 위해 이들의 권위를 조직 및 선전선동비서의 그것과 형식상으로 동등한 것으로 밝히고 있다. 결국 당 제6기 제1차 전원회의 이후부터 김정일이 조직 및 선전선동담담 부총비서격인 조직 및 선전선동비서직을 장악함으로써 당의 실질적이고 전반적인 업무를 실행해 왔다고 볼 수 있다.[38]

또한 1990년대 들어와 김정일은 군사고유의 지도권을 단계적으로 移讓받게 됨으로써 명실상부하게 북한의 "일체 무력을 지휘통솔"할 수 있는 지위를 굳히게 되었다. 1990년 5월 24일에서 26일에 걸쳐 진행되었던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1차회의에서는 '국가지도기관'선거를 통하여 중앙인민위원회 산하에 있던 국방위원회를 중앙인민위원회와 同格의 기관으로 확대개편하였다. 국방위원회는 원래 대내정책위원회, 대외정책위원회, 사법안전위원회, 법제위원회, 경제정책위원회 등과 함께 북한의 최고권력기관인 중앙인민위원회의 하부기구로서 존재해왔다(1972.12.27. 수정헌법, 제7장 제105조 참조). 이와 같이 중앙인민위원회에서 독립, 확대개편된 국방위원회에서 김정일이 제2인자에 해당하는 제1부위원장(위원장 : 김일성)으로 임명됨으로써 군사 고유의 指導權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단계에 진입하게 되었다. 더 나아가 1991년 12월 24일 김정일은 군최고사령관직을 이양받았으며 이어서 1992년 4월 20일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수稱號를 수여받게 되었다. 최고인민회의는 1993년 4월 7~9일까지 3일간에 걸쳐 개최된 제9기 제5차회의에서 김정일을 마침내 "국가주권의 최고군사지도기관"인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하게 되었다. 이렇게 함으로써 김정일은 지난 1980년 제6차 당대회를 계기로 김일성의 후계자로 공식 부각된 이래 13년만에 핵심통치 기구의 수장 자리 중 하나 즉 軍統帥權을 완전 이양받게 된 것이다. 이렇게 볼 때 김일성은 그의 생존시 당을 비롯한 모든 부문에서의 2인자(군사부문 지휘권 완전이양)적 권한을 김정일에게 완

38) 귀순자 김정민씨의 증언.

전 이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김일성이 사망하고 난 지금 김정일이 김일성의 절대적 권력을 완전 장악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만큼 현재의 북한안보의 주체는 김정일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김일성 사후 북한은 공공매체를 통하여 김정일 중심으로 일치 단결해 나갈 것을 지속적으로 강조함으로써 김정일 유일지배정권에 대하여 정통성을 부여해 오고 있다. 북한 당국은 지난 8월 28일 「청년절」 3주년을 맞아 각종 언론매체를 동원하여 전체 청년들에게 김정일을 옹호 보위하는 근위대·결사대가 될 것을 촉구하는가 하면, 사로청원들의 김정일에 대한 충성맹세 모임(8.17)에서는 김정일만을 충직하게 따르는 '충성의 전위투사'가 될 것을 다짐한 것으로 전해진다.[39] 이렇게 볼 때 향후 북한안보의 객체는 김일성 유일지배체제를 승계한 김정일 유일지배체제로 굳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김정일 정권하의 북한안보에 대한 위협은 한층 심화된 상태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김정일은 부자세습에 의하여 권력을 장악하게 되었기 때문에 김일성의 유일지배독제체제 통제 메카니즘을 그대로 유지하지 않으면 안된다. 즉 그의 정권은 폐쇄통제체제를 그대로 유지해야 하는 숙명을 지니고 있다. 반면 한반도 주변세계는 이러한 폐쇄통제체제를 위협하는 개방화 정책을 심화시켜 나가고 있다. 대내적으로도 경제적 불안, 부정부패 심화, 김정일에 대한 상대적인 불만감 팽배 등은 김정일 승계정권을 위협하는 주요 요소들이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김정일 정권하 북한 안보의 기본 논리구조는 김일성 때의 그것과 별 차이가 없다. 그러면 이러한 안보 논리구조 하에서 김정일은 그의 정권 공고화를 위해서 어떠한 군사정책을 수행할 것인가?

2. 김정일 政權下의 北韓 軍事政策 展望

1990년대 들어 북한정권의 정책결정자들은 한반도 안보환경의 구조적 변화를 그들의 체제 또는 정권자체의 존립을 위협하는 최악의 상황으로 간

39) 「중앙방송」, 1994.8.26.

주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국제적인 상황변화는 북한에게 상당히 불리하게 전개되었다. 구소련의 붕괴를 포함한 사회주의권의 몰락으로 새로이 형성된 신국제질서의 구도는 북한을 국제적으로 고립시켜 나갔으며 특히 군사적으로도 중국 및 구소련과의 동맹관계가 약화 또는 변질되어 감으로써 북한의 안보가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는 상황에 처해왔다. 실제로 북한은 이러한 안보상황의 변화를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이 사회주의 나라들에 대한 사상문화적 침투책동을 악랄하게 벌이고 있는 조건"[40]으로 규정함으로써 정권안보에 대한 근본적 위협인식을 직접적으로 시사한 바있다. 따라서 북한은 이러한 외부적 위협을 타개하기 위하여 실제적인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왔는데 그 내용은 외부로부터의 단절 및 폐쇄전략으로 집약된다. 북한은 "사회주의 사회에 남아있는 낡은 사상잔재를 극복하고 외부로부터 온갖 불건전한 사상의 침습을 막기 위해서는 사상혁명을 힘있게 벌여 사람들을 주체형의 공산주의 혁명가로 만들어야"한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나아가 북한은 "위대한 주체사상을 구현하고 있는 우리당의 노선과 방침은 우리식 대로 살아가기 위한 강령적 지침이다. 우리식의 사상관점과 사고방식이란 다름아닌 우리당의 로선과 방침대로 사고하는 것이다. 우리당의 노선과 정책과 어긋나는 그 어떤 사상도 우리 내부에 침습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온 사회에 주체사상과 그 구현인 우리 당의 노선과 정책만이 차넘치게 하여야 한다"[41]고 함으로써 우리식 사회주의의 우월성과 우리식 사회주의 고수를 인민들에게 인식시키고자 노력하였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중국, 동구, 구소련에서의 개혁·개방과 무관하게 북한은 더욱 '우리식'대로 살아가야 함을 고수하고, 이들 사회주의권의 개혁바람이 북한에 침투하는 것을 철저히 막기 위해서 사상적으로나 정치·군사적으로 강력히 무장하지 않으면 안됨을 강조하는 것이다.[42] 이와 같이

40) 김정일,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 「로동신문」, 1991.5.27.
41)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사고하며 일해가자," 「조선중앙방송」, 1991.9.2.
42) 북한에 인민정권이 수립된 이후 김일성 정권은 크게 보아 2차례에 걸쳐 심각한 외부로부터의 위협에 직면해 온 것으로 보인다. 그 하나는 1953년 스탈린 사망이후 사회주의권의 변화이고 또다른 하나는 1990년 초를 전후하여 구소련 붕괴로 야기된 세계 사회주의체제 자체의 몰락이다. 전자의 경우에 있어서도 북한은 사상의 주체성을 강조

북한은 1990년을 전후한 사회주의권의 붕괴로 말미암아 제기되는 외부로부터의 위협을 차단하기 위해서 우리식 사회주의 원칙을 고수하면서 그의 우월성을 발양시킴과 동시에 사회주의 건설의 총노선인 김일성정권을 더욱 강화하는 기초위에서 사상·기술·문화의 대혁명을 부추겨 왔다. 이에 덧붙여 북한정권 내부의 權力移讓期에서 나타나는 과도적 상황요인들은 북한으로 하여금 대외적인 유연대응 태도 보다는 폐쇄적이고 강경한 자세를 견지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북한의 권력세습 작업은 비교적 안정된 수준에서 이루어 지고 있지만 父子世襲에 대한 북한내부로부터 이데올로기적 불만과 김정일의 지도력에 대한 문제, 당과 관료, 군부 및 일반 주민들의 김일성에 대한 충성심을 김정일에게로 轉移하는데 대한 난관 등이 북한세습정권의 정통성 문제로 귀결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은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편으로 먼저 김정일 世襲政權의 정통성과 강대성을 과시하기 위해서라도 외부의 위협을 보다 강조함과 동시에 이에 대처하기 위해 공격적이고도 폐쇄적인 정책을 지속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1990년대 들어 북한은 대외적 고립과 내부적인 경제난에 직면하여 전례없이 유화적으로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왔다. 美·日과의 관계개선에 대한 강한 의지 표명,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南北사이의 和解와 不可侵 및 交流·協力에 관한 合意書」 서명 등은 이러한 북한의 宥和的 態度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에 관련한 북한 당국의 태도를 주시하여 보면 북한은 기존의 기본노선에 있어서 어떠한 근본적인 변화징후를 보임이 없이 오히려 내부적으로 그와 상반되는 정책을 강화해 온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북한이 남북합의서 서명 이후 수차례의 남북고위급회담에 응해온 것 또한 그것의 이행을 통하여 진정으로 남북관계를 개선하자는 데 주목적이 있었다기 보다는 미·일 관계개선 카드로 활용하는 등 전략적 목적에 초점을 둔것으로 판단된다.[43] 또한 북한의 미·일관계개선의 카드는 군사안보적

하고 이를 통해서 당시 사회주의권에서 크게 번져온 변화의 물결을 차단하기 위해 맹목적인 사회주의 연대를 단절하고 자주노선 선택의 의지를 밝힘과 동시에 군사적으로로 '국방자위'의 노선을 견지하면서 군비증강노력에 박차를 가하였다.

43) 유영옥, "북한정치체제와 권력구조의 변화전망," 「통일문제연구」, 제4권 3호 (1992 가을), p.29.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경제적 측면에서도 중요성을 갖는다. 북한이 미국 및 일본과 어떠한 형태로든지 관계를 개선한다는 것은 한반도에 있어서 미국과 일본의 직접적인 군사적 개입을 어느 정도 봉쇄할 수 있는 효과를 가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韓·美 同盟關係를 약화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으며, 美·日로 부터의 경제적 원조를 유인할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현재 김정일의 정권유지에 있어서 가장 취약점으로 나타나고 있는 경제문제와 같은 기본문제의 해결 없이는 우리식 사회주의를 강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유지해나갈 수도 없을 것이므로 북한은 경제문제 타개에 필요한 원조 등 국제적 협력을 유인하기 위해서라도 美·日과의 관계개선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지난 1994년 10월 21일 미·북핵협상의 타결로 북한의 대미·일 관계개선 가능성이 한층더 커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북한의 美·日 관계개선 노력은 본격적인 북한의 대외적 개혁·개방정책을 표방하는 정책적 전환을 의미하기 보다는 제한적 이익을 획득하기 위한 전술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김정일이 권력승계과정의 과도기적 현상을 극복하고 자신의 권력기반과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정책적 성과를 필요로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적 성과는 현재 북한의 장기적인 경제침체의 회생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다. 경제회생을 위해서 북한은 실질적인 경제개혁·개방조치를 표방할 수 밖에 없는데, 문제는 내부적 문제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소외 또는 차단으로 통제해 나가지 않으면 안되는 북한체제의 폐쇄적 특성으로 인하여 그들의 개혁·개방정책의 시행이 그만큼 제약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제약 속에서 북한은 매우 소극적이고 제한적인 개방정책을 시도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다. 특히 1990년대 초 북한은 대외개방 관련 정책을 보다 제도화시켜 놓았다. 북한은 1992년 4월 헌법을 개정하여 外國企業의 權利와 利益保護 규정을 삽입하였다. 나아가 북한당국은 1992년 말에 가서 외국인 투자법, 외국인 기업법, 합작법 등을 제정하였으며, 1993년 2월 6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을 통해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외국인 투자 기업 및 외국인 세금법·외환관리법·자유경제무역지대법 등 세가지 외국인투자관련법을 제정·발표함으로써 대외경제개방에 대한 강

한 의욕을 표방하였다. 특히 1994년에 들어와서는 경제개방과 관련한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단행했다.[44]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북한은 현재 군사부문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는 자원들을 민간부문에 재분배하면서 점진적인 개혁을 통한 경제성장을 도모하여 체제안보능력을 제고할 필요성 조차도 인식하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정책대안은 경제회생을 통한 정권안보 확보 이전에 권력승계 과정에서 파생될 수 있는 불만세력을 자극시켜 김정일 정권을 붕괴시킬 수 있는 위협요인으로 보다 강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정권안보 측면에 있어서 북한 당국은 당분간 개혁·개방의 심화를 통한 정권유지정책을 적극화 하기 보다는 외부로부터의 정권 불안정 요인을 차단하기 위한 주체사상 강조 등의 이데올로기적 결속작업과 체제선전을 통하여 현정권의 유지를 도모할 가능성이 더 크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김정일은 군사적으로도 비록 대남 모험주의와 같은 強硬路線을 당분간 지양할 것이지만 그의 정권유지에 필수적인 군사적 우위확보 중심의 군비증강 정책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다. 대신에 북한은 자체 경제능력의 저하라는 상황을 고려하여 지나치게 소모적인 군비증강정책을 피하되 기존에 개발해오던 핵무기를 포함한 공격형 무기체계 즉 기습공격 및 대량살상 무기체계를 더욱 발전시켜 군사적 우위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동시에 군비통제회담과 같은 일련의 군사적 긴장을 감소시키는 명목상의 협상창구를 개설하는 등 이중정책을 구사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총체적인 군사적 억제기능 측면에 있어서나 상대

---

44) 1994년 경제개방 관련 조치는 다음과 같음.
1월 : 합영법 개정
2월 : -자유경제무역지대 외국기업 상주 대표사무소 규정
-외국투자 기업 및 외국인 세금법 시행규정
3월 : 외국인 기업법 시행규정
4월 : 자유무역항 규정
6월 : -자유경제무역지대 외국인 체류 및 거주규정
-외화관리법 시행규정
9월 : 토지임대법 시행규정

적인 개발비용 측면에 있어서도 효율성이 높은 것인 바, 경제력 저하로 난관에 봉착해 있는 상황에서 김정일 정권안보에 필요한 지속적인 군비증강 정책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군사정책 대안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이 핵개발 의혹으로 인한 국제적 압력에도 불구하고 핵옵션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것은 놀랄만한 일이 아니다. 실제로 북한은 지금까지 완전한 핵투명성을 제공하지 않은 채 일종의 「핵모호성 정책」으로 일관하면서 국제적 제재 압력을 최소화하고 미국, 일본 등으로부터 경제협력 등과 같은 관계개선 책을 유인해 내고자 노력해 왔던 것이다. 지난 6월 15~18일 카터 前 美대통령이 訪北하여 북한의 核凍結 약속 차원에서 제3단계 미·북한 고위급회담을 개최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미·북한간 평화적 핵협상을 위한 절충점을 찾게 되었다. 북한이 제의한 핵동결이란 그간의 핵개발 과거사는 당분간 불문에 부치고 향후의 핵개발을 중단하겠다는 조건을 의미한다. 그리고 북한의 향후 핵개발 억제를 위한 조건은 ① 旣 인출한 사용후 핵연료봉 재처리 금지, ② 5MW 원자로 새연료 장착금지, ③ IAEA 핵안전조치 이행 등이다. 북한의 이러한 핵동결 제안은 旣 개발된 핵능력을 보유하면서 단지 현재, 미래의 핵개발 추진유무를 새로운 핵카드로 활용함으로써 미·북관계 정상화 議題를 포함한 政治協商을 미국과 계속할 수 있는 명분을 구축하게 되었다. 즉 이것은 북한의 「최소한의 핵무장 옵션 不抛棄」와 부분적 양보차원의 「核카드 活用」을 통한 이득 챙기기 등 이중목적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에 해당한다. 지난 10월 18일 전격적으로 타결된 미·북한 핵협상 결과 역시 북한의 이러한 방안 관철 수준을 크게 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은 그들의 핵무장 능력에 대한 모호성을 그대로 간직하면서, 한편으로 미국 및 남한을 군사적으로 견제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상투적인 평화공세적 차원의 군사관련 유화정책을 집중적으로 제시하여 남한정부를 딜레마에 빠트려 남북한 경쟁체제의 기선을 장악함으로써 김정일의 정권 공고화를 꾀할 것이다. 따라서 향후 김정일은 미·북한 평화협정 체결, 미군철수, 군비축소 등을 집요하게 제안해 올 가능성이 크다.

빈 면

김정일체제의 대남정책 전망

全 賢 俊*

◁目 次▷

Ⅰ. 서 론
Ⅱ. 김정일 후계체제하의 북한 대남정책
1. 북한의 전통적 대남정책 목표
2. 김일성의 혁명계승론과 김정일
3. 김정일의 정세인식 태도와 대남관
4. 김정일 후계체제하의 대남정책
Ⅲ. 김정일 유일체제하의 대남정책
1. 김정일체제의 정치적 성격
2. 김정일 유일체제하의 남한관련 당면과제
3. 분야별 대남정책 전망

Ⅰ. 서 론

북한은 해방 이후 전한반도의 사회주의화를 국가목표로 설정하여 왔다. 북한은 이러한 목표달성을 위해 내부적으로는 주민결속강화를, 남한에 대해서는 결속약화를 시도하였다. 그리고 북한은 내부결속을 통한 한반도 통일달성을 위해 주체사상에 입각한 반미주의와 반남한주의를 지배이데올로기로 채택하여 왔다. 즉 북한은 미국을 主敵으로, 남한을 從敵으로 취급해

* 民族統一硏究院 硏究委員

왔다. 북한이 미국과 남한을 공동의 적으로 설정한 목적은 소극적 측면에서 내부통합을 통한 김일성 정권 및 김정일후계체제 보위를, 적극적 측면에서 한반도 사회주의화를 위해서 였다.

북한 최고권력자 김일성은 생존시 민주기지론에 입각한 '민족해방'을 위해 한국전쟁을 일으켰으나 실패하고 남한내 혁명역량의 중요성을 인식, 3대혁명역량 강화를 주창하였다. 이후 그는 남한내 혁명역량강화를 위해 남한정부를 부정하고 '남조선파쑈론'을 제기, 이의 타도를 위한 통일전선전술을 지속적으로 구사하였다. 왜 그는 '미제 및 파쑈타도'를 지속적으로 주장하였는가? 그 이유는 독특한 유일지배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외부위협선전이 필요하였기 때문이다.

코저(Lewis Coser)의 주장에 의하면 외부집단과의 갈등은 내적 통합을 증대시킨다.[1] 즉 다른 집단과의 갈등은 집단성원들의 에너지를 동원하게 하고 따라서 그 집단의 단결을 강화시킨다. 투쟁집단들이 집단응집력을 유지·강화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적을 인위적으로 조작해 낸다고 주장한다. 지속적인 갈등은 투쟁집단의 생존조건이기 때문에 투쟁집단은 부단히 갈등을 유발시켜야 한다.

북한은 사회주의체제 공고화를 위해 미국과 남한으로 부터의 위협을 지속적으로 확대·과장 하여왔다. 북한은 이를 통해 사회전체를 병영국가화 하였다. 그러나 핵문제 관련 北·美 고위급회담 타결로 주적이었던 미국에 대한 비난의 명분이 감소하고 있다. 아울러 김일성 사후 김정일체제가 등장함으로써 신체제의 공고화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은 「우리 식 사회주의체제」 및 신정권 유지를 위한 주적이 지속적으로 필요하게 되었고 한국이 그 '惡役'을 맡게 되었다.

한편 김일성은 1960년대 부터 북한내 사회주의의 완성을 표방하면서도 남북통일 미달성과 자본주의 강대국들의 존재를 이유로 사회주의식 계속혁명론을 내세웠다. 이에 근거해 김일성은 친자인 김정일을 후계자로 내정하였고 후계자 김정일은 아버지의 노선을 충실히 이행하였다. 김정일은 김일

1) Lewis Coser, *The Functions of Social Conflict* (New York : The Free Press, 1956), p.95.

성 생전에 충성스럽게 김일성의 노선을 지지했을 뿐만 아니라 더욱 정교화 시켰다.

이제 김일성 사후 우리의 관심은 김일성의 '유훈'통치를 내세우고 있는 김정일이 향후 어떤 대남정책을 채택할 것인가에 집중되고 있다. 따라서 본 글은 첫째, 김일성 생존시 북한의 대남정책과 김정일의 대남인식 태도는 무엇이었는가를 고찰하고, 둘째, 김정일체제의 정치적 성격 및 김일성의 대남관련 '유훈(遺訓)'과 그에 다른 김정일의 과제는 무엇인가를 고찰한 후, 셋째, 향후 김정일체제의 대남정책 향방에 대해 전망하려 한다.

Ⅱ. 김정일 후계체제하의 북한 대남정책

1. 북한의 전통적 대남정책 목표

북한의 대남정책 목표는 남한을 포함한 전한반도의 사회주의화에 두어져 왔다. 북한의 사회, 국가를 현실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노동당의 당규약은 당의 중요한 목표 중의 하나를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로 규정하고 있다.[2] 여기에서 '온 사회'는 물론 한반도전체를 의미한다. 따라서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는 남한을 북한식으로 통일하겠다는 북한의 의지를 분명히 해주는 중요한 귀절이라 할 수 있다.

김일성은 '미제'와 '남조선파쑈'를 타도하고 전한반도의 사회주의화를 위해 1950년 한국전쟁을 일으켰다. 그러나 무력에 의한 한반도 통일 기도는 한국의 국제공조적 대응으로 인해 실패하였다. 전쟁이후 김일성은 전후복구와 반대파 척결을 위한 시간확보를 위해 평화통일론을 제시하는 등 대남

2) 1980년 6차 당대회에서 개정된 노동당 규약 전문에는 "조선로동당의 당면목적은 공화국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 혁명과업을 완수하는데 있으며 최종목적은 온사회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는데 있다"고 되어 있다. 조선로동당규약 전문 참조.

유화책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그는 반대파에 대한 효율적 제어와 성공적인 전후복구를 달성한 이후인 1960년대 초반 부터 대남혁명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시작하였다. 물론 그것은 직접혁명전략이 아닌 간접혁명전략이었다. 즉, 김일성은 1964년 당중앙위 제4기 제8차 전원회의에서 남한해방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북한내 혁명역량 강화, 남한내 혁명역량강화, 세계혁명역량과의 연대성 강화 등 소위 3대혁명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후 이것은 '지역혁명론'으로 명명되면서 남한혁명을 위한 기본정책이 되었다.[3)]

김일성이 이러한 정책을 선택한 이유는 첫째, 김일성이 독재정권유지를 위해 보다 철저한 사상적·조직적 체계확립이 필요했기 때문이었고, 둘째, 남한에는 1961년 강력한 군사정권의 등장과 주한미군의 존재로 인해 직접적 공격이 난관에 봉착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남한주민들의 대정부투쟁의 중요성이 보다 증대되었기 때문이며, 셋째, 미·쏘 냉전의 심화로 세계는 양분되어 갔고 전체적으로 미국을 중심으로한 자본주의 세력의 힘이 강대해짐으로써 사회주의권과 제3세계권과의 연대 및 자본주의 국가들간의 이간이 보다 절실해 졌기 때문이었다.

결국 북한내 혁명역량 강화책은 김일성 유일사상체계 및 유일지배체계 확립정책으로, 남한내 혁명역량 강화책은 주한미군철수, 국가보안법철폐, 남한민중혁명에 의한 친북정부수립 정책으로, 세계혁명역량과의 연대성강화책은 사회주의권 및 제3세계권과의 외교강화와 이를 통한 미국고립화 정책으로 나타났다.

여기에서는 김정일이 "사회주의의 완전승리를 이룩하는것은 조국을 통일하는것과 함께 조선혁명의 당면한 2대과업입니다"[4)]라고 언급한 것에 근거, 북한의 전통적 대남정책목표를 북한내 사회주의 및 유일체계 확립과

3) 자세한 내용은 김일성, "조국통일위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혁명역량을 백방으로 강화하자," 김일성,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에 대하여」(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69), pp.262~282 참조.

4) 김정일, "올해 당사업에서 틀어쥐고나가야 할 몇가지 중심적과업에 대하여,"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3」(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88), p.418.

사회주의식 한반도 통일로 상정, 분석해 보려 한다.

가. 북한내 사회주의 및 유일체계 확립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북한의 최종목표는 한반도를 사회주의식으로 통일하는 데에 있다. 이러한 목표달성을 위한 제1차 과제는 북한 자체가 우선적으로 이념·정치·경제·군사적 측면에서 대남우위를 점하는 일이었다.[5] 물론 모든 정책선택의 사상적 원천은 자주를 근간으로 한 주체사상이었다. 북한내 혁명역량 강화를 위해 북한은 부문별로 다음과 같은 정책을 채택하였다.

첫째, 북한은 이념적 공고성을 유지하기 위해 맑스-레닌주의의 답습, 맑스-레닌주의의 창조적 적용, 맑스-레닌주의와의 차별화 및 결별이라는 과정을 통해 주체사상을 체계화 하였다.[6] 주체사상은 초기에는 보편적 의미에서의 자주성 유지 문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였다. 중·쏘 중심의 강대국 논리와 그들의 지배로 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념·정치·경제·국방·외교 등 제반 분야에서 철저한 자주성을 유지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논리였다.[7]

그러나 이러한 논리는 중·쏘로 부터 자주성을 어느 정도 달성한[8] 1967

5) 김일성은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북조선의 혁명역량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혁명을 더욱 확대하기 위하여서는 혁명에서 이미 쟁취한 성과를 공고발전시키는것으로부터 출발하여야 합니다…혁명역량은 주로 정치적 역량, 경제적 역량, 군사적 역량의 세가지로 구성된다고 말할수 있습니다"라고 강조함으로써 북한내 혁명역량 강화가 최우선임을 분명히 하였다. 김일성,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에 대하여」, pp.267~268.

6) 3대혁명역량 강화를 최초로 언급한 김일성의 문건에는 맑스-레닌주의만이 강조되고 있다. 김일성,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에 대하여」, pp.268~269. 그러나 북한 1992년 헌법 개정을 통해 맑스-레닌주의를 지배이념에서 삭제하였다. 북한의 1992년 헌법 참조.

7) 이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金甲喆·高性俊, 「主體思想과 北韓社會主義」(서울: 文佑社, 1988) 참조.

8) 김일성은 최고인민회의 제4기 제1차 회의에서 발표한 정부정강을 통해 "우리가 사상분야에서 주체를 세우기 위하여 노력한 결과 우리일군들의 민족적 자부심과 자주의식이 매우 높아졌으며…오늘 우리나라는 당당한 독립국가로서 자기의 모든 로선과 정책

년 이후 부터는 수령에 대한 충성 강화로 변화되기 시작하였다. 즉 수령론이 주체사상의 정수로 변하였고 자주보다는 수령에 대한 충실성이 더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잡기 시작하였다.[9] 유일사상인 주체사상은 김일성 개인 우상화의 최고형태인 수령론으로 변하기 시작하였고 수령론은 1972년 헌법개정을 통해 강력한 힘을 가진 주석으로 제도화되었다.

주체사상은 김정일 등장 이후인 1974년 부터 김일성주의로 전환되기 시작하였다.[10] 김정일이 김일성주의를 표방한 근본적인 이유는 김일성 신격화작업을 통한 자신의 확고부동한 입지확립의 필요성 때문이었다. 즉 김정일은 후계자로 선택된 이후인 1974년 부터 김일성주의에 대한 규범을 만들고 김일성의 모든 교시는 반드시 자신의 결재하에 집행되도록 제도화하기 시작하였고 이를 통해 김정일은 후계자로서의 지위를 성공적으로 보지할 수 있었다.

수령론은 1982년 김정일의 「주체사상에 대하여」를 통해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으로 등장하기 시작하였고 이 논리는 1986년에 체계화되었다. 이 글에서 김정일은 김일성을 사회정치적생명의 부여자인 '신'으로 승격시켰고, 이러한 신을 보유한 '우리민족은 세계에서 제일'이라는 '우리민족제일주의'를 표방하였다.[11] 이를 계기로 김일성은 생명을 창조한 신으로 추앙되기 시작하였고 북한은 사이비 종교국가로 변모하기 시작하였다.

결국 '신'인 김일성은 '그를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계급, 성별, 종교, 민족 등에 관계없이 '민족'으로 분류하고 교류·협력을 강조하였다.[12]

을 자주적으로 규정하며 대외관계에서 완전한 평등권과 자주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라고 강조함으로써 자주성확립에 대해 자랑하였다. 김일성,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에 대하여」, pp.376~377.

9) 崔 星, 「首領體系의 形成過程과 構造的 作動메카니즘에 關한 硏究」(高麗大學校大學院 政治外交學科, 1993년 博士學位論文), p.109.

10) 이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졸고, 「김정일리더쉽 연구」(서울 : 민족통일연구원, 1994) 참조.

11) 김정일, "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문헌집」(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p.156.

12) 김일성은 "조선민족은 북에 있건 남에 있건 해외에 있건 관계없이 그리고 로동자, 농민, 청년학생, 정치인, 경제인, 문화인, 종교인 할것없이 모두다 조국통일의 주인으로

즉 정주영, 김우중, 카터 등 누구나 수령을 '믿고 따르면(지원)' 김일성교 신자로 분류되었고 칭찬과 교류·협력의 대상이 된다는 논리이다. 반대로 이것은 이러한 준봉(conformity)에 순응하지 않으면 김정일을 포함해 누구도 생존할 수 없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둘째, 정치적 측면의 역량강화를 위해 북한은 민주집중제에 입각한 일당 중심체제를 철저히 강조하여 왔다. 물론 북한도 형식적으로는 다당제를 채택하고 있다. 즉 북한에 천도교청우당, 조선사회민주당 등이 존재하고 있고 이들 당원들이 〈표 1〉에서 처럼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표 1〉 제9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분포상황

구분 \ 시기	9기 (1990. 5)
대의원수	687명
노동자	37.0%
협동농장원	10.4%
박사, 교수, 과학자, 기술자	52.6%
기타	(미발표)
35세 이하	2.9%
36세 — 55세	56.8%
55세 이상	40.3%
대졸	68.2%
전문졸	31.8%
중졸	(중졸포함)
여성	20.1%
비고	※사회민주당 7.4% 천도교청우당 3.2% 무소속 1.9%

서 자기의 힘과 지혜를 다 바쳐 조국통일위업에 이바지하여야 할 숭고한 민족적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라고 말하여 계급론을 탈피하는 발언을 하였다. 김일성, 「우리나라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더욱 높이 발양시키자」, pp.23~24.

그러나 이들 당의 강령은 조선노동당의 강령을 그대로 답습[13]하고 있다는 점에서 독자적인 지지세력을 통한 이익활동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북한은 일당체제라 할 수 있을 것이고 김정일 자신도 다당제를 자본주의적 요소라고 강도높게 비판[14]하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을 다당제국가로 분류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한편 조선노동당은 '어머니' 당으로서 북한사회주의혁명의 모든 방향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실천결과를 감시하고 책벌한다.[15] 만일 당의 강령에서 일탈하는 개인이나 집단이 있다면 당의 이름으로 징계한다. 당은 절대적 권한을 바탕으로 사회전부문에 침투해 있다. 당은 국가, 군, 행정기관, 외곽단체 등을 당원과 세포, 당위원회 등을 통해 감시·통제함으로써 수령중심의 유일지배체제를 지탱해 가고 있다. 결국 북한은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라는 구호하에 전주민을 기계화·화석화하고 있고 노동당의 충성분자로 전화시키고 있다.

물론 북한은 1989년 부터 시작된 사회주의권의 붕괴를 목도하는 과정에서 인민대중의 중요성을 인식,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를 강조하고 관료들의 부패, 관료주의 등을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근본적으로 김일성이 해방 이후 지지기반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수립한 인민민주주의혁명론 및 통일전선전술의 변형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북한은 여전히 유일당중심체제라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셋째, 북한은 사회주의경제체제 확립을 위해 자력갱생체제를 도입하고

13) 조선사회민주당강령은 "자주리념은 우리당의 모든 정책과 활동을 규제하는 지도리념이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조선노동당 이도이념인 주체사상의 핵심을 지도이념으로 천명하고 있다. 「조선사회민주당」, 1994. 1월호 조선사회민주당강령(초안) 참조. 한편 조선사회민주당 당수인 김병식은 국가부주석이다.

14) 김정일, "사회주의건설의 력사적 교훈과 우리 당의 총로선," 김정일, 「사회주의를 위하여」(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93), p.93.

15) 김정일은 「사회주의는 과학이다」에서 '어머니 당'을 강조하고 많은 당이 패망한 것은 "당을 인민의 운명을 책임지고 따뜻이 보살펴 주는 어머니 당으로 건설한 것이 아니라 행세하고 권력을 남용하는 관료당으로 전락시킨 결과"라고 말하여 그동안 조선노동당도 계급투쟁의 역할에 치중함으로써 많은 적을 만들어 왔음을 시인하였다. 김정일, 「사회주의는 과학이다」, 「로동신문, 1994.11.1.

있다. 북한은 세계적 분업구조에 편입되지 않고 주체경제 논리에 입각한 자력갱생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북한경제체제 유지를 위한 기본적인 작동 논리는 청산리 농법, 대안의 사업체계, 독립채산제 등이 있다.[16]

자력갱생체제는 일단 각 협동농장, 각 기업소, 각 행정단위가 책임지고 각 단위에 필요한 물질을 생산하고 충당해야 한다. 물론 국가 자체도 세계 분업구조론에 입각한 경제성장전략을 채택하지도 않는다. 김정일은 성장전략은 반드시 자본주의국가들과의 교류·협력을 필요로 하고 그것은 곧 자본주의 분업구조에 편입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식하고 있다.[17] 따라서 북한은 모든 것을 자력으로 해결하도록 독려하고 있고 외국으로 부터의 수입이 필수불가결한 물품만 선별적으로 도입하고 있다.[18]

그러나 이러한 자력갱생체제는 많은 문제점을 노정함으로써 경제전략을 수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고 그것이 1984년 합영법으로 구체화되었다. 이의 연장선상에서 1991년 「나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가 설치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논리적으로는 중국식 개방정책을 비난하고, 사회주의권의 붕괴원인을 무분별한 시장사회주의의 도입으로 전가하는 등 특구설치로 부터 야기될 수 있는 부작용 즉 자력갱생체제의 붕괴를 심히 두려워하고 있다.[19] 이것은 국가가 인민경제 전반을 책임지는 경제체제가 도

16) 보다 자세한 내용들은 고승효(김한민 역), 「북한사회주의 발전연구」(서울 : 靑史, 1988) 참조.

17) 김정일은 1992년 「사회주의건설의 력사적 교훈과 우리 당의 총로선」이라는 글에서 "사회주의원칙으로 부터의 한걸음의 양보와 후퇴는 열걸음, 백걸음의 양보와 후퇴를 가져왔으며 결국에는 로동계급의 당자체가 파멸되지 않으면 안되는 엄중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고 말함으로써 자본주의식 경제전략의 도입을 극력 반대하였다. 김정일, "사회주의건설의 력사적 교훈과 우리 당의 총로선," 김정일, 「사회주의를 위하여」, p.94.

18) 김정일은 1986년 "무역을 하여 원유와 콕스탄, 생고무와 같은 원자재를 들여와야 철강재와 자동차, 뜨락또르도 생산하고 경공업공장들을 돌려 여러가지 인민소비품도 만들수 있으며 농사도 짓고 물고기도 많이 잡을 수 있습니다"고 말하여 수입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김정일, "당과 혁명대오의 강화발전과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새로운 앙양을 위하여,"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5」, p.380.

19) 김일성은 생전에 자본주의요소의 침습을 최소하는 개방방식인 '방충망식' 개방을 강조하였고, 김정일은 「사회주의는 과학이다」(1994.11.1)에서 "오늘 사회주의 배신자들

입됨으로써 파생될 수 있는 정치적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향후에도 자력갱생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의도의 표출일 가능성이 높다.

어떻든 김일성이 사망 이전인 1994년 2월 협동적 소유의 전인민적 소유로의 전환을 역설하는 등 자력갱생에 입각한 사회주의혁명을 교시했다[20]는 점에서 특구중심개방은 매우 한정된 지역에 국한할 가능성이 높다.

넷째, 북한은 북한체제 유지와 강화를 위해 군사부문의 투자에 정책적 우선순위를 두어 왔다. 북한이 군사력 증강을 통해 달성해야 할 기본목표는 4대군사노선이다. 즉, 전군 간부화, 전군 현대화, 전국 요새화, 전인민 무장화이다.[21] 북한은 1960년대 초반 부터 '四化' 달성을 위해 군사비를 지속적으로 증액시켜 왔다. 북한은 1961년 19.0%, 1965년 19.0%이던 것이 1970년에 29.4%, 1971년에 31.0%까지 상승하였다. 물론 1972년 이후 부터 군사비비중이 16.0% 내외로 하락된 상태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반면, 인민경제비와 사회문화비에 대한 할당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인민경제비에 대한 증액에도 불구하고 인민경제향상 징후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은 북한이 인민경제비를 원안대로 집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북한은 군사비를 인민경제비나 사회문화비에 은닉하여 집행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22]

북한은 미국 및 남한과의 군비경쟁으로 인한 인민경제의 낙후를 만회하기 위해 미국과의 관계개선에 정책적 역점을 두는 한편, 특구활성화에서 획득된 외화를 통해 인민경제상태의 향상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내면적으로 군비확충에 정책적 역점을 두고 특구에서 획득된 외화를 군수산업 활성화에 집중투자할 가능성 또한 상존한다.

도 자본주의에 대하여 환상을 가지고 제국주의자들의 원조와 협력에 기대를 걸면서 자본주의 복귀소동을벌이고 있다"고 중국과 국내의 개방세력들을 비난하였다.

20) 김일성의 서한은 「로동신문」, 1994.2.25 참조. 이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졸고, "北韓最高人民會議 第9期 第7次會議 結果分析," 民族統一硏究院, 「統一情勢分析 94-09」(1994.4) 참조.

21) 4대군사노선은 1962년 12월 당중앙위 제4기 5차 전원회의에서 일부 제시된 후 1966년 10월 당대표자회의에서 확정되었다.

22) 박재규 외, 「북한군사정책론」(서울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1983), pp.70~71.

나. 사회주의식 한반도 통일

북한 대남정책의 궁극적 목표는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데 있다. 즉 북한 대남정책의 최종목표는 한반도를 북한식으로 통일하는 데 있다. 전술한 바 대로 북한이 각부면에서 자체역량을 강화할려는 이유도 힘의 우위에 의한 한반도 통일에 그 목적이 있다. 북한은 국가목표달성을 위해 극좌모험주의를 채택한 적도 있었다. 역사적으로 북한이 시도한 대남정책은 다음과 같이 몇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民主基地論에 입각한 직접혁명정책이다. 북한은 해방 이후 한반도 공산화를 위해 먼저 공산화가 된 북한이 남한을 공산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민주기지론을 채택하였다.[23] 이 논리는 북한혁명역량에 의한 남한의 직접 공격정책이었다. 북한은 민주기지론을 실천하기 위해 군사역량강화에 힘을 쏟았고 그 결과는 1950년 6·25전쟁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군사력에 의한 통일정책은 실패하였다. 전쟁실패 이유는 김일성 개인의 군사모험주의의 결과였지만 김일성은 전쟁실패를 반대파 숙청을 위한 계기로 삼았다. 즉 그는 대대적인 숙청과 함께 유일사상 및 유일지배체계 확립에 매진하였다.

둘째, 地域革命論의 도입이다. 북한은 남한내부의 적극적 지원없이는 전한반도의 사회주의화는 불가능하다는 판단하에 남한내 혁명역량 강화와 이를 통한 남한내 폭력혁명 유도, 이후 평화통일 전략을 수립하였다. 즉 소위 지역혁명론이 수립되었다. 이러한 전략에 입각하여 북한은 철저한 대남 이중전략을 수립하였다. 일면 정부간 대화를 추진하면서, 일면 민중에 대한 선전선동과 통일전선전술을 구사하였다.

---

23) 김일성은 "해방직후 우리당은… 조선민족을 완전히 해방하며 부강한 자주독립국가로 만들기 위한 튼튼한 민주기지를 북조선에 창설하는 것을 기본적인 정치로선으로 규정하였습니다"라고 말하였다. 「김일성저작선집 1」(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67), pp.224~225. 민주기지론에 대한 심층 분석은 김순규, "북한의 초기 통일정책 : 민주기지로선," 김일평 외, 「북한체제의 수립과정 : 1945~1948」(서울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1991), pp.211~246 ; 한국정치연구회, 「북한정치론」(서울 : 백산서당, 1990), pp.187~192 참조.

대화전략은 적십자회담, 남북공동성명, 고위급회담 등으로 나타났고, 공식적으로는 합의에 의한 통일 방안이 제시되었다. 즉 1960년대 부터 등장하기 시작한 연방제 통일방안이 그것이다. 선전선동과 통일전선전술은 남한내 학생, 진보세력과의 연계투쟁, 「범민련」과 같은 비정부적 차원의 공동투쟁기구 설치, 「구국의 소리」와 같은 흑색방송 등으로 나타났다. 물론 이러한 계급론적 통일전선전술에 입각한 지역혁명론은 남한사회의 발전과 주변환경의 변화로 인해 순기능적으로 작용하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북한은 민족론에 입각한 「전국민족통일전선전술」을 새로이 도입, 지역혁명론의 실천을 시도하고 있다. 「전국민족통일전선」은 김일성의 다음과 같은 교시에서 출발하고 있다. 즉 김일성은 "조국을 통일하는 것은 온 민족의 리익을 위한 사업이며 온 민족이 힘을 합치고 굳게 단결하여 투쟁해야만 실현할 수 있는 거족적인 사업입니다. 민족대단결의 원칙에 따라 전국적 범위에서 광범한 민족통일전선을 형성하는 것은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입니다"[24]라고 말하여 「전국민족통일전선」의 필요성을 최초로 역설하였다.

「전국민족통일전선」은 남북한, 해외를 막론하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조국의 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사상과 리념, 제도와 신앙의 차이를 초월하여 조국통일의 기치밑에 단결"[25]하는 단결체이다. 여기에서 통일의 주체는 민족으로 된다. 통일의 주체인 민족은 "공산주의자들도 있고 민족주의자들도 있으며 유신론자도 있고 무신론자도 있으며 유산자도 있고 무산자도 있다."[26]

전국민족통일전선은 "북의 사회주의력량과 남의 애국적민주주의력량 그리고 해외애국력량"으로 구성된다. 여기에서 우리의 주목을 끄는 것은 남의 애국적 민주력량이다. "남조선의 애국적민주력량에는 남조선의 로동자, 농민, 청년학생, 지식인, 종교인, 정치인, 소자산계급과 애국적 군인 그리고 량심적인 민족자본가들"이다.

---

24) 「김일성저작집 30」, p.550.

25) 위의 책, p.550.

26) 「조국의자주적통일을 위한 우리 당의 정책」(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p.67.

북한은 기존의 통일전선과 「전국민족통일전선」과는 차이가 있다고 설명한다. 북한은 기존의 통일전선은 일반적으로 노동계급 주관하에 노동동맹을 기초로 한 것이었으나 「전국민족통일전선」은 한 민족내의 두지역사이에서 맺는 민족의 대연합형태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 이유는 한민족이 일시적으로 두지역으로 분열되여 있고 조국통일이라는 민족적 과제를 수행해야 하는 특수한 사정때문이라고 설명한다.[27]

「전국민족통일전선」의 조직형태는 첫째, 남과 북의 제 정당, 사회단체, 각계각층 인민들의 대표로 구성된 정치협상회의나 대민족회의, 둘째, 남과 북의 유명한 정치인들의 연합회의 등이 있다. 여기에서 정치협상회의나 대민족회의와 유명정치인연합회의의 상이점은 정치협상회의와 대민족회의가 정당, 사회단체 대표중심이라면 유명정치인연합회의는 개인차원의 연합회의라는 점이다. 정치인연합회의에는 야당이나 재야세력이 포함된다.

결국 북한이 통일전선전술을 포기하지 않는 한 북한의 국가목표인 전한반도의 사회주의화를 수정했다고 판단할 수는 없을 것이다. 즉 북한의 주객관적 상황변화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남한정부타도와 이를 위한 「전국민족통일전선」 전술의 구사는 지속할 것이다.

2. 김일성의 혁명계승론과 김정일

김일성은 1967년 과도기와 프롤레타리아독재 문제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여 공표하였다.[28] 여기에서 그는 공산주의 고전 이론과는 달리 국제적 요인을 고려에 넣는 동시에 계속혁명의 관점으로 부터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과도기와 분리해서 이해하고 사회주의하에서의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필연성과 역사적 임무를 명확하게 하였다.

김일성 주장의 요지는 "일국 혹은 일부지역에서 공산주의가 실현되더라도 세계혁명이 아직 완수되지 않고 자본주의와 제국주의가 잔존하는 조건

27) 위의 책, pp.73~76.

28) 김일성,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와 프롤레타리아독재 문제에 대하여," 「김일성 저작집 21」, p.271.

하에서는…제국주의의 위협을 피할 수가 없고 따라서 프롤레타리아독재는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한마디로 세계혁명의 동시적 승리만이 공산주의의 달성을 가능케한다는 인식하에서 세계적 차원의 계급투쟁과 혁명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일국적 차원의 혁명이 완수된다 하여도 전세계의 혁명을 위해서는 프롤레타리아 독재가 계속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강력한 영도체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29]

김일성이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지속을 주장한 이유는 첫째, 사후 비판에 대한 공포심에서 였을 것이다. 김일성이 아무리 국부로서의 지위를 확보하였다 하더라도 만일 노선이 다른 지도자가 등장하였을 때는 그 자신이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것은 스탈린의 예에서 극명하게 나타났다. 둘째, 김일성은 그가 심혈을 기울여 달성한 업적을 누군가 가장 충직한 자에게 전수할 생각이었을 것이다. 따라서 그는 누구보다도 충실성과 혁명성이 뛰어난 김정일이 적격자라고 판단하였을 것이다. 셋째, 사회주의 이념의 표방에도 불구하고 가부장제적 정치문화가 강하게 잔존해 있던 당시 상황에서 사회주의자라 자처한 김일성도 예외는 아니었을 것이다. 어쩌면 그는 주변환경과 관계없이 친자인 김정일에게 권력을 이양하리라 생각하였을지도 모른다.

김일성의 정치적 구도하에 후계자로 키워지기 시작한 김정일은 1964년 김일성 대학 졸업후 당중앙위 비서처 참사실에서 1년간, 내각수상 참사실 지도원으로 1년간 근무하였다. 1966년 그는 당조직지도부 중앙지도과 중앙기관담당 책임지도원이 되면서 업무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였다. 김일성은 1967년 5월에 열린 당중앙위 제4기 5차 전원회의에서 유일사상체계확립을 제기하였고 그것을 실천에 옮기기 위해 수요강연회, 토요학습, 매일 두시간 학습 제도를 도입하였다.

김정일은 유일사상체계확립에 매진하였고 그 주요도구로 영화를 집중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하였다. 이를 위해 그는 선전선동부 문화예술지도과장을 맡았고 백두산창작단, 4·15문학창작단, 만수대창착단 등을 만들었다.

---

29) 崔 星, 前揭論文, pp.164~170.

이 기간에 그는 혁명사적지를 정비하고 김일성 가계우상화에 매진하였다. 김정일은 1969년에 선전선동부 부부장으로 승진하였고 가극 '꽃파는 처녀' 창작, 연극 '피바다'의 영화화 등을 직접 지도하였다. 1970년에는 '어느 자위단원의 운명,' '아내의 직장' 등을 제작하여 김일성을 크게 만족시켰다.

김정일이 후계자로 굳혀지게된 결정적 사건들은 1971년 부터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후계자문제는 1971년 4월 부터 비밀리에 토론되기 시작하였고 김정일의 예술적 능력은 김정일로의 후계를 누구도 반대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 김일성은 1971년 6월 부터 후계문제의 절박성을 강조하기 시작했고 7월에는 '피바다' 가극이 김일성 면전에서의 초연을 통해 김일성을 감동시켜고 김일성은 김정일의 특출한 능력을 혁명 1세대들에게 자랑하였다. 이러한 김일성의 행동은 혁명1세대들로 하여금 김정일을 후계자로 추대하도록 암암리에 강제하였다.

임춘추, 김영주를 비롯한 당원로들은 1972년 4월 김일성의 환갑을 기해 김정일로의 세습을 강력히 주장하였다. 물론 이것은 1972년 2~3월에 걸쳐 집중적으로 공연된 '밀림아 이야기하라,' '꽃파는 처녀,' '피바다' 등을 통해 당원로들이 크게 감동을 받았고 김정일의 수령과 혁명1세대들에 대한 절대적 충성심을 확인하였기 때문이었다.

김정일은 1973년 9월 당중앙위 조직 및 선전·선동 담당비서가 됨으로써 실질적 의미에서 후계자로 내정되었고 그것은 1974년 2월 당중앙위 제5기 8차 전원회의를 통해 당내에서 공식화되었다.

3. 김정일의 정세인식 태도와 대남관

후계자로 내정된 김정일은 통일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였고 남한을 어떻게 인식하였는가?

첫째, 그는 북한사회발전을 통일의 원동력으로 생각하였다. 1974년 「속도전」을 주창하면서 "속도전을 힘있게 벌려 나라의 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하여야…남조선인민들의 혁명투쟁을 힘있게 고무하고 조국통일위업을 하루속히 실현할 수 있습니다"[30]라고 강조함으로써 북한내 혁명역량강화를

통일의 선차 조건으로 제시하였다.

둘째, 그는 전쟁에 의한 통일을 상정하였다. 그는 1974년 「유일사상체계확립 10대원칙」을 발표하면서 "우리는 조국의 통일을 위하여 언제든지 한번은 원쑤들과 맞서 결판을 내고야말겠다는 사상적 각오를 튼튼히 가져야 하며…"[31]라고 말함으로써 언젠가는 '제2의 해방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암시하였다.

그리고 그는 전쟁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였다. 김정일은 "전쟁에서 승리하자면 우리의 주체적력량을 튼튼히 꾸려야 합니다…우리는 혁명적 대사변을 눈앞에 두고있는것만큼 어떻게 해서든지 군중을 더 많이 쟁취하여야 합니다…전쟁준비에서는 정치적준비와 함께 물질적준비가 또한 중요합니다."[32]라고 말함으로써 남한과의 전쟁을 기정사실화하고 그에 대한 대비를 강조하였다.

셋째, 김정일은 남한이 북침준비를 하고 있다고 인식하였다. 김정일은 "동무들도 아는 바와 같이 지금 미제와 그 앞잡이들은 침략과 분렬의 범죄적 목적을 집요하게 추구하면서 우리를 반대하는 전쟁도발책동을 미친듯이 벌리고 있습니다. 우리를 먹어보려는 적들의 무모하고도 발악적인 책동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에는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를 위험한 정세가 조성되고있습니다. 우리는 사실상 전쟁전야에 처하여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33]고 말하였다.

이러한 발언들을 종합해 보았을 때 김정일은 남한이 북침준비 내지는 '평화적 이행전략'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강공책을 구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

30) 김정일, "온 사회를 김일성주의화하기 위한 당사상사업의 당면한 몇가지 과업에 대하여,"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3」, p.26.

31) 김정일, "온당과 온 사회의 유일사상체계를 더욱 튼튼히 세우자,"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3」, p.97.

32) 김정일, "현정세의 요구에 맞게 혁명력량을 튼튼히 꾸리며 당사업을 더욱 개선강화할데 대하여," 「주체혁명위업을 위하여 3」, p.309.

33) 김정일, "올해 당사업에서 틀어쥐고나가야 할 몇가지 중심적과업에 대하여,"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3」, p.437.

4. 김정일 후계체제하의 대남정책

1970년대 김정일은 후계자로서의 자기 위상 정립을 위해 남한으로 부터의 위협을 과장하였다. 즉 그는 자신의 후계체제를 공고화시키기 위해 남한을 철저히 이용하였다. 김정일은 남한을 '북침'하기 위해 기회를 엿보는 '악마'로 인식하였다. 김정일은 이러한 악마로 부터 국가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수령중심의 유일사상체계가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34] 물론 이러한 그의 선전선동은 후계자인 그의 용맹성을 인민들에게 확인시켜줄 필요에서 생성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김정일은 1970년대 중반이후 부터 남한과의 경쟁에서 뒤진 사실을 발견하고 남한을 더욱 적대시하는 정책을 펼쳤다.[35] 1976년 판문점미군살해사건, 1983년 아웅산 한국요인 암살사건, 1987년 KAL기 폭파사건 등이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

34) 김정일은 "우리는 조국의 통일을 위하여 언제든지 한번은 원쑤들과 맞서 결판을 내고야말겠다는 사상적각오를 튼튼히 가져야 하며 원쑤들의 격화되는 전쟁도발책동에 대처할 만단의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정세가 긴장하고 투쟁이 어려워 질수록 우리는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더욱 튼튼히 세워야 하며 혁명대렬의 순결성을 철저히 보장하여야 합니다"라고 강조하였다. 김정일, "전당과 온사회에 유일사상체계를 더욱 튼튼히 세우자,"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3」, p.97.

35) 김정일은 1974년 6월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최근에 경제건설사업이 잘되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이것은 정무원위원회, 부들이 자기사업을 옳게 하지 못하고있기때문이라고 교시하였습니다"라고 말하여 경제상태가 나쁘다는 것을 시인하였다. 김정일, "정무원위원회, 부, 당조직들의 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하여,"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3」, p.139. 그리고 그는 1975년 5월 "우리는 적들의 전쟁도발책동에 대처할 준비를 해놓기는 하였지만 결코 그에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상 전쟁준비에는 계선이 없습니다.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이 계속 무력을 증강하고 전쟁도발책동을 강화하고 있는 조건에서 우리는 전쟁준비를 더욱 완성하여야 합니다…더우기 미제침략자들이 우리와의 대결에서 물질기술적 우세를 믿고있는것만큼 우리는 물질적 준비를 결코 소홀히 할수 없습니다"라고 말하여 상황을 확대과장하는 한편, 남한의 경제적 우세를 간접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김정일, "현정세의 요구에 맞게 혁명력량을 튼튼히 꾸리며 당사업을 더욱 개선강화할데 대하여,"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3」, pp.305~309.

김정일이 후계자로 등장한 이후 대남강경정책을 지속한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첫째, 김정일은 항일무장투쟁을 정치적 정통성의 근거로 삼는 혁명 1세대들(김일성 포함)의 지지를 통해 후계자로 내정되었기 때문에 적개심과 투쟁심을 과시함으로써 혁명세대들을 안심시킬 필요가 있었다.

둘째, 김정일은 남한을 '인민의 공동적'으로 상정함으로써 후계체제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강화하고 철저한 독재를 통해 유일지배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었다. 특히 남한경제의 발전은 김정일 후계체제는 물론 사회주의체제 자체를 위협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남한에 대한 강경책을 구사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김정일의 대남강경책을 통한 내부통합정책은 관료 및 인민들의 사고와 행동을 화석화시켰지만 독재자의 후손으로서의 자질은 인정받게 하였다. 그 결과 김정일은 1980년 대내·외적으로 공식후계자가 되었다. 따라서 김정일의 대남강경책은 김정일체제를 유지해 주는 근간이 되고 있다. 아울러 1980년대 김정일의 대남정책 기조 역시 강경일변도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이유는 1983년 아웅산 한국 정부요인 암살사건, 1987년 KAL기 폭파사건 등을 통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김정일은 대남강경책을 구사함으로써 북한이 남한보다 우세하다는 것을 인민들에게 과시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공산주의 전략전술대로 공격은 힘이 있을 때만 가능한 것이므로[36] 김정일의 공격정책은 북한주민들이 북한의 우세를 지속적으로 믿도록 하기 위한 전술이다.

1990년대 김정일의 대남강경책은 1989년 사회주의권의 붕괴로 인해 전술적 유화적으로 변하였다. 사회주의권의 붕괴는 북한을 이념적, 경제적으로 곤경에 처하도록 하였다.[37] 사회주의 시장의 상실, 인민들의 사상적 동요 등은 김정일 후계체제를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따라서 김정일은

36) 「통혁당」에서 발행한 「金日成主義革命論」은 "오직 위력한 혁명력량을 마련하여야만 혁명의 결정적 시기를 주동적으로 앞당길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金日成主義革命論」(통일혁명당중앙위원회선전부, 1974), p.93.

37) 북한은 당중앙위 제6기 21차 전원회의를 통해 제3차 7개년 경제계획의 실패원인을 세계사회주의국가들의 붕괴와 그로 인한 사회주의시장의 상실 및 남한과 미국의 전쟁위협으로 돌렸다. 「로동신문」, 1993.12.9.

남한과의 대화에 적극적이지 않을 수 없었다. 왜냐하면 1989년 이후 북한은 '남한의 무력공격' 내지는 '북한붕괴작전'에 대비해야 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위협을 남한과의 우호관계를 무기로 제어해 나가야 했기 때문이다.

남북대화 결과, 「남북기본합의서」가 1992.2.13일 발효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북한핵문제로 인해 남북관계가 교착상태에 빠짐에 따라 이행되지 못하였다. 한편, 북한은 핵문제로 인해 중요한 대외정책상의 변화를 격어야만 했다. 즉 그것은 미국과의 관계정상화이다. 물론 북한은 1980년대 부터 이미 대미정책의 변화를 시도하였기 때문에 1990년대의 정책전환이 새로운 것은 아니다. 김일성은 1980년 제6차 당대회를 통해 미국과의 관계 개선용의를 표명하였다.[38] 그 이유는 미국과의 직접대결은 그의 평생소원이었던 한반도통일 달성을 요원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김정일은 부친의 '교시'를 실천하기 위해 1984년에 「3자회담」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先남북관계개선 後미·북회담」 원칙에 입각, 북한의 제의를 거부하였고 오히려 핵문제를 이유로 북한을 제어하려는 적극적 공세를 전개하였다.

그러나 미국의 의도와는 달리 역으로 김정일은 북한은 핵문제를 미국과의 관계개선 수단으로 활용하였다. 북-미간에는 3단계에 걸친 고위급회담이 개최되었고 그 결과 김정일은 미국으로 부터 세습체제인정과 안전보장을 얻어내는 데 성공하였다.[39] 따라서 김정일은 '敵數의 최소화'전략에 입각, 미국의 대북강경책을 약화시키고 일단 '미국주적 남한종적' 전술을 수정, '남한主敵 미국從敵'전술로 전환하였다.

결국 김정일이 북-미 고위급회담에 적극 임한 것은 남한과 미국, 일본의 3자동맹을 차단함으로써 한편으로는 남한을 고립시키고 중국을 견제하며, 북한에 대한 미국의 직접적 위협을 제거하려 했기 때문이다. 어떻든 오늘날 북-미 고위급회담의 타결은 김정일의 승리로 치부되고 있다.[40] 즉

38) 김일성은 1980년 6차 당대회에서 "남조선에서 미군을 철수하고 우리나라의 통일을 방해하지 않는다면 미국과도 좋게 지낼 용의를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말하였다. 「김일성저작집 35」, p.366.

39) 미국은 북-미 2단계 고위급회담(1993.6.11)에서 북한체제를 인정하고 3단계 고위급회담(1994.10.21)에서는 핵선제 불사용을 약속하였다.

40) 「평양방송」, 1994.11.6.

마치 1953년 휴전이 '김일성의 승리'였던 것처럼, 북·미간 핵협상타결은 '김정일의 승리'로 치부되고 있는 것이다.

Ⅲ. 김정일 유일체제 하의 대남정책

이제 북한은 김일성 우위의 '비대칭적 양두체제'에서 김정일 유일체제로 변화되었다. 즉 북한은 김정일만이 유일한 최고통치권자로 군림하는 국가가 되었다. 따라서 향후 북한의 대남정책은 보다 일관성있게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김일성은 사망 직전, 대내적으로는 사회주의경제발전을 대외적으로는 북·미고위급회담의 원만한 타결을, 대남적으로는 「전국민족통일전선」과 「10대강령」에 입각한 한반도통일을 중대과업으로 설정, 추진하려 하였다.[41]

최고권력자 김정일은 김일성의 '유훈'관철을 그의 최대정책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김정일은 김일성의 유훈 중 북·미고위급회담을 관철시켰고, 사회주의발전을 위해 전인민적 소유의 확대, 경공업 공장의 가동율 확대,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에 대한 적극적 투자유치 등을 시도하고 있다. 그렇다면 김정일은 '유훈' 중의 하나인 대남정책 전반을 어떻게 운용해 갈 것인가?

1. 김정일 체제의 정치적 성격

향후 김정일이 대남정책을 어떻게 추진하여 갈 것인가를 전망해 보기 위해서는 우선 김정일체제의 정치적 성격은 무엇인가를 고찰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김정일체제의 성격이 무엇인가에 따라 김정일이 전임자의 정책을

41) 김일성은 1994년 7월 25일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려 하였고 북한은 「통일3대원칙」과 「10대강령」을 관철할 것임을 천명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문명자씨의 증언은 「말」, 1994.11월, p.106 참조.

답습할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를 전망해 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결론부터 언급하면 김정일체제는 김일성 체제의 연장에 불과하다. 김정일체제가 김일성체제의 연장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김일성은 사후 비판을 두려워하여 친자인 김정일에게 정권을 이양하였고, 김정일은 김일성 혁명사상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후계자 지위를 공고화 하였기 때문이다. 둘째, 현재 북한 정치체제의 주요골격은 김정일 후계체제 수립 이후 정립된 것으로서 김정일 자신이 체계화의 주역이었기 때문이다. 셋째, 위와 같은 이유에서 김정일이 김일성 생전의 의도대로 김일성의 '유훈'을 받들어 통치할 것을 맹세하고 있기 때문이다.[42]

김일성 생존시 김정일이 후계자로서 수행한 일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가? 그가 후계자로 책봉된 이후 중점을 두었던 사업은 크게 세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첫째는 당조직정비와 당관료와 당원들에 대한 충성심제고와 통제강화였다. 그 도구는 당조직지도부였다. 당조직지도부는 당중앙위 최고실무지도기구로써 실질적인 당 조직, 정치사업의 총참모부이다. 조직지도부는 김부자 유일지배체제의 직접담당기관으로서 이 기구의 지시에 의해 당중앙위가 움직이고 북한체제가 작동되어 왔다. 당중앙위 정치국은 명목상 당최고기구일 뿐 당정책입안에는 실질적인 권한행사를 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정치국은 상징기구이고 비서국 특히 조직지도부와 선전선동부가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여 왔다. 당총비서 직속으로 조직비서 및 선전선동비서가 있고 그 아래로 각 부문담당비서들이 포진하고 있다.

김정일은 1973년 9월 당 조직 및 선전선동담당 비서가 된 이후 그의 유일지도체계 확립에 부심하였다. 김정일은 1967년 부터 추진해 왔던 유일사상체계확립이 어느 정도 달성되자 1973년 부터 1974년 사이에 유일지도체계확립을 위해 매진하였다. 김정일은 모든 문건이 하급기관으로 하달되기 전에 자신의 결재를 받도록하는 한편 , 1974년 4월 당원들에게만 배

42) 북한에서 최초로 '유훈'이란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994년 7월 19일인 것으로 보인다. 「로동신문」 7.19일자는 "우리당과 인민은 혁명을 개척한 자기수령의 이 유훈에 끝까지 충실할 것이다"라고 보도하고 있다.

포된 비밀문건 「당의 유일사상체계확립의 10대원칙」을 발표, 형식적이었던 유일지도체계를 보다 확고히 하였다.

김정일이 유일지도체계 확립에서 기본중심문제로 제기한 것은 우선 당조직기구 체계의 개편과 함께 당사업에서 기본핵으로 되는 당·군·국가 간부사업체계를 재정비 수립하는 문제, 당사업지도검열체계의 정비, 당간부대열의 정화, 지도이론과 방침·방식의 침투, 간부·당원들의 당조직생활과 그의 지도체계의 정비강화, 당홍보사업체계의 정비수립문제 등이었다.

우선 당조직지도부가 당·정·군 전반에 걸친 간부문제를 총괄적으로 장악·관장할 수 있도록 조직지도부의 기구를 개편하고 간부사업체계를 세우는데 역량을 집중하였다. 종래에는 간부문제를 당간부부의 지도하에 각 부서별, 기관별로 분산 취급하고 있던 것을 조직지도부가 직접 총괄적으로 장악·관장할 수 있도록 기구를 신설했다. 즉 김정일은 모든 간부문제를 조직지도부에 집중시키고 조직지도부장 겸 조직비서인 자신의 직접적인 지도·통제하에 간부사업이 진행되도록 하는 간부사업체계를 세웠다.

이와함께 모든 간부의 선발임명의 기준과 절차, 간부의 승진, 노동해임, 교육훈련의 절차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간부사업지도서를 직접 만들어서 그대로 실행하도록 했다. 즉 김정일은 조직지도부의 '비준'제도를 더욱 체계화시켰다. 당내 경제부서를 제외한 부서에는 간부과를 신설하고 조직지도부 해당 간부담당과와 협동하에 산하 경제·교육·과학·문화·예술·언론·보도·출판 부문의 간부문제를 사무적으로 다루도록하고 그것도 임명결정권은 조직비서에게 집중시켰다.

결국 오늘날 북한에 엘리트들의 파벌과 엘리트간 파벌투쟁이 종식된 것은 김정일의 간부정책에 힘입은 바가 크다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는 전인민을 '김일성주의자'로 만드는 일이었다. 김정일은 사상개조사업을 통해 '전인민의 김일성주의자화' 사업에 온 정열을 다바쳤다. 이 사업을 위해 그는 당관료 및 당원들에 대한 사상개조사업에 착수하였다. 그는 관료와 당원들을 김일성 맹신자로 만들기 위해 1974년 「유일사상체계확립의 10대원칙」 준수를 강화하였다. 이를 위해 김정일은 「10대원칙재토의사업」을 시작하였다. 「10대원칙재토의사업」이라는 것은 당의 각 세포별

로 「유일사상체계확립의 10대원칙」의 1개조항씩을 학습하면서 개인별로 입당 이후 현재까지 당생활을 해온 자신의 행적을 그 조항과 연결시켜 반성하고 일종의 '고해성사'인 자아비판을 하는 것을 말한다. 김정일은 이 사업을 위해 '총화'제도를 더욱 강화하였다.

한편 이 사업은 김정일후계체제에 승복하지 않는 구당원들에 대한 숙청의 도구였다. 즉 「10대원칙」은 북한판 '10 戒名'으로서 누구나 한가지는 잘못할 수 있었기 때문에 김정일은 이를 이용하여 충성심이 약한 수많은 당관료와 당원들을 '철직'시키거나 산간벽지로 강제이주시켰다. 이 사업은 항상 '종파'문제로 고심하고 있던 김일성을 만족시켜 주었고 후계자 책봉을 정당화시켜 주었다.

셋째는 경제발전사업이었다. 김정일은 김일성이 제시한 사업을 기한내에 완결하기 위하여 매진하였다. 제일 중요한 경제추동방법은 3대혁명소조운동이었다. 그는 3대혁명소조를 이끌면서 주야를 가리지 않고 일하였다. 이와 함께 '속도전,' '70일전투' 등을 벌였다. 이것은 모든 사업을 신속하게 완수하는 사업방법이었다. 즉 인간의 노동력을 최단시간내에 최대한으로 발양시키는 방법이었다. 특히 그는 '70일전투' 기간에는 모든 '총화'를 중지하고 전투와 무관한 사업에 대한 물자지원을 최대한 억제함으로써 지정된 사업을 '통이 크게,' '번개처럼' 해치웠다. 그는 3대혁명소조운동을 3대혁명 붉은기쟁취운동으로 확대강화하고 필요에 따라 '100일전투,' '200일전투'등을 수립, 비록 내용은 형식적 이었을지라도 외형적으로는 '커다란' 성과를 올렸다. 이것 또한 김일성이 김정일에게 대만족한 요인 중의 하나였다.

김정일이 후계자가 될 수 있었던 제1요인은 물론 최고권력자 김일성의 장자였다는 점일 것이다. 그러나 김정일 후계체제와 관련, 고려해야 할 것은 역사적으로 모든 사전적 후계책봉이 성공했던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이다.[43] 어느 사회나 출세를 위해서는 배경과 능력이 겸비되어야 한다. 더구나 북한처럼 고도로 중앙집중화된 국가에서의 최고리더는 진정으로 '초인

43) 중국에서 모택동에서 화국봉에게로의 권력이양 실패 사례.

적인' 능력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독재국가의 최고지도자는 거의 모든 결정을 스스로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조직력, 정보획득력, 분석력, 판단력, 추진력 등을 겸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김정일도 최고권력자 김일성의 후광 이외에 어느정도의 통치능력을 보유하고 있었음에 틀림없고 실제로 그는 김일성이 '흡족해' 할 만큼 능력을 발휘하였다. 김일성은 자식이 아닌 '정치적 동지' 입장에서 김정일을 칭찬하였고 오히려 만년에는 김정일을 의지하면서 생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있다. 어떻든 김일성과 김정일의 관계는 단순한 '혈연적 유대관계' 이상의 '혁명동지관계'였다. 즉 김일성과 김정일은 명실공히 '一軀兩頭' 관계로서 분리해서는 생각할 수 없는 관계다.

2. 김정일 유일체제하의 남한관련 당면과제

김정일은 1970년대 '속도전·70일전투식' 건설방식의 폐해와 1980년대 '기념비적 대건축물' 축조로 인한 재정낭비 등으로 인해 인민들로 부터 많은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전반적인 경제계획에 의한 건설사업이 아니고 '속도전식' 경제사업은 체계적인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고 인민생활과 직접 관련이 없는 건축물은 김일성부자 우상화에는 기여하였을지 모르나 인민경제를 피폐하게 만들었다. 이것은 김정일의 정치적 인기를 하락시키는 원인이 되었고 향후 만일 김정일이 이것을 효율적으로 극복하지 못하면 그의 리더쉽에 심대한 타격을 주게 될 것이다. 따라서 김정일은 특구활성화에 매진하고 이와 관련 미국과의 화해에 정책적 역점을 두고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김일성 사후 김정일은 김일성의 '유훈'을 충실히 고수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대남정책도 예외가 아니다. 김일성의 남한관련 유훈은 90년대 통일이다. 따라서 유훈정치를 표방하고 있는 김정일의 대남관련 국가목표는 통일일 수 밖에 없다. 물론 그것은 북한식 통일이다. 김일성은 생전에 통일형식으로 연방제를 주장하였고 그 명칭은 「고려민주연방공화국통일방안」이었다.

따라서 김정일의 대남정책 목표는 남북통일일 수 밖에 없다. 북한이 김정일을 '통일대통령'으로 추대하자는 선전선동[44]을 지속하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3. 분야별 대남정책 전망

북한은 1994년 7월 20일 김일성 추도대회에서 김영남 부총리가 발표한 추도사를 통해 사상·기술·문화의 3대혁명노선을 견지하여 「우리 식 사회주의」 건설에 매진할 것을 다짐하고 자주·평화통일·민족대단결의 3대원칙과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을 통한 통일달성 및 자주·평화·친선 원칙에 입각한 대외관계 발전이 향후 김정일체제의 대내·외 정책의 기본임을 분명히 함으로써 기존의 김일성 정책 고수를 천명하였다.[45]

김정일은 김일성의 유훈인 전한반도의 사회주의화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첫째, 내부체제 강화를 위해 남한과의 체제경쟁을 더욱 심하게 전개할 것이다. 그것은 제1의 주적이었던 미국대신 남한으로 주적으로 대체하는 형태를 띨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체제유지, 경제성장 등을 위해 미국과 화해를 시도함으로써 주적개념에서 도출된 반미주의는 그 효용가치를 상실하고 있다. 그런데 북한은 체제통합을 위해 외부의 적이 필요하다. 따라서 북한은 종적이었던 남한을 주적으로 변경해 가고 있다.

북한이 전체적인 탈냉전구도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남한을 주적으로 상정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그동안 북한의 결속력은 공동의 적의 존재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갑작스런 공동의 적의 상실은 북한주민들을 정치적·정신적 아노미를 야기시킬 수 있고 이것은 곧 정권붕괴 내지는 체제붕괴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북한은 남한 주적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김정일은 1989년 사회주의국가들의 붕괴이후 우려했던 미국의 물

44) 「중앙방송」, 1994.10.24.
45) 「로동신문」, 1994.7.21.

리적 공격 공포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그는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북-미고위급회담의 순조로운 타결로 인해 체제제유지에 대한 자신감을 회복, '제2의 남한과의 체제경쟁'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그동안 북한은 남한과 비교했을 때 경제적 열세를 면치 못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김정일은 남한 경제를 제압하기 위해 제2체제경쟁에 돌입할 것이다. 그 일환으로 김정일은 1983년 이래 경제개방을 가속화하여 왔고 1991년에는 나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를 설정하였으며, 1993년에는 제3차7개년계획의 실패를 인정하고 특구식 개방정책을 가속화할 것을 천명하였다. 김정일은 극히 제한된 개방형태인 특구의 활성화를 통해 경제과실을 획득하고 그것을 군사비 및 인민경제비에 충당함으로써 군사력 증강 및 경제성장을 꾀하려 할 것으로 전망된다.

셋째, 김정일은 김일성시대와 같이 「전국민족통일전선」 형성에 정책적 역점을 둘 것이다. 김정일은 남한정부를 주적으로 강도높게 비난하는 일방, 민족론에 입각, 경제·사회·학생·노동·야당 등에 대한 지속적인 상·하층 통일전선전술을 구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전국민족통일전선」전술은 연방제통일방안 실현의 기본전제가 되고 있고 그것이 곧 김일성 유훈을 실현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며 그것은 또한 김정일체제를 공고화하는 초석이 될 것이다.

넷째, 김정일은 주한미군철수에 주력할 것이다. 그 첫단계 작업으로서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대체를 주장할 것이다. 북한은 이미 1991년 이후 군사정전위 자체를 거부하였고 최근에는 중국을 설득, 정전위에서 철수하도록 만들었다. 이의 연장선상에서 북한은 평화협정 대체문제를 미국과 직접협상을 통해 실현할려고 노력하고 있다. 만일 평화협정이 체결된다면 북한은 주한미군의 존재이유를 부정할 것이고 결국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연방제통일실현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평화협정 체결 이후의 김정일정권의 목표는 주한미군철수일 것임은 자명하다.

김정일체제 등장과 日·北韓 관계개선 전망

全 東 霞*

◁目 次▷

Ⅰ. 서 론
Ⅱ. 김정일체제 등장과 대외개방 불가피성
Ⅲ. 일·북한 관계개선의 촉진요인
Ⅳ. 제약요인
Ⅴ 일·북한 관계개선 전망과 한반도문제에 미치는 영향
Ⅵ. 한국의 고려사항

Ⅰ. 서 론

1994년 7월 8일 김일성 사망이후 북한에서는 김정일 체제로의 권력 승계가 비교적 안정되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북한의 김정일 체제는 극심한 경제난과 외교적 고립을 극복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특히 김일성과 같은 카리스마를 가지지 못한 김정일은 권력을 공고화하기 위하여 김일성과의 차별화를 모색할 것으로 보이며, 극심한 경제난 해결을 업적 창출을 위한 효율적인 분야로 간주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북한은 파탄 상태에 빠져 있는 자국경제에 회생의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 民族統一硏究院 責任硏究員

일본과의 관계개선을 모색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편 일본은 1994년 10월 21일 미국과 북한이 제네바회담에서 북한 핵개발 동결과 경수로 전환 지원 및 양국간 관계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한 합의문에 조인함에 따라 일·북한간 수교의 중요한 장애요인인 북한핵문제가 해결의 기미를 보이게 되었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북한과의 수교교섭을 진전시키기 위한 긍정적인 환경이 조성되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연립여당은 내년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일·북한수교교섭 재개를 타진하기 위해 12월초에 선발대를 파견하고 구보 와타루(久保亘) 사회당 서기장을 단장으로 여당합동 방북대표단을 12월 15일경 파견할 방침이었다.[1] 이와 같이 일·북한간에는 김정일 체제 등장을 계기로 관계개선을 위한 분위기가 무르익어 가고 있으며 1995년중에는 일·북한 수교교섭이 재개되어 양측간의 현안문제들이 논의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일·북한간 관계개선을 전망하기 위하여 우선 김정일체제의 대외개방정책을 전망한 후, 일·북한 관계개선의 촉진요인과 제약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일·북한간 관계개선 가능성을 전망해 본다. 또한 일·북한 수교가 한반도문제 및 남북한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중장기적으로 분석하고 우리의 고려사항을 제시해 본다.

Ⅱ. 김정일 체제 등장과 대외개방 불가피성

1. 김정일 체제의 개방·개혁의 촉진요인

가. 극심한 경제난

북한은 현재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구조적 모순과 냉전체제 붕괴에 따른

1) 이러한 일본 여당대표단의 방북계획은 수교협상 재개 전에 우위선점을 노리고 있는 북한측의 거부로 일단 무산되었다.

대외경제 환경의 급속한 악화로 극심한 경제난을 겪고 있다. 북한은 1958년까지 완료된 생산수단의 국유화를 기반으로 중앙집권적인 계획·명령 체제를 유지해 왔으며, 1960년대에는 중공업우선의 외연적 경제성장 정책을 추진하여 일정한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북한은 중앙집권적인 계획·명령의 경제체제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비대해진 관료주의의 경직성과 비효율성 그리고 폐쇄경제가 초래하는 기술의 낙후성과 자본 부족, 생산시설 낙후와 산업간 불균형 등 구조적인 결함을 노정하게 되어 극심한 경제난을 겪게 되었다.[2)]

물론 북한은 자국경제에 구조적인 결함이 노정되던 1979년 제2차 7개년계획 이후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주장하였으며, 독립채산제, 기업이윤 배분·이용면에서의 각 기업소의 권한강화를 시도하였고, 1984년에는 합영법을 제정하여 부분적인 합작투자를 유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북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경제는 회생될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대외개방을 위한 후속조치 부족으로 외자도입 및 외국자본 유치도 여의치 못한 실정이다. 특히 1980년대 후반 구소련 및 동구권의 체제전환 등 대외 경제환경의 급격한 변화상황 속에서 북한의 경제난은 더욱 가중되었다.

우선 경제성장과 관련, 북한경제는 1980년대 후반 경제체제의 구조적 결함으로 인해 2%대의 저성장(1987: 2.5%, 1988: 2.9%, 1989: 2.0%)을 기록하였으며, 1990년 −3.7%, 1991년 −5.2%, 1992년 −7.6%에 이어 1993년 −4.3%의 감소를 보여 4년 연속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식량사정과 에너지 공급부족 현상이 심각한데 1990년 481.2만톤의 식량을 생산하였던 북한은 1991년 442만톤, 1992년 426.8만톤을 생산한데 이어 1993년에는 388.4만톤의 생산에 그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2) 북한경제는 식량난, 외화난, 물품난의 3難을 겪고 있으며, 노동의욕저하, 국제경쟁력 저하, 기술수준 저하의 3低현상과 생활환경 열악, 제품조악, 기계설비 노후의 3惡현상을 보이고 있다.

러한 수치는 1993년의 경우 658만톤의 식량수요에 비추어 볼 때 약 231만톤의 식량부족 상황이 초래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에너지 부족 면에서도 1990년 252만톤이었던 북한의 원유도입량은 1993년 136만톤으로 약 53% 급감하였으며, 발전량도 1990년의 294억 kwh에서 1993년에는 221억 kwh로 25%가 감소되어 에너지난이 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는 원유의 주요 공급원이었던 구소련과 중국이 북한에 대해 경화결제를 요구한 데 기인한다.[3] 북한은 대외교역 규모면에서도 1993년도 대외교역규모가 24억 7,600만 달러로서 1990년의 46억 4,000만 달러의 약 53% 수준으로 축소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상과 같은 북한의 심각한 경제난은 북한체제의 지속적인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김정일 체제 등장 이후에도 북한이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나. 북한의 외교적 고립 및 남북한간 국력격차

북한은 구소련의 붕괴와 동구사회주의권 국가들의 체제전환은 북한의 외교적 고립을 초래하였다. 특히 구소련이 1990년 9월 한국과 수교한 데 이어 북한과 혈맹적 유대관계를 지녔던 중국도 사회주의 시장경제화를 추구하면서 한국과 수교하였다. 국제경제체제의 변화에 따라 제3세계도 경제실리 추구를 향해 변화하고 있고 비동맹권도 약화되고 있어 북한의 외교적 기반이 와해되고 있다. 또한, 북한은 국제적 질서 재편에 중추적 역할을 하는 미국, 일본, 서구 등 서방세계와 적대관계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경제난 회복을 위한 경제지원 제공국을 확보지 못하고 있으며, 동시에 외교적 고립이 심각해 지고 있다.

한편 남북한의 경제·군사적 격차도 심각한 실정이다. 1993년도 북한의 1인당 GNP는 7,466 달러 대 904 달러로 남한의 약 1/8 수준이었으며,

3) Chong-Sik Lee, "Prospect for North Korea," Paper presented at the International Workshop co-hosted by the Korean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Studies and the Research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May 27-28, 1994, Seoul, Korea), pp. 7-10.

무역 총액은 1,660억 달러 대 26.4억 달러로 남한의 1.6% 수준에 불과했다. 더욱이 1993년도 북한의 군사비 지출규모는 56.2억 달러인데 비해 남한은 119.2억 달러였다. 이러한 액수는 남북한의 총 GNP 규모에 대비한 비율를 감안할 때 더욱 북한에 불리한 수치이다. 즉 북한의 군사비는 총 GNP 205억 달러의 27.4%에 달하는 반면, 남한의 군사비는 총 GNP 3,287억 달러의 약 3.6%에 불과해 북한은 절대적인 액수에서의 열세뿐만 아니라 상대적인 부담에서 더욱 불리한 입장에 처해있다.[4)]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은 미·일 등 서방국가들과의 관계개선을 통한 대외개방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자신의 경제회복을 모색하고 한국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고립되고 국력면에서 열등한 지위에 놓여 있는 현상을 타개해 보고자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북한은 심리적 안정판 역할을 할 수 있는 핵무기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면서, 동시에 핵문제를 서방과의 관계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외교카드로 사용하려 하고 있다.

결국 북한은 김정질 체제 등장과 미·북한 제네바 합의 이후 남한보다 상대적으로 열등한 경제 및 외교적 지위를 만회하기 위해 제한적이나마 대외개방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이며, 서방으로부터의 경제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미 및 대서방 관계개선을 적극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 김정일의 대외개방에 대한 수용 태도

북한의 김정일은 1982년 전국 주체사상 토론회에서 발표한 논문인 '주체사상에 대하여'에서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이 폐쇄를 의미하거나 국제적인 경제협조를 부인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김정일은 1987년 당중앙위 챔임일꾼과의 담화에서 자본의 국제화로 서구자본주의가 상호 투쟁의 국면으로부터 상호의존의 국면으로 전환됨으로써 지속적인 생명력을 가진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또한 김정일은 자본주의의 중요성을 재인식함과 함께 자립경제를 부분적인 대외개방 조치의 도입을 통해 재해석하였으

4) 남궁영, " 북한경제력비교연구," 「통일연구논총」, 제2권 2호(1993), pp.187-229.

며, 남북한간의 대결이 정치·군사적 대결인 동시에 경제전임을 강조함으로써 중공업과 함께 경공업을 균형있게 발전시켜 나가야 함을 지적하였다.

이상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김정일은 대외개방에 대한 수용적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합영법 제정(1984), 8·3 소비품 생산운동(1984),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 지정(1991), 농업·경공업·무역 등 3대 제일주의 천명(1993) 등의 일련의 개방조치들은 김정일의 대외개방에 대한 수용태도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5]

더욱이 김일성 생존시 대외개방의 방향으로 정책적 선회를 시도한 사실은 김정일 체제가 대외개방을 추진해 나가는데 있어서 정치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효과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북한은 11월 1일 김일성이 사망 직전 7월 5일과 6일 경제난에 허덕이는 북한경제를 개선시키기 위하여 경제각료나 국영기업 간부를 모아 질책한 모습 등을 기록한 비디오를 제작함으로써 경제재건을 강조한 김일성의 유언을 받들어 김정일 체제 등장 이후에도 경제특구 설립 등 대외개방 조치들을 추진해 나갈 의사가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6]

또한 김정일체제하에서 중용이 예상되는 2세대 전문관료가 정무원·노동당의 30－40%, 정치국 정위원의 50%, 후보위원의 70%를 차지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실용성을 추구하는 이들의 성향이 김정일 체제의 대외경제 개방을 가속화시키는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2. 김정일 체제의 개방정책에 대한 제약요인 및 전망

북한이 사회주의 체제 유지에 사상적 기반이 되고 있는 주체사상은 경제적으로 자력갱생 원칙에 입각한 자립경제 건설을 중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자력갱생원칙에 대한 강조를 통해 북한은 김일성의 유일지도체제 및 김정일의 권력승계를 정당화해 왔다. 다시말해 북한의 주체사상은 자력갱생을

5) 김병로, "김정일 정권의 출범과 대내외정책 전망," 「김일성사후 북한의 정책전망과 우리의 통일방안」(서울 : 민족통일연구원, 1994), pp.25-26.

6) 「朝日新聞」, 1994. 11. 1.

통한 자립경제를 건설한다는 명목으로 주민을 김일성 및 김정일의 유일적 지도하에 동원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그런데 북한이 개방정책을 추진할 경우 자력갱생원칙의 수정이 불가피해지고 이는 북한의 권력승계 정당성의 토대를 붕괴시키게 되는 역설적인 상황을 낳게 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북한은 김정일 체제가 주체사상의 재해석으로 대외경제개방의 의미를 잘 소화해내지 못할 경우 대외개방에 대한 정치적 부담을 안게되어 김정일 체제의 대외경제개방정책의 폭을 제한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정일은 동독, 루마니아 등 사회주의 체제의 붕괴요인이 개혁·개방에 따른 부작용임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7] 북한은 체제 붕괴를 우려하여 대폭적인 대외개방을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대외개방을 하더라도 경제 및 정치개혁으로 이어지지 않는 한도내에서 매우 점진적이고 제한적으로 접근하는 태도를 보일 것으로 보인다.

Ⅱ. 일·북한 관계개선의 촉진요인

이와 같이 북한은 제한적이지만 대외개방정책을 추진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며, 이에 따라 막대한 보상자금과 경제지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일본과의 관계개선을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 일·북한간에는 관계개선을 위한 다음과 같은 촉진요인들이 대두되고 있다.

1. 일본의 영향력 확대를 위한 동북아 및 한반도정책

일본의 동북아정책 목표는 미국의 동북아 안보전략을 지원하기 위해 政

7) 김정일, "혁명적 당건설의 근본문제에 대하여," 「로동신문」, 1992. 11. 2.

治·軍事的 役割을 分擔하고 이를 통해 동북아 지역에서 정치·경제·군사적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다. 일본은 이러한 동북아 정책 목표에 따라 정치·군사적 측면에서 주일미군 주둔비용 분담을 통해 미·일동맹 체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도 동시에 군사력 현대화와 유엔평화유지활동(PKO) 참여 그리고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지위 추구 및 대외원조의 전략적 이용 등을 통해 정치·군사대국으로서의 독자적 지위를 확보하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8] 한편 일본의 對韓半島政策 목표는 1) 한반도의 안정과 2) 한반도에서 자국에 우호적인 정부 수립 및 3) 정치·경제적 영향력 확대이다.[9]

이러한 일본의 동북아정책 및 대한반도정책 목표하에 일본은 최근 냉전체제 붕괴 및 한국의 중·러와의 수교를 계기로 미·러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화된 대한반도 영향력을 회복하기 위해 對北韓 接近 政策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2. 김정일 체제 안정을 위한 북한의 경제난 해소

북한은 김정일 체제를 안정화하기 위해 심각한 경제난 해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본과의 관계개선 내지 수교를 통해 일본으로 부터 경제지원이 필요하다. 북한은 일본과의 수교를 통하여 일본정부로부터 보상금과 조총련 재산 그리고 일본기업인 및 조총련계 상공인으로부터 원활한 경제적 지원을 얻기를 희망한다.

북한은 일본과의 수교가 이루어질 경우 北韓과 日本사이의 經濟交流가 증대되어 短期的으로 北韓經濟를 活性化시키는 촉진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일본이 북한에게 제공할 보상자금은 김일성 사후 북한체제의 위협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경제 난을 극복하는 데 긴요하게 사용될 것이며, 북한의 생산능력을 증대시키고 생필품 및 식량부족과 에너지, 수송분야 등 사회간접 자본의 만성적 애로현상을 短期的으로 緩和해 줄 수

8) 졸저, 「일본의 대북한정책」(서울 : 민족통일연구원, 1993), pp.2-18.
9) 졸저, 「일본의 대한반도정책」(서울 : 민족통일연구원, 1992), pp.3-4.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10]

3. 일본 사회당 무라야마 위원장의 총리 취임

일본은 북한노동당과 우당관계인 사회당 좌파소속의 무라야마 위원장을 총리로 하는 연립여당을 출범시킴으로써 전후처리를 명목으로 대북한 접근을 보다 적극화할 가능성이 있다. 일본의 사회당은 1990년 가네마루를 단장으로 하는 방북 대표단에 참여하여 자민·사회·북한노동당 3당 합의문을 발표한 바 있으며, 전후처리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는 정당이다. 특히 구보 와타루(久保亘) 사회당 서기장은 일·북한수교를 "무라야마 정권의 중요한 외교상의 과제"로 간주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사회당내에는 방북대표단을 파견함에 있어서 1) 핵개발문제나 이은혜문제는 일·북한수교의 전제로 삼지 말아야 하며, 2) 전제조건을 제시하지 않고 우선 양국간 우호관계 수립을 조속히 실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유력하게 대두되어 있다.[11]

더욱이 과거 하타(羽田孜)정권은 북한핵문에에 대하여 "유엔의 결의가 없더라도 한미일 3국에 의한 다국적 제재에 참여가 불가피하다"는 등의 강경입장이었던 데 반해, 사회당은 북한에 대한 어떠한 제재에도 반대하며 대화에 의한 평화적 해결만을 강조한 점으로 미루어 북한은 무라야마 총리 재임기간 중에 국교정상화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12]

비록 무라야마 내각이 한미와의 유대관계를 강조한 기존의 외교노선을 이탈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당내에서 조총련과의 우호적인 인맥을 유지

10) Tomaki Motoi, "Japan's Role in the North Korean Economy," pp.75-76.

11) 현무라야마 연립내각의 다수파인 自民黨내 일부에서도 핵개발의혹에 대한 김정일 후계체제의 태도를 신중하게 주시한 후에 대처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미·북한 합의가 이루어진 마당에 이 기회를 이용하여 이은혜문제를 잠시 제쳐 놓더라도 지금은 우선 수교교섭 재개 통로를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주장하는 의견도 증가하고 있다. 「讀賣新聞」, 1994. 10 25.

12) 이러한 일본사회당의 연립내각 참여를 북한은 수교를 위해 우호적인 분위기가 조성되었다고 판단하고 무라야마 총리취임을 축하하였다.

하고 있는 정치인들이 포진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대북한관계개선을 적극 추진하도록 촉구하는 당내의 압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보여 대북한 관계수교 교섭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4. 미·북한 제네바 협상 타결

일본은 미·북한간 북한핵개발 동결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짐으로써 대북한 접근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미국으로부터 북한핵문제를 둘러싸고 일본에 가해졌던 압력과 제약요인이 제거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대북한 수교교섭을 적극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고 인식하고 있다.

또한 일본은 미·북한 제네바 합의 이후 북한의 경수로 전환 지원을 위한 지원금 40억달러중 상당부분을 일본이 출연하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지만,[13] 「코리아에너지개발기구」(KEDO)에 참가하기로 하고 지원금 분담도 불가피하다고 인식하고 있다.[14] 이와 같은 일본의 「코리아에너지개발기구」 참여는 양국간의 관계개선을 촉구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며, 수교교섭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III. 제약요인

1. 현안문제에 대한 일·북한간 입장차이

가. 북한 핵문제를 비롯한 군사적 위협문제

일본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가 자국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남한의 핵보유를 자극, 향후 통일한국의 핵보유 가능성을 우려하여 북한의 핵개발

13) 「讀賣新聞」, 1994. 10. 19 ; 1994. 10. 22.
14) 「讀賣新聞」, 1994. 10. 20.

에 대한 적극적인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으며,[15] 특별사찰을 포함한 IAEA 사찰 및 남북한 상호사찰 수락을 촉구하고 있다.

미·북한 제네바 합의(10. 21)로 인해 북한핵문제는 일·북한 수교교섭에서 과거와 같이 최우선의 요구사항으로 제시되지는 않겠지만, 일본은 북한이 특별사찰 수락을 통해 핵과거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지 않는 한 북한과 수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수교교섭 과정에서 줄곧 북한 핵과거에 대한 의혹 해소를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북한은 북한의 핵문제가 미·북한간의 문제라고 주장하면서 (제1차 수교회담) 일·북한 수교교섭에서 보다는 미·북한 관계에서 해결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일본이 핵연료 재처리 공장건설(롯카쇼무라) 및 고속증식로 시험가동(몬쥬)을 통한 플루토늄 생산 및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점을 내세워 일본의 논거를 비판하고 있다.[16]

또한 일본은 사정거리 1000㎞의 북한「노동1호」지대지 미사일에 대하여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북한핵문제를 비롯한 북한의 대일 안보위협 사항들에 대한 일본의 해결요구는 미·북한 합의로 다소 완화될 것이지만 여전히 일·북한 수교교섭에서 주요 현안으로 제기될 것이며, 이에 따라 수교교섭 진전에 중요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나. 보상문제

북한은 식민지시대 일·북한관계를 국제법상 교전관계라는 인식하에 일본에게 전승국으로서의 배상과 식민지배에 대한 보상 그리고 전후 40년에 대한 피해와 손실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북한은 지난 1990년 9월 방북한 가네마루 신(金丸信) 前自民黨副總裁와 타나베 마코토(田

15) 신임 무라야마 총리도 국회에서 행한 취임 소신표명(1994. 7. 18) 연설에서도 이와 같은 인식을 표명하였다.「朝日新聞」, 1994. 7. 19 ;「防衛廳編,「防衛白書」(1994年版), pp.47-58.

16) 송무경, "겉과 속이 다른 일본의 핵정책,"「로동신문」, 1993. 8. 4 ; 송무경, "핵무기는 완전히 폐기되어야 한다,"「로동신문」, 1993. 9. 2-8.

邊誠) 전사회당위원장, 북한 노동당 을 대표한 김일성이 공동발표한 「3당 공동선언」에서 "36년간의 일제 식민지배뿐만 아니라 전후 45년간에 대한 보상 등을 약속한 사실을 근거로 이 3당 공동선언의 이행을 요구하고 있으나 일본정부는 거부의 입장을 보여 왔으며, 최근 다케무라 마사요시(武村正義) 大藏相과 이가라시 고조(五十嵐廣三) 官房長官도 이 선언의 재검토를 주장함으로써 거부의 뜻을 분명히 하였다.[17] 이러한 일본의 입장에 대해 북한은 강력히 비판하고 있으며,[18]

이에 항의하기 위해 북한은 일본여당대표단의 방북을 초청해 놓고 다시 방북을 거부하는 제스처를 보이고 있다.[19]

반면, 일본측은 일본의 식민지지배는 합법적인 것이며 북한과 전쟁상태에 있지도 않았다는 입장으로부터 패전국으로서의 배상을 거부하고 식민지시기에 입힌 손해에 대해서도 보상을 최소화한다는 입장이다. 일·북한 국교정상화에 대한 일본의 기본적 입장은 "한·일기본조약에서 정한 틀과 적합성 내에서 진행시켜 나간다"는 것으로서 일·북한수교교섭에서도 경제문제는 재산청구권문제로서 취급한다는 입장이다.

일본은 식민지배 기간중의 加害 상황에 대한 擧證責任을 북한측에게 전가하고 있는 바, 북한이 증거를 충분히 준비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청구권의 규모는 심각한 경제난을 겪고 있는 북한의 양보를 기초로 정치적으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배상문제에 대한 합의에 이르기까지는 양측간 교섭에 있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다. 과거사문제

일본정부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계속 "한반도의 식민지배에 대하여 사

17) 「朝日新聞」, 1994. 11. 29.
18) 「로동신문」, 1994. 11. 30.
19) 이는 북한이 전후45년간의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수교교섭도 재개하지 않는다는 신호라기 보다는 수교교섭을 재개하기 전에 일본이 지나치게 한국을 의식하면서 협상에 임하거나 보상문제에서 양보를 하지 않을 경우 수교교섭을 진전시키지 않겠다는 경고의 의미를 지닌 교섭前의 기선제압용 행동인 것으로 판단된다. 「朝日新聞」, 1994. 11. 30.

죄하지만 정당한 절차를 거쳐 일본의 영토가 되었다"는 입장을 유지하여 왔다. 이에 대해 북한은 일본에게 식민지지배에 대한 불법성 인정과 성실한 사과를 촉구하는 등 원칙론적인 입장을 최대한 고수하고 있다. 북한은 일본의 식민지지배에 대한 인식 변화 및 사죄 표명을 일본의 대북한 관계 개선 의지의 표현으로 간주함과 동시에, 보상문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20] 또한 북한은 김일성정권의 정통성 제고와 승전국으로서의 보다 많은 배상을 일본으로부터 받아내기 위해 김일성정권의 출발시기를 만주에서 일본제국주의와 싸운 항일무장 투쟁시기로 규정하고, 이를 일본으로부터 인정받기를 바라고 있다.

이에 대하여 일본정부는 현재의 북한정권과 항일투쟁시기의 항일운동세력과의 연결이 약하거나 단절된 상태로 인식하고 있으며, 일본이 북한과는 전쟁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면서 배상이나 보상이라는 개념을 인정하지 않고 재산청구권의 관점에서 대화의 용의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양측간의 현격한 입장차이도 보상액수에 대한 협상에 상당한 논란을 불러 일으키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여 수교교섭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것이다.

라. 이은혜문제

이은혜문제는 일본경찰청의 조사 결과 대항항공기 폭파범 김현희의 일본어 선생인 이은혜가 일본인으로서 북한에 있을지 모른다는 결론을 내린후 일본측이 북한에 조사를 요청한 문제이다. 일본은 인도적인 차원의 문제라는 명분하에 북한이 반발하는 이은혜문제를 일·북한수교교섭에서 제기하여 교섭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려 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북한측은 이 문제가 남한에 의하여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북한과 전혀 관계없는 문제를 수교교섭에서 제기하는 것 자체에서 일본의 교섭태도를 불신하고 있다.

---

20) 山本剛士, "日朝交流の現狀と問題點," 「提言·日本の朝鮮政策」(東京 : 岩波書店, 1989), pp.4-5.

그러나 일본정부는 금후에도 수교교섭에서 일본측이 과거사 및 보상 문제 등에서 수세에 몰릴 경우 일본국민을 보호한다는 인도적인 견지에서 이 문제를 계속 제기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일·북한간에는 재일 조선인의 법적 지위향상 문제와 일본인 처문제 등의 제반문제가 관계개선을 위해 해결해야 할 현안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일본측은 일·북한 수교회담에서 재일 조선인의 일·북한간 왕래가 자유롭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일본인처의 모국방문을 수교 이전에라도 허용하여 줄 것을 북한에 요청하였다. 북한측은 제2차회담(1991. 3. 11~13)에서 회담이 순조로이 진행될 경우 수교이전이라도 일본인 처의 일본왕래가 실현될 수 있을 것임을 밝힘으로써 일본인 처문제와 수교회담 진전을 연계시키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

2. 무라야마 연립내각의 취약성

일본은 11월 21일 소선거구 비례대표병립제 선거제도에 따른 선거구 분할법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새로운 선거제도에 따라 새로 선거를 치러야 하고 이를 계기 일본정계는 새로운 선거제도에 따른 총선을 준비하기 위해 정계재편 과정을 겪고 있다.

우선 야당측에서는 12월 10일 新生, 公明, 民社 등 舊연정 참여세력을 9개정파를 중심으로 한 범야당세력의 통합신당인 「新進黨」을 창당하였으며(1994. 12. 10), 이를 위해 新生黨과 일본신당, 공명당 및 민사당이 각각 통합을 위해 해체되었다. 이 통합신당측은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郎)를 신당준비위실행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일본의 국제 무대에서의 정치·군사적 역할증대를 골자로 하는 강령초안을 마련하는 등 「신보수노선」을 기치로 내걸고 있다.

자민당도 종래의 체질과 이미지로는 새로운 소선거구제에 대응할 수 없다는 판단아래 새로운 강령 및 당명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은 새로운 소선거구제에 따라 1구 1인의 후보를 낼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 당내 파벌을 년내에 해체하기로 하는 한편, 본격적인 후보자 조정 작업에 들어

갔다.

사회당도 구보 와타루(久保亘) 서기장과 야마하나 사다오(山花貞夫) 전 위원장 등을 중심으로 한 우파세력(新民主聯合 : 일명 新民聯)은 현재와 같은 소선거구제에 의한 총선에 사회당이 임할 경우 보수양당의 틈바구니에서 군소정당으로 전락할 것이 분명하다는 판단아래 제3의 정치세력(사민리버럴) 결집을 추진중에 있다.

이와 같은 일본정계의 이합집산은 현재의 연립여당의 지속성과 총선시기에 영향을 미쳐 일본 정국을 더욱 불안하게 하고 있다. 총선시기와 관련하여 일본내에는 몇가지 시나리오가 상정되고 있다.

우선 조기총선설(1월 국회해산, 2월총선)의 첫번째 근거로 사회당내 우파세력인 신민련측이 신당을 결성하여 현재의 무라야마 연립정권과 협력관계를 파기하고 오자와와 가까운 구보서기장을 내세워 신진당측과 협력하게 되면 현재의 자민·사회·신당사키가케의 연립내각은 중의원에서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해 조기총선이 불가피해 진다는 시나리오이다. 그러나 이 시나리오는 11월 26일 신민련측이 신당창당 준비작업의 일환으로 심포지엄을 개최하였으나 참석자가 저조하였고 전도가 불투명하게 되어 실현가능성이 불투명하다.

조기총선설의 또 다른 근거로는 소위 「다케시다(竹下)시나리오」이다. 즉 자민·사회·신당사키가케의 3당 연립정권을 탄생시킨 배후조정자인 다케시타 전총리가 정적인 오자와 이치로를 궁지에 몰아넣기 위해 내년 1월 조기총선을 실시하여 총선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야당측을 참패시켜 자민당과 사회당의 일부 그리고 야당이면서 오자와에게 반감을 갖고 있는 반오자와파를 묶어 자민당 단독정권을 설립한다는 구상이다. 중의원이 조기해산되어 총선을 조기에 실시할 경우 지방조직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자민당만이 대승을 거두고 여타정당은 지리멸렬할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이 시나리오는 자민당에게 매우 매력적인 시나리오이다.[21]

---

21) 그러나 이러한 무리한 선거강행은 국민여론으로부터 비겁하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며, 이에 따라 고노 요헤이 총재를 비롯한 자민당 집행부측은 반대입장을 표시하고 있다. 특히 지난 9월의 참의원 아이치현(愛知縣) 재선거와 11월의 오키나와현

이에 대해 무라야마총리는 가능한한 장기정권을 유지할 생각이며 적어도 내년은 피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일본내 정계재편 움직임과 총선시기의 유동성 등으로 인해 일본정국은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으며, 이에 따라 현재 기반이 취약한 과도적 내각인 무라야마 연립내각이 조급히 대북관계 개선을 추진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더욱이 일·중 국교정상화를 이끌어 냈던 다나카(田中角榮)전총리와 같이 일·북한 수교에 대한 결단을 내릴 수 있는 거물급정치인이 없다는 점도 일·북한수교를 조속히 추진할 수 없게 하는 중요한 장애요인이다.

반면에 정계가 취약할 때에는 한국 및 미국과의 관계를 중요시하는 외무관료의 영향력이 증대하기 때문에 급격한 수교교섭 진전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3. 일본의 한미와의 협조관계 유지정책

일본은 한국 및 미국과 전략적인 협조관계에 있기 때문에 미국의 전략을 염두에 두어야 하며 한국이 중요시하는 남북한관계 진전을 고려하면서 대북한 수교교섭을 추진하여야 한다. 일본은 김영삼대통령의 일본방문(94. 3. 24－26)과 미야자와총리의 방한(94. 7. 23－24), 그리고 APEC 정상회담 기간중 두차례 열린 정상회담(94. 11. 14)을 통해 양국간의 우로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하였으며, 특히 북한핵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한·미·일 3국간에 협조체제를 유지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무라야마총리는 APEC 정상회담 참석후 가진 기자회견(94. 11. 15)에서 북한과의 수교교

(沖繩縣) 지사선거 및 구마모토(熊本) 시장선거 등에서 자민당 후보가 낙선했기 때문에 자민당은 최근의 여론조사결과에서 자민당의 지지율 상승에도 불구하고 선거에 대한 자신감을 갖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나리오에 찬성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자민당내에서도 모리요시로(森喜郎) 간사장은 총선시기를 내년 7월의 참의원 선거 이후로 ,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 부총재는 96년 가을로 가지야마 세이로쿠(梶山靜六) 전간사장은 97년 7월의 임기만료후 등으로 각기 전망하고 있다. 「朝日新聞」, 1994. 11. 22 ; *Far Eastern Economic Review*, 1994. 11. 17.

섭에 적극적인 의사가 있음을 표명하면서도 한국과의 긴밀한 협의와 함께 일·북한 수교교섭 진전을 위해 남북대화 재개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22]

또한 한승주외무장관과 고노요헤이(河野洋平) 일본외상은 11월 11일밤 자카르타에서 양국 외무장관회담을 갖고 대북경수로 지원에 한일양국이 긴밀히 협조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양국 외무장관은 대북경수로는 한국형이 되어야 하며 「코리아에너지개발기구(KEDO)」 내에서 한국이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또한 양국 외무장관회담에서 일본정당대표단의 방북 등 일·북한 수교교섭 움직임과 관련하여 일본이 일·북한 수교교섭에서 한국과 긴밀히 협의해 나간다는 데에 합의하였다.[23]

이와 같은 한일간의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는 일·북한 수교교섭 속도를 제약할 것이며, 일·북한 수교교섭을 남북한 관계 진전 과의 연계를 가능하게 할 것으로 보여 북한의 강력한 반발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북한은 일본이 연립여당의 방북대표단 파견을 앞두고 한국에 특사를 파견한 사실을 문제삼아 일본여당대표단의 방북을 거부함으로써 일본의 한국과의 사전협의 입장에 항의하고 경고하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V. 일·북한 관계개선 전망과 한반도문제에 미치는 영향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은 김일성 사후 김정일 체제를 안정시키기 위해 경제난을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고, 이를 위해 일본의 경제지원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핵문제를 포함한 일·북한간 諸般懸案問題에서 전향적인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일·북한간에는 핵문제 이외에 보상 형식과 액수 문제, 그리고 역사해석 문제

22) 「朝日新聞」, 1994. 11. 16.
23) 「朝日新聞」, 1994. 11. 12.

및 이은혜문제 등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상존해 있다.

결국 일본과 북한은 미·북한간 제네바 합의를 계기로 내년도에 일·북한수교교섭을 재개할 것이나 일본은 한국과 미국의 대북한 관계개선 수준을 염두에 두면서 균형을 맞춰 교섭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수교후 일본의 대한반도정책에 있어서도 일본은 상당기간 한·미와의 전략적 유대관계 및 미국의 동북아정책의 틀 내에서 전개될 것이고, 남한에 대한 일본의 경제·안보적 이익을 고려할 것이기 때문에 당분간 韓國偏向의 南北韓 等距離外交를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북한 관계개선이 한반도문제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 일·북한 관계개선 결과로 나타날 일·북한수교는 미·북한수교와 보조를 맞춰 추진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냉전이후시대에 東北亞地域의 國際秩序를 變化시키고 한반도에 대한 교차승인을 완성시킬 것이다.

4강의 남북한에 대한 교차승인 완성은 북한이 「대남 사회주의 혁명전략」의 명분으로 제시하고 있는 「하나의 조선」 논리를 國際的으로 否定하는 것으로서, 北韓도 南北韓 交叉承認을 契機로 남북한 분단상태를 現實的으로 認定하고 남북한간 냉전적 대치관계를 남북한 평화공존관계 혹은 화해관계로 전환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특히 남북한 교차승인은 궁극적으로 북한이 대남혁명노선을 포기하고 대남 평화공존정책으로 나오도록 유도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한간 정치적인 신뢰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한반도안정을 위한 긍정적인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일·북한 수교를 계기로 북한의 동북아질서 참여는 북한이 고립 및 패쇄정책을 고수함으로써 동북아지역 국제관계의 자연적 흐름을 저해하고 있는 현재와 달리 經濟的 면에서는 域內國家間 多角的인 經濟協力과 軍事·安保的 면에서는 域內 國家間 信賴構築 및 軍備縮小 등을 논의할 수 국제적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예상되며,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周邊國들의 保障役割이 期待된다.

한편 일·북한 수교후 北韓과 日本사이의 經濟交流는 短期的으로 北韓經濟를 活性化시키는 촉진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본이 북한에게 제공할 보상자금은 김일성 사후 북한체제의 위협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경제난을 극복하는 데 긴요하게 사용될 것이다. 북한에 제공되는 배상자금은 북한의 생산능력을 증대시키고 생필품 및 식량부족과 에너지, 수송분야 등 사회간접 자본의 만성적 애로현상을 短期的으로 緩和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北韓經濟 沈滯의 本質的인 원인은 자력갱생의 閉鎖的 經濟路線과 中央執權的인 計劃經濟 體制의 非效率性 그리고 정치·군사 우위의 비합리적인 경제정책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일본의 대북한 배상 및 경제교류 증대로 단기간내에 북한 경제난이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는 없을 것이다.

북한은 심각한 경제난으로 인해 日本資本의 對北韓 投資를 促進하기 위한 부분적인 개방입법을 추진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나, 지나친 대외개방이 체제붕괴로 연결될 것을 우려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제한적이고 선택적인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최근 북한은 외국인투자관련법을 제정하면서도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자유경제무역지대 내에서만 창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외국인기업법 21조는 북한의 「직업동맹」이 종업원활동을 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여전히 대외개방에 일정한 제약을 가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일·북한수교는 초기 단계에서 대외개방 면에서는 일정한 성과를 보일 것이나 체제개혁 면에서는 상당히 제한적인 영향만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일·북한 수교가 남북한관계에 미칠 영향과 관련, 북한은 일·북한수교 후 대일 경제협력을 증대하고 이와 병행하여 남한과의 부분적인 경협도 파격적으로 시도해 볼 가능성도 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북한은 체제위협으로 작용할 남한과의 교류를 경계할 것이며 남북한교류 증진도 제한적으로 허용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북한 경제교류는 남북한간의 경제교류 확대 및 상호 보완성 증대보다는 경제교류의 필요성을 감소시키고 남북한간 및 한·일간의 경쟁관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일·북한수교 및 교차승인은 한반도 통일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은 부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이다.

첫째, 政治的 側面에서 韓半島의 政治·經濟 狀況에 周邊四強의 影響力

이 增大된다는 사실이다. 특히 일본은 韓半島의 平和保障國의 일원으로서 남북한간의 군비통제에 대한 국제적 보장에 참여할 것이며, 구체적으로 남북한 양측의 군사력 및 군사배치 이동에 대한 정보교환 및 투명성 제고 그리고 비무장지대에 대한 엄격한 감시·통제 등 검증기술면에서 支援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安保的 側面에서 交叉承認에 의한 北韓과 西方間의 경제협력 증대가 북한의 개혁·개방과 북한 주민의 생활수준 향상보다는 김정일의 독재권력을 강화하고 군사력을 증대하는 데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라 남북한간 긴장관계가 고조될 수 있다.

셋째, 經濟的 側面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인 효과는 일본의 대북한 수교로 인하여 북한에 대한 해외투자 및 서방과의 경제협력이 증대될 경우, 북한은 한국과의 경제협력 필요성을 소홀히 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일본의 대북 경제지원은 한·일간에 대북 경제협력 문제를 둘러싸고 경쟁관계를 조성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Ⅵ. 한국의 고려사항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한국은 미·일의 대북한 수교가 한반도통일 문제에 줄 수 있는 부정적 효과를 저지하고 주변국들로부터 통일에 필요한 건전한 정치·경제·안보적 협력을 유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對應 方案을 강구할 必要가 있다.

첫째, 韓國은 미·북한 및 일·북한 수교후 韓半島問題를 解決하는 과정에서 北韓의 誤判 등 안보상의 긴급사태 발생에 대비하여 한·미간에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주한미군의 계속 주둔 등 미국의 대한방위공약 준수를 재확인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통일이행기에 북한 김정일체제의 붕괴로 야기될 지도 모르는 한반도의 혼란과 전쟁위험을 막기 위해 주한미군의 역할이 필수적이다.

둘째, 韓國은 日本에 대하여 상호이익의 관점에서 협조관계를 유지하려는 자세를 견지하여야 하며 일본의 국제적 역할증대에 대한 전향적인 수용 및 인정을 통하여 일본을 한반도통일을 위한 정치·경제적 협력 세력으로 만들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대일 협조체제 유지를 통하여 한국은 일·북한 수교후 일본의 대북한 경제원조가 군사적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외교적 경로를 통해 주의를 환기할 수 있을 것이며 북한의 개혁·개방을 유도하기 위한 일본의 협력도 얻어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한국은 일본과의 협의하에 일본의 대북한진출을 남북한관계 진전과 연계시켜줄 것을 요청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한국은 일본의 과도한 대북한 접근을 견제하기 위하여 중·러와의 지속적인 협력관계 증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노력은 미·일과의 정치·안보적 협력관계를 손상하는 공개적인 방식이어서는 안되며, 가능한한 경제협력을 중심으로 조용히 추진되어야 한다.

넷째, 한국은 남북한간 신뢰구축 및 군축문제를 협의함과 동시에 일본과 중국의 군사력 증강 및 과도한 대한반도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하여 북한을 포함한 동북아 국가들 사이에 多者間 安保協議體를 推進하여야 할 것이다.

빈 면

북한의 사회변동 : 제2사회의 형성 전망을 중심으로

徐 載 鎭*

◁目 次▷

Ⅰ. 서 론
Ⅱ. 혁명의 재창조와 혁명의 일상화의 이중성
Ⅲ. 세대구성의 이중성
Ⅳ. 계급구조의 이중성
Ⅴ. 인성구조의 이중성
Ⅵ. 권력 엘리트 구성의 이중성
Ⅶ. 경제구조의 이중성으로의 이행
Ⅷ. 결 론

Ⅰ. 서 론

소련 및 동구 사회주의체제가 붕괴한 원인에 대한 기존 연구중에서 사회학적으로 가장 흥미로운 것은 제2사회(the second society)라는 개념이다.[1)]

제2사회는 사회주의체제의 공식 사회와 공존하면서 형성되어진 비공식

* 民族統一硏究院 北韓硏究室長

1) 동구 사회주의 시민사회 이론가들의 신진화주의(new evolutionism), 반정치(antipolitics), 병렬사회(parallel society), 제2의 사회(second society), 대안적 사회(alternative society), 시민사회(civil society) 등의 개념은 모두 급진적, 폭력적 방식이 아니라 인민대중의 심성(mentality)에 대한 지적·도덕적 교체를 추구하는 개념들이다.

사회로서 결국은 공식사회를 전복하기까지 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 의하면 사회주의권의 반체제운동인 시민사회 운동도 다름아닌 제2의 사회를 형성하는 운동이다. 사회주의 시민사회 운동은 사회주의체제에서 공식적인 체제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은 매우 무모한 행위이기 때문에 사회주의 공식세계는 공격하지 않으면서 당국의 영향이 미치지 못하는 제2의 사회를 발전시키는 운동이었다.[2] 따라서 제2사회는 기본적으로 반정치(antipolitics)를 지향하였다. 반정치는 권력을 잡을 수도 없으며 권력을 잡기를 원하지도 않는 사람들의 행위를 의미하다. 반정치는 삶의 모든 영역을 정치화해버린 정치에 대한 혐오감의 표현이며 제2사회란 국가의 통제의 바깥에 존재하는 인간의 협력과 커뮤니케이션을 회복하기 위한 전략이다[3]

제2사회의 성장은 단순히 시민사회운동의 결과로서 등장한 것은 결코 아니다. 사회의 구조적인 측면에서 분화가 진전되었기 때문이다. 사회구조의 제반 측면에서 제1사회와 병존하는 새로운 구조가 성장한 결과 개인의 가치의식이 변화하였기 때문이다.

북한사회는 흔히 전형적인 전체주의 사회로 이해되고 있다. 주체사상과 명령경제체제에 의하여 사회 전체가 획일화된 구조와 유일가치체제에 의하여 작동하는 사회인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소련 및 동구 사회주의 국가들이 제2사회의 성장과 제1사회의 와해의 결과로 사회주의체제가 붕괴한 것이라고 본다면 북한사회는 과연 어떠한 단계에 있는가? 북한사회에는 제2사회가 성장하고 있는가? 아니면 북한은 소련 및 동구와는 전혀 다른 사회인가?

이 논문은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하여 동원 사회로서 사회동원력, 인

2) H. Gordon Skilling, *Samizdat and an Independent Society in Central and Eastern Europe* (Columbus : Ohio State University Press, 1989)

3) Miklos Haraszti, "The Beginning of Civil Society : The Independent Peace Movement and the Danube Movement in Hungary," in Vladimir Tismaneanu ed. *In Search of Civil Society : Independent Peace Movements in the Soviet Bloc* (New York : Routlege, 1990), pp.85-87.

구구성, 계급구조, 주민들의 인성구조, 권력엘리트 구조, 경제구조의 6개 측면에서 제2사회의 성장 여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이 논문은 여타 사회주의가 모두 붕괴하거나 급진적으로 변화된 시점에서 북한 사회의 구조를 이해하고 향후 변화를 전망해보고자 한다.

Ⅱ. 혁명의 재창조와 혁명의 일상화의 이중성

북한은 항일 유격대의 빨치산 혁명전통을 사회통제의 핵심적 모델로 사용하고 있다. 김일성의 표현을 빌면 "오랫동안 매우 어려운 환경에서 일제를 반대하여 싸워이긴 항일빨치산들의 투쟁과 생활은 우리의 모든 근로자들을 끝없이 감동시키며 그들을 영웅적 투쟁에로 고무하는 산 모범"으로 되고 있다.[4] 이 빨치산 혁명전통은 단순히 과거의 유산이 아니라 '생산도 학습도 생활도 항일유격대식으로!'라는 구호와 같이 오늘의 생활을 규정하는 혁명의 지도방침이라고 말하고 있다.

북한에서는 항일빨치산의 전통을 여러가지 형식으로 '복원'하고 있다. 이는 복원이라기 보다는 허구적 재창조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북한은 자기 체제의 지배이데올로기인 주체사상의 역사적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 항일투쟁의 전통을 1955년[5]부터 대대적으로 확대하여 활용하고 있다. 왜 이 시점에서 항일저항운동이 확대 복원되어 활용되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간단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당시는 1953년 스탈린 사후, 후르시쵸프가 스탈린의 우상숭배를 비판한 후 사회주의권에 변혁의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던 때였다. 즉, 소련에서 수정주의가 등장하

4) "온 사회에 항일유격대식 사업기풍과 생활기풍을 더욱 튼튼히 세우자," 「근로자」, 1980년 3호, p.9.

5) 김일성의 "레닌의 학설은 우리의 지침이다,"(「근로자」, 1955년 제4호)라는 글을 통해 김일성은 1930년대의 항일빨치산 운동을 자기의 것으로 유일 정통화하는 역사의 왜곡을 시작하였다.

고 동베를린, 폴란드, 헝가리, 체코에서 반소 민족주의 시민봉기가 연쇄적으로 일어났던 시기였다. 만약 그때 소련의 군사적 개입이 없었더라면 1989년에 일어난 동구사회주의권의 붕괴가 그때 일어났을 것이다. 이러한 사회주의권의 대변혁이 북한에도 영향을 미쳐 반김일성 세력들이 김일성의 우상숭배경향에 대하여 비판을 제기하고 나오자 김일성정권은 일대 위기에 직면했다. 이러한 정권위기의 상황에서 김일성은 소련과 중국, 동구사회주의권의 수정주의와 우상숭배의 바람을 차단하기 위하여 자주성 또는 독자노선이라는 개념을 핵심내용으로하는 주체사상을 내세워 사회주위권과의 단절과 폐쇄주의 노선을 채택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채택된 주체사상에 역사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북한에서는 북한 사회과학을 총동원하여 항일혁명운동의 역사 연구가 추진되었다. 1955년에서 1967년 사이에 「력사과학」이라는 잡지를 통하여 1920~1930년대의 노동운동, 농민운동, 학생운동에 관한 대대적 연구를 발표하였다. 김일성의 다음과 같은 말에서도 이 사실이 표현되어 있다 : "과거 우리나라에서 진행된 노동운동사, 민족해방 투쟁사들에 대한 연구가 무시되고 있으며 그에 대한 정리 또는 편찬사업을 거의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 진행된 우리나라의 노동운동과 민족해방투쟁의 경험을 연구하지 않고서 어떻게 조선혁명을 옳게 수행할 수 있겠읍니까?"[6] 주체사상이 형성되어가는 과정속에서 과거의 민족주의운동, 민족해방운동은 주체사상의 역사적 정통성 부여작업에 사용되었다. 그리고 1979~1983년사이에 22권으로 된 조선전사, 1983년에 「현대조선력사」, 1987년에 「조선통사」를 발간했다. 이렇게 복원된 항일유격대 빨친산의 혁명전통을 어떻게 동원하고 있는지가 아래의 인용문에서 잘 나타나 있다.

> 사회주의 건설이 힘있게 진척되고 있는 오늘 우리 당은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로 하여금 지난날 항일유격대원들이 벽두밀림에서 높이 발휘하였던 그 불타는 열정과 투지, 투쟁기풍을 적극 따라배워 그대로

6) 제4차조선로동당대회 자료집(서울 : 통일원, 1988)

> 일하고 생활함으로써 혁명과 건설을 새로운 높이에서 힘차게 전진시켜나갈것을 요구하고 있다. 黨이 제시한 〈생산도 학습도 생활도 항일유격대식으로!〉 라는 전투적 구호를 높이 받들고 온 사회에 백두의 혁명정신과 전투적인 사업기풍, 생활기풍이 차넘치게 하는데 사회주의 건설에서 끊임없는 위대한 비약과 혁신을 이룩하며 우리 혁명 위업의 종국적 승리를 다그쳐 나가는 확고한 담보가 있다.[7]

즉, 항일유격대의 혁명전통을 오늘에 되살려 따라 배우며 그것을 생산, 학습, 생활의 역할 모델로 사용하자는 것이다. 80년대 들어 항일빨치산 전통이 더욱 강력하게 동원되는 이유는 중국이나 소련, 동구 사회들이 개혁한다고 해서 북한도 개혁할 것이 아니라 '주체식' 또는 '우리식'으로 할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이것은 외부의 변화의 사조가 북한 내부로 침습하여 동구나 중국 및 소련에서 처럼 인민대중들이 봉기할 것을 우려하여 대응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다.[8] 그 중의 한 내용을 보자.

> 항일혁명투쟁시기 혁명로선과 전략전술을 우리혁명의 구체적 실정에 맞게 세우는 것은 옳바른 로선과 전략전술이 없어 실패만 거듭하던 선행한 운동들의 역사적 경험과 교훈 그리고 전인미답의 주체혁명위업을 개척해나가야 할 항일혁명의 특성으로부터 제기되는 절박한 요구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주체적인 전략전술을 밝히는 것을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되찾기 위한 근본문제로 내세우시었으며 항일혁명투쟁을 령도하는 전기간 우리 혁명의 실정에 전적으로 맞는 주체적인 전략전술을 제시하시고 혁명실천이 제기하는 모든 문제를 독창적으로 해결해 나가시었읍니다.[9]

---

7) "온 사회에 항일유격대식 사업기풍과 생활기풍을 더욱 튼튼히 세우자," 「근로자」, 1980년 3호, p.8.

8) 「근로자」에 게재된 몇개의 논문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박인근 "항일혁명투쟁시기 혁명의 주체를 튼튼히 세우는데서 이룩한 고귀한 경험," 「근로자」(1989.1) ; 권중영, "항일유격재원들이 지녔던 숭고한 애국정신," 「근로자」, 1987년 1호 ; 황순희, "항일혁명투쟁 시기의 대중정치사업," 「근로자」 1982가 1호.

9) 박인근, 윗글, p.43.

항일빨치산 혁명때 고생하면서 조국과 민족을 지켰듯이 지금과 같은 위기에서도 정권을 이반하지 말고 사회에 통합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자주 인용되고 있는 김일성의 말은 다음의 것이다 :

> 지난날 험산준령을 넘나들며 무장투쟁을 할 때에 늘 부모형제들에 대한 생각, 고향에 대한 생각, 조국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싸웠읍니다.[10]

항일빨치산 전통이 주체사상의 한 핵심내용인 군중노선에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가 다음의 인용문에서 잘 나타난다.

> 어찌하여 항일빨치산이 오랫동안 지탱할 수 있었읍니까? 빨치산들이 옳은 군중관점에 서 있었고 그들이 군중의 지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항상 군중의 이익을 옹호하였으며 그들을 위하여 생명을 바쳐 싸웠기 때문에 그들도 이와같이 우리를 지지하고 보호해온 것입니다. …군중을 이탈한 당은 마치 물을 떠난 고기와 마찬가지입니다. 군중이 없는 당이 무엇을 가지고 혁명을 하겠읍니까?[11]

이러한 혁명의 재창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혁명은 이미 일상화(routinization)되어 혁명적인 효율성이 매우 약화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북한에서 혁명성의 약화로 혁명후기 국면이 나타나고 있다는 징후의 하나는 물질에 대한 욕망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에서 혁명의 핵심이 사상성인데 오히려 물질에 대한 욕망이 높아진 것은 혁명적 가치가 전도된 결과이다. 김일성은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한다'는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한다면서 어떻게 해서 계속 일만 시키고 주는 것은 그대로인가라고 회의한다는 것이다. 이는 금기사항으로 되어 있던 물질에 대한 욕망이 높아지고 노동의 댓가로서 충분한 물질적 보담을 요구하는 경향을 보여 주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기대가 보상되지 않을 때 고의적으

10) 「김일성저작집」 제3권, pp.237-38 ; 권중영 윗글, p.44에서 재인용.
11) 김일성, "사상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할 데 대하여,"

로 노동을 기피한다든가 지도이념과 지도체제에 대하여 불만을 의식하게 된다. 「로동신문」 논설은 생산이 정상화되지 못하는 현상에 대하여 스스로 비판하면서 그들 나름대로의 이유와 결함들을 분석하는 대목에서 '혁명성'이 미약하며 근로자들의 주인의식과 책임감이 결여되어 있고, 관료주의적 사업방법과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경제지도 관계자들로 말미암아 근로자와는 융화되지 못한 채 유리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일하기 싫어하는 것은 착취계급의 낡은 사상"이라고 지적하고 "자기의 창조적 지혜와 열정을 아낌없이 바쳐 노동을 충실히 해나가는 사람이 진정한 애국자이며 공동노동에 주인답게 참가하여 성실하게 일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12]

다른 공산주의 사회와 마찬가지로 북한주민들이 상점, 사무실과 공장에서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북한방문자들은 쉽게 알 수가 있다. 보상이 없으므로 의욕도 없다. 모든 인민들에게 생산에서 경이적인 위업달성과 충성심을 보일 것을 라디오와 선전간행물을 통해 독려하는 공식적인 미사여구가 끊임없이 범람하는 것과는 대조를 이룬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사실상 선전과 생활상과의 관계는 정반대이다. 상호 보강관계로서 인민들의 일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수록 과대선전을 하기 마련이며,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13] 혁명의식이 일상화되고 혁명후기 국면의 징후를 나타내주는 예로서 노동기피현상이 증가하고 있다. 노동기피현상에 대한 단적인 예로서 중국사회과학원 S교수가 한 농사꾼 청년과 나눈 대화를 보자 :

"당신들은 왜 열심히 농사를 안짓느냐?"고 물었어요.
"선생님, 농사지어서 우리 입에 들어와요?"
"소변 세번하고 대변 한번 하면 해져요."
"집단농장에서 농사짓는 사람들이 옛날에는 서로 감시를 하고 뭐 이랬어요. 그러나 한 마을에서 같이 평생을 살다보니까 감시하는 사람도

12) 「로동신문」(1991.8.31).
13) Aidan Foster-Carter, "북한사회를 어떻게 볼 것인가 : 하버마스 위기이론의 적용," (민족통일연구원 제1회 국제학술회의발표논문, 1991), p.10.

없어요. 이젠 고발하는 사람도 없고 다 이젠 한가족같이 살아요. 몇십년을 같이 사니까, 그리고 서로 결혼해가지고 얼키고 설키고 친척도 되고, 뭐 이렇게 되니까 옛날같이 「혁명정신이 투철하지 못하다, 반동분자다」하는 뭐 그런 고발이 없다구요."
"일을 하다가 '야, 소변 한번 보고 와' 하면 소변하러 가서는 뭐 한시간 아니면 30분, 그러니 소변 세번하고 또 대변하러 간다 해서는 1시간 놀다오고 이러면 하루 소변 세번하고 대변 한번 하면 해져요." * 「최근 북한의 경제 사회상 : 중국과학원 S교수에게 알아본다.[14]

현재의 북한상황을 보면 그들 나름대로 새로운 입장, 새로운 슬로건을 표방하고 사상교양을 강화한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주민들 스스로가 느끼는 실제적인 성취감과 현실적 조건사이에 간격이 있을 때에는 주민들의 시각에서 그것을 액면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이다. 이러한 주민의식과는 별개로 북한 공산주의자들은 계속혁명로선과 사상학습교양의 강화를 부르짖고 있는데 이제 '혁명'이 일상화되어 그 효과는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계속 강화 일변도로 나갈 경우 더욱 큰 역효과를 낳게 될 것이다. 이러한 경향에 대한 보다 구조적인 분석이 이 글의 이하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Ⅲ. 세대구성의 이중성

혁명이 체제 운영의 이념적 도구이며 그 이념을 지탱하는 것이 결국은 개인의 의식이라고 본다면 한 세대의 교체는 그러한 의식의 변화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사회에서 사회주의 체제가 수립된지 45년이 지났다. 한 세대를 30년으로 볼 때 이미 한 세대가 지난 세월이다.

14) 통일원 (1989), p.20.

따라서 혁명성의 전승에 촛점을 맞추어 세대교체가 북한사회의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15]

북한에서 세대교체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새세대가 구세대와 혁명의식에서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동기효과(cohort effect)의 분석과, 구세대가 나이를 먹어 노년층이 되면서 혁명의식이 어떻게 변해가는지에 대한 연령효과 (age effect)를 동시에 분석할 필요가 있다.

대체로 45년이후 북한사회에서 일어난 변화의 하나는 우선 혁명세대의 사멸과 혁명후기세대로의 교체이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6.25전쟁(1953년) 이후에 출생한 사람(〈표 1〉에서 39세 이하)은 전체 인구의 78.5%를 차지하고 있으며 혁명세대라고 불리는 전쟁전에 태어난 사람(〈표 1〉에서 40세 이상)은 21.5%에 불과하다. 그런데 더 엄격히 말하여 전쟁전에 국민학교를 들어가기 이전의 유년기에 있었던 사람을 새세대로 본다면 전후세대(〈표 1〉에서 44세 이하)는 83.7%에 달한다. 북한에서 혁명세대라는 말이 일제기간 동안 항일운동에 참여했거나 6.25 전쟁기간 동안 "미제"와 싸운 경험이 있는 세대(6.25 당시 10세 이상을 포함하면 현재 50세 이상)는 12.1%에 불과하다. 이것은 북한 인구의 대부분이 이미 전후세대라는 것을 알 수 있다.

---

15) 世代의 개념은 크게 세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다. 첫째 부모세대와 자식세대 처럼 가계계승의 단위(unit of kinship decent) 개념, 둘째 청년층 세대나 대학생 세대라고 부를 때 처럼 생애주기(life cycle)의 어느 단계에 있는 사람들을 통틀어 지칭하는 개념, 셋째 나이를 먹음에 따라 연령층을 함께 이동하는 동시출생집단 또는 동기집단(cohort)을 지칭하는 개념의 경우이다. 이 중에서 특정 기간내에 주요 역사적 경험을 공유한 사람들로서 정의되는 동기집단은 오늘날 세대 연구의 중심개념이다. David Kertzer, "Generation as a sociological problem," *Annual Review of Sociology* 9 (1983). 동기집단의 세대개념이 학계에 보편화되게 된 것은 같은 시대, 같은 사건이라는 공통의 역사적 상황으로 인해 동기집단들 간에 모종의 의식적 공감대를 발견할 수 있으리라는 지식사회학적 사고가 보편화 되고나서 부터라고 할 수 있다. Karl Mannheim, "The problem of generation," Essays on the Sociology of Knowledge (Oxford : Oxford University Press, 1952). 이렇게 세대의 개념이 정의된다면 세대효과(generation effect)라는 말은 공통의 역사적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발생하는 동기효과(cohort effect)와 흔히 성숙효과라고 부르는 것으로 나이를 먹어간다는 사실과 직결되는 연령효과(age effect)의 합이라고 볼 수 있다. Norval D. Glenn, *Cohort Analysis*, Sage University Paper Series 5 (Sage Publication, 1980).

〈표 1〉 북한의 연령별 성별 인구분포

연 령	%	% 누계	전 체	남 자	여 자
0	12.3	2.3	493,552	252,079	241,473
1−4	8.5	10.8	1,808,316	922,501	885,815
5−9	9.6	20.4	2,046,355	1,042,714	1,003,641
10−14	9.1	29.5	1,949,407	991,168	958,239
15−19	11.8	41.3	2,531,943	1,283,591	1,248,352
20−24	12.4	53.7	2,658,012	1,342,791	1,315,221
25−29	9.5	63.2	2,041,534	1,024,064	1,017,470
30−34	8.8	72.0	1,875,169	939,853	935,316
35−39	6.5	78.5	1,380,927	691,191	689,736
40−44	5.2	83.7	1,100,728	548,727	552,001
45−49	4.2	87.9	900,998	446,532	454,466
50−54	3.5	91.4	757,991	345,978	412,013
55−59	2.9	94.3	620,179	269,532	350,647
60−64	2.1	96.4	450,494	181,397	269,097
65−69	1.5	97.9	329,689	125,824	203,865
70−74	1.0	98.9	223,830	82,942	140,888
75−79	0.6	99.5	137,636	47,668	89,968
80^{+}	0.5	100	104,858	28,398	75,460
계	100		21,411,618	10,567,950	10,843,668

자료 : Nicholas Eberstadt and Judith Banister, *North Korea : Population Trends and Prospects. Center* for Int'l Research, US Bureau of the Census, Washington, D.C.(1990)에서 계산.

이렇게 많은 수를 차지하는 새세대는 일제의 지배, 전쟁, 절대적 빈곤을 경험한 기성세대에 비해 대체로 사상성과 혁명성이 약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북한지도부의 표현에 의하면 "학생 등 새세대 중에는 혁명적 시련을 겪지 못하고 당의 품속에서 행복만을 알며 자라난 사람들이 적지 않으며 서구의 부르조아 문물에 물들기 쉽다"[16]는 것이다. 한국사회에서 새세

16) 「로동신문」 1991. 6. 5.

대가 민주적 시민의식과 진보적 성향이 강하듯이 북한의 새세대도 그러한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언론매체에 매우 자주 지적되고 있는 대로 북한의 새세대도 북한의 강력한 체제유지 교육에도 불구하고 과반수를 차지하는 청장년층의 당성과 혁명성이 약한 것은 북한사회의 기존체제유지에 도전적 요인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문제는 1960년대에 이미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음을 김일성의 지적에서 알 수 있다. 1963년 2월에 이미 김일성은 휴전선 너머에 있는 적들이 우세한 지위를 점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젊은 세대들은 계급의 적에 대한 투쟁이 이제 더 이상 필요한 임무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 새로 자라난 우리의 젊은이들은 지주가 어떻게 생겼는지, 자본가가 어떻게 생겼는지, 제국주의자들이 어떻게 악독한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대장들이 정치상황을 지도하고 있는데 우리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여러가지 질문들이 제기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생활이 좋아지면서 일부 청년들속에서 투쟁하기를 싫어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영화도 전쟁영화 같은것은 꼿꼿해서 싫다고 합니다. 이들은 그저 좋다 좋구나 하면서 놀기만 좋아하고 곤난을 이겨내기를 싫어합니다. 곤난을 이겨내는 투쟁을 강하게 전개해야 용감성과 참을성이 배양될 것인데 이런 투쟁이 없고 점차 라태하고 안일한 분위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젊은 세대들이 적을 잊어버리고 투쟁하기를 싫어하며 안일한 것만 좋아하게 된다면 그들은 우리의 혁명위업을 계승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루어놓은 업적마저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17]

새로운 세대의 이러한 문제는 사회화의 실패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18]

---

17) 김일성, "우리의 인민군대는 로동계급의 군대, 혁명의 군대이다. 계급적 정치교양사업을 계속 강화하여야 한다."(인민군부대 정치부련대장이상 간부들 및 현지 당, 정권기관 일군들 앞에서 한 연설, 1963. 2. 8.)「김일성저작선집」, 3권,(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71), pp.468~72.

18) 도홍렬, "북한사회의 개방화요인과 전망,"「통일논총」(서울 : 통일원, 1984)

북한의 젊은 이들이 아주 어릴 때는 자아를 의식하지 못하고 남이 시키는 대로만 따라 하게 되지만 고등중학교를 마치는 단계에 오면 그들 스스로가 자신과 북한에 대해 여러가지 의문을 가지게 되고, 나아가 한국·미국·일본 등 외부세계에 대해 호기심을 한층 더해 간다는 것이다. 이러한 그들의 심리적 변화 가운데는 다음과 같은 현상들이 포함된다.

> 북한은 평등사회이고 계급이 없는 사회라고 배웠는데, 어째서 대학진학, 직장배치, 장교임관, 「로동당」입당, 도시지역 거주 등 모든 생활분야에서 성분·핵심계층·당간부의 자녀·출신도 등에 따라 차별적으로 대우하는 것인가?[19]

이는 북한이 출신성분을 철저히 따져 당간부들의 경우 그 자녀들에게까지 정치적·사회적 혜택과 우선권을 주어 왔기 때문에 이러한 불평등한 현실적 조건에 대한 각성이 높아지고 있음을 말해준다. 고등중학교 졸업반이나 대학에 들어 갈 단계가 되면 이러한 회의와 불만이 더욱 깊어지고 종국에는 체제에 대한 비판의식으로 까지도 발전하게 된다. 듯 북한사회에서는 사회화 실패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다. 북한당국은 청소년들간에 안일주의가 팽배하고 투쟁이 약화되고 혁명성이 퇴색하고 있다고 그들 스스로가 비판하고 있다. 즉 「일하기 싫어하고」, 「조직생활을 싫어하고」, 「학습하기 싫어하고」, 「직장이탈 현상이 빈번하게 일어난다」고 경고하고 있다.

또 하나의 경향은 청소년층에 서구풍조가 확산되는 조짐이 발견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평양을 방문한 사람들의 증언에 의하면 북한 청소년 가운데 일부는 디스코풍의 록음악을 즐겨들으며 은밀한 곳에 모여 디스코를 추기도 하는데, 이같은 젊은이들은 대부분 일본, 홍콩 등지로부터 방문하는 상인을 통해 카세트라디오를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고급 당간부 자녀들이라는 것이다. 평양에는 주민을 위한 공개적인 디스코텍은 없지만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한 호텔 등 10여곳에는 디스코텍이 설치되어 있는데 당간부

19) 「내외통신」 (1983. 8. 26).

자녀를 비롯한 일부계층은 외화와 바꾼 돈표 3원을 내고 입장하고 있으며 돈이 없을 경우에는 외국인과 동행하여 입장하려고 호텔주위를 배회하는 모습이 목격되고 있다고 한다.

청소년의 '혁명성'의 문제가 우려할 정도라는 것을 나타내주는 명백한 증거의 하나는 새로 제정되어 시행된 「청년절」 행사이다. 북한은 1991년에 8월 28일을 처음으로 「청년절」로 제정하여 대대적인 행사를 개최하였다. 8월 18일부터 청년절 당일인 28일까지를 「청년학생축전기간」으로 설정하고 정치, 경제, 예술, 체육 등 분야별로 나누어 북한 전역의 청년학생들을 참가시킨 가운데 김일성과 김정일의 생일 행사 다음가는 전국 규모의 거대한 행사를 치렀다. 중앙보고대회에는 전국의 10만여 인파가 동원되었다. 8월 28일을 청년절로 제정한 이유에 대해 중앙인민위원회 정령은 "김일성이 항일혁명 투쟁기에 청년운동발전에서 획기적 의의를 가지는 '조선공산주의 청년동맹'을 결성한 1927년 8월 28일을 기념하여 이날을 청년절로 제정한다"고 밝혔다. 이 행사동안 북한 전역의 청년, 사로청원들에게 보낸 서한 「청년들은 당과 수령에게 끝없이 충실한 청년 전위가 되자」에서 김정일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교양했다.

> 청년들은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모든 문제를 우리 식대로 풀어가며 그 어떤 이색적인 사상요소와 생활풍조에도 물젖지 말아야 합니다.…청년들은 썩어빠진 부르조아적 사상문화와 생활양식과의 투쟁을 강하게 벌려 자그마한 요소도 우리내부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야합니다.…항일혁명투쟁속에서 마련된 빛나는 혁명전통으로 튼튼히 무장하는 것은 혁명의 시련을 겪어보지 못한 새세대 청년들에게 있어서 특별히 중요한 문제로 나섭니다. 우리 혁명의 종국적 승리를 이룩하자면 그 계승자인 청년들이 당의 혁명전통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 합니다.[20]

이 행사는 북한이 김정일과 청년세대의 관계강화에 역점을 둔 것으로 분

20) 「월간 북한동향」 (서울 : 통일원, 1991년 8월).

석된다. 각 선전 매체를 통해 청년절이 김정일의 배려에 의해 제정되었음을 강조함으로써 김정일이 청년세대에 특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부각시키는 데 주력하는 것을 보아도 이를 잘 알 수 있다. 이 행사가 끝난 후에도 김정일이 전체 청년들에게 보냈다는 서한 내용을 관철한다는 명목의 대규모 청년궐기집회를 개최한데 이어 10여일 동안 전국 각지에서 이같은 집회를 잇달아 열어 사상교양과 '김정일 따라배우기 운동'강화, '사회주의애국주의정신'함양, '북한식 사회주의 우월성' 발양을 강조했다.[21]

지금까지의 분석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북한 사회에는 혁명을 경험한 세대는 사멸해가고 있으며 의식면에서 '혁명'을 체험한 세대와 체험하지 못한 세대간에 큰 차이가 나는 이중적 세대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Ⅳ. 계급구조의 이중성

이 절에서는 계급구조에 제2사회적 특성이 성장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북한 사회에서 계급개념이 하나의 중요한 정치적 도구로 사용되는 것은 사회주의 건설을 통해서 착취계급인 지주계급과 자본가계급을 해체함으로써 노동계급과 농민을 계급적 지배로부터 해방시켰다고 선전하기 위한 것이다. 즉 사회구성의 원리가 마르크스-레닌주의에 의거하여 노동계급이 주체가 되는 프로레타리아 독재가 실현되는 사회라는 것이 사회적 정당성의 이념적 기초가 되고 있다. 따라서 계급이론과 계급투쟁이 북한에서 가장 중요한 사회적 정치적 언어 중의 하나가 되어 있다. 북한에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건설하는 과정이란 주권을 잡은 노동계급이 경제와 문화, 사상과 도덕의 모든 분야에 걸쳐 사회를 자기 모양대로 개조해 나가는 과정, 즉 로동계급화해 나가는 과정"이다.[22] 북한에서는 프로레타리아 계급독재의 역사적 사명이 착취계급(자본가, 지주)을 청산하고 그 반항을

21) 「내외통신」 9481호 (1991. 9. 18).
22) 「김일성저작선집」 4권, p.369.

진압하는 데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근로자를 개조하여 노동계급화 함으로써 온갖 계급적 차이를 점차적으로 없애고 또 노동계급의 보편적 이익(universality)을 지향하는 사회적 정당화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

북한에서 정권창출 초기에 이미 착취계급을 말살하고 노동계급의 독재를 실현하여 계급없는 사회를 건설하였다고 선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급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끊임없이 계급투쟁을 선동하고 동원하고 있는 까닭은 어디에 있는가? 마르크스의 계급리론은 자본가계급과 노동계급의 양극적 대립을 가정하여 착취계급인 자본가 계급을 해체하면 노동계급의 독재가 실현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산업화의 진전은 새로운 계급분화를 창출하여 마르크스의 이론적 각본에 없던 중간계급이 비대해졌다. 사회주의적 공업화는 북한에서도 직업구성을 변화시켰던 것이다. 1987년 현재 북한의 총인구 중 약 60%가 도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북한의 성인중 약 75%가 비농업인구로 분류되어 있어 북한이 농업사회에서 비농업사회로 이행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표 2〉에서 보는대로 농민이 1946년 당시 74.1%에서 1987년 현재 25.3%로 대폭 감소했고 대신 노동자의 비율이 1946년 말의 12.5%에서 1987년에 57.0%로 대폭 증가했다.

공업화가 야기시킨 계급구조의 중요한 변화는 북한에서 근로인테리로 불리는 신중간계급의 증가이다. 신중간계급의 비율은 1946년말의 6.2%에 불과하였으나 1987년에 약 17%에 이르게 될 정도로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신중간계급 또는 근로인테리는 양적으로 팽창했을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상당한 성장을 하였다. 그들의 일부는 사회적 상승이동을 하여 전문관료집단으로 부상하였으며 혁명엘리트와 과도기적 연합을 구성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계급구조의 이러한 변화는 전인민의 노동계급화, 무계급사회의 건설 정책과 상충됨으로써 새로운 계급투쟁의 요인이 되었으며 북한은 이론적 정책적 딜레마에 봉착하게된 것이다. 다렌도르프가 1957년에 Class and Class Conflict in Industrial Society에서 마르크스의 계급이론을 비판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이다. 마르크스의 이론은 계급의 양극화를 가정하여 중간계급은 점차 소멸하여 프롤레타리아화될 것이라고 보았으나 현실적으로

〈표 2〉 북한 주민의 직업별 구성 변화

	1946 년말	1949 년말	1953 년	1956 년	1960 년말	1963 년	1965 년말	1986 년	1987 년
노동자	12.5	19.0	21.2	27.2	38.0	40.1	41.0	56.3	57.0
사무원 (근로인테리)	6.2	7.0	8.5	13.6	13.7	15.1	16.5	17.0	16.8
농업협동조합원				40.0	44.4	42.3	40.8	25.9	25.3
개인농민	74.1	69.3	66.4	16.0	—	—	—		
협동기업노동자	—	0.3	0.5	1.1	3.3	1.9	—	0.9	0.9
수공업자	1.5	0.8	0.6	0.3	—	—	—		
기업자	0.2	0.1	0.1	—	—	—	—		
상인	3.3	1.7	1.2	0.6	—	—	—		
기타	2.2	1.8	1.5	0.5	0.3	—	1.7 (조합원)		

자료 : Nicholas Eberstadt and Judith Banister, *North Korea : Population Trends and Prospects*. Center for Int'l Research, US Bureau of the Census, Washington, D.C.(1990)

는 오히려 더욱 비대해졌다. 중간계급의 성장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주의 사회에서도 팽창했다. 마르크스 이론의 맹점이 여기에 있으며 사회주의 붕괴의 핵심이 마르크스의 이론에서 예기하지 못했던 중간계급의 비판적 역할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중간계급의 팽창을 체제유지의 기반으로 삼고 있는 것과는 반대로 공산주의에서는 중간계급의 출현이 노동계급 독재의 이념과 상충되어 체제의 모순으로 대두되었다.

이러한 신중간계급을 어떻게 이론적으로 규정하고 다루어야 할지가 북한의 새로운 계급정책의 핵심으로 등장하였다. 북한에서는 임금로동자 일반을 노동계급으로 보지 않고 노동계급, 농민계급, 병사, 근로인테리의 4개 범주로 분류하고 그 계급적 차이를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에서 근로인테리를 독립적인 계급으로는 인정하지 않고 '계층'이라는 다른 개념을 적용시키는 이론적 정책을 사용함으로써 노동계급의 독재개념을 고수하고

있다. 북한의 정치사전에 따르면 계층 개념은 다음과 같다.

> 어느 계급에도 속하지 않는 사회적 집단. 계층은 독자적인 사회정치적 세력으로는 될 수 없다. 계층 가운데는 인테리같이 사회생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도 있으며 룸펜부르조아지같이 계급으로부터 탈락되어 기생적 생활을 하는 계층도 있다. 착취사회에는 기생적 생활을 하는 사회계층들이 있으나 사회주의 사회에는 오직 로동자, 농민에게 복무하는 근로인테리만이 계층으로 남아 있다.[23]

북한에서 새로이 중요한 정책적 과제로 등장한 것이 이러한 '계층'을 이루고 있는 인테리에 대한 계급적 통합이다. 그러나 인테리들은 실제로 체제비판과 동요 세력으로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북한 지도부에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을 다음의 인용문에서 알 수 있다.

> 인테리들에게는 아직 낡은 사상 잔재가 적지 않게 있으며 나쁜 사상이 되살아날 수 있는 요소도 많습니다. 인테리들은 생산실천과 떨어져 있고 많은 경우에 개별적으로 활동하는 사업상 특성으로 하여 사상적으로 단련할 기회가 적으며 낡은 사상에 쉽게 물들 수 있읍니다. 인테리들을 철저히 혁명화하여 참다운 로동계급 인테리로 만들어야 그들이 변질되지 않고 당과 혁명에 끝까지 충실할 수 있습니다. 당조직들은 인테리들 속에서 사상교양과 조직생활을 강화하여 그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고 단련시키며 모든 인테리들이 늘 현실 속에 들어가 실천투쟁을 통하여 로동계급의 사상성과 조직성, 규율성을 배우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모든 인테리들이 당과 혁명에 대한 높은 충성심과 강인한 혁명적 의지,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가지고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사업에 온갖 지혜와 정력을 다바쳐 투쟁하도록 하여야 하겠읍니다.[24]

---

23) 정치사전(평양 : 사회과학출판사, 1973), p.185.

24) 김일성 1980.10.10.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

지난날 착취사회에서 교육을 받았고 부르조아 사상의 영향도 비교적 많이 받은 오랜 인테리는 물론, 사회주의 제도하에서 자란 새 인테리들도 생산활동과 떨어져 주로 개별적으로 정신활동을 하는 직업상 특성으로 하여 혁명적 단련이 부족하며 사상수양에 힘쓰지 않으면 개인주의, 사대주의, 교조주의를 비롯한 여러가지 불건전한 사상의 영향을 쉽게 받을 수 있다.[25]

최근의 동구와 소련에서의 개혁이 신중간계급 또는 인테리들의 주도로 이루어졌던 것에 대해 북한의 지도부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다. 최고인민회의 의장 양형섭의 다음과 같은 말은 그것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국제공산주의 운동의 력사적 경험은 인테리들을 로동계급의 진정한 인테리로, 참된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교양개조하기 위한 투쟁을 벌이지 않는다면 일단 사회주의의 길에 들어섰던 사람들도 제국주의자들이 퍼뜨리는 반동적 사상공세 앞에서 사상적으로 무장해제되고 변질되어 사회주의의 길을 포기하고 치욕스러운 반혁명의 길로 굴러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26]

이러한 성격을 가진 신중간계급이 성장한 것은 북한 사회의 계급구조에 혁명후기 계급이 성장하고 있다는 것으로 결론내릴 수 있다.

Ⅴ. 인성구조의 이중성

이 절에서는 북한주민의 인성의 이중구조를 살펴보기로 한다. 북한주민은 한편으로는 김일성과 김정일의 신민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사회주의적

25) 「근로자」(1990. 8), p.20.
26) 「근로자」(1990. 8), p.21.

인성'이기를 거부하는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북한은 자본주의적 인간을 사회주의적 인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사회관계의 사회주의적 개조와 병행하여 인간의식의 사회주의적 개조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 사회주의적 제도가 서면 낡은 사상이 발생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기초는 없어지며 근로자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개조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이 지어진다고 본다. 그러나 착취제도가 없어지고 물질문화생활이 높아진다고 하여 사람들의 공산주의적 개조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에도 근로자들의 머리속에는 착취사회에서 물려받은 낡은 사상잔재가 오래동안 남아있게 되며 그 부작용도 계속된다. 혁명과 건설의 주인인 근로인민대중이 낡은 사상의 멍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낡은 사상의 부식작용이 계속되는 조건하에서는 부르조아적 영향이 사회생활에 널리퍼지는 것을 막을 수 없으며 혁명의 전취물을 지켜낼 수 없다. 오직 인간개조사업에 선차적 힘을 넣어야만 낡은 사상잔재의 부식작용을 막고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킬 수 있으며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자본주의에 대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할 수 있다.[27]

인간개조이론은 "공산주의적 새 인간 육성에 관한 완성된 과학적 리론"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인간개조사업에 선차적인 주의를 돌리지 않고서는 자연개조사업과 사회개조사업을 힘있게 밀고 나갈 수 없으며 혁명과 건설을 높은 속도로 전진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28] 인간개조이론에서는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과정이란 노동자, 농민, 인테리 등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화하는 과정이며 전사회를 노동계급의 모양대로 개조하여 온갖 계급적 차이를 없애는 과정으로 보고 있다.

---

27) 김환,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히신 인간개조사상은 공산주의적 인간육성의 위력한 사상리론적 무기,"「근로자」(1978, 4), p.19.

28) 사회과학출판사 편,「인간개조리론」(평양 : 사회과학출판사, 1985), pp.1-2.

인간개조사업의 기본 내용은 주체사상교양이며 당정책교양과 혁명전통교양, 혁명교양, 계급교양, 집단주의교양, 노동을 사랑하는 정신의 교양이다. 인간개조사업은 무엇보다도 사상개조이며 인민을 김일성의 신민으로 개조하는 것이다. "사상전에서는 수령님의 교시, 당의 의도대로 대중을 무장시키는 것이 첫공정으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수령의 사상은 참다운 공산주의 혁명가의 사상정신적 양식이라고 본다. "참다운 공산주의 혁명가는 위대한 수령의 혁명사상을 유일한 세계관으로, 확고한 신념으로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이 상정하고 있는 이상적인 혁명적 인간형은 곧 臣民型 인간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에서 인민들이 인간개조이론의 논리대로 혁명적 인간으로 개조되었는가? 초기에는 혁명적으로 개조되었다고 하더라고 그 혁명성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가? 아베크롬비(Abercrombie) 등은 구체적인 사례연구를 통하여 중세 봉건주의도 현대 자본주의도 지배이데올로기를 피지배계급에 내면화시키를 실패했다는 사실을 들어 지배이데올로기 이론을 비판했다.[29] 아베크롬비(Abercrombie) 등은 지배이데올로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지배이데올로기의 중요성이 너무 강조되었으며, 지배이데올로기는 실제로 지배이데올로기론이 주장하는 그러한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공식적 지배이데올로기는 피지배자에 의하여 침투(penetration)당하기 쉽다. 그것은 지배이데올로기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응집력이 강하지 못하며 또한 지배이데올로기는 피지배자 개인들의 사회적 위치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고 이해되기 때문이다. 그러한 상이한 이해는 사람마다 일상적 경험과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이다. 북한사회는 다른 어떤 사회보다 지배이데올로기가 더욱 발달한 사회이다 그러나 이런 사회에서의 피지배자도 사유하는 정신능력이 있는 인간이란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어느 사회나 지배자의 무기가 있으면 피지배자의 무기도 있게 마련이다. 자유민주주의사회에서 처럼 시민사회가 발달해 있으면 수많은 자발적 결사

29) Nicholas Abercrombie, Stephen Hill, and Bryan Turner, *The Dominant Ideology Thsis* (London : George Allen & Unwin, 1980), p.3.

체(grass roots association)들이 성장하여 지배층에 대항하여 집합행동이나 공개적 저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과 같이 '절대군주'가 지배하는 억압적 사회일수록 집단적이고 공개적인 저항(open defiance)은 무모한 짓일 뿐이다. 따라서 그러한 사회에서는 일상생활형의 저항(everyday forms of resistance), 소극적 저항(passive resistance)이 발달하게 된다. 이러한 저항을 제임스 스카트(James Scott)는 약자의 무기(weapons of the weak)라고 지칭했다.[30]

일상생활형의 저항이란 피지배자들이 지배자가 시키는대로 열심히 로보트처럼 일하는 것이 아니라 외양적으로는 순종하는 척 하면서 실제는 저항하는 것이다. 즉 일하면서도 일부러 꾸물거리기, 고의로 불성실하기, 도주, 무지한 체 하기, 시치미 떼기, 좀도둑질하기, 비방하기, 사보타지 하기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일상생활형의 저항은 인도의 카스트제도하에서 하층민들이 사용했고[31] 남북전쟁이전에 미국의 남부 흑인들이 사용하던 저항의 형태이다.[32] 이러한 저항은 소수의 영웅적 지도자들에 의해 간헐적으로 이루어진 공개적인 무장봉기보다 훨씬 많은 저항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북한사회에서도 이러한 일상생활형의 저항이 부분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집단적이고 공개적인 저항이 허용되지 않고 정치체제가 억압적인 사회일수록 최소한의 저항의 형태인 일상생활형의 저항이 발달하기 마련이다. 북한의 소설에서 나타나는 일상생활형의 저항에 관한 몇 가지 사례만 제시하고자 한다.

개개의 인간들을 따져보면 하나같이 제구실을 할 사람들인데도 엇서기

30) James Scott, *Weapons of the Weak : Everyday Forms of Resistance* (New Haven : Yale University Press, 1985) 참조.

31) Edward B. Harper, "Social consequences of an unsuccessful low Caste Movement," *Social Mobility in the Caste System in India; An Interdisciplinary Symposium*, James Silverberg, ed., Supplement No. 3, *Comparative Studies in Society and History* (The Hague : Mouton, 1968), pp.48-49.

32) James Scott, *Weapons of the Weak : Everyday Forms of Resistance*, p.34.

를 잘하고 웬간해서는 분조장의 지시가 먹어들지 않았다. 그 때문에 그 분조장의 얼굴에 주름살이 펴질새 없었다. 오죽이나 골머리를 앓았으면 '흐린하늘'이라는 별명까지 붙었겠는가.[33]

나의 눈길을 끈 것은 그의 작업도구였다. 곡괭일 메고 나왔어야 할 그의 어깨에는 넉가래가 얹혀있었던 것이다. 아무리 심사가 비뚤어졌다 한들 첫 작업분공까지 어기다지. 나에게는 그의 행동거지가 새 분조장에 대한 말없는 도전처럼 느껴졌다. 나는 삼녀가 가끔 뿔난 언행으로 말밥에 오르군한다는 것을 전부터 들어왔으나 첫날 부터 이럴줄은 몰랐다. 만사가 다 귀찮다는 건가?[34]

광춘이는 배가 자꾸 아프다고 해서 내가 내려갈 때 병원엘 간다고 같이 갔고 창흡이는 그보다 먼저 할머니 3년제사라고 갔는데 둘다 아직 안왔다는 것이다. 밸이 울끈하였다. 〈잘한다. 3년제사라는건 3년동안 하는 제사인가? 그리구 밥을 두그릇씩 꽝꽝 조겨넣어두 흠씰하지 않는 배는 어디가 고장난 건가?〉[35]

일상생활형의 저항은 아니지만 북한의 지배이데올로기와 피지배자의 실제 생활은 괴리되어 있다는 인성의 이중성도 발견되었다. 북한에서는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를 금지하기 때문에 인간의 보편적 속성인 개인주의는 감추어져 있고 정치적으로 허용된 행위와 태도인 공적 선호(public preference)만 겉으로 노출된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외부의 억압이 약화되면 언제든지 사적 선호(private preference)가 현저화될 가능성이 있다.[36]

---

33) 변창률, "첫 메아리," 「청년문학」 (1991. 1), p.23.

34) Ibid., p.38.

35) 한인준, "깊은 산속에서," 「청년문학」 (1991. 6), p.13.

36) 개인은 정치적 불만이 있을 때 정부를 비판하면서 저항운동에 참여하느냐 또는 비판을 안하면서 운동에 참여하지 않는냐의 갈림길에 서게 된다. 저항운동에 참여하면서 입게 되는 정치적 박해때문에 公的으로는 정부를 두둔하면서 私的으로 즉 내심으로만 정부를 비판할 수도 있을 것이다. 개인의 선택은 사적 선호(private preference)와 공적

북한에서 공적 선호가 위장되어 있거나 잠재되어 있다는 것은 소설을 통해서 그 증거를 찾을 수 있다. 다음은 북한소설「먼길」의 일부이다.

〈의자밑에 쓰러져 있는 저 철부지가 내아들이란 말인가?〉〈기다려보자요. 철이들면 달라지겠지요〉안해는 남편을 위안하려 하였다.〈듣기싫소. 저자식을 혁명화시킬 만한 곳을 탐문하는 중이요.〉〈당신눈엔 그렇게 보인단 말이요.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동무도 견해가 잘못 서 있소. 가정에서도 사상투쟁은 매시각마다 해야 하오. 동무부터 자기를 비판하란 말이요.〉〈아니 여보, 나더러 동무동무 하면서…그래, 집에서 매 시각마다 사상투쟁을 하겠단 말요. 그럼 회의실도 꾸려 놓자요.〉아들로 하여 어느 하루도 편한치 못한 예술가 부부였다.[37]

가정을 혁명화하는 것이 공식적인 선호이지만 아내의 입장에서는 가정에서조차 동무라는 호칭을 쓰며 사상투쟁을 한다는 것은 일상생활의 관례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북한가정이 공식적으로는 가정의 혁명화라는 구호밑에 가정내에서조차 사상투쟁을 하도록 요구되고 있으나 이는 한낱 구호에 불과함을 시사하여 준다.

다음은 집단주의가 지배적인 가치체계이지만 개인들에게 개인의 안일과 가족 이기주의는 포기하기 어려운 귀한 가치라는 사실을 시사하여 주는 단편소설「상상봉」의 한 대목을 보기로 한다.

산골 오지의 개발현장에 사랑하는 딸이 근무를 자원해오자 시공과장인

선호(public preference)로 나누어진다. 두개의 선호에 차이가 있는 한 개인은 선호위장(preference falsification)을 하는 것이다. 공적 선호는 공개적 저항행위에 참여하면서 입게될 외적 박해와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느끼게 될 양심의 손상 사이의 균형에 의해서 결정된다. 따라서 사적 선호는 고정되어 있지만 공적 선호는 얼마나 많은 다른 사람들이 혁명에 참여하느냐에 따라 변화하게 된다. Timur Kuran, 'Now out of never : the element of surprise in the East European Revolution of 1989," *World Politics* 44(1)참조.

37) 정창윤,「먼길」(평양 : 문예출판사, 1983), p.31 ; 이온죽,「북한사회연구」(서울 : 서울대출판부, 1988), p.173에서 재인용.

아버지는 마음 속으로 딸의 고생을 너무나 안타까와 한다. '희고 가느다란 손매듭이며 반금 싹튼 듯한 연한 참대순 같은 몸매'를 보며, 〈저런 몸으로 힘든 이곳 근무를 자원해오다니〉 시공과장은 해종일 까닭모를 불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다. 자신이 이상스럽게 느껴진다. 다른 집 아이들이 조국이 부르는 벅찬곳으로 달려갈 때는 왜 그리도 평범하고 범상하게 여겨지는지. 정작 내 자식이 그러한 현실에 뛰어들 때는 그것이 왜 희생으로만 느껴지는 것인지[38]

북한에서는 이기주의와 개인주의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집단의 이름으로 개인의 이익과 안일을 추구하는 소집단 이기주의로 발전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농업작업분조를 소재로 한 북한의 단편소설 「사랑의 길」은 분조본위주의에 빠져있는 현실을 지적하고 있다.

우리 작업반 2분조장은 1분조장과 동창생이구 서로 절친한 사이인데도 글쎄 분조본위주의를 하지 않겠습니까. 1분조에서는 모가 아직 실하지 못해서 2분조 신세를 지게되었는데 2분조장은 절대로 모를 넘겨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무리 설복해도 막무가내였습니다. 저는 안타까와 막 욕을 했습니다.[39]

다음의 단편소설 「삶의 자격」의 일부이다. 이 소설에서 대학을 졸업하여 개인적 출세를 해야한다는 가치관을 가진 주인공의 '삼촌'의 말을 통하여 우리는 북한주민의 이중적 인성구조를 들여다 볼 수 있다. 대학을 졸업하고 군경영위원회 간부로 일하는 주인공의 삼촌은 조국애 또는 집단의 이익보다 개인의 사적 이익을 우선적으로 강조한다. 주인공의 삼촌은 주인공의 아버지에게 주인공을 대학에 보내야 한다고 말한다.

〈형님! 그래도 집안에 하나밖에 없는 사내 녀석인데 공불 시켜야 할게

38) 전택철, "상상봉," 「청년문학」 (1991. 11), p.22.
39) 강학태, "사랑의 길," 「청년문학」 (1991. 4), pp.11-12.

아니요?〉〈공부? 왜?〉〈아 참, 이런… 아무 자격이래두 있어야지 당장 일부터 시키겠소? 지금이야 대학졸업증 없이 어디에 가서 제구실을 하는줄 아오?〉 단순한 사회물계도 모르는 아버지가 답답하다는 듯 삼촌은 넥타이를 늦춰놓았다. 〈흥, 대학간판? 그게 무엇에 필요한거냐? 대학졸업증이 왜 있어야 하는가 말이다.〉〈형님은 지내 단순한게 탈이예요. 생활이야 어디 그렇소?〉[40]

단편소설「대들보」에서도 몸이 약한 딸을 청년돌격대에 보내면서 공적 선호와 사적 선호 사이에서 갈등하는 공장지배인 오광림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는 북한주민의 일상적인 삶속에서의 이중적 인성을 관찰할 수 있다. 지배인은 피붙이인 딸을 보내기가 안스럽지만 자기의 얼굴(체면)을 봐서 1년만 참고 견디라고 말한다.

어느날 오광림은 딸애를 조용히 사무실에 불러들이였다. 어머니를 닮아 외소한 몸에 성미 또한 그대로 박꽃 같았다. 년중 내내 햇볕 한번 받아보지 못한 희고 연한 살갗과 길고 가늘기만 한 팔, 아직도 아버지의 보호 '우산' 없이는 기실 제발로 살아갈 수 없이 연약한 딸애였다. 오래 동안 딸애를 세워놓고 즘저리기만 하던 오광림은 끝내 누구에게도 하소할 수 없었던 마음속 고뇌를 딸앞에 털어놓고 말았다. 〈어쩌겠니. 네가 아버지를 좀 도와다오. 지금 온 나라의 청년들이 다 당의 부름을 받구 대건설장에 달려가질 않니. 그런데 지배인의 자식이라구 해서 너만은 공장에 그냥 남아 있어서야 되겠니. 너때문에 아버진 일하기가 힘들다. 그렇다고 널 훌렁 학교에 보낼 수도 없지않니. 그러니 칼에 맞아도 큰칼에 맞으랬다구 소문이 자자한 큼직한 건설장에 가서 한 1년을 꾹참고 견디어라. 그러느라면 알도리 있을게다.〉[41]

위에서 몇가지 사례를 통해서 본 대로 북한주민의 인성은 이중성을 넘어

40) 윤경찬, "삶의 자격,"「청년문학」(1990. 10), pp.28-35.
41) 원종주, "대들보,"「청년문학」(1990. 2), pp.31-32.

일상생활형의 저항까지 발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공식세계의 가치와는 다른 지향의 가치의식이 형성되어 있다. 이는 정치적 억압이 강한 권위주의 사회에서 개인이 취할 수 있는 당연한 전략이자 결과이다.

Ⅵ. 권력 엘리트 구성의 이중성

이 절에서는 권력 엘리트의 이중적 구조를 살펴보고자 한다. 북한의 권력엘리트는 한편으로는 김일성을 중심으로 유일체제를 형성하고 있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파벌의 잠재성을 길러가고 있다는 점에서 이중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북한은 초기의 노선갈등을 극복하고 유일지도체제를 확립하였으며, 파벌의 생성을 성공적으로 억제하고 있다. 북한이 소련이나 중국과는 달리 파벌을 억제할 수 있었던 요인은 무엇인가? 첫째, 북한에서는 중국이나 구소련에서 나타났던 혁명1세대의 사멸과 권력교체가 없었다는 사실이 지금까지 북한 권력엘리트집단내의 파벌형성을 억제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945년 이후 지금까지 한 지도자가 장기집권을 했다는 사실이 북한체제에 변화가 없는 가장 중요한 원인인지도 모른다.

둘째, 북한에서는 권력승계를 장자에게 세습하려고 하고 있고 또 지난 20년 동안의 장기간에 걸쳐 승계준비가 이루어져왔기 때문에 중국이나 구소련에서와 같은 전임자에 대한 격하운동이나 대안적 노선을 혁명적으로 선택하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는 점이다. 또 현재의 권력엘리트 구조는 이미 김정일 후계체제로 공고화되어 있기 때문에 김일성 사후에도 엘리트집단내에 파벌이 형성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이다.

셋째, 소련에서 후르시쵸프의 스탈린 격하운동 이후에 나타난 다원주의나 중국에서 모택동의 대립통일의 원칙과 같은 경쟁적 사상이 병존할 수 있는 토양이 북한에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북한에서는 유일사상, 유일체제, 유일노선만 허용되고 나머지는 숙청될 수 밖에 없는 정치

적 상황으로 인하여 경쟁적 파벌이나 대안적 노선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설사 다원주의나 경쟁적 노선이 점진적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김일성과 김정일의 유일체제하에서는 아직은 억압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넷째, 북한에서도 전문관료의 수가 점증하는 등 권력엘리트의 특성에 약간의 변화가 있으나 중국이나 구소련에 비해서는 그 변화의 정도가 매우 미약하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엘리트 구조에 변화의 잠재력이 성장해가고 있다. 북한의 권력엘리트 구성에는 두가지 유형의 잠재적인 파벌이 성장하고 있다. 그 하나는 혁명 엘리트와 전문기술 엘리트의 분파이며, 다른 하나는 김일성과 김정일의 친인척 엘리트와 비친인척 엘리트의 분파이다. 차례로 살펴보기로 한다.

앞의 제3절에서 살펴본대로 북한에서는 정권수립이후 혁명세대가 사멸함에 따라 비혁명세대 전문기술관료들이 대거 등장하고 있다. 이들은 아직 권력의 상층부까지 진입하지는 못했지만 빨치산세대와 과도기적 연합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다. 〈표 3〉에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의 직업별 출신성분을 보면 노동자와 농민은 점차 감소하는 반면에 사무직과 전문직 출신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공업화의 결과 사무직 전문직의 절대적인 수가 증가하였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1982년 이후 사무 전문직이 대의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5%를 넘었다는 것은 대단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또 노동당의 정위원 및 후보위원, 정무원의 부장 및 부부장급 엘리트의 출신성분에 관한 정확한 자료는 없지만 전문관료출신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북한은 아직도 혁명 1세대가 지배하는 사회주의 국가에서 흔히 볼 수 있듯이 사상과 정치지도가 강조되고 있지만 산업화가 진전되고 사회적 복합성과 다원화가 증가하면서 사상과 정치중심의 리더쉽 보다는 실무적이고 실용적인 리더쉽이 더욱 요청됨에 따라 전문관료집단의 역할이 증대되는 것도 일반적인 경향이다. 따라서 김일성 이후 체제는 점점 더 이같은 신중간계급의 기능이 강화되어 북한사회의 발전을 추진할 것이며 제한적이나 개혁과 개방을 실현할 것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북한에서는 아직은 김일성의 강력한 유일체제하에서 파벌의 발달이 억제되어 있지만 상층부 권력에 변화가 발생하면 혁명엘리트와 전문기술 관료 사이에 노선의 갈등이 필연적으로 예상된다.

〈표 3〉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의 직업성분별 구성비

기 별	노동자	농민	사무·전문직
제4기(1967)	63.89	15.12	20.79
제5기(1972)	64.14	13.13	22.56
제6기(1977)	42.8	11	46.2
제7기(1982)	34.6	10.2	55.2
제8기(1986)	36.4	12	51.6

자료 : 통일원 편, 「북한최고인민회의자료집」(1988)
중기별 「대의원자격심사위원회보고」 분석.

북한 상위 권력엘리트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잠재적인 파벌은 김일성 친인척 집단과 비친인척 집단이다.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친인척이 권력의 핵심에서 주류 집단세력으로 형성하고 있고, 비친인척 집단은 배제되어 있다. 김일성의 아들 김정일 후계자로, 김일성의 이종동생 강성산이 정무원 총리로 기용되고, 박성철, 김달현, 김용순, 황장엽, 장성택 등 친인척이 권력의 핵심을 모두 장악하고 있다. 이것도 앞의 혁명-비혁명의 파벌과 마찬가지로 김일성 사망시 잠재된 불만과 갈등이 노선갈등의 방식으로 표면화될 가능성이 높다.

〈표 4〉 김일성 관련 친·인척 권력엘리트

성 명	관 계	직 위	당서열
김정일	김일성의 장남	당 정치국 상무위원 비서국 비서 당 조직지도부장 당 군사위원회 위원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 인민군총사령관 공화국 원수	2
강성산	김일성의 이종동생	정무원 총리 당 정치국위원	4
박성철	김일성의 삼촌 김형록의 사위	국가부주석 당 정치국위원	5
김달현	김일성 오촌조카사위	당 중앙위원회 위원 정무원 부총리 겸 대외 경제 위원회 위원장 무역부장	14
김용순	김일성의 전처 김정숙의 남동생	비서국 비서 당 국제부장 최고인민회의 외교위원회 위원장	19
황장엽	김일성의 조카사위	당 중앙위원회 위원 비서국 비서 조평통 부위원장	27
김중린	김일성의 친동생 김영주 처의 인척	당 중앙위원회 위원 비서국 비서 대남공작의 총책임자 최고인민회의 자격심사위원회 위원장	28
김창주	김일성의 삼촌 김형록의 아들	당 중앙위원회 위원 정무원 부총리 최고인민회의 예산심의위원회 위원	32
강석승	김일성의 외척	당 중앙위원회 위원 당 역사연구소장	38
양형섭	김일성의 고종사촌 김신숙의 남편	최고인민회의의장 당 중앙위원회 위원	42

성 명	관 계	직 위	당서열
김봉주	김일성의 삼촌 김형록의 아들 김창주의 동생	당 중앙위원회 위원 조국통일 민주주의전선의장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사무국장	51
장성우	장성택의 친형	당 중앙위원회 위원 사회안전부 정치국장	104
김성애	김일성의 처	「민주여성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116
김경희	김일성의 장녀 장성택의 처	당 중앙위원회 위원 당 경공업부장	173
이용무	김일성의 조모 이보익의 조카	당 중앙위원회 위원 교통위원회 위원장	174
김정숙	김일성의 고모부 김영철의 차녀(허담 처)	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민주조선」지 책임주필 당 중앙위원회 후보위원	291
장성택	김일성의 사위 김경희의 남편	당 중앙위원회 후보위원 당 근로단체사업부, 3대 혁명소조부 부장	302
김평일	김일성의 차남 김성애 소생 김정일 이복동생	전 불가리아 주재대사	
강덕수	김일성의 외삼촌 강보석의 아들	조선방송위 부위원장	
강인수	김일성의 외삼촌 강보석의 아들	화학공업부 부부장	
김정우	김일성의 고종제	대외경제사업부 부부장 「교류협력분과위원회」 북측 위원장	
강영섭	김일성의 외종숙 (강양욱의 아들)	최고인민회의 통일정책 심의위원회 위원 조선기독교연맹 위원장	

출처 : 전현준, 안인해, 이우영,「북한의 권력엘리트 연구」(서울 : 민족통일연구원, 1992), pp.73-75.

Ⅶ. 경제구조의 이중성으로의 이행

북한의 경제구조에서도 이중성으로 이행될 전망이다. 북한은 경제발전전략에 있어서 지금까지의 자력갱생전략에서 수출산업확대와 자유무역지대의 건설을 추진한다는 정책의 가닥을 잡았으며 구체적인 추진단계에 돌입한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의 핵문제 때문에 이 정책의 집행은 유보되어 있으나 북한내부에서는 정책의 대계가 이미 결정되어 있다.

북한이 경제정책에서 대외무역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지난 1980년 10월 제6차 당대회에서 대외무역의 다각화, 수출품의 우선생산 및 품질향상 등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부터이다. 이후 북한은 1984년 합영법을 제정 공포하는 등 극히 부분적으로나마 자본주의적 요소의 도입을 포함한 경제개방 정책을 추진하였고, 제3차7개년계획(1987~93)에서 무역증대의 필요성을 보다 분명히 했다. 그러나 북한은 정책적 측면에서 대외무역의 필요성을 인식한 것과는 달리 자력갱생적 통제경제정책으로 말미암아 실천적인 측면에서는 매우 제한적인 범위에서만 대외무역을 수행해 왔다. 그동안 북한의 수출정책은 '수입을 위한 수출'의 원칙에 입각해 있었으며 대외무역을 하면서도 사회주의권내의 구상무역 형태에 치중했고 '주체적인 대외무역정책'에 기초해 왔다.[42] 최근 무역부장 김달현도 "대외무역을 철저히 자립적 민족경제건설에 복종시키며 자립적 민족적 경제를 건설하는 기초위에서 그것을 발전시키는 원칙을 일관하게 고수하여 왔으며…이 때문에 항상 외화사정이 좋지 않았다"고 지적했다.[43]

---

42) 1967년 12월 김일성이 발표한 '10대정강'뿐만 아니라 대외개방화로 정책노선을 전환한 1984년 1월의 발표내용(최고인민회의 제7기 3차회의의 의안 "남북협조와 대외무역사업을 강화하며 무역을 더욱 발전시킬 것에 대하여")에도 명백히 나타나 있다.

43) 김달현 "대외무역을 발전시키는 것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중요한 담보," 「근로자」 (1989년 2호), p.61.

그런데 북한은 최근 수출정책에 대한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제한적인 수출정책에서 대폭적인 수출확대를 위한 시도를 시사하고 있다. 침체된 경제를 회복하는 길은 대외무역과 수출확대에서 찾아야 한다는 인식으로 전환한 것이다.

> 대외무역을 발전시키면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일부 원료, 자재를 원만히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발전된 기술을 널리 받아들여 우리나라에 있는 풍부한 부원자원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개발 이용할 수 있다.… 대외무역을 더욱 발전시키는데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수출을 대대적으로 늘리는 것이다. 수출과 수입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대외무역은 수출을 첫 공정으로 선차적인 사업으로 하고 있다.[44]

물론 이러한 내용들은 최근에 처음 나온 것은 아니고 1980년부터 나타나던 내용들이다. 중요한 것은 이 내용이 최근에 와서 더 구체화되어 강조되고 있으며, 매우 구체적인 후속조치들이 취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로동당 중앙위원회는 "당의 무역정책을 철저히 관철하여 대외무역사업에서 혁명적 전환을 일으킬데 대하여"에서 무역확대에 관한 새 정책방향을 전반적으로 제시했다. 북한은 이 회의에서 대외무역발전이 경제력을 향상시키고 주민생활을 높이며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대처하기 위한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하고 무역활성화방안으로서 수출품 생산기지 조성과 해외시장개척을 통한 수출증대를 촉구했다. 각공장 기업소별로 가공무역사업의 강화, 모든 경제부문에서 수출품직장, 수출품작업반을 꾸려 1가지 이상의 수출품을 생산하도록 촉구했다.

이후 1992년 2월 26일에 정무원결정이 있었는데 "대외무역사업에서 혁명적 전환을 일으키기 위한 구체적 방안"이 제시되었다.

변천된 현실에 맞게 세계 여러나라들과의 대외무역을 더욱 전면적으로

---

44) Ibid., pp.61-64.

발전시켜야 한다.…인민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수출을 첫자리에 놓고 수출품부터 먼저 생산하여 내보내는 원칙을 지키며 수출계획을 현실성있게 세우고 그 수행에 대한 총화사업을 잘해야 한다.

북한은 이번 정무원 결정에서 '전면적', '대대적' 등의 용어를 반복 사용하면서 대외무역 증대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북한의 대외무역 실상을 비교적 정확히 인식한 바탕위에서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했다. 가까운 몇해 사이에 도달해야할 수출목표액을 제시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수출품의 품종과 물량확대, 수출시장의 개척, 가공무역의 강화, 수출품의 질적제고, 관련기관 및 종사자들의 역할강화 등을 제시했다.

북한 경제구조의 이중성을 심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정책은 선봉 나진 자유무역지대의 건설과 유엔개발기구(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 UNDP) 주관의 두만강유역 개발사업이다. 북한은 선봉 나진 자유무역지대에 대한 외국의 투자유치를 위해 이미 외국인 기업법, 기업소득세법안을 이미 마련하였으며 외국인출입국 등 모든 관련 법규들을 이미 정비하였다.

김정우 대외경제사업부 부부장은 일본 기자들에게 선봉 나진 지역에 대한 외국기업의 투자법규를 설명하는 자리에서 항만개발 및 확장과 철도, 도로건설 분야에 대한 일본의 투자, 경공업·전자공업부문의 일본 기업진출을 초청한 적이 있다.

북한의 최근 수출확대전략의 특징은 철저히 '숨은 개혁'이라는 점과 사회주의 체제에 동화되는 방식의 개혁이라는 점이 강조되어야 한다. 또 '우리식 사회주의' 고수와 수출확대정책의 양면적 전략은 1980년대 초기 중국이 취했던 정책과 방법면에서 유사한 측면이 있다. 마치 중국에서 1978년 이후 등소평이 중국식 사회주의를 고수하자는 사개견지(공산당 영도, 사회주의노선, 프로레타리아독재, 마르크스·레닌·모택동사상)의 기본원칙을 지키면서 동시에 경제적 개혁·개방을 추진하던 것처럼 북한도 우리식 사회주의 고수와 주체사상을 강화하면서 대외개방적 경제정책을 시도하

고 있는 것이다. 중국이 '중국식 사회주의' 고수를 견지하면서 개혁·개방을 하듯이 북한도 '우리식 사회주의'를 고수하면서 수출산업확대를 통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이것은 상당히 장기적으로 지속될 북한식 개혁·개방의 양식으로 전망된다. 중국의 급속한 개혁 개방이 가져온 여러가지 정치적 문제를 고려하여 매우 완만하게 개혁·개방을 추진한다는 것이 북한식의 개혁 개방모델이 될 것이다.[45]

Ⅷ. 결 론

지금까지 북한사회의 인구구성, 계급구조, 인성구조, 권력 엘리트 구성 및 경제구조에 있어서의 이중성을 살펴보았다. 북한이 아직은 스탈린주의적, 중앙집권적 사회체제를 유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사회의 제반측면에서 구조적인 분화가 발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구조분화를 촉진시킨 요인의 하나는 자연적 시간이 경과하였다는 사실일 것이다. 한 세대의 시간이 경과함으로써 전체인구의 구성이 혁명세대에서 혁명후기세대로 교체되었으며, 권력 엘리트도 마찬가지로 혁명후기 세대로 교체되었다. 두번째 요인은 사회주의 공업화에 따른 사회구조의 분화를 들 수 있다. 이 결과 계급구조에 변화가 발생하여 프롤레타리아와는 상이한 계급이익을 가지는 사회계급이 생성하게 되었다. 세번째 요인은 혁명이란 혁명적 상황에서 인민대중을 혁명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데 북한에서는 혁명이 일상생활에서 항상적으로 존재함으로써 혁명자체가 일상화(routinization)되어 버렸다는 측면에서 북한의 혁명은 더 이상 혁명적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이러한 변화들이 상호작용하여 북한 주민들의 인성이 혁명적 인성과 혁명후기적 인성의 이중적 인성으로 변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회 제부문의 구조적 분화는 소련을 비롯한 동구의 사회주의제

45) 김서명 중국 동방경제기술공사 이사장의 세미나 발표내용(민족통일연구원, 1993년 2월 19일).

국의 체제변화를 야기시킨 주요한 요인이었음을 고려할 때 북한사회 변화의 전망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북한을 획일적인 사회로 보는 관점은 더이상 유효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표면적으로 안정된 것처럼 보였던 소련이 갑자기 붕괴된 것은 이러한 사회의 구조분화와 이중구조의 심화 때문이다. 북한에도 정도는 아직 미약하나마 제2의 사회(the second society)가 형성되고 있다. 지도부에서는 변화의 의도가 전혀 없지만 사회구조적 측면에서 변화가 진전되고 있으며 인민들의 의식에 변화가 일고 있다.

이렇게 사회구조가 분화되면 이전과 같은 획일적이고 일사불란한 국가통제가 이완되기 마련이다. 각종의 비공식집단이나 소집단들의 활동이 활성화되어 사회의 독자적인 여론형성구조를 낳게 되고 국가의 공식적인 선전은 이를 통해 여과되어 사회에 전달됨으로써 당과 국가의 이데올로기적인 헤게모니가 부식되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이 의미하는 바는 북한도 정도는 미약하나마 집단주의적 사회에서 사적영역이 점진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금까지는 김일성과 김정일의 정치적 주도에 의해서 구성된 북한사회에 점차 사적 영역의 공간이 증대되고 있는 것이다.

빈 면

北韓의 基本權保障의 制度的 問題點

張 明 奉*

◁目 次▷

Ⅰ. 序 言
Ⅱ. 主體思想과 基本權
1. 人間中心論과 北韓憲法
2. 主體思想과 基本權保障의 問題點
3. 金正日의 人權觀
Ⅲ. 北韓에서의 基本權保障의 制度的 問題點
1. 北韓憲法上 基本權保障의 問題點
2. 北韓刑法上 基本權保障의 問題點
3. 北韓 刑事訴訟法上 基本權保障의 問題點
4. 北韓의 裁判制度上 基本權保障의 問題點
Ⅳ. 北韓人權의 國際的 保障의 問題點
Ⅴ. 北韓人權의 改善方向
1. 南北當事者間의 努力
2. 國際的 保障策의 摸索
3. 南北關係와 北韓人權의 改善
Ⅵ. 結 語

Ⅰ. 序 論

北韓의 人權實態에 관해서는 그간 國際赦免委員會(Amnesty International) 등의 人權團體의 報告와 歸順者들의 證言에 의해 最惡의 狀況임이

* 國民大 敎授·憲法學

지적되어 왔다. 얼마전 安全企劃部長이 國會 情報委員會 月例會議(1994. 8. 26)에서 報告한 몇가지 北韓人權實相도 北韓人權의 참혹한 實相을 확인해 주는 것이었다.[1] 더욱이 근자에 시베리아 北韓伐木工, 北韓留學生 등 歸順者의 證言들은 北韓의 열악한 人權實態를 전해 주는 것이었다.[2]

특히 安企部에 의해 공개된 北韓 함흥시 安全部 名義의 殺人犯罪者「주순남」에 대한 死刑執行(1992. 11. 15) 公告文은 우리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3] 이 事實은 國際赦免委員會의 人權報告書에서도 調査가 되었던 내용이었다.[4] 國際赦免委員會가 당시 北韓內 外國留學生의 목격담을 토대로 밝힌 이 公開處刑에 대해 北韓에 항의하자, 北韓은 1993년 10월 이철 駐스위스 北韓大使를 통해 "'인민의 요구'에 의해 공개처형할 수밖에 없었다"는 解明書를 제출함으로써 확인되었다.[5] 公開處刑이 그동안 北韓에서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만, 그것을 실증하는 文件(公告文)이 이번에 처음으로 나와 公開死刑執行 事實이 公式確認되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아울러 6·25때 北韓에 捕虜가 되어 脫出을 시도하다가 체포된 후 43년만에 北韓에서 탈출한 趙昌浩 少尉의 證言은 北韓 敎化所의 人權蹂躪狀況을 생생하게 말해 주었다.[6]

國際赦免委員會의 調査에 의하면, 北韓에서는 매년 수십명씩 공개로 死刑執行이 행해지고 있다. 또 이와는 별도로 政治犯收容所 등에서는 매년 15명 정도가 處刑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7] 최근 귀순한 北韓 시베리아 벌목공들도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이들은 一般刑事犯의 경우 公開裁判과 處刑이 공공연히 시행되고 있으며, 또 公開處刑을 목격하고 그 非人間的인 刑罰執行에 恐怖心을 느꼈다고 증언하였다.[8] 더욱이 北韓은 障碍

1)「東亞日報」, 1994년 8월 27일, 3면 ;「朝鮮日報」, 1994년 8월 28일, 3면.
2)「東亞日報」, 1994년 9월 9일, 30면.
3)「한겨레신문」, 1994년 8월 27일, 4면.
4) 國際赦免委員會 人權報告書 1993 北韓部分.「북한의 인권실태」(통일원, 1994. 8), 92면 ;「朝鮮日報」, 1994년 8월 4일, 7면.
5)「한겨레신문」, 1994년 8월 27일, 4면.
6)「東亞日報」, 1994년 10월 25일, 29면 ;「中央日報」, 1994년 10월 27일, 7면.
7)「북한의 인권실태」, 前揭書, 71~72면.

者들을 이른바 '재래종관리소'라는 外地에 隔離·收容하고, 심지어는 이들에 대한 斷種을 기도함으로써 文明社會에서는 결코 생각하기 어려운 非人間的인 野蠻行爲를 자행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또한 등이 굽은 老人이나 病弱者들에 대한 外出禁止도 北韓人權의 現實을 말해주는 것이다. 게다가 北韓 全域의 45%를 일반인의 出入統制地域으로 만들고 旅行許可制를 實施하는 것은 住民行動를 통제하는 가장 효과적인 手段으로 활용되는 것으로써 人權侵害의 대표적인 事例로 볼 수 있다.[9]

또한 12개소 이상의 이른바 '特別獨裁對象區域'이라는 政治犯集團收容所에서 15만명 이상의 政治犯들이 참혹한 생활을 하고 있음은 이미 內外에 잘 알려진 사실이다.[10] 北韓의 政治犯收容所 중 하나인 '요덕수용소'에서 직접 收容生活을 했던 안혁, 강철환씨 등 歸順者들의 證言[11]과 人權團體의 報告書[12] 등은 政治犯에 대해서는 適法節次와 공정한 裁判을 거치지 않고 收容所에 收監되며, 여기서 人間 이하의 苛酷行爲가 恣行되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이와 함께 北韓 함북 회령 政治犯收容所 경비대에서 근무하다가 歸順(1994. 10. 13)한 安明哲씨의 증언에서 나타난 北韓 政治犯收容所의 처참한 실태에 다시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그의 證言에 의하면, 그 수용소에서 公開處刑은 1년에 1~2번 이루어지는데, 수용소에서 도주 및 폭동기도자, 보위부요원살해자, 임신부 등을 對象으로 收容人員이 모두 지켜보는

8) 시베리아벌목공이었다가 귀순한 안충학씨는 1994년 9월 8일 기자회견에서 지난 1986년 함흥시 호령천과 만수교에서 北韓當局이 두차례에 걸쳐 강도범 5명과 절도범 형제를 잔인하게 公開處刑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다고 증언하였고, 또 엄만규씨는 政治犯인 경우 秘密裁判을 통해 몽둥이와 흉기에 의해 살해되고 있다고 전하였다. 「東亞日報」, 1994년 9월 9일, 30면 ; 「中央日報」, 1994년 9월 8일, 22면.

9) 「東亞日報」, 1994년 8월 27일, 1면 ; 「朝鮮日報」, 1994년 8월 28일, 3면.

10) 「'92 북한개요」(통일원, 1992), p.275-277면.

11) 강철환·안혁, 「대왕의 제전 2」(香實, 1993), 57~58면 ; 全賢俊, 「北韓의 人權實態 硏究」(民族統一硏究院, 1993. 10), 82~87면.

12) 國際赦免委員會의 北韓問題責任擔當官인 피에르 로베르氏는 國際赦免委의 北韓 政治犯에 관한 報告書에 대하여 北韓은 "몇몇 特定 政治犯들이 최근에 死亡했다는 식으로 보고서에 공개된 名單의 전부를 확인하기도 하였다"고 밝혀 北韓이 사실상 政治犯의 存在를 인정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국제사면위 북한담당 피에르 로베르氏 인터뷰", 「朝鮮日報」, 1994년 8월 4일, 7면.

가운데 銃殺시킨다고 한다.[13]

이러한 北韓에서의 非人間的인 公開處刑制度는 근대 刑事法制下에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한편 北韓의 人權狀況의 劣惡性이 北韓法制에도 기인하고 있음을 北韓의 憲法, 刑事法制, 裁判制度 등에서 찾을 수 있으며, 그것들이 北韓에서 住民의 基本權을 제약하는 手段이 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本稿에서는 北韓의 基本權保障의 制度的 問題點을 考察하되, 먼저 北韓의 支配이데올로기로서의 主體思想과 基本權의 關係를 槪觀한다. 이어 北韓에서의 基本權保障의 制度的 問題點을 憲法과 刑事法을 중심으로 알아보고, 아울러 裁判制度上의 問題點도 논급한다. 그리고 國際的인 面에서의 北韓人權保障의 問題點을 살펴보고, 끝으로 이러한 問題點에 기초하여 그 改善方向에 관하여 고찰하기로 한다.

II. 主體思想과 基本權

1. 人間中心論과 北韓憲法

알다시피 北韓에서는 主體思想이 政治·經濟·社會·文化·軍事 등 모든 分野에서 유일한 指導理念이 되고 있다. 基本權保障에 있어서도 主體思想은 그 理論的 土臺가 되고 있다. 北韓의 1992年 改正憲法은 제3조에서 北韓은 "사람중심의 세계관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사상인 주체사상을 자기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고 하고, 제8조에서 北韓의 "사회제도는 근로인민대중이 모든 것의 주인으로 되고 있으며 사회의 모든 것이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람중심의 사회제도"라고 명기하였다.

13) 安明哲씨의 귀순후 記者會見(1994. 11. 24).「東亞日報」, 1994년 11월 25일, 5면;「朝鮮日報」, 1994년 11원 25일, 5면.

이는 主體思想의 哲學的 原理에 따른 이른바 人間中心論에 바탕한 것이다. 北韓의 主張에 의하면, 主體思想은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철학적 원리"에 기초하고 있다.[14] 여기서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것은 사람이 世界와 자기 運命의 主人이라는 것이며,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것은 사람이 世界를 개조하고 자기 運命을 개척하는데 있어 決定的 役割을 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래서 主體思想의 原理는 世界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地位와 役割을 밝힌 사람위주의 哲學原理라고 한다.[15]

또한 主體思想을 再解釋하고 體系化한 金正日은 이와 관련해, 이른바 '사람중심의 세계관'에 입각한 主體思想은 自主性, 創造性, 意識性을 가진 社會的 存在로서의 사람의 本質的 特性을 해명한데 기초하여 그 哲學的 原理를 밝혔다고 한다.[16] 이어 사람의 利益으로부터 출발하여 모든 것을 대하고 사람의 활동을 기본으로 하여 모든 變化發展에 대하는 主體的인 觀點과 立場을 확립하였다고 하고, 이러한 主體思想에 의해 사람의 尊嚴과 價値는 최상의 경지에 올라서게 되었다고 주장한다.[17]

이러한 北韓의 설명에 따른다면, 北韓에서는 主體思想에 의해 人間의 尊嚴과 價値가 존중되고 基本權이 최대한 보장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改正憲法에서 舊憲法에서의 마르크스-레닌主義를 삭제하고 主體思想의 自主性을 강조(제3조)한 裏面에는 대외적으로 排他的인 民族主義를 내세

14) 김정일, "주체사상에 대하여"('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탄생 70돌기념 전국주체사상토론회에 보낸 론문', 1982). 이 論文의 全文은 조선중앙통신사 편, 「조선중앙년감, 1983」(평양 : 조선중앙통신사, 1983), 124~159면 ; 「주체사상연구」(태백, 1989), 173~227면.

15) 리상걸, 「친애하는 지도자 김일성동지의 론문 '주체사상에 대하여'의 해설」(평양 : 사회과학출판사, 1983), 43면 ; 김정일, "주체철학의 이해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근로자」, 1984년 4호(평양 : 근로자사, 1984), 2~6면 ; 양재인 外, 「북한의 정치이념 : 주체사상」(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1990), 30~31면.

16) 김정일, "인민대중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1991년 5월 5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과 한 담화) (평양 : 중앙방송, 1991년 5월 27일), 「근로자」, 1991년 6호, 3~25면.

17) 上揭 談話.

우고 대내적으로 大衆의 集團性의 강조를 통해 首領의 1人支配를 보다 강화하려는 意圖가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餘他 社會主義國家들이 社會主義理念을 廢棄하면서 대외적으로 交流와 協力을 강조하고 대내적으로 個人의 自由와 福利, 人權을 강화하는 傾向과는 北韓의 主體思想은 그 方向을 달리하고 있다.[18] 이에 비추어 改正憲法에서의 主體思想의 強調는 改革과 開放을 바탕으로 人權의 伸張을 도모하는 社會主義國家 憲法들의 改革方向과는 물론 北韓에서 주장하는 基本權保障과는 거리가 먼 것임을 알 수 있다.

2. 主體思想과 基本權保障의 問題點

다음에 主體思想이 基本權保障面에서 갖는 問題點을 살펴본다.

(1) 主體思想에서 말하는 人間中心論은 人本主義(humanism)를 내세우는듯 하지만 그 實際的 意味는 다르다. 主體思想에서 사용하는 '人間'이라는 用語는 일반적으로 '사람'이란 뜻의 'human being'과는 그 의미를 달리하고 있다.[19] 主體思想에서의 人間은 '主體'라는 독특한 의미를 갖고 있다. 主體思想에서는 現時代에 있어서 중요한 철학적인 主要課題는 物質과 意識의 관계문제가 아니고 人間의 運命을 누가 좌우하느냐 하는 것이라고 하고, 인간의 운명을 결정짓는 '주체'를 바로 인간으로 본다. 이에 기초하여 北韓은 主體思想의 人間論이 마르크스主義의 唯物論的 입장에서 보는 人間論 보다 발전된 것이라고 강조한다.[20] 즉, 主體思想은 人間의 정신적인 면을 물질적인 면보다 우위에 두고 그 중요성을 인정하였으며, 이는 人間의 精神이 물질적 세계를 개조해 나가는 현재에 이르러 人間의 모든 精神活動과 意識活動이 物質的 活動에 대한 反作用으로 일어난다고 보는 마르크스主義의 입장에서 발전된 思想이라는 것이다.[21]

---

18) 「1994 북한이해」(통일연수원, 1993), 51~52면.
19) 金甲喆·高性俊, 「主體思想과 北韓社會主義」(文佑社, 1988), 103~104면.
20) 양재인 外, 前揭書, 54~55면.
21) 김찬희, "宗敎的 理論으로서의 主體思想", 第9次 國內外 宗敎人·學者會議資料(民主平和統一諮問會議 事務處, 1991), 2~3면.

그러나 이러한 主張은 마르크스주의에서도 物質과 意識의 관계에서 결코 의식의 役割을 무시하지 않고 精神이 人間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부인하지 않고 있음을 간과한 것이다. 北韓은 主體思想에서 사람과 세계의 문제를 규명함으로써 物質과 意識의 問題를 다룬 마르크스 哲學을 한 단계 발전시켰다고 주장하지만, 그것은 '物質'을 '세계'로, '意識'을 '사람'으로 바꾼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22] 그런데 主體思想에서의 主體, 즉 人間은 마르크스主義 哲學에서 말하는 意識을 가지고 社會的 關係에서 對象的·實踐的 活動을 하는 社會的 人間을 가리키는 主體와는 槪念上 差異가 있다. 主體思想에서 人間은 歷史의 主人이고 '주체'라고 하지만, 이것은 個人의 尊嚴性에 바탕한 모든 人間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근로인민대중'을 가리키는 것이다. 즉, 자연·사회·자기 운명의 주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이란 일반적으로 어느 한 개인이나 집합체로서 전체 國民이나 人類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 어느 특정 集團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23] 이런 점에서 主體思想에서의 人間中心論과 人間中心의 世界觀이란 '擬似 humanism'으로서 政治的 宣傳을 위한 口號의 하나로 이용되고 있다.

(2) 主體思想에서의 人間論은 唯物論을 벗어나 사람의 思想意識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고 하지만, 기실 唯物論的 人間觀의 기초위에 성립한 것이다. 主體思想의 論理에 의하면, 사람의 本質的 特徵은 自主性·創造性·意識性에 있으며, 그 內容과 實現程度는 社會發展의 매단계, 매시기마다 다르며 歷史發展과 社會制度의 變化·發展과 함께 한다. 그런데 이 論議는 사람의 自然的 生命 보다는 이른바 '社會政治的 生命'을 강조함으로써 社會的·生物的 存在로서의 人間의 槪念과의 차이를 보여준다. 이것은 社會的 生物的 存在로서 인간의 槪念을 규정한 마르크스-레닌주의와도 차이점을 나타낸다.[24] 결국 主體思想의 人間觀이란 北韓에서 人間의 主體를 革

22) 李恒九, "北韓 社會體制維持의 核心要因考察 - 主體思想本質解剖 中心", 理念制度委員會 主管 統一問題 세미나 會議資料(民主平和統一諮問會議 事務處, 1994. 4. 19), 4~5면.

23) 양재인 外, 前揭書, 56~57면; 李恒九, 上揭 論文, 5면.

24) 上揭書, 54~55면.

命의 主體로 대치시키고, 조선로동당과 首領의 支配에 복종하는 人間觀의 창출과 大衆運動의 論理的 根據가 되고 있다.

(3) 主體思想에서의 人間은 北韓에서의 이른바 '공산주의적 새인간'의 의미와 관련해 살펴볼 수 있다. 改正憲法은 제43조에서 "지덕체를 갖춘 공산주의적 새인간"으로 후대들을 키운다고 규정하였다. 北韓에서는 '공산주의적 새 인간' 양성을 위한 敎育原則으로 黨性·勞動階級性의 구현, 主體의 수립, 敎育과 革命實現의 결합 등에 두고 있다.[25] 이를 좀더 보면, '공산주의적 새 인간'이란 勞動階級의 革命思想, 共産主義 思想과 道德으로 무장되고, 物質技術的 土臺를 쌓는 것과 함께 思想意識이 共産主義的으로 改造된 사람을 의미함을 알 수 있다.[26] 이와 관련하여 김정일은 思想革命이란 바로 낡은 思想을 뿌리뽑는 人間改造事業으로서 共産主義의 完全勝利에 이를 때까지 진행되는 階級鬪爭의 基本形式이라고 강조하였다.[27] 결국 '공산주의적 새 인간'이란 共産主義 社會에서의 生活에 적합한 인간으로서 財産의 社會的 共有, 權利에 앞서는 義務, 個人에 우선하는 全體, 支配者의 指示에 맹목적인 服從을 강요당하는 人間을 의미하는 것이다.

(4) 北韓은 사람중심의 主體思想을 구현한 社會主義社會에서는 集團의 利益이 철저히 옹호되는 기초위에서 個人의 利益도 존중된다고 하여 個人의 利益 보다는 集團의 利益을 우선하고 있다. 즉, 사람중심의 主體思想이란 곧 集團主義原則下에서만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集團의 利益을 우위에 놓고, 集團의 이익과 個人의 이익을 일치시키고 集團의 이익 뒤에서도 個人의 利益을 실현할 수 있다는 集團主義의 基本要求에 따른다는 것이다. 심지어 集團의 生命을 위해 필요하다면 個人의 生命을 서슴없이 희생해야 한다고 강요한다.[28] 이렇듯 主體思想에서는 人間의 生命 내지 그 存在의 의미를 集團속에서 찾기 때문에 個人의 生命이나 自由는 큰 의미를

25) 「'92 북한개요」, 前揭書, 327~328면.

26) 張明奉, "北韓의 社會主義憲法에 관한 硏究", 「省谷論叢」, 第11輯(省谷學術文化財團, 1980), 396~397면.

27) 김정일, "사회주의건설의 력사적 경험과 우리 당의 총로선", 1992년 1월 3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과 한 담화(평양 : 중앙방송, 1992. 2. 4).

28) 김정일, "인민대중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 前揭 談話.

부여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主體思想의 人間觀에서는 個人의 人間으로서의 尊嚴과 價値尊重을 기대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5) 主體思想의 論理에 의해 北韓에서는 사람을 가장 중시하는 사회주의사회이므로 人權을 法的으로 철저히 보장하고 있으며, 그것을 침해하는 자그마한 현상도 허용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또한 노동에 대한 권리로부터 먹고 입고 쓰고 살 권리, 배우며 치료받을 권리에 이르기까지 사람의 모든 權利가 철저히 보장되고 있는 나라라고 강조한다.[29] 改正憲法도 제25조에서 北韓은 人民의 物質文化生活을 높이는 것을 自己活動의 最高原則으로 삼는다고 하고, 모든 근로자들에게 먹고 입고 쓰고 살 수 있는 온갖 조건을 마련한다고 하는 人民의 福祉條項을 두었다. 이렇듯 人權과 福祉가 강조되지만, 黨과 國家의 人民的 施策에 의하여 人權과 福祉의 조건은 國家와 社會로부터 보장된다고 보는 北韓에서는 物質的 條件이 선행되어야 그 權利를 향유할 수 있게 된다.

(6) 北韓은 人民의 物質文化生活이 높아질수록 思想革命을 더욱 강화하여 근로자들을 철저히 革命化 勞動階級化하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思想革命은 여타 社會主義의 붕괴에 따라 北韓에서 '우리식 사회주의'의 강화와 함께 더욱 강조되고 있다. 北韓에서 이른바 '온 사회의 사상적 일색화'의 강조는 바로 主體思想을 唯一的 指導指針으로 하는 北韓體制守護의 關鍵이라 할 수 있다. 思想革命이란 곧 모든 사람들을 敎養改造하여 혁명과 건설의 참된 주인으로, 즉 共産主義的 人間으로 만드는 것으로 黨의 唯一思想, 主體思想으로 무장시키는 것이라고 한다.[30] 이를 위해서는 組織의 指導와 統制下에서 思想敎養課業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래서 改正憲法은 제10조에서 全體人民의 政治思想的 統一을 강조하고, 제80조에서 人民의 政治思想的 統一과 團結守護義務規定을 두고 있다. 이에 의한 個人에 대한 思想統制는 基本權保障과는 거리가 있음을 나타낸다.

(7) 北韓에서 社會主義的 民主主義는 社會主義法務生活에 의해 法的으

29) 上揭 談話.

30) 上揭 談話; 양형섭, "주체사상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사상", 「근로자」, 1989년 8호, 15~16면.

로 보장된다고 한다. 즉, 가장 인민적인 社會主義法務生活을 통하여 國家와 社會의 주인으로서의 인민의 民主主義的 權利와 自由를 法的으로 철저히 보장한다고 강조한다. 그래서 改正憲法은 제18조 3항에서 社會主義法律制度의 완비와 社會主義法務生活의 강화를 규정하였다. 아울러 改正憲法은 '法遵守執行의 指導와 對策樹立'을 中央人民委員會와 地方人民委員會의 任務와 權限의 하나로 포함시키는 조항을 신설하였다(改正憲法 제120조 4호, 제136조 3호). 그러나 北韓에서 社會主義法務生活이나 遵法性이란 개념이 首領의 唯一的 支配體制의 강화에 따라 北韓住民을 통제하기 위해 이데올로기화 되었다는 점[31]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여타 社會主義가 몰락한 현시점에서 北韓은 體制守護를 위해 住民에 대한 思想武裝과 思想統制를 강화하고 있는데, 그 방법의 하나로 社會主義法務生活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北韓은 外部思潮의 浸透防止와 社會秩序維持를 위한 '社會主義法務生活指導委員會'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시키고 있다.[32]여기서 人民의 權利와 自由의 法的인 保障이란 곧 주민에 대한 統制를 의미하는 것임을 엿볼 수 있다.

(8) 北韓은 北韓社會가 主體思想의 核心內容으로 수령－당－대중이 일심단결된 불패의 사회주의임을 주장한다. 이것은 수령－당－대중은 하나의 生命을 가진 有機體的 統一體로서 운명을 같이 하는 이른바 '社會政治的 生命體論'에 입각한 것이다. 여기서 人民大衆은 革命의 주인이며, 黨은 인민대중의 核心部隊이고, 首領은 社會政治的 生命體의 中心으로서 인민대중의 의사를 체현한 最高 腦髓라고 한다. 그리고 首領과 大衆과의 관계는 社會政治的 生命體 안에서의 血緣的 關係로서 서로 뗄 수 없는 관계라고

31) 金圭昇,「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の法と司法制度」(東京：日本評論社, 1985), 230면 ;「北韓法制槪要」, 法制資料 第157輯(法制處, 1992), 51면.

32) 김일성, "인민정권을 더욱 강화하자"(최고인민회의 제6기 1차회의에서 한 연설, 1977. 12. 15).「조선중앙연감 1978」, 72～82면. 社會主義 法務生活指導委員會의 任務와 權限에 대해서는 김억락, "법무생활을 강화하는 것은 온 사회에 혁명적 생활기풍을 세우기 위한 중요한 요구",「근로자」, 1978년 7호, 23～28면 ;「北韓槪要 '91」(統一院, 1991), 83면 ; 김정일,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할데 대하여"(사회주의헌법 공포 10주년 기념연설, 1982. 12. 27).「조선중앙연감 1983」, 174～183면.

한다. 이는 개인의 生物學的 生命보다 社會的 生命이 선행한다는 集團主義的 生命觀에 입각한 것이다.[33] 北韓은 하나의 社會政治的 生命體를 이루는 社會로서, 이것이 資本主義 社會에 비하여 社會主義 社會의 본질적 우월성의 하나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것은 中央集權的 指導를 통해 실현되는 것이며 個人의 존엄과 가치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따라서 '社會政治的 生命體論'은 個人主義, 自由主義, 反全體主義를 근간으로 하는 自由民主主義體制下에서의 基本權保障과는 크게 배치된다고 할 수 있다.

(9) 主體思想에 있어 그 形成背景은 金日成 1人支配體制의 構築에 있었으며, 그 展開過程은 金日成 唯一支配體制의 강화와 金正日 後繼權力體制의 확립이라고 할 수 있다. 主體思想에서의 이른바 '革命的 首領觀' 내지 '社會政治的 生命體論' 등은 北韓의 '首領의 唯一的 支配體制'를 뒷받침하는 理論的 背景을 이룬다. 이러한 論據에 의해 北韓에서 金日成 1人獨裁體制가 형성될 수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主體思想은 金日成 1人의 주체만을 강요하고 모든 人民의 自我에 대한 본질적인 主體性을 박탈하였다는 점에서 '주체없는 주체사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34] 특히 個人의 生命은 부모에게서 받지만 政治的 生命은 '수령'이 부여한다는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에 의하면, 社會政治面에서 個人의 主體는 결코 인정될 수 없는 것이다. 北韓은 社會主義 社會에서 근로대중이 社會의 주인으로 되고 그들의 人格과 權利가 최대한으로 존중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것은, 主體思想이 金日成 1人獨裁體制를 위한 支配이데올로기였으며, 그 體制下에서 참혹한 지경에 이른 北韓의 人權實相에 비추어 한낱 虛構에 불과한 것임을 알 수 있다.

---

33) 이른바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은 金正日이 主體思想을 理論的으로 體系化하는 과정에서 제기한 것으로, 그 核心內容은 수령－당－대중을 하나의 生命을 가진 有機體的 統一體로서 운명을 같이하는 社會的 生命體라는 것이다. 이는 個人의 生物學的 生命보다 社會的 生命이 先行한다는 集團主義的 生命觀에 바탕한 것이다. 김정일, "주체사상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근로자」, 1987년 7호, 3~19면 ; 「주체사상연구」, 前揭書, 265면 ; 高性俊 外, 「轉換期의 北韓社會主義」(大旺社, *1992*), *46~48*면.

34) 申一澈, "주체없는 주체사상", 「東亞日報」, 1994년 8월 27일, 5면.

3. 金正日의 人權觀

金正日이 저술했다는 문건들에 나타난 人權에 대한 槪念은 역시 主體思想에 입각하고 있다. 金正日은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라는 논문에서 人權問題를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의 인민적 성격과 부르조아 민주주의의 반인민적 성격을 구별하는 기준으로 강조하였다. 즉, 사람을 가장 귀중한 존재로 여기는 北韓 社會主義社會는 人權을 法的으로 철저히 보장하고 있으며 그 侵害를 절대 허용하지 않는다고 한다. 또한 北韓은 노동에 대한 권리로부터 먹고 입고 쓰고 살 권리, 배우며 치료받을 권리까지 사람의 모든 권리가 가장 철저히 보장되는 나라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반해 自由民主主義者들은 人權擁護者들로 자처하면서도 人權을 빙자해 北韓을 헐뜯고 있지만, 오히려 그들이 초보적인 민주주의적 자유와 生存權마저 유린하는 진짜 人權蹂躪者들로서 人權에 대해 말할 자격이 없다고 비난하였다. 이어 北韓에서 人民이 國家와 社會의 主人으로서 민주주의적 權利와 自由를 法的으로 철저히 보장받는다고 하였다.[35] 그러나 그러한 權利와 自由의 保障은 社會主義法務生活을 통하여 보장되고, 또 전술한 集團主義에 입각한 社會政治的 生命體論에 연관됨으로써 진정한 人權保障의 本旨를 벗어나고 있다.

그리고 金正日은 金日成 主席 사후 처음 自身의 이름으로 발표한 '사회주의는 과학이다'라는 論文[36]을 통해 人權에 관한 견해를 밝혔다. 이에 의하면, 人權은 政治·經濟·思想·文化를 비롯한 社會生活의 모든 분야에서 人民들이 행사하여야 할 自主的 權利라고 하고, 나라와 민족의 自主權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러면서 西方世界에서 말하는 '人權'이란 돈에 의해 좌우되는 富者들의 特權일 뿐이며, 이들은 반인민적 정책과 인종적.민족적 차별정책, 식민주의정책을 실시함으로써 人權에 대해 말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이들은 人權擁護라는 구

35) 김정일,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 前揭 談話.
36) 「로동신문」, 1994년 11월 1일 ; 「中央日報」, 1994년 11월 4일, 2면.

실하에 다른 나라의 內政에 간섭하고 自主權蹂躪을 正當化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이들에 대해 '인권의 첫째가는 원쑤'라고 지칭하였다.

이러한 주장을 통해서 北韓이 人權保障을 강조하는 것은 對內的으로 住民의 불만을 무마하려는 의도로 보이는 한편, 對外的으로는 점증하는 北韓人權改善에 대한 世界輿論과 非難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기실 北韓이 가장 人權을 잘 보장하는 나라라고 주장하지만, 北韓에서의 人權이 社會主義法務生活에 의한 法的·思想的 統制하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黨의 領導밑에 國家의 중앙집권적 제도가 실시되는 條件下에서만 보장될 수 있다고 주장되고 있음은 北韓에서 본래적 의미의 人權保障의 具現이란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III. 北韓에서의 基本權保障의 制度的 問題點

1. 北韓憲法上 基本權保障의 問題點

北韓에서의 基本權은 自由民主主義下의 基本權과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즉, 北韓에서 公民은 社會生活의 모든 분야에 걸쳐 폭넓은 權利와 義務를 가지는데, 그 權利와 義務는 평등하고, 現實的 實現이 物質的으로 보장되며, 평등한 조건에서 社會的 生産과 分配에 참가할 수 있도록 통일되어 있으며, 國家社會의 발전에 따라 그 내용이 확대·발전되고 있다고 강조한다.[37] 그러나 이러한 北韓의 주장은 사실상 하나의 虛構이며, 憲法上 基本權規定은 그 實效性이 없는 것으로 하나의 프로그램的·裝飾的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北韓은 基本權의 性格을 國家內的인 것이며 自然權이 아니라 實定權으로 보고 있다. 때문에 國家의 目的을 프롤레타리아獨裁의 實現이라고 보는 北韓에서 憲法上 基本權이 진정으로 보장되기

37) 張明奉, "共産圈 憲法上의 基本權에 관한 考察－蘇聯 및 北韓 憲法을 중심으로－", 「法政論叢」, 第8輯(國民大 法學研究所, 1985), 216면.

어렵다.

일반적으로 社會主義國家 憲法上 基本權은 프롤레타리아 獨裁權力에 의해 전적으로 인정된 것으로서 市民 또는 公民이 향유하는 '市民의 權利'(Bürgerrechte)라는 점에서 個人의 天賦人權思想에 기초한 '人間의 權利'(Menschenrechte)를 의미하는 自由民主主義憲法上 基本權과는 性格上 差異가 있다.[38] 市民의 權利로서 社會主義國家의 基本權은 前國家的 前憲法的 權利로 인정되지 않으며, 唯物史觀에 입각하여 物質的 手段에 의해 보장된다고 함으로써 國家에 의해 보장되는 制度的 側面이 강조된다. 그런 면에서 社會主義國家의 基本權은 自由權 보다는 社會經濟的 權利에 중점이 두어진다.[39] 다음에 北韓憲法上 基本權保障의 問題点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 北韓憲法은 제63조에서 基本權保障의 대전제로서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이른바 '集團主義原則'을 표방하였다. 北韓에서 集團主義는 個人의 이익보다 集團과 社會의 이익을 귀중히 여기며 個人의 利益을 社會의 利益에 복종시키는 生活原則이라고 한다. 이에 대하여 北韓에서는 다음과 같이 說明하고 있다.

> 근로인민대중이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의 주인으로 되고 있는 사회주의 사회생활의 기초는 집단주의이다. 집단주의는 로동계급의 가장 본질적인 특성의 하나이며 근로자들이 굳게 뭉쳐 공동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사회주의·공산주의 사회생활의 기초이다.…

38) 共產主義國家에 있어서는 그 社會의 法秩序를 이루고 있는 法規範間의 質的 區別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個人의 基本的 權利도 立法에 의한 자유로운 處分의 對象이 된다. 그것은 共產主義國家에 있어서 모든 法秩序는 社會의 改造를 위한 黨의 指導의 政治的 道具를 의미하는데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共產主義 國家에 있어서의 基本權은 不可讓的·超國家的인 人間의 權利가 아니라 오로지 國家에 의하여 부여되고 보장되는 市民의 權利를 의미한다. Dietrich Müller-Römer, "Die Grundrechte im neuen mitteldeutschen Verfassungsrecht," in : *Der Staat*, Bd. 7, Heft 3, 1968, S.308 ; 張明奉, 上揭 論文, 210~211면.

39) Karl Braunias, "Grund-und Freiheitsrechte nach der neuen Sowjetverfassung," *Zeitschrift für offentliches Recht*, Bd. XVII, S.349 ; Theodor Maunz, *Deutsches Staatsrecht*. 6. Aufl.. 1957. S.306.

우리나라에서 공민의 권리와 의무가 집단주의 원칙에 기초하는 것은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는 투쟁에서 공민들의 자주의식과 창조적능력을 높이 발양시킬수 있게 하는 확고한 담보로 된다.[40]

나아가 北韓憲法은 제82조에서 "집단주의는 사회주의사회생활의 기초이다. 공민은 조직과 집단을 귀중히 여기며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몸바쳐 일하는 기풍을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에 대하여 北韓에서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집단주의는 사회주의·공산주의 생활의 기초이다. 집단주의 정신을 높이 발양하여야만 낡은 사회의 생활양식을 없애고 새로운 사회주의적 생활양식을 확립할 수 있으며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다그쳐 우리나라 사회주의 제도를 더욱 공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

사회주의 사회에서 개인의 리익은 전적으로 사회의 리익에 의존하며 사회적 리익은 근로자들의 개인적 리익을 담보하는 필수적이며 일차적인 조건으로 된다. 따라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개인의 리익보다 집단과 사회의 리익을 귀중히 여기며 개인의 리익은 사회의 리익에 복종시키는 것이 생활원칙으로 된다. 그러므로 집단과 조직을 사랑하며 언제 어디서나 개인의 안일과 향락을 위하여서가 아니라 사회와 인민의 리익, 당과 혁명의 리익을 위하여 몸바쳐 일하는 혁명정신을 높이 발양하는 것은 공민의 신성한 법적 의무인 동시에 고상한 정치 도의적 의무로 된다.[41]

이렇듯 改正憲法은 公民의 基本權利를 集團主義原則에 둠으로써 公民의 權利는 그러한 原則에서 逸脫할 수 없다. 즉, 公民의 權利는 國家作用에 平行하는 權利이며, 따라서 權利는 集團 내지 全體에 이바지하는 것이 아니면 안된다. 그리하여 個人의 利益보다 集團과 社會의 利益을 귀중히 여

40) 량창일, 「사회주의헌법학」(평양 :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82), 135면.
4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해설」(평양 : 인민과학사, 1973), 80~81면.

기며 個人의 利益을 社會의 利益에 복종시켜야 한다는 論理가 나오는 것이다.

여기서 지적해야 할 것은 北韓에서의 權利槪念에 대한 것인데, 北韓에서는 憲法 제63조에서 集團主義原則을 내세움으로써 대립된 當事者間에 주장할 수 있는 對立的 槪念보다도 國家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는 可能性 槪念으로 그 權利槪念을 바꾸어 놓았다. 즉, 國家가 실질적으로 보장하겠다고 약속한 것만이 權利일 수 있고, 그 權利는 개인이 國家에 대하여 請求, 主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42]

(2) 이와 같이 北韓에서의 基本權과 義務는 國家作用과 평행하는 것으로 集團 내지 全體에 이바지하는 것이어야 한다. 自由民主主義國家의 基本權과는 달리 北韓의 基本權과 義務는 國家權力作用과 평행하는 權利 및 義務이다. 다시 말하면, 共產主義國家에서는 個人, 國家, 社會가 상호간 對立關係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보는만큼 이 3者는 歷史法則에 따라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으며, 따라서 國家에 대항하는 개인의 防禦手段으로서의 人權은 존재할 여지가 없게 된다.[43] 여기서 北韓憲法上의 基本權을 볼 때, 항상 그것은 곧 같은 내용의 義務로 바뀐다는 것을 注目해야 할 것이다.

北韓憲法은 基本權 保障에 대해서는 위에서 말했듯이 오직 國家權力에 의한 實質的 및 物質的 保障만을 약속하고 있다. 즉, 제64조에서 "국가는 모든 공민에게 참다운 민주주의적 권리와 자유, 행복한 물질 문화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며 北韓에서 "공민의 권리와 자유는 사회주의제도의 공고 발전과 함께 더욱 확대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따름이다. 그러므로 '인민의 권리는 곧 의무'라는 論理에 의해 北韓의 基本權利는 義務와 不可分의 一體를 이루어 서로 결합하고 있다.

(3) 北韓에서 基本權의 '國家와 社會의 利益과의 一致'라는 것은 곧 '黨

42) 崔達坤, "北韓法에 대한 槪說的 硏究", 國土統一院 學術用役報告書(國土統一院, 1978), 40면.

43) Michael Bothe, "The 1968 Constitution of East Germany ; A Codification of Marxist-Leninist Ideas on States and Government," *The American Journal of Comparative Law*, Vol. 17, 1969, p.283 ; 金雲龍, "北韓憲法秩序의 理論과 實際", 「北韓法律體系硏究」(高麗大 亞細亞問題硏究所, 1972), 78면.

의 路線과의 一致'를 의미한다.[44] 北韓에서 國家內的인 實定權으로서 '相對化'되어 있는 基本權의 範圍와 實現程度는 黨의 利益에 따라서 측정되며 黨의 指導的 意思에 종속된다.[45] 결국 黨의 指導는 基本權이 具體的 內容을 결정하는 동시에 基本權의 內在的 限界를 형성하게 된다. 그래서 北韓은, 裁判所構成法에서 이 法이 "당의 정치적 보위자로서 당의 사법정책을 집행하며 프로레타리아독재의 무기"라고 하고(제1조), 또 裁判所는 '로동당 령도 밑에 사업'한다고 규정하여(제5조) '黨의 領導'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이 점과 관련하여 1992년 北韓憲法은 제11조에서 國家에 대한 '黨의 領導' 규정을 신설하였다.

(4) 北韓에서 사실상 最高規範性을 지니는 것은 이른바 '김일성의 교시와 김정일의 말씀 및 당의 사법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46] 金日成主席은 '우리당 사법정책을 관철하기 위하여'라는 제목의 교시(1958. 4)를 통하여 "국가정책은 곧 당의 정책"이며, "법의 정확한 집행이 곧 당의 정책의 확실한 집행"이라고 하였다.[47] 그리고 '사법일군'에 대해 黨의 政策理解를 그 實質的 資格으로 들고, 프롤레타리아독재의 觀點에서의 法解釋適用을 강조하였다.[48] 이는 裁判所와 判事에 대해 黨政策에의 복종을 의미하는 것으로 北韓 司法機關의 이데올로기적 道具性과 非獨立性을 보여주는 것이다.

(5) 北韓憲法에는 우리 憲法 제10조와 같은 '國家의 基本權保障義務'라든가 우리 憲法 제37조 2항과 같이 부득이한 경우 法律로 基本權을 제한

---

44) Georg Brunner, *Die Grundrechte im Sowjetsystem*(Koln : Verlag Wissenschaft und Politik, 1963), S.17.

45) Dietrich Müller-Romer, a.a.O., S.312.

46) 「北韓法制槪要」, 前揭書, 16면.

47) 金日成의 전국사법·검찰 일군회의에서 한 연설(1958.4.29). 「김일성선집」, 제5권(평양 : 로동당출판사, 1960), 438~458면 ; 姜求眞, "大韓民國과 「北韓」의 法的 體系比較", 「北韓法律體系硏究」, 前揭書, 187면.

48) 김일성은 "우리의 국가정책은 곧 당의 정책이기 때문에 우리 당의 정책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은 우리나라의 사법일군이 될 수 없다"고 하고, 이는 "법을 적용할 때 우리 당이 요구하고 있는 계급적인 관점, 다시 말해서 프로레타리아독재의 관점에 의해서 정확히 해석하라는 말"이라고 하고, 또 "법을 정확히 집행한다는 것은 곧 당의 정책을 정확히 집행한다는 것으로써 당의 지도에 복종한다는 말이 된다"고 하였다. 「김일성선집」, 上揭書, 451~452면 ; 姜求眞, 上揭論文, 215면.

할 수 있다는 '基本權制限의 一般原則'을 밝힌 규정이 없다. 또한 우리 憲法 제37조 2항 단서와 같이 基本權制限의 경우에도 그 本質的 內容을 침해할 수 없다는 基本權制限의 限界를 설정하지 않음으로써 北韓憲法上 基本權規定은 有名無實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49]

(6) 北韓憲法이 제64조에서 '물질문화생활의 실질적 보장'과 '사회주의 제도의 공고발전과 함께 권리와 자유의 확대'라는 基本權保障의 物質的 保障의 原則을 밝힌 것은 일종의 基本權의 '一般的 憲法留保條項'으로서 基本權保障의 限界를 규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아울러 '프로레타리아독재의 실현'과 '공산주의사회 건설'이란 目的은 北韓憲法上 基本權의 '一般的 社會留保'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는 결국 基本權은 이러한 限界內에서 보장된다는 것을 밝힌 것이다.[50]

(7) 北韓憲法에는 權利의 國家權力에 의한 實質的 및 物質的 保障만을 약속하고 있을 뿐이고, 權利의 侵害時 이를 救濟받을 수 있는 具體的 방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즉, 北韓憲法에는 이른바 '基本權을 보장하기 위한 基本權' 또는 '權利保護請求權'으로서 請求權的 基本權 규정이 없다. 이는 權利侵害時 이를 救濟받을 제도가 충분하지 못함을 의미한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集團主義原則에 의한 權利觀念을 바탕으로 하여 平等權, 參政權, 言論 出版 集會 結社의 自由와 함께 기타 여러 가지 權利들을 北韓憲法은 열거하고 있지만, 이들 '權利'가 國家에 대항하여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닌만큼 '權利'의 侵害가 행하여지는 경우에 이를 救濟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法的 節次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다만 國家權力에 의한 實質的 및 物質的 保障만을 약속하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볼 때 그들의 '權利'는 단순한 利益槪念에 가까운 것으로서 이 '權利'에는 反射的 利益까지도 포함될 수밖에 없다.[51] 北韓憲法은 고작 제68조에서 申訴權과 請願權을 규정하여 우리의 請願制度에 해당하는 제도를 두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北韓憲法上 基本權規定이란 그 實效性이 확보되지 않음으로써 뢰벤슈타인의

49) 張明奉, "共産圈 憲法上 基本權에 관한 考察", 前揭 論文, 217면.
50) 이에 관한 詳論은 上揭論文, 207~209면.
51) 崔達坤, 上揭 硏究論文, 404면.

이른바 '裝飾的 憲法'(semantische Verfassung)에 해당한 것이라 할 수 있다.[52]

2. 北韓刑法上 基本權保障의 問題點

北韓은 이른바 政治刑法 또는 反統一的 刑法이라는 비난을 벗어나고자 1987년 2월 5일 刑法을 개정하였다. 종래 이데올로기적 性向을 띠었던 '反革命犯罪'를 '反國家犯罪'로 用語를 바꾸고, 非民主的인 요소로 지목되어온 類推適用制度에 대하여 상세한 制限을 두는 등 개선된 立法態度를 보였다.[53] 그러나 人權侵害的 要素를 여전히 내포하고 있다. 그 주요내용을 다음에 간략히 살펴본다.

(1) 立法技術的인 면에서 犯罪의 構成要件이 애매모호하고, 그 用語도 추상적이며 포괄적이어서 解釋의 一貫性을 유지하기 어려우며, 따라서 法執行機關의 恣意에 따라 刑罰이 남용될 우려가 있다. 또한 刑事節次法과 實體法이 혼재하고 規範과 事實이 혼동되는 立法態度를 보이고 있다.[54]

(2) 犯罪論的인 면에서 비록 制度運營上의 限界를 두었지만 刑罰法規의 類推適用을 표명한 것(제10조)은 刑法의 基本原則으로서 罪刑法定主義를 크게 훼손할 우려가 크다. 그것은 犯罪의 伸縮的 適用을 규정한 제9조와 결합할 때 類推適用禁止를 일탈할 수 있는 소지가 마련되어 法的 安定性을 해치고, 刑法이 階級的 鬪爭의 武器로 활용될 수 있는 便宜的 裝置로 전락할 危險性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55]

---

52) Karl Loewenstein, *Verfassungslehre*, 3. Aufl.(Tübingen : Paul Siebeck, 1975), SS.151~157.

53) 北韓刑法의 改正內容에 관해서는 朴光燮, "北韓刑事法令의 變遷過程", 「北韓硏究」, 제1권 2호(大陸硏究所, 1990 겨울), 56~87면 ; 金日秀, "北韓刑法 40年", 「北韓法律行政論叢」, 第8輯(高麗大 法學硏究所, 1991), 57~94면 ; 같은 筆者, "舊蘇聯刑法이 北韓刑法의 變化에 미친 影響", 「北韓法律行政論叢」, 第9輯(高麗大 法學硏究所, 1992), 259~300면 ; 「北韓法의 體系的 考察(II)－刑事關係法－」, 法務資料 第169輯(法務部, 1993), 28~49면, 159~191면.

54) 「北韓法의 體系的 考察(II)」, 上揭書, 186~187면.

또한 正當防衛와 緊急避難만을 社會的 危險性이 배제되는 事由로 규정하고(제13조, 제14조), 그밖의 違法性阻却事由에 대해 學說에 의존하는 것은 違法性阻却事由의 判斷에 있어서 恣意와 獨斷에 의한 刑罰의 濫用可能性을 크게 한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모든 刑法上의 犯罪에 대하여 過失犯의 성립을 인정하며(제9조), 豫備와 未遂에 대해 旣遂와 같은 處罰을 내릴 수 있다고 하고(제15조), 共犯에 대한 量刑判斷을 正犯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제18조)들은 便宜的 刑罰觀을 나타내는 것으로 近代刑法의 基本原則을 벗어나는 위험한 발상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게다가 隱匿犯, 不申告犯, 放任犯의 처벌규정을 두고(제54조, 제55조), '反國家犯罪'의 경우 이를 예외없이 適用하고 있는 것은 일종의 連坐刑罰을 제도화한 것으로 北韓刑法의 前近代性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고 할 수 있다.[56]

(3) 刑罰論的인 면에서 法을 支配의 道具로 보고 刑罰의 意義를 個人의 基本權保障에 두기 보다는 全體主義的 秩序維持에 두고 있다. 특히 '反國家犯罪'에 대하여는 死刑이 일반화되어 있고(제44조, 제45조, 제52조), 그 法定刑도 가혹하다(전부의 재산몰수형 병과). 기실 北韓의 刑事法은 제1차적 機能을 國家主權과 社會主義制度의 保衛를 위한 手段으로 봄으로써 市民과 社會의 利益保護 및 人權保護機能은 副次的일 수밖에 없다. 개정된 1987년 刑法과 1992년 刑訴法이 과거보다 그 形式과 內容面에서 人權保護的 側面을 강화한 듯이 보이지만, 그 實際는 그렇지 않음을 北韓人權實相이 잘 증명하고 있다.[57] 이렇듯 反國家犯罪에 대해 가혹한 刑罰을 賦課하는 것은 北韓住民에 대해 反國家犯罪에 관한 豫防的 效果를 강조함으로써 결국 北韓의 全體主義的 秩序維持에 큰 意味를 두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55) 金日秀, "舊蘇聯刑法이 北韓刑法의 變化에 미친 影響", 前揭論文, 286면 ; 朴東熙, "北韓의 새 刑法", 「北韓硏究」, 제4권 4호(大陸硏究所, 1993 겨울), 72면.

56) 朴光燮, "北韓刑法에 관한 考察", 「北韓의 法과 法理論」(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1988), 216~217면, 237~238면.

57) 「北韓法의 體系的 考察(II)」, 前揭書, 190~191면 ; 「북한의 개정형사소송법 개요」(북한연구소, 1992), 29~35면.

3. 北韓 刑事訴訟法上 基本權保障의 問題點

北韓은 刑事訴訟法을 개정하여(1992. 1. 15) 刑事訴訟節次에 있어 科學的 客觀的 證據裁判主義를 채택하고(제35조, 제36조), 人身拘束 등 強制處分에 신중성을 강조함으로써(제11조) 舊法에서 보다 人權保障側面에서 外形上 進一步한 면을 갖추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58] 그러나 몇가지 점에서 人權侵害的 要素가 상존하고 있다.

(1) 北韓의 刑訴法은 이른바 '수사일군'과 '예심원'들의 證據調査, 拘束處分, 捜索 押收 등의 強制處分時 裁判所의 令狀制度를 채택하지 않고 있다(제40조, 제100조, 제111조, 제129조). 다만, 拘束處分決定에 따른 被審者(被疑者)를 체포하거나 수색·압수할 때에는 각각 檢事의 承認을 받은 拘束處分決定書나 捜索 押收決定書를 제시하도록 하여(제107조, 제132조) 犯罪捜査로 인한 부당한 人權侵害와 身體의 自由의 侵害를 방지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捜査機關인 檢事에 의한 統制에 불과한 것으로, 捜査機關에 대하여 裁判所가 司法的 抑制機能을 하는 令狀制度와는 그 本質이 다른 것으로서 실질적인 人權保障裝置로 보기 어렵다.[59] 捜査機關의 強制處分에 대한 裁判所의 統制策의 未備는 北韓 刑訴法이 人權保護 보다는 捜査의 效率과 統治의 便宜에 따라 운영된다는 점을 말해준다.[60]

(2) 北韓의 刑事訴訟節次는 犯罪로부터의 社會의 保護的 性格 및 基本的 人權의 保障的 性格보다는 特定階級 및 社會主義制度의 保護的 性格이 강하게 반영되어 人民들에 대한 社會的 敎養과 敎育的 機能이 강조되고 있다. 그래서 北韓의 刑事訴訟節次에는 事件과 직접 관련이 없는 一般大衆이 여러 형태로 審理에 참여할 수 있게 함으로써(제179조, 제230조) 具體的

58) 北韓의 刑事訴訟法의 改正內容에 관해서는 「北韓法의 體系的 考察(II)」, 上揭書, 565~570면 ; 「북한의 개정형사소송법 개요」, 上揭書, 19~27면.

59) 「북한의 재판제도」(북한연구소, 1991), 56~57면.

60) 「北韓法의 體系的 考察(II)」, 前揭書, 576~579면.

眞實의 發見節次라기 보다는 프롤레타리아독재를 옹호하기 위한 政治事業의 일환으로 삼고 있다. 北韓은 刑事訴訟節次에 群衆의 광범위한 관여를 制度化하고 있다. 北韓의 刑事訴訟法은 刑事事件의 취급에서 群衆의 힘과 지혜에 의거한다고 하고(제2조), 裁判所는 군중에 대한 각성과 犯罪豫防을 위해 필요에 따라 '現地裁判'을 조직진행하며 이 경우 노동자 농민 대표에 의한 犯罪者의 罪行의 폭로규탄을 가능하게 하였다(제179조, 제230조). 이처럼 事件과 직접 관련이 없는 住民을 裁判審理에 관여토록 한 것은 前近代的인 人民裁判的 要素를 드러내는 것이다.[61] 이것은 刑事訴訟節次를 社會主義制度의 保衛를 위한 人民에 대한 敎養 및 改造, 體制反對行爲에 대한 一般的·心理的 威脅感, 黨의 司法政策의 확립 등을 위한 手段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3) 通常裁判所「中央裁判所, 道(直轄市)裁判所, 人民裁判所」사이에 제1심관할에 관한 명확한 基準이 없다. 道(直轄市)裁判所는 필요에 따라 當該 道(直轄市) 안의 人民裁判所의 管轄에 속하는 事件을 직접 재판할 수 있으며(제181조), 中央裁判所도 필요에 따라 어떤 裁判所의 管轄에 속하는 제1심사건에 대한 포괄적인 管轄權을 가지게 되어(제184조) 세 裁判所가 모두 제1심형사사건에 대한 管轄權을 갖게 된다. 이에 따라 上級裁判所가 下級裁判所의 管轄事件을 임의로 이송토록 함으로써 國民의 上訴權은 쉽게 박탈될 수 있다. 이러한 裁判管轄制度는 人權保護 보다 法執行機關의 恣意性의 危險을 안고 있다.[62]

(4) 黨과 人民政權에 반대하는 이른바 反革命敵對分子들이 행하는 '反國家犯罪'(北韓刑法 제44조~제55조)에 해당하는 政治犯에 대해서는 國家保衛機關의 豫審員이 예심하도록 하고(제74조), 道(直轄市)裁判所를 第1審管轄로 정하여(제181조) 一般刑事犯과 구분하여 취급하고 있다. 이에 의해 北韓에서는 社會安全機關이나 檢察機關 등 다른 搜査機關이 間諜이나 反黨·反體制行爲者 등 反國家犯罪者를 검거했을 때에는 國家安全保衛部로 그 事件을 이관하도록 되어 있다. 政治犯事件인 경우 國家安全保衛部에

61) 上揭書, 579~582면 ;「북한의 개정형사소송법 개요」, 前揭書, 36~38면.
62) 鄭東潤, "北韓의 裁判所構成法",「北韓硏究」, 제4권 4호, 前揭書, 92~93면.

서 檢察機關과 裁判機關의 관여없이 단독으로 처리됨으로써 人權蹂躙의 事例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63]

4. 北韓의 裁判制度上 基本權保障의 問題點

北韓憲法은 제6장 제8절에서 裁判所와 檢察所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北韓에서의 裁判 및 檢察機關에 관한 규정은 프로레타리아독재의 武器인 裁判 및 檢察機關의 責任과 權限을 높이고 그 機能과 役割을 강화 내지 보장하는데 있다.[64] 실제로 北韓은 金日成과 金正日 및 黨의 教示를 綱領視하고 그에 따라 그들의 獨裁武器로서 裁判 및 檢察制度의 機能을 강화하여 왔다. 이러한 機能에 따라 北韓의 裁判制度는 問題點을 안고 있다.

北韓憲法은 제159조에서 "재판소는 재판에서 독자적이며 재판활동을 법에 의거하여 수행한다"고 규정하여 '裁判의 獨立'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그 實效性에는 의문이 있다. 다음에 그러한 문제점을 간략하게 살펴본다.

(1) 北韓의 裁判制度는 自由民主主義憲法의 統治構造上 基本原理의 하나인 權力分立主義에 비추어 볼 때 특이한 점을 엿볼 수 있다. 그 特異性은 人權侵害의 要素를 안고 있다. 北韓의 裁判所는 통상 判事 1인과 人民參審員 2인으로 구성된다고 하여(北韓憲法 제156조, 裁判所構成法 제31조) 이른바 人民參審員制度를 두고 있다. 人民參審員制度에 대해 北韓은 人民政權의 本質에서 오는 당연한 귀결이라고 주장하지만, 기실 이는 裁判所에 대한 黨의 統制를 강화하는데 있으며 裁判의 獨立과는 거리가 멀다.[65] 人民參審員은 非法律家이며 非常任임에도 불구하고 判事와 동등한 權利를 가지고 裁判에 참여하며, 裁判의 判決 및 決定은 判事와 人民參審員의 多數決에 의하도록 하여(裁判所構成法 제39조) 사실상 이른바 '黨의 政策'

63) 「북한의 인권실태」, 前揭書, 63~64면.

6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연구론문집」(평양 : 사회과학출판사, 1973), 201면 ; 丘秉朔, "北韓의 司法 裁判制度", 「北韓의 法과 法理論」(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1988), 183~184면.

65) 「북한의 재판제도」, 前揭書, 48~50면 ; 「北韓法制槪要」, 前揭書, 245~247면.

에 따른 裁判의 統制를 가능하도록 하였다. 더욱이 判事 및 人民參審員의 資格에 관해서는 특별히 규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실제로는 北韓의 司法政策이 黨의 政策에 기초한다는 점에서 黨性이 바로 判事 및 人民參審員의 資格基準이 된다.[66] 이런 상황에서 北韓의 裁判을 통해 法의 客觀的 妥當性이나 人權保障의 思想을 구현한다는 것을 기대하기란 어려운 것임을 알 수 있다.

(2) 北韓의 司法機關은 다른 國家機關의 事業指導에 의해 통제됨으로써 그 獨立性을 침해받을 수 있는 素地가 많다. 그들은 各級 人民會議에서 選擧 및 召還되는데, 黨의 政策에 위배되는 裁判을 이유로 召還될 수 있다. 北韓憲法은 제120조 3호에서 中央人民委員會가 司法機關事業을 지도하도록 하였으며, 제160조에서 中央裁判所는 中央人民委員會의 指導를 받도록 규정하였다. 그리고 제161조에서 中央裁判所는 自己事業에 대하여 最高人民會議와 主席, 中央人民委員會 앞에 책임지도록 하고, 道(直轄市)裁判所와 人民裁判所는 自己事業에 대하여 該當 人民會議 앞에 책임지도록 하였다. 이는 司法行政上의 監督과 裁判業務에 대한 책임을 강조한 것으로 裁判所의 職務上 獨立을 제한하는 것이다.[67]

(3) 北韓憲法은 제91조 12호에서 中央裁判所長은 最高人民會議에서 選擧·召還되도록 하고, 제101조 9호에서 中央裁判所 判事 人民參審員은 最高人民會議 常設會議에서 選擧·召還되도록 하였다. 그리고 제136조 7항에서 該當 裁判所의 判事 人民參審員은 該當 人民會議에서 選擧 召還된다고 하였다. 이렇듯 判事·人民參審員의 選擧 또는 召還에 있어 그 運營實態는 로동당이 지명하는 單一候補만이 被選될 수 있고, 또한 로동당이 恣意로 召還할 수 있다는 점에서 黨의 政策에 위배되는 裁判을 이유로 召還될 수 있도록 하여 選擧 및 召還制의 本旨를 벗어나고 있다.[68] 더욱이 北韓刑法이 제129조에서 부당한 판결 판정을 한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노동교화형(舊刑法 제184조에서는 2년 이상의 懲役刑)에 처하도록 한 것은

66) 姜求眞, 「北韓法의 硏究」(博英社, 1975), 126~127면.
67) 鄭東潤, 前揭論文, 97~98면 ; 「북한의 개정형사소송법 개요」, 前揭書, 38~39면.
68) 姜求眞, 前揭書, 122~123면.

法과 良心에 따른 裁判을 위협하는 것이다.

(4) 北韓憲法은 제157조에서 '裁判의 公開原則'을 정하고 법이 정한데 따라 非公開裁判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裁判所構成法은 제32조에서 國家 및 軍事的 秘密을 보장할 필요가 있거나 그밖에 法에 정해진 경우에는 裁判所의 判定으로 裁判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것이 예외적인 非公開裁判의 槪念을 벗어나 公正한 裁判을 저해하는 手段으로 惡用되는 사례가 많다.[69]

이러한 裁判所의 職務上 人事上 獨立性을 침해하는 制度는 결과적으로 '裁判의 獨立'을 침해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北韓의 裁判所는 단적으로 黨과 國家의 司法政策을 집행하는 프롤레타리아독재의 무기로서 그 機能과 役割을 하도록 되어 있음(裁判所構成法 제1조)을 알 수 있다. 이같은 상황 아래 北韓에서 裁判의 獨立이란 도저히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다.

Ⅳ. 北韓人權의 國際的 保障의 問題點

北韓은 1981년 9월 14일 '經濟的 社會的 및 文化的 權利에 관한 國際規約'(A規約)과 '市民的 및 政治的 權利에 관한 國際規約'(B規約)에 가입하였다. 이렇듯 國際的 次元에서의 基本權保護를 정한 國際人權規約에 가입하여 北韓은 외형상 人權의 普遍的 尊重이라는 國際的 努力에 호응하고 人權尊重國家로서 對外的 이미지를 높이는 契機를 마련하였지만, 실질적인 人權保障과는 거리가 있다. 그것은 國際人權規約上의 基本權의 實質的 保障을 규정한 B規約 選擇條項(제41조)과 'B規約 選擇議定書'의 가입을 留保하고 있기 때문이다. B規約의 選擇條項인 제41조는 이 選擇條項을 수락한 한 이 規約의 規定을 履行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다른 當事國(選擇條項 受諾國)에서 注意를 환기하는 通報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두 나라 사이

69) 丘秉朔, 前揭論文, 189면.

의 解明 調停 등이 이루어지며, 그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으면 당해 事案을 UN人權理事會(Human Rights Committee)에 회부하여 審理토록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또 'B規約 選擇議定書'는 B規約이 규정하고 있는 權利를 侵害당한 個人이 人權理事會에 通報해 審理를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人權理事會가 審理를 거쳐 얻은 見解를 관련 國家와 個人에게 송부하는 節次를 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유보한 北韓에서 個人이 人權을 침해당한 경우 國內的 救濟節次를 넘어 國際的 保障策을 강구하는 方法은 封鎖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北韓은 國際人權規約 履行에 관한 報告書를 1983년 한차례만 人權理事會에 제출한 뒤 계속된 報告書提出促求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치 않고 있으며, 國際人權團體들의 人權調査要請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70]

이같은 北韓의 人權保障에 대한 制度的 問題點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北韓의 통제로 인해 人權實相에 관한 신뢰할 만한 情報를 얻기가 매우 어렵다. 그간 '아시아人權調査機構'(Asia Watch), '미네소타辯護士 國際人權委員會'(MLIHRC)[71], 國際赦免委員會 등의 國際人權擁護團體들의 노력은 北韓人權의 심각한 實相을 國際社會에 알리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이와 함께 美國務部의 人權報告書도 北韓人權實態를 계속 감시하고 그 改善을 촉구해왔다. 그리고 최근 歸順者들의 證言은 北韓에서의 人權狀況의 열악성을 생생하게 전해주었다. 이를 통해 볼 때, 北韓에서는 진정한 意味의 人權을 찾아보기가 어려우며 基本權保障에 대한 制度나 實際에 있어서 그 改善이 크게 요청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報告書와 證言들이 한결같이 北韓의 열악한 人權狀況을 지적하면서, 그것은 北韓의 一人支配體制에 기인한다고 분석하고 있다.

---

70) 國際赦免委員會 '人權報告書 1993' 北韓部分. 「북한의 인권실태」, 前揭書, 95~96면.

71) Asia Watch & Minnesota Lawers International Human Rights Committee(MLIHRC),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North Korea)*, December 1988 ; 「북한의 인권백서」(평화문제연구소, 1991), 35~76면.

Ⅴ. 北韓人權의 改善方向

北韓人權狀況에 비추어 볼 때, 北韓의 人權에 대하여 人類普遍의 價値로서 正當한 人權問題의 擧論과 그 改善方案의 摸索은 필요하다. 이점과 관련해 金泳三大統領은 지난 8·15 光復節 慶祝辭에서 北韓의 人權改善을 촉구하고, '自由·福祉·人間의 尊嚴性'을 統一國家가 지향하는 基本價値로 정하였다. 이것은 北韓人權問題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意志를 표명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앞으로 北韓의 人權改善問題는 金大統領도 밝혔듯이 '民族共同體統一方案'의 實踐上 當面政策課題의 하나인 만큼 國際赤十字社 및 UN人權機構 등 國際人權機構와 國際赦免委員會와 같은 人權團體 등을 통한 北韓人權問題의 解決努力은 물론이거니와 南北間의 대화와 합의를 통한 여러 方面에서의 지속적인 改善努力이 요청된다.

1. 南北當事者間의 努力

현재 南北間에는 '南北基本合意書'에서 離散家族問題 및 人道的 問題의 解決對策講究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며(제18조), 人權問題에 관한 基本合意는 없는 실정이다. 이에 비해 東西獨은 '東西獨基本條約'에서 UN憲章에 명시된 目的과 原則의 指向과 함께 人權保護 指向을 규정하고(제2조), 이른바 CSCE條約(헬싱키協定)을 통해 東西獨間의 人的 交流와 東獨住民의 人權保障을 강조하였다. 이 헬싱키協定에는 西獨과 西方側의 要求에 의해 基本權伸張(前文), 人權과 基本的 自由權의 尊重 및 그 義務의 성실한 履行(제7, 10원칙) 등 人權條項을 명기하였다.[72] 이는 결과적으로 東獨으로 하여금 人權改善과 人道的 交流의 措置를 취하도록 함으로써 獨逸統一

72) 이에 관한 詳論은 Paul Sieghart, *The International Law of Human Rights*(London : Oxford Uni. Press, 1983), pp. 30~32 ; 全賢俊, 前揭書, 37~44면.

에 크게 기여하게 되었다. 이렇듯 西獨이 當事者間 또는 國際的으로 東獨이 人權을 개선토록 하는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獨逸統一에 유리한 方向을 유도한 점은 우리에게 큰 敎訓을 준다. 여기서 西獨이 對內的인 民主化를 완성하고 이를 토대로 人權先進化를 이룸으로써 東獨에 대해 人權問題에 대해 正當性을 갖고 優位에 설 수 있었던 점을 看過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런 면에서 國際赦免委員會에서 北韓人權問題와 함께 지적된 南韓의 人權狀況의 改善은 北韓의 人權改善에 대한 促求에 앞서 關心을 두어야 할 대목이다.[73] 北韓의 民主化·開放化를 유도하고 北韓의 人權狀況改善을 가져오게 하는 길은 南韓에서의 진정한 民主化의 實現을 통해 뒷받침될 수 있는 것임을 銘心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北韓人權問題에 접근하는데 있어서는, 그것이 政治的 目的이나 經濟的 利害에 의해 임의적인 基準과 모호한 資料에 의해서는 안되며 반드시 人權의 普遍的인 立場에서 보아야만 效果的이고 現實的인 方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北韓人權을 개선하는 南北韓의 努力의 일환으로 현재 南北間 人權問題에 관한 基本合意가 없는 만큼 앞으로 이에 대한 南北韓의 合意를 도출하고 이를 明文化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 方法으로는 특히 '民族共同體統一方案'에 천명된 統一過程에서 '南北聯合' 段階의 制度化로서 마련될 이른바 '民族共同體憲章'(南北聯合憲章)에 그 內容을 반드시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그래서 南北韓이 상호 人權保障에 最善을 다하는 努力을 기울임으로써 自由와 人權이 보장되는 統一國家의 礎石을 쌓아가야 할 것이다.

2. 國際的 保障策의 摸索

世界的으로 人權을 保障하기 위한 條約과 制度들이 강구되어 왔으며, 이른바 人權先進國들은 이를 통하여 自國民의 人權을 保障할 뿐만 아니라 人權彈壓國에 대해 人權改善을 촉구함으로써 人間의 尊嚴과 價値의 尊重精神을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國際的 人權保障制度는 北韓에 대해 人權改善을

73) 「한겨레신문」, 1994년 8월 14일, 10면.

위한 效果的인 代案을 제시하고 있다. 그 國際的 保障方案으로 다음을 생각해본다.

첫째, 北韓은 前述한 바와 같이 國際人權規約 A規約과 B規約에 加入하였다. 그러나 人權의 國際的 保障策으로서 他規約當事國의 規約上 義務不履行에 대한 介入權과 人權理事會의 審理權限을 인정한 B規約 選擇條項(제41조)과 B規約上 權利를 침해당한 個人의 救濟節次를 정한 'B規約 選擇議定書'에의 加入을 유보하였다. 그것은 北韓이 외형상 人權尊重國家라는 對外的 이미지를 改善하려는 意圖가 짙으며 실질적인 人權保障과는 거리가 있다. 따라서 北韓이 國際人權規約上 人權의 國際的 保障節次를 정한 規定에 加入하여 실질적인 人權保障의 길을 열도록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서울에서 열린 제3차 유엔 亞太地域 人權워크숍(1994. 7. 20)에서 합의된 亞太地域 人權會議의 定例化와 人權機構의 設立原則의 具體化는 北韓의 人權改善을 위한 효과적인 方案의 하나로 摸索될 수 있을 것이다.[74] 이는 '人權과 基本的 自由에 관한 유럽協約'(유럽人權協約 :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美洲人權協約'(Americ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人權과 人民의 權利에 관한 아프리카憲章'(아프리카人權憲章 : African Charter on Human and People's Rights) 등과 같이 亞太地域에서의 地域的 人權保障을 위한 努力이 될 것이다. 다음에 國際的 人權保障을 위한 地域協定의 內容을 좀더 보기로 한다.

'유럽人權協約'(1950 채택, 1953 발효)은 國際人權規約 B規約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규정으로 市民的·政治的 權利를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이 協約을 시행하는 機關으로 유럽人權委員會(European Commission on Human Rights)와 유럽人權裁判所(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가 있다. 前者는 準司法機關으로서 協約上 權利侵害를 주장하는 個人, 非政府機關 또는 團體의 請願을 처리할 수 있다. 後者에서는 유럽人權委員會가 심의했던 事件으로서 關係 當事國이나 유럽人權委員會가 제소하는 事件을 재

74) 「東亞日報」, 1994년 7월 21일, 7면.

관한다. 協約當事國은 유럽人權裁判所의 強制管轄權을 인정하는 宣言을 할 수 있으며, 유럽人權委員會나 當事國 이외의 個人은 訴訟能力이 인정되지 않는다.[75]

'美洲人權協約'(1969 채택, 1978 발효)에서도 人權保障을 도모하는 機關으로 美洲人權委員會(Inter-American Commission on Human Rights)와 美洲人權裁判所(Inter-American Human Rights Court)를 설치하고 있다. 前者는 모든 美洲機構(Organization of American States)의 會員國들을 상대로 한 請願節次를 관장하는 美洲機構의 機關이면서 동시에 美洲人權協約上의 機關이다. 後者는 美洲人權協約上의 機關일 뿐만 아니라 人權問題에 관한 美洲機構의 司法機關으로서 美洲機構와 美洲人權協約의 非當事國에 대해서도 裁判權을 행사할 수 있다. 특히 美洲人權協約上의 機關으로서는 이 裁判所의 裁判管轄權을 수락한 當事國과 관련된 協約의 解釋과 適用에 관한 紛爭을 재판하며, 關係 當事國과 美洲人權委員會에만 提訴權이 인정된다.[76]

'아프리카人權憲章'[1981 채택, 아프리카단결기구(Organization of African Unity) 各國別로 비준발효]에서는 市民的·政治的 權利(第1世代 人權), 經濟的·社會的 文化的 權利(第2世代 人權) 외에 이른바 '第3世代 人權'(a third generation rights) 또는 '連帶權'(solidarity rights)[77]을 명시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여기서는 이 憲章의 解釋과 適用을 위한 아프리카 人權 및 人民의 權利委員會(African Commission on Human and People's Rights)가 설치되어 있지만, 별도의 裁判機關을 두고 있지 않다.[78]

---

75) Paul Sieghart, *op. cit.*, p. 393 ; 張孝相, "國際法上 人權의 保護", 「月刊考試」, 1987年 10月號, 54~56면.

76) Thomas Buergenthal, "The Advisory Practice of the Inter-American Human Rights Court,"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1985, p. 1 ; 上揭論文, 56~57면.

77) 이에 관해서는 Final Report of UNESCO Expert Meeting on Human Roghts, Human Needs and the Establishment of a new International Economic order, Paris, 19~23 June, 1978, UNESCO Doc. ss-78/Conf.630/12 ; 李長熙, "第三世代 人權의 槪念", 「人權과 國際法」, 碩岩 裵載湜博士華甲紀念論文集(博英社, 1989), 207~223면.

第3世代 人權으로는 대체로 平和·開發·環境에 대한 權利, 人類共同遺産의 保障에 대한 權利 등을 들 수 있는데, '아프리카人權保障'에서 새로운 博愛精神에 입각한 第3世代 人權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은 주목되는 점이다.

이같은 地域的 人權保障을 위한 協約들은 國際的 次元에서의 人權保障을 위한 制度로서 발전되고 그 效率性을 높여 나가고 있다. 亞太地域에서도 이와 같은 人權條約을 채택하고 人權保障機關을 설립함으로써 國際的인 人權保障制度를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여기에 北韓을 참여토록 하여 北韓에서의 人權保障을 촉구하는 方案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다.

3. 南北關係와 北韓人權의 改善

北韓의 人權問題는 南北關係와 관련하여 중요하다. 현시점에서 北韓의 變化없이는 南北關係의 改善 내지 統一의 進展을 기대하기 어렵다. 北韓의 人權問題는 北韓社會의 民主化가 선행되지 않고는 改善되기 어렵다. 여기서 北韓의 民主化란 北韓社會의 改革과 開放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北韓은 舊蘇聯 및 東歐社會主義國家들의 變革을 통해 나타난 改革과 開放에 대하여 共産主義의 실현과정에서의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하고 社會主義의 종국적인 勝利를 강조하면서 '우리식 사회주의'의 優越性을 주장하고 있다. 즉, 餘他 社會主義國家들의 變革에서 나타난 世界史的 潮流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社會主義國家들에서 행해진 變革이란 舊蘇聯의 고르바초프가 페레스트로이카의 主要目標로 삼았던 社會主義의 새로운 모습, 즉 '인간의 얼굴을 한 社會主義'의 실현이라고 할 수 있다. 고르바초프는 '인간의 얼굴을 한 社會主義'를 人間의 價値에 부합하는 生活權의 保障, 人間重視의 방향으로의 社會制度의 전환, 모든 生活分野에서 人間的인 尺度의 優先原則 실현,

78) M. J. Browman, *Multilateral Treaties, Index & Current States*, Seventh Cumulative Supplement(London : University of Nottingham Treaty Center, 1990), pp. 174~175 ; 張孝相, 前揭論文, 57면.

그리고 社會主義的 法治國家의 건설, 人民의 社會主義的 價値와 代議制·議會民主主義에 입각한 權力分立主義의 결합, 政治制度의 根本的 民主化, 一黨體制에서 多元主義로의 발전 등을 내용으로 하는 '人間的이고 民主的인 社會主義'라고 하였다.[79] 이에 비추어 볼 때 北韓이 비록 人民의 福祉와 人權을 강조하고 있지만, 그것은 '인간적이고 민주적인 社會主義'의 지향과는 그 本質을 달리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民主化 開放化·自由化·人間化'를 지향하는 餘他 社會主義國家들의 改革의 歷史的 方向과는 역행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北韓에 대한 改革과 開放의 유도는 北韓의 人權을 개선시키는 유효한 方案이 된다. 이것은 나아가 南北關係 및 統一問題에도 직결되는 것이다. 對北政策 내지 統一政策의 推進에 있어서 北韓의 人權問題는 시급한 課題로 다가서고 있으며, 따라서 이에 대한 對策 마련이 요청된다. 北韓의 人權改善이 北韓의 民主化를 전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對北政策 내지 統一政策은 北韓을 改革과 開放으로 유도하는 方向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北韓의 人權問題를 北韓住民의 基本權保障 및 삶의 질 향상이란 問題를 넘어 北韓의 開放과 궁극적인 民主化를 염두에 둔 것으로서 對北政策 내지 統一政策에서의 중장기적인 次元에서의 政策的 考慮가 될 것이다.[80]

무엇보다 北韓의 民主化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우선 北韓을 開放으로 이끌어내는 것부터 시작하여야 한다. 그것은 南北間 交流와 協力의 강화를 통해 달성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金大統領의 '民族共同體統一方案'에서의 '民族發展共同計劃'構想과 北美間 核問題解決을 위한 合意를 도출한 후 南北經協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천명[81]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이 過程에서 이제까지 南北關係의 障碍가 될 수 있다는 판단하

79) *Pravda*, 1989년 11월 26일자에 揭載된 M. Gorbachev의 "사회주의사상과 혁명적 페레스트로이카"라는 論文. 이의 譯文은, 「中蘇硏究」, 第13卷 4號(漢陽大 中蘇問題硏究所, 1989/90 겨울), 239면.

80) 朴銖吉, "올바른 對北 인권정책", 「朝鮮日報」, 1994년 8월 12일, 5면.

81) 「東亞日報」, 1994년 11월 7일, 2면.

에 소극적으로 대처했던 北韓의 人權問題에 대해서도 보다 적극적인 입장에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北核問題에 관한 北美協商의 妥結 후 北核問題와 連繫되었던 對北經協에 대한 규제 완화 조치를 우리 政府가 취한 것은 앞으로 南北關係의 改善은 물론이거니와 北韓人權의 改善에도 기여할 것이다. 현시점에서 南北經協은 北韓을 開放社會로 유도하여 北韓의 人權改善을 위한 하나의 方法이 되므로 이것은 중단없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Ⅵ. 結 語

北韓人權이 最惡의 狀態에 있다는 것은 이미 여러 차례 人權團體에 의한 人權水準의 評價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예를 들면, 美國의 人口危機委員會(PCC)는 北韓의 人權水準을 10점 만점에 0점으로 평가하였으며(1992. 7)[82], 최근 美國의 헤리티지財團 아시아연구소가 발간한(1994. 8. 23) '美-아시아 통계자료집'에서도 北韓에 대해서는 政治的 權利 및 住民의 自由化 水準 7段階 중 最下位인 7段階로 평가하였다.[83] 北韓은 憲法에 '우리식 사회주의'의 核心內容으로 '사람중심의 세계관'(제3조)과 '사람중심의 사회제도'(제8조)를 규정하고, 主體思想에 의하여 사람의 尊嚴과 價値는 最上의 境地에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主體思想에서의 人間中心論은 人本主義(humanism)를 표방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것은 기실 이른바 '擬似 humanism'으로서 政治的 宣傳을 위한 口號의 하나로 이용됨으로써 한낱 虛構임을 알 수 있다.

北韓의 人權保障에 대한 制度와 實際에 비추어 볼 때, 北韓에서는 진정한 의미의 人權을 찾아보기 어렵다. 그래서 或者는 北韓에는 '人權'이란 槪

82) 「中央日報」, 1992년 7월 11일, 5면.
83) 「世界日報」, 1994년 8월 16일, 6면.

念조차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한다.[84] '人權의 死角地帶' 또는 '人權과 自由의 不毛地帶'라는 表現은 北韓의 人權狀況을 잘 대변해주는 것이다.[85] 北韓은 國際赦免委員會의 '94 아시아·태평양지역회의'(1994. 7. 30)에서 발표된 北韓의 人權實相에 관한 公開資料[86]에 대하여 이른바 '조선인권연구협회'의 聲明(1994. 8. 2)을 통해 "북한에는 인권문제와 수용소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人權彈壓行爲를 부인하였다.[87] 또한 國際赦免委員會의 公開資料에서 政治犯收容所에 수감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진 前 수도여고 교사 高相文씨와 前 서독주재 한국대사관 서기관 兪成根씨 등을 평양방송에 내세워 이들의 拉北事實을 부인토록 하였다(1994년 8월 9일, 10일). 그러나 이는 北韓이 北韓人權에 대한 國際社會의 非難을 모면하기 위한 逆攻勢로서 北韓의 열악한 人權狀況을 糊塗하기 위한 대응으로 보인다.[88]

현재 北韓에는 金日成 主席의 死亡 후 사실상 金正日體制가 확립된 것으로 보인다. 金正日은 이른바 '首領의 後繼論'에 의해 '首領'으로서의 실질적인 權力承繼를 마무리하고 黨總秘書와 國家主席職의 公式承繼節次만을 남겨두고 있다. 金正日時代를 맞는 北韓에서는 對內外情勢의 변화에 부응하여 開放政策이 추진되는 것과 함께 北韓住民에 대해서도 基本權이 伸張될 것이란 展望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그러나 北韓이 當面課題인 經濟難打開와 國際的 孤立脫皮를 위해서는 改革과 開放이 불가피하더라도 그것은 극히 제한적으로 추진될 것이며, 결코 體制守護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範圍內에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金正日體制下에서도 基本權保

84) 佐藤勝己, "金日成主義下에서의 人間의 權利", '北韓社會의 人權'에 관한 韓國自由總聯盟 國際學術 심포지엄 發表文(1989. 11. 14), 5면.

85) 梁好民, "北韓의 自由와 人權", 第9次 國內外 宗敎人 學者會議資料(民主平和統一諮問會議 事務處, 1993), 10면.

86) 「한겨레신문」, 1994년 7월 31일, 14면 ; 「東亞日報」, 1994년 8월 2일, 29면.

87) 北韓의 「조선인권연구협회」는 1993년 6월 10일 오스트리아에서 개최된 세계인권대회를 통하여 처음으로 확인된 단체라고 알려지고 있다. 「東亞日報」, 1994년 8월 4일, 2면 ; 「월간 북한동향」,통권 제158호, 1994년 8월호(통일원, 1994. 9), 73~74면, 177~181면.

88) 「東亞日報」, 1994년 8월 12일, 2면.

障에 대해 발전적 變化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더욱이 金正日은 金日成 死後 北韓의 政策路線을 통해 볼 때, 體制守護라는 最優先의 課題達成을 위해 '우리식 사회주의'를 보다 강조할 것이며, 그 過程에서 住民에 대한 統制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金日成과 같은 카리스마를 갖추지 못한 金正日이 강력한 住民統制를 통한 政權安定을 도모할 것이란 점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로 미루어 金正日政權下에서도 北韓住民에 대한 抑壓的 體制는 강화될 것으로 예견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단기적으로 北韓의 人權改善은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오히려 北韓이 처한 現狀況에서 볼 때, 北韓住民의 基本權은 더욱 위축될 우려마저 생긴다.

빈 면

社會主義 經濟體制 轉換과 南北韓 統合

— 북한 경제체제 전환에 관한 방법론적 고찰 —

金 瑩 允*

◁目 次▷

Ⅰ. 問題提起
Ⅱ. 體制轉換의 槪念과 要件
Ⅲ. 體制轉換의 方法과 事例
Ⅳ. 合理的 體制轉換의 方法
Ⅴ. 北韓의 體制轉換
Ⅵ. 結 語

Ⅰ. 問題提起

體制가 서로 다른 두 국가가 어떤 방법으로 統合을 이루며, 통합할 경우 어떤 형태의 체제를 수립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통합을 이루려는 주체의 의지와 結付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또한 두 국가가 어떠한 형태로 정치적인 통합을 이루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다시 말해, 동서독과 같이 동독이 자신의 체제를 스스로 포기하고 서독에 편입되어 이루어진 통일의 경우와 두 체제가 서로 협의하여 새로운 하나의 체제를 형성하는 경우는 통합후 견지할 체제의 형태나 내용에 있어서 판이하게 다를 것이다. 經濟統合을 이룬 역사적인 경험은 서로 상이한 두 체제가 제3의

* 民族統一硏究院 硏究委員

체제를 이루어내는 경우보다, 어느 한 편의 체제가 체제면에서 우월한 체제로 통합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임을 제시하고 있기는 하다.[1)]

독일 통일이후 남북한 통일에 대한 논의는 대체로 남북한간에 어떠한 형태의 통일이 이루어져야 할 것인가에 집중된 면이 없지 않았다. 즉 통일을 점진적으로 이루어야 할 것인가 아니면 급진적인 형태가 되어야 할 것인가에 치중되어 왔는데, 그 답은 이제 대부분 점진적인 통일을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로 모아지고 있다. 점진적인 통일을 이루어야 하는 배경에는 급진적인 통일이 남북한 모두에게 가져올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큰 경제적 負擔과 사회적인 衝擊 및 부작용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북한 경제가 스스로 발전하여 남한과 비교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에 이를 수 있도록 하며, 남한 경제도 통일을 감당해 낼 수 있을 만큼의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는 시간적인 여유를 가진 점진적인 통일이 合理的이라는 논리이다.

통일이 이루어낼 경제체제는 北韓式 사회주의 체제가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면서 남북한 경제가 시장경제체제로 單一化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市場經濟體制가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보다 우월한 면에서도 기인하지만 어떤 경우의 통일에 있어서도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自由民主主義 체제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2)] 그리고 북한 경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개방과 체제전환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데에도 共通分母를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통일과정과 통일 실현 단계에서, 북한 경제체제가 어떤 방법을 통해 시장경제체제로 전환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 내용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아직 체계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

1) 歷史的으로 이루어졌던 경제통합의 과정을 분석하여 그 共通點을 발견하고 이를 남북한의 現實에 반영시켜, 남북한간에는 어떤 형태의 통합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分析은 金瑩允, "經濟統合의 事例硏究와 南北韓 經濟統合 展望," 民族統一硏究院「統一硏究論叢」제 1권 2호, p.189ff. 참조.

2) 시장경제체제와 자유민주주의체제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Franz Neumann (ed.), *Handbuch politischer Theorien und Ideologien* (Hamburg : Rowohlt Taschenbuch Verlag GmbH, 1987).

점진적이든 급진적이든 어떤 형태의 통일이라고 할지라도 북한의 체제전환이 필연적인 것이라면, 이에 대한 논의가 미래를 對備한다는 측면에서 통일의 형태에 대한 논의보다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엄밀히 말해, 점진적 통일이 북한경제력 提高와 統一費用의 輕減이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북한경제수준 향상후 통일을 이루는 것이 부작용의 최소화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일이지만, 북한경제체제 자체가 점진적이거나 급진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과는 다른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남북한이 정치적 통일을 이루었을 경우, 北韓의 經濟體制가 어떤 방법을 통해 轉換되는 것이 합리적인가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즉, 통일이 이루어지는 형태에 관계없이 北韓式 사회주의 경제체제가 舊東獨을 비롯한 동유럽 국가나 中國 또는 러시아와 같이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한다면, 과연 어떤 체체전환적인 방법과 과정을 택해야 가장 바람직할 것인가에 焦點을 두어 論議하고자 한다.[3)]

먼저 체제전환에 대한 개념과 조건 및 방법을 제시하고 몇가지 체제전환의 사례를 살펴본 다음, 북한의 체제전환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II. 體制轉換의 槪念과 要件

1. 體制轉換의 槪念

經濟體制轉換(economic system transformation)이란 한정된 지역(국

3) 남북한이 급진적으로 통일을 이루든, 상호 협의에 의해 화해·협력과 남북연합 단계를 거치는 점진적·단계적 통일을 이루든 북한경제체제의 실질적 전환은 政治的인 통일에 대한 合意가 일단 이루어지고 난 다음 비로소 대두될 것이다. 「南北聯合」이라는 통일단계가 남북한이 조약에 의해 국가연합(Staatenbund ; Confedration)의 성격을 띠게 될 경우 남북한간에는 南北聯合 종료시까지 '複數의 憲法'을 가지게 됨으로써 서로 상이한 경제체제를 유지하게 될 것이다. 南北聯合의 성격에 대해서는 金明基, "南北聯合의 法的 性格," 明知大學校 社會科學硏究所 「社會科學論叢」 제6집 pp.35ff. 참조.

가)에서 기존에 유지되어 오던 경제질서나 경제활동과 관련된 법규의 적용이 무효화되고, 다른 경제적 秩序나 法規가 적용되는 것을 의미한다. 즉 경제적 질서나 경제질서유지를 위해 마련된 제도적 기구(institional mechanism)가 전혀 새로운 원칙에 의해 運用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상이한 두 체제가 소유형태나 이데올로기와 같은 체제의 근본원칙을 변화시키지 않고 양 체제의 특징 중 일부가 유사한 변화를 하여 상대체제의 긍정적인 면을 취하는 체제접근(system approach)이나, 기존의 경제질서의 核心을 유지하면서도 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체제개혁(system reform)과는 다르다.

체제전환과 관련된 논의는 지금까지 주로 體制移行과 관련하여 이루어져 왔다. 이는 곧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체제가 유형적으로 어떻게 變化·發展될 것인가 하는 체제의 將來에 대한 연구였다. 이에 대한 연구는 특히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경제체제가 서로 양립하지 못하고 결국은 다른 한 편의 지배를 받거나 붕괴에 이른다는 체제非양립론(Unvereinbarkeitslehre)에 입각하여 먼저 전개되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마르크스(K. Marx)의 辨證法的 유물사관에 의한 자본주의 붕괴와 그에 따른 사회주의의 대두,[4] 또한 자본주의는 내부모순의 極大化로 몰락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발전적 성공에 의해 사회주의 체제로 이행한다는 슘페터(J.A. Schumpeter)식 자본주의 沒落論[5] 등이다.

또한 1920년대부터 30년대에 걸쳐 計劃經濟論爭(經濟計算論爭)에서 사회주의 경제의 합리적인 운용 가능성을 부정한 미제스(Ludwig v. Mieses)[6]나 하이에크(F. A. Hayek)[7]의 「사회주의 실패론」을 들 수 있다.

---

4) 이에 대해서는 Karl Marx, *Das Kapital : Kritik der politischen Okonomie,* Marx Engels Werke Vol. 23~25(Berlin : Dietz Verlag Berlin 1963) 및 이에 대한 요약으로 Henri Denis, *Geschichte der Wirtschaftstheorien* Vol.2 : Von Marx bis zue Gegenwart (Rheinfelden : Schauble Verlag 1974/75) pp.60~86 참조.

5) J. A. Schumpeter, *Kapitalismus, Sozialismus und Demokratie* (Tübingen : Francke Verlag 1950).

6) Ludwig v. Mieses, *Socialism An Economic and Sociological Analysis* (Original : Die Wirtschaftsrechnung im sozialistischen Gemeinwesen) (New Haven, Conn. : Yale University Press, 1951).

한편, 이와는 다른 시각에서 각기 상이한 체제가 자체내의 상당한 수정과 변화를 거치고 경제적인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서로 일정한 새로운 체제를 선택하는 방향으로 이행된다는 갈브레이스(J.K. Galbraith)[9]나 틴버겐(J. Tinbergen)[10] 등의 體制收斂論(convergence theory)도 체제전환적 입장에서 거론될 수 있다. 그리고 社會主義 체제의 시장경제질서로의 移行이 필연적임을 역설한 로스토우(Rostow)[11]를 비롯하여 사회주의의 중앙관리체제는 경제성장의 국면전환과 함께 자유화가 불가피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 뵈트허(E. Böttcher)[12] 등도 위의 관점에서 설명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논리나 假說들은 각 체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과 모순점으로 인해 체제전환이 이루어진다는 이론적 입장에서 개진되고 있거나, 경제체제의 핵심은 바뀌지 않으면서 변화를 모색하는 경제개혁의 입장에서 전개되고 있다. 따라서 이를 현재 동유럽이나 중국 등에서 나타나고 있는 사회주의의 崩壞나 改革에 따른 체제전환현상과 연관시켜 볼 때, 많은 부분에서 그 현실성을 상실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바꾸어 말해 과거의

---

7) F. A. Hayek(ed.), *Collectivst Economic Planning : Critical Studies on the Possibilities of Socialism* (London : Routledge & Kegan Paul, Ltd., 1935). 그 외 랑게(Oskar Lange) 이론에 대한 비판은 하이에크의 논문집 *Individualism and Economic Order* (London : Routledge & Kegan Paul, Ltd., 1949) 참조.

8) 1920년대까지의 경제체제에 대한 논쟁은 대부분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논리성에 관한 것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다가 미제스의 사회주의 경제에 대한 비판이 이루어짐으로써 사회주의 경제를 경제적 시각에서 분석하게 되었는데 미제스는 사회주의의 윤리적 우월성과는 무관하게, 사회주의는 구성원들의 목표를 달성시킬 수 없는, 즉 시민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는 체제로서 실패할 것이라는 것을 주장하였다. L.V. Mieses, *op. cit.*,

9) J. Galbraith, *Die moderne Industriegesellschaft* (München-Zürich : Knauer, 1968). (Original : The New Industrial State).

10) Jan Tinbergen, "Konvergenzen und Divergenzen zwischen den verschiedenen Wirtschaftsordnungen," La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Nordrhein-Westfalen-Koln(ed.), *Unsere Wirtschaft-Basis, Dschungel, Dogma?* (Koln : 1973).

11) W. W. Rostow, *Stadien wirtschaftlichen Wachstums, (Göttingen : 1967)* (Original : The Stages of Economic Growth, Cambridge 1960).

12) E. Böttcher (ed). *Wirtschaftsplannung in Ostllock : Beginn einer Liberalisierung?* (Stuttgart · Berlin · Köln · Mainz; 1996).

사회주의 체제가 정부주도에 의해 자본주의 체제로 근본적인 전환을 모색하고 있는 현상과는 다른 次元에서 논의되어야 할 성질의 문제이다.

2. 體制轉換의 要件

경제체제는 경제적 秩序나 經濟活動을 결정하는 원칙, 즉 생산, 소비 및 소득분배와 관련되는 의사결정과 이의 수행을 위해 마련된 機構(mechanisms)와 制度(institutions)의 總體라고 할 수 있다. 기구란 제도가 일정한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기능하는 장치를 말하며 제도는 경제주체가 이루려고 하는 일정한 목적이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다. 예를 들어 가격기구(price mechanism)란 가격이라는 제도를 통하여 상품의 需要와 供給이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장치를 말하며, 이와 같은 기구와 제도가 정상적인 조건 아래에서 항상 동일한 경제적 성과를 나타낸다고 전제할 경우, 제도와 기구는 서로 통합된 상태, 즉 제도적 기구(institutional mechanism)로서 성립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경제활동을 결정하는 제도적 기구의 總體가 경제체제를 이룬다고 할 때, 經濟體制轉換이란 제도적 기구가 새로운 것으로 바뀌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은 사회주의 경제를 이루는 제도적인 기구의 전환을 지적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법적·제도적 장치가 도입·시행됨을 전제로 한다.[13]

첫째, 가격이 自由化되어야 한다. 價格自由化는 경쟁시장을 성립시키기 위한 필수적이며 최우선적 조치이다. 가격이 경쟁시장을 통해 자유롭게 형성되지 않고서는 재화의 수요·공급이 조절되지 않으며 자원의 최적배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문제는 가격자유화를 어떻게 실시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즉 가격자유화를 산업 전부문에 걸쳐 즉시 실시할 것인지, 아니면 一部門에서

13) 그러나 일개 국가의 經濟體制는 경제적인 요인 이외에도 무수히 많은 정치적 또는 制度的인 요소들에 의해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경제체제전환이 경제제도적 기구에 의해서만 轉換되지 않는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시작하여 全部門으로 점진적으로 擴大實施할 것인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의 결정은 신중하게 내려질 필요가 있는데 그 이유는 가격자유화의 방법과 내용이 기타 체제전환의 요소와 함께 경제에 큰 영향을 미쳐 대량실업이나 물가상승, 경제구조의 일시적인 瓦解 현상 및 그 밖의 각종 사회적인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생산자와 소비자의 자유로운 市場참여와 시장으로부터의 離脫이 법적·제도적 장치에 의해 보장되어야 하며, 市場活動으로부터 얻은 利益이나 剩餘가 생산자나 소비자 자신에게 歸屬되어야 한다.

경쟁을 통해 얻은 이익이 자신에게 귀속되지 않을 경우, 아무도 자신의 능력을 시험받는 시장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경쟁시장이 私有財産制度가 성립할 때에만 존재 가능하다. 사유재산제도가 시장경쟁을 통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企業活動과 운영이 국가간섭을 벗어나 스스로의 책임하에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기업이 사적 소유관계에서 운영될 때 경쟁시장과 경쟁가격이 형성되고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은 물론, 기술발전까지 기대할 수 있다.

셋째, 海外貿易과 資本移動이 국가독점에 의하지 않고 개별 경제주체에 의해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대외경제개방이 실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자국화폐가 對外支拂手段으로 사용될 수 있는 태환성을 갖추어야 하며, 재화가격은 국내외간 가격 왜곡현상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시 말해, 두 국가간에 있어 제품의 생산가격과 판매가격이 아무런 제약없이 연결되어져야 한다.[14] 이것은 가격자유화를 통해서 이룩될 수 있다. 그러나 경제 전 분야를 일시에 개방하고 화폐의 兌換性을 갖게 하는 것은 산업경쟁력이 확보되어 있지 않을 경우, 오히려 기업의 도산을 초래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국가가 幼稚産業의 발전을 위해 체제전환 초기 적절한 보호무역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14) 사회주의 국가의 財貨價格은 국가가 여러모로 개입하여 형성시킨 가격이기 때문에 가격 왜곡현상이 심하다. 국내생산가격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국제시장에서는 싸게 판매하는 경우와 國內生産價格이 싼데도 불구하고 국제시장에서 비싸게 구입해 오는 경우가 많다.

Ⅲ. 體制轉換의 方法과 事例

1. 體制轉換의 方法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어떤 방법을 통해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로 전환시킬 것인가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다음의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하나는 급진적으로 전환시키는 방법, 즉 충격요법적인 방법(동독의 경우)이며 다른 하나는 점진적으로 변화시키는 방법(헝가리 등 동유럽국가의 일부)이다.

衝擊療法(Schocktherapie)的 방법이란 "시장경제질서와 자유민주주의적인 정치질서 수립에 필요한 주요 기본정책들이 한꺼번에 내려지고 동시에 시행됨으로써 사회주의체제가 전환되는 것"을 의미한다.[15]

이에 반해 漸進的인 방법(Gradualismus)은 중앙계획경제가 단계적인 개혁을 통해 체제전환을 이룩하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 사회주의 체제의 경제·사회체제적 기초(예를 들어 中央執權化, 중앙통제계획, 국유재산권, 대외경제의 獨占)가 장기간에 걸쳐 변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충격요법적인 방법의 전형적인 사례는 동독의 체제전환에서, 점진적인 방법은 헝가리의 체제전환에서 찾을 수 있다.[16]

이 두가지 방법중 어느 것을 선택하는 것이 體制轉換에 성공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둘 다 확실한 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동독의 체제전환은 동서독 통일 당시 주어졌던 정치·사회적인 환경에 의해 급진적인 전환

15) Uwe Jens, 'Schocktherapie oder Gradualismus," HWWA-Wirtschafts-forschung, *Wirtschaftsdienst* 1993/Ⅲ, (Hamburg : 1993) p.159.

16) Karl-Heinz Kratz · H.-Jorg Thieme "Abbau von Transformationshemmnissen : Ursachen, Formen und Planierungsstrategien," Karl-Heinz Kratz, · H.-Jorg Thieme(ed.), *Transformationsprozessen in sozialistischen Wirtschaftssystemen : Ursachen, Konzepte, Instrumente* (Heidelberg : 1991) p.411ff.

을 이루었으나, 바로 그 때문에 통일후 많은 後遺症을 겪고 있으며, 舊蘇聯을 비롯한 동유럽의 일부국가들은 점진적인 체제전환을 시도하고 있지만 아직 이렇다할 성공을 거두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어느 방법을 택하든지 체제전환을 통해 시장경제의 기능이 최대한 빠르게 발휘될 수 있도록 하며 체제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사회적인 부담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것이 두 방법 모두가 지향하는 공통된 목표이다. 시장경제기능이 효율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시장경제제도를 통한 經濟成長과 함께 물가안정 및 완전고용과 國際收支 균형을 이루려 하는 것이며, 경제·사회적인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것은 체제전환의 목표를 최소한의 재정적인 부담과 사회적 費用을 통해 달성하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가. 衝擊療法的 體制轉換

체제전환의 방법 중 충격요법적인 전환을 택해야 한다는 주장은 Jeffrey Sachs을 비롯한 여러 학자들[16]에 의해 제기되고 있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근거에서 출발하고 있다.

첫째, 한 나라의 경제는 經濟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와 부문들이 상호 유기적으로 結合·運用되고 있는데, 체제전환 과정에 있어서 두가지 상이한 체제적 原理가 서로 병존하거나 혼합된 형태로 존재할 경우, 경제체제적 기능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경제가 오히려 더 不安定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 체제에서 다른 체제로의 전환은 충격요법적 전환을 통해 全分野에 걸쳐 동시에 실시되어야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

17) Jeffrey D. Sachs, "Crossing the Valley of Tears in East European Reform," in : Challenge Sep.·Oct. 1991. J. Sachs외 대표적인 학자로는 Dieter Lösch,·Horst Siebert, Holger Schmiedling, Hans-Eckart Scharrer 및 Rüdiger Pohl이 있으며, 내용에 대해서는 Hans-Eckart Scharrer, "Schocktherapie statt Gradualismus," in : HWWA, *Wirtschaftsdienst* (1990/II), pp.75~77 및 Dieter Lösch, "Der Weg zur Marktwirtschaft : Eine anwendungsbezogene Theorie der Systemtrans-formation," in : HWWA, *Wirtschaftsdienst* (1992/VII)을 참조.

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전면적인 價格自由化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가격 자유화를 개별적으로 서서히 진행시킬 경우, 예를 들어 원자재 및 반제품 가격은 묶어 놓고 최종생산물 가격만을 개방시킬 경우, 가격메카니즘은 개별가격을 총체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체가격 체계가 競爭的으로 형성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급진적 체제전환론자들은 1948년 서독의 貨幣改革을 예로 들어 충격요법적 價格改革이 체제전환으로 성공하였던 事例로 제시하고 있다. 이들은 그 당시 화폐개혁을 통해 집세나 일부 생필품의 가격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가격이 한꺼번에 자유화되었기 때문에 단기간에 걸쳐 생산의 급격한 증가를 가져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리고 구소련 및 동유럽 국가가 지난 수년간 사회주의의 體制變革을 시도하고 있으나, 가격개혁을 점진적으로 실시하였기 때문에 체제전환에 실패하고 있는 것을 그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례로 지적하고 있다.[18]

둘째, 급진적 체제전환론자들은 경제체제전환에 있어 점진적인 전환이 가지고 있는 발상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다. 즉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 나라의 경제는 생산의 각 단계와 부문이 有機的이며 依存的으로 결합되어 이루어지는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경제체제를 점진적으로 전환시켜 나가려고 하는 것은 마치 거대한 기계설비 가운데 하나의 톱니바퀴만 돌리고 나머지 전체 기계는 서 있게 하는 것과 같으므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착상이라는 것이다.[19] 따라서 사회주의 경제가 市場經濟的 기능을 지닌 체제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價格, 所有權 및 對外貿易分野가 동시에 자유화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對外經濟分野와 관련하여 화폐의 兌換性이 일시에 보장될 수 있어야만 해외로부터 소비재나 투자재 및 용역의 이전이 자유로우며, 이를 통한 기술과 해외저축의 유입도 가능할 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발전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

18) Dieter Lösch, *op cit.*

19) Heiner Flassbeck, Wolfgang Scherement, *Economic Aspects of German Unification*, (Berlin : 1992) p.5f.

그러나 점진적인 전환의 경우에는 이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체제전환의 基本目標를 달성할 수 없으며, 궁극적으로 경제혼란에 봉착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20]

셋째, 체제전환의 시간이 길수록 상품생산을 위한 각 부가가치 단계별 원자재와 부품조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각 생산단계별 또는 산업분야별 유기적인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勞動生産性의 증대를 가져올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所得向上도 기대하기 어려우며 산업의 전반적인 구조조정도 기대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산업구조조정이 불가능할 경우 경제구조의 실질적인 개편은 늦어질 수 밖에 없으며, 이것이 다시 사회적인 不滿要因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넷째, 체제전환이 급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점진적으로 시도될 경우에는 체제전환을 시도하는 정부가 어려움에 봉착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즉 주민들로 하여금 체제전환에 대한 신뢰성을 상실케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舊體制가 維持되고 있는 限, 체제전환에 대한 저항요인이 작용하여 체제전환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될 수 있는 점도 들고 있다. 다시 말해, 점진적인 전환을 시도할 경우, 전환을 시도해 나가는 과정에서 각 분야의 既得權者들의 반발을 유발하고, 체제전환을 의도적으로 기피하는 현상을 초래케 함으로써, 체제전환 본연의 목표달성이 不可能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나. 漸進的 體制轉換

이에 반해 체제전환에 있어서 점진적인 방법을 선호하는 입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20]

첫째, 체제전환을 위해서는 가격체제 改革, 투자의 自由, 해외무역에 있

20) Jens Uwe, *ibid.*

21) Wolfgang Flic, Jürgen Kromphart 등이 점진적 체제전환을 옹호하고 있다. Wolfgang Flic, 'Devisenholfe statt eiener sofortigen Wahrungsunion," in : HWWA, *Wirtschaftsdienst* (March 1990) 참조.

어서의 國家獨占 解除, 국가재정의 緊縮的 운용, 안정기조에 중점을 둔 중앙은행의 화폐정책, 시장경제적 운용에 입각한 금융체계 수립 등 체제전환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들이 먼저 취해져야 하는데 그와 같은 조치들이 과연 단시간내에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다.[22]

만약, 어느 한 체제의 전환이 경제력에 있어 비슷한 수준에 있는 다른 체제와의 통합을 통해 이루어진다면 급진적 체제전환도 가능할 수 있을 것이나, 산업 경쟁력과 노동생산성의 격차가 큰 두 체제간의 통합일 경우에는 그것이 결코 용이하지 않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통합 이후에는 두 체제의 기존산업들이 서로 競爭상태에 설 수 밖에 없는데, 이 경우 야기되는 경제·사회적인 부담은 막대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그로 인한 부작용이 사회 전체적인 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체제통합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상당기간 동안 과도기를 두는 점진적인 統合이 유리하다고 보는 것이다.

더구나 체제전환이 두 체제간의 통합에 따른 결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사회주의 체제가 자력으로 체제를 전환시켜야 할 경우,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만 체제전환이 비교적 평탄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며, 전환과정에서 비록 시행착오를 겪더라도 그 부담을 크게 輕減시켜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입장은 체제가 전환되는 과정과 체제전환 조치가 같은 속도로 움직여 나가야 한다는 인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둘째, 점진적 체제전환의 경우만이 체제전환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부작용을 극소화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급진적인 체제전환이 아무리 큰 경제적 效率性을 가져온다고 해도 그것이 사회적으로 큰 부작용을 수반한다면 급진적인 체제전환의 당위성은 상실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급진적인 전환을 시도할 경우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사회·경제적 부작용을 점진적 체제전환론자들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설명하고 있다: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가격체계의 왜곡으로 만성적인 需要超過現象이 나

22) Rüdiger Pohl, Das Preissystem ist der erste Schritt zur Währungsunion, in : HWWA, *Wirtschaftsdienst* (1990/II), p.72f.

타나고 있다. 물가는 국가 통제하에 있기 때문에 상승할 수 없으며, 화폐량(소득의 총액)은 공급되는 財貨의 總量보다 초과해 있기 때문에 구매력이 항상 초과되어 있는 상태이다. 그리고 대외무역은 개방되어 있지 않아 수요를 해외로부터 충족시킬 수도 없는 상태이다. 화폐량은 재화의 공급량보다 훨씬 많아 인플레이션 경향은 아주 높으나 물가통제로 인하여 일어나지 않고 있다. 즉 억제된 인플레이션(repressed inflation)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자원의 소비와 분배는 극도로 비효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만약 가격 자유화가 일시에 실시될 경우, 소비자들의 화폐지출에 비해 재화 供給이 크게 부족하므로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物價上昇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물가상승은 실질소득의 감소를 가져와 임금상승을 유발하게 되며, 임금상승은 기업이윤을 저하시켜 투자의욕을 상실케 한다.

인플레이션 현상은 대외무역에서 자국의 통화가치를 떨어뜨려 화폐를 평가절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며, 이는 다시 국내물가를 자극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이와 같은 현상을 단절하기 위해 정부가 통화를 긴축적으로 운용한다면,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 失業者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점진적 체제전환 옹호론자들의 주장은 체제전환의 效率性과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점진적 가격개혁과 함께 체제의 상이한 요소들을 적절히 융합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것을 주장하고 있다.

셋째, 體制轉換은 경제체제 전환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정치 및 사회체제 전환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市場經濟를 도입·운용하는 것은 경제제도적 조치의 적용을 통해 가능하나, 시장경제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범사회적인 전환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시장경제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논리는 經濟活動에 참여하고 있는 각 經濟主體의 자유로운 경쟁과 능력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을 수용하려는 의식이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자유경쟁질서가 유지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그러한 競爭意識이 형성되는 데 있어서도 상당한 시간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넷째, 계획경제체제의 청산이나 소유권을 실제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전문인력이 필요한데, 이의 양성을 위해서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므로 점진적인 체제전환이 합리적이라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

2. 體制轉換 事例

가. 東獨의 體制轉換

1989년 중반 동독의 민주화열기가 고조되면서 동독주민들의 통일요구가 가시화 되었을 때, 서독은 점진적인 통일안(Zehn-Punkte-Plan)[23]을 마련,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동서독 통일을 이루려고 하였으나, 실제 통합은 정치적인 결정에 의해 급진적으로 이루어질 수 밖에 없었다. 급진적인 통합조치를 취한 배경에는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베를린 장벽의 붕괴 이후 서독지역으로 넘어오는 동독 이주민의 급격한 증가를 막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24] 동독의 체제전환을 위해서도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었다.[25] 그러나 그 보다 더 중요하게 작용했던

23) Verlag für Internationale Politik, *Europa-Archiv* (Bonn : 1990) pp.222~228. 10개 항목의 統一案은 다음과 같다. ① 동독국민에 대한 通貨供給 및 양독간의 旅行自由化, ② 양독간 철도, 전화망 가설, ③ 동독내 자유, 평등, 비밀선거 실시 및 공산당의 권력독점 지양, ④ 동서독 사회단체간 교류확대, ⑤ 동서독간 연방체제구성, ⑥ 동서독관계 개선은 유럽의 평화질서 유지와 共同步調, ⑦ 유럽공동체 국가간의 유대강화 및 동독의 유럽공동체 참여, ⑧ 유럽안전보장회의(CSCE)의 活動強化 ⑨ 동서유럽 및 양독간의 신속한 군축조치, ⑩ 독일인의 자결권에 따른 統一 등이다.

24) Flassbeck은 화폐통합을 통해 동독주민의 서독으로의 移住를 멈추게 할 수 있다는 믿음은 통독과정에서 서독이 내린 결정적인 잘못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 이유로 Flassbeck은 화폐통합 조치에도 불구하고 통합 이후 東獨지역에 머무르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서독으로 이주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H. Flassbeck, *op. cit.* p.36. 사실 동독지역에서 서독으로의 이주자는 통일전후 연도인 1989년과 1990년에 가장 많아, 이 두해 동안 만 해도 총 80만명에 달했다. 1991년 이후부터는 減少趨勢를 보였으나 1991년과 1992년 동안에도 37만명이라는 대규모의 移住民이 발생했다. 이주민 추이에 대해서는 Statistisches Bundesamt, *Zur wirtscahftlichen und sozialen Lage in den neuen Bundeslandern*, 1993/III (1993.11) p.8 참조.

25) 그 외에도 많은 정치적인 理由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이에 대해서는 民族統一硏究院, 「統一獨逸의 分野別 實態 硏究」, 硏究報告書 92-01 (서울 : 民族統一硏究院, 1992) pp.23~24 참조.

요인은 동독주민들의 급진적인 經濟 및 通貨統合에 대한 요구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당시 동독주민들은 동서독간의 장벽은 무너졌으나 통일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인지의 여부가 불확실하였기 때문에 하루에도 수천명씩 서독으로 移住하였다. 동독지역에 남아 있는 주민들은 동독이 서독과 같은 경제적인 부를 누리기 위해서는 동독의 화폐가 즉각 서독마르크에 통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였으며, 이의 실천을 서독정부에 要求하였다. 서독정부 또한 급진적 통합이 초래할 副作用에 대비하기 보다는 통일과업의 완성이라는 정치적인 목적에 더 치중한 나머지 동독주민의 요구를 수용하는 방법으로 통합을 단행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동독의 화폐는 서독화폐로 대치되고, 동독경제는 충격요법적인 방법을 통해 서독의 市場經濟體制로 전환하는 형태를 취하게 되었다.

동독지역의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과 동서독간 經濟單一化를 위해 동서독정부는 1990년 5월 18일자로 화폐 및 경제통합을 체결하였다(동년 7월 1일자로 발효). 이로써 동독에는 사회적 시장경제체제가 곧바로 전 부문에 걸쳐 도입되었으며,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에너지, 교통, 수도요금, 집세 등을 제외하고는 전 物品의 價格이 自由化되었다. 국내시장가격의 자유화와 더불어 대외경제관계도 완전히 개방되어 상품, 용역 및 자본거래가 서독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게 되었다.

제1차 統合條約의 체결 이후 모든 생산수단의 사적소유가 보장되고 생산수단의 거래는 물론 기업의 생산, 투자 및 영업활동이 완전히 자유화되었다.

동독경제에 충격요법이 취해짐으로써 얻을 수 있었던 효과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첫째, 1990년 7월 1일 동서독간 통화통합이 실시된 이후 동독의 마르크화가 폐지되고 서독 마르크화가 동독지역의 公式貨幣로 등장, 구매력이 강한 화폐로 통용됨으로써 동독의 주민들은 그들이 가진 생산재나 소비재에 대한 수요를 서독의 국내시장을 통하거나 해외시장으로부터 충족시킬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원자재 부족으로 인한 生産萎縮을 해소시켜 만성적인 공급부족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시적 변화를 가져왔다.

둘째, 동독 급료가 경쟁에 입각한 노동시장의 수급에 따라 결정될 수 있었기 때문에 동독 산업이 노동생산성을 가져오게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으며 이것이 경제전반에 걸쳐 투자를 촉진시킬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였다.

셋째, 동독의 사회주의 경제체제가 서독의 시장경제체제에 의해 변화(위로부터 아래로의 전환)되었기 때문에 동서독 경제가 서로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효과를 가지게 되었다. 서독의 각종 金融 및 貨幣政策은 동독지역에 그대로 적용되었으며 동독지역의 경제변화와 발전은 서독경제에도 그대로 連結되는 效果를 가져왔다. 다시 말해 동독 경제는 체제전환 과정에서 동유럽 여러나라가 스스로 사회주의 체제의 구조적인 전환(밑으로 부터 위로의 전환)에 따라 겪어야 하는 財政政策이나 금융 및 화폐정책의 시행착오나 '실험'을 거칠 필요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제전환과 관련된 정책결정, 그 중에서도 특히 1 : 1의 화폐가치교환 결정은 모든 부문에서 실제 동독이 지녔던 경제적 가치보다 높게 평가되는 效果를 나타냈다. 그리고 동독경제가 변화된 상황에 스스로 適應하는 기회를 갖지 못하고 경제 구조와 질서가 위로부터 변화를 강요하는 형태를 띠게 됨으로써 많은 부작용을 초래하였다. 이의 대표적인 현상을 다음 몇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구동독 기업의 생산비용을 상승시킴으로써 기업의 산업경쟁력을 약화시키고, 대규모 倒産을 초래하게 하였다. 기업도산은 대량실업을 유발하였으며 실업자들로 하여금 일자리를 찾아 구서독지역으로 移住하게 하는 구실을 안겨주었다.

둘째, 동독시장이 외부에 대해 갑작스럽게 개방됨으로써 동독경제가 실제보다 급격하게 評價切上되고 임금의 일시적 상승[26]에 따른 생산비의 상승, 가격자유화로 인한 국가보조금 폐지 등이 물가와 연결됨으로써 제품가격이 크게 상승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26) 동독지역 임금은 부문별로 약간씩 차이는 있었으나 대부분 1994년까지 서독수준에 이르도록 1990년 7월~8월 새로 결성된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에서 합의되었다. 금융부문과 같은 경우는 1992년까지 서독임금수준의 100%를 지급받는 데 합의하였다.

셋째, 동독주민의 소득에 대한 1 : 1의 교환과 단체협상을 통한 동독지역 노동자의 임금상승 등은 동독주민 소득을 증대시키는 구실을 하였으나, 증대된 소득이 오히려 서독제품에 대한 소비로 집중되어 나타남으로써 동독경제를 침체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동독 소비자들의 수요는 한꺼번에 서독제품에 集中되어, 감자와 같은 농산물까지도 서독 것을 선호하는 사태로 나타났었다. 동독제품에 대한 수요감소는 다시 생산감소로 이어졌고, 생산감소는 실업자를 발생시켰으며 실업자의 증가는 범사회적인 문제로까지 발전하였던 것이다.

넷째, 통독이후 해외시장에서 교역자유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기존의 보조금이 폐지되었으며 이로 인해 제품가격이 크게 상승하였다. 동독제품 가격의 상승은 동유럽시장의 수요가 대폭 감소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27] 수요감소는 다시 기업의 操業을 중단시키는 상황을 초래했다.

동독의 체제전환에 따라 파생된 경제적 문제는 개별 동독지역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현재의 상황으로 보아 시간적인 격차를 가지고 극복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28] 그러나 구동독지역이 사회전체적인 측면에서 구서독과 同質化되기까지에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며, 극복해야 할 心理的·社會的인 장벽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독의 체제전환은 총체적으로 말해 그 방법과 형식면에서는 큰 成果를 얻은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당면한 社會的·心理的인 문제는 그 해결을 위해 지불해야 할 부담이 비록 크지만, 독일이 실질적인 통합을 위해 겪어야 하는 過程의 일부로 인식된다.

나. 헝가리의 體制轉換

27) 동독수출의 70% 이상이 海外市場 경쟁가격이 아닌 동유럽 국가들과의 쌍방계약에 의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서방시장이 요구하는 品質改善이나 技術革新, 原價節減 등의 노력이 없이도 교역이 가능하였다. 또한 통독이전 구동독 정부는 코메콘 국가와의 交易, 특히 수출의 경우에 있어서는 큰 규모의 補助金을 기업에 제공하였다.

28) 동서독 경제의 최근상황과 전망에 대해서는 DIW(Deutsches Institut für Wirtschaftsforschung), *Wochenbericht*, 16-17/94, (Berlin : 1994)을 참조.

1989년 이후 동유럽국가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개혁과 체제전환은 사회주의에 대한 전면적이고도 확실한 否定을 의미하는 혁명이기는 하나, 체제전환의 形態와 方法은 국가에 따라 각각 다르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유형의 체제전환이라고 한마디로 특징 지울수 없다.[29] 다만, 헝가리는 동유럽국가중 가장 먼저 시장경제를 받아들인 나라로서 비교적 오랜 시간에 걸쳐 체제전환을 추진하여 비교적 큰 성공을 거두고 있는 나라라고 할 수 있다.

헝가리의 개혁은 장기적인 체제전환의 計劃에 의해 意圖的으로 추진하여 온 것이라기 보다는 정치적이면서도 역사적인 산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헝가리는 이미 1968년에 들어서면서 「신경제메카니즘(New Economic Mechanism)」이라는 이름의 경제개혁조치를 도입하여 가격결정을 행정관리가격체제로 부터 어느 정도 자유화하는 데 성공하였다.[30] 그리고 價格自由化의 과정을 貿易의 자유화와 마찬가지로 급격하게 진행시키지 않았다.

기업 및 금융부문의 개혁도 매우 완만한 방법을 사용하여 추진하였으며 賃金決定에 있어서도 1968년의 개혁을 통해 總額을 규제하는 상한선을 폐지하고 임금인상액에 대한 누진적인 과세표준을 설정하는 간접적 規制方式을 택하였다.

---

29) 동유럽의 국가 중 동독의 경우가 가장 급진적인 體制轉換의 형태를 취했던 것으로 본다면 체코의 경우는 비교적 과감한 체제전환의 형태를 띠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불가리아를 비롯한 루마니아, 유고 등은 體制改革과 함께 그 방향이 불확실하다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이들 국가들도 市場經濟體制로 전환을 꾀하고 있으나 자원이 시장을 통해 배분될 수 있는 제반 조건들이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 체제전환의 본격적인 실현이 가시화되지 않고 있다. 1980년대 후반부터 공산주의 정권아래에서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이나마 사회주의 요소가 바뀐 적이 있는 폴란드는 충격요법적인 형태를 통한 체제전환의 형태로 분류될 수 있다. 체코와는 달리 1993년 1월 1일부터 聯邦을 해체하고 獨立國家로 분리된 슬로바키아의 경우에는 점진적인 改革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Judit Habuda, "Wirtschaftliche Entwicklung und Perspektiven in Ungarn, Polen und in der CSFR," ifo-Institut Witschaftsforschung, *IFO Schnelldienst* 7/1992 (München : 1992), pp.17~22.

30) 이제민, "헝가리의 경제구조와 경제정책 -경제개혁을 중심으로-", 김달중 편, 「헝가리·유고슬라비아 : 정치·경제·사회구조와 정책」(서울 : 법문사, 1989) pp.68~73.

직장선택과 도시로의 移住 自由化와 함께 投資決定이나 投資財源의 확보에 있어서도 기업이 정부보다 더 큰 재량권을 갖도록 하였으며, 기업의 經營管理體制에 있어서도 기업내부의 의사결정을 중시하여 필요한 기구를 다양화하였다.

기업성과를 기업이윤을 기준으로 판단하였으며, 경영자의 보너스 지급여부를 기업이윤과 연결시키고 근로자에게도 기업이윤에 대한 참여권을 보장하였다. 산업에 있어서는 농업부문과 상공업부문에 非國有部門을 두고 정부가 공식적으로 私的 經濟部門을 인정하였다.

헝가리의 농업은 사적 경제부문과 관련, 경제개혁이 가장 성공적으로 추진된 부문으로 평가되고 있다. 농기업이 소유하는 형태의 하나인 국유농장에 대한 국가 통제를 크게 약화시켰으며, 기타 협동농장과 사유농장의 운영과 관련하여 물질적인 誘引을 강화시키고 생산물의 임의처분을 가능하게 하였다. 농산물 판매결과로 얻는 利潤도 자유재량에 의해 처분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공식 사경제 부문에 속한 기업으로는 수공업, 소규모상업, 건설하청업, 상점, 식당 등이 있었는데 정부는 이들 기업의 인가요건을 크게 완화시키고 이들 기업간에 공동으로 合作企業을 설립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이상과 같은 신경제메카니즘의 도입 이후 헝가리의 사경제영역은 자못 활기를 띠고 서서히 확대되기 시작하였으나, 197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서부터는 경제개혁 방향에 대한 一貫性을 갖지 못해 사경제영역이 한 때 위축되는 현상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1980년대에 들어와 제2차 경제개발조치가 시행되면서부터는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하였다. 특히 사적 경제활동을 위한 새로운 조직형태가 개발되면서 사경제영역은 크게 확대되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소위 「經濟勞動共同體(wirtschaftliche Arbeitsgenmeinschaft)」였다. 이는 하나의 독자적인 경제단위로 생산 및 서비스분야에서 자율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한 조직체였다. 그러나 경제전체적으로 볼 때 사경제영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그리 크지 않았다.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실시한 헝가리 경제개혁의 특징은 生産手段의 사회화를 고수하면서도 자원배분에 있어서는 가격기구(price mecha-

nism)의 장점을 최대한도로 살리는 「시장사회주의」의 형태[31]를 취하는 것이었다.[32]

기업의 경영관리는 근로자의 참여속에 의사결정이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 經濟體制를 유지하면서도, 실제적인 개혁이 이루어진 80년대 후반까지는 사회주의 명령경제의 틀을 유지하였다.

기업의 私有化와 관련, 헝가리 체제전환의 특징은 80년대초부터 부분적으로 사기업 설립을 허용하는 것을 시작으로 서방기업에 의해 많은 투자가 이루어진 점과 사유화의 방법이 바우처(voucher)나 쿠폰(coupon)을 발행하여 매각하는 체코와는 달리 有償賣却制度를 채택함으로써 국가가 직접 사유화에 참여하는 中央集中的인 사유화방법을 止揚한 점이라고 할 수 있다.

1990년에는 기업사유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유재산관리공사(State Property Agency : SPA)」를 설립하였다. 이 기구를 통해 기업 사유화에 外國投資家들을 참여시키는 데는 성공하였으나 국내투자가들을 끌어들이는 데에는 금융지원 결여 등으로 인해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체제전환과 함께 헝가리 경제 전반에 나타났던 현상은 공업생산량의 현저한 감소, 급격한 물가상승, 실업률의 급격한 증가 등과 같이 동독의 체제전환에서 보여준 체제전환의 副作用과 같은 것을 알수있다.

적자기업의 도산에 따른 실업은 가장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었으며, 가격자유화 및 정부보조금의 削減 등으로 인한 물가폭등과 생활수준하락, 원자재조달난으로 인한 工業生産의 저하, 경기후퇴, 빈부격차의 확대들이 사회불안정을 야기시켰다. 거기에다 코메콘의 붕괴와 통독에 따른 구동독시장의 상실, 구소련경제의 파탄에 따른 대소수출의 감소등이 經濟難을 더욱 가중시켰다.

---

31) 「市場社會主義」는 랑게에서 비롯된 경제체제의 모형으로서 일반적으로 유고를 대상으로 논하는 경우가 많다. 유고 市場社會主義의 특징은 생산수단이 名目上으로는 국가소유지만 노동자가 그 사용권(use right)과 소득권(income right)을 갖고 자주적으로 경영하는 형태라고 할 수 있다. O. Lange & F.M. Tayler, *On the Economic Theory of Socialism* (Mineapolis : Unversity of Minnesota Press, 1938).

32) 이 모델의 핵심은 생산, 분배, 투자문제를 보다 많은 정도로 시장기구에 맡긴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가와 계획당국은 여전히 핵심적인 권한을 유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헝가리의 체제전환은 동유럽 국가 중 비교적 큰 성과를 거둔 성공적인 사례로 지적되고 있다.[33]

1992년에는 1989년 대비 평균 30~40%의 工業生産率 저하를 기록하였으나 점차 안정을 되 찾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物價上昇率도 년 20% 정도로 크게 완화되었으며[34] 수출부문에서 있어서도 對先進國 수출 증가에 힘입어 규모면에서 폴란드나 체코 등에 비해 월등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지난 1992년 한해 1억8천만 달러의 貿易黑字를 기록하였으며, 1992년 말 현재 50억달러가 넘는 外換 보유고를 갖게 되었다.[35] 특히 EC(현재의 EU)와의 준회원국 協定締結에 이어 EFTA(유럽자유무역연합) 및 체코 폴란드와의 자유무역협정을 통한 경제통합을 추진하고 있어 그 성과가 머지않아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헝가리의 체제전환에서 체제전환의 성공을 위해 필수적인 조치로 인식되는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헝가리는 비록 그와 같은 과정을 거치지는 못하였지만, 收益性이 없는 기업은 조속히 폐쇄시킴으로써 기업 사유화를 가능한 한 빨리 완료시키는 것이다.[36]

---

33) Ifo Institut Wirtschaftsforschung, *op. cit.*

34) 1990년~1991년 동구권은 전체적으로 생산이 평균 16.3% 감소했었다. 이 중에서도 특히 루마니아는 24.6%, 불가리아 22.5%, 폴란드 17.3%로서 平均生産減少보다 훨씬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인플레는 동유럽국가 거의 모두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는데, 불가리아 1,400%, 폴란드 1,343%, 구소련 285%, 구체코슬로바키아 79%, 항가리가 71%를 나타내었었다. 실업률도 거의 모든 국가가 10%이상을 기록하였으며 수출도 20%이상 감소하였다. Benedikt Thanner, "Wirtschafrsreformen in Mittel- und Osteuropa," IFO-Institut für Wirtschaftsforschung, *IFO-Schnelldienst* 23/92, pp.13ff.

35) 主要 輸出 對象國은 독일과 이탈리아, 오스트리아이며 이들 3국의 대 EC 수출물량의 약 70%는 독일과 이탈리아가 흡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가지 주목할 만한 현상은 그동안 두절되다시피 되어버린 對獨立國家聯合의 무역이 3국간 貿易形態로 차츰 되살아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36) Judit Habuda · Michael B. Kost, "Schwierige Phase der Privatisierung in Ungarn : Rettung der Unternehmen durch Sanierung?" IFO-Institut für Wirtschaftsforschung, *IFO-Schnelldienst* 25-26/92, pp.20ff.

앞서 언급하였듯이 헝가리는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을 위해 일찍부터 價格自由化를 실시하였으며, 체제개혁이 본격화되었을 80년대 말부터는 계약체결의 자유화 및 대외무역의 개방을 의미하는 무역허가제의 철폐를 단행하였다. 거시경제적인 안정을 위해서 補助金의 대폭적인 삭감과 함께 환율의 평가절하를 실시하였으며, 실질적인 금리제도를 도입하고 국내통화량 증대에 대한 억제책도 병행 실시하였다. 그러나 사적부문으로의 소유권 이전을 뜻하는 국가기업의 사유화는 신속히 진행되지 못하였다. 國營産業部門이 지난 40여년간 스탈린식 발전모델에 의해 과도하게 팽창되어 있었기 때문에 산업구조재조정과 함께 상당 규모의 축소작업이 요구되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기업을 운영하고 있었던 기업관리자 및 관료들이 改革에 저항하는 세력으로 등장하여 경제자유화 이후에도 사회주의 체제하에서 행했던 기존의 行動樣式을 존속시켰다. 즉 자의적이며 자기 이익추구적인 행동만을 취했다.

기업의 신규설립이 대규모로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상업 및 무역부문에 종사하는 기업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工業生産量의 하락을 막는 데 효율적이지 못했었다.

둘째, 헝가리의 체제전환이 점진적인 전환형태를 띠면서도 경제개혁 과정이 너무 오랫동안 실시되었기 때문에 안정적이고 일관성 있는 개혁주도 세력이 형성되지 못했었다. 따라서 체제전환의 경제적 效率性을 제고시키지 못하였다.

셋째, 위와 같은 체제전환상의 제약에도 불구하고 동유럽 국가들 중에서 가장 큰 체제전환 성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경제활동을 위한 하부조직이 가장 잘 발달되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여기에는 민간기업이 출현할 수 있는 상업거래규정과 회사법의 整備 등이 주효했다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 같은 제도적 정비가 외국투자의 유치를 활성화시켰던 요인으로 작용했다.

헝가리의 체제전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점진적인 체제전환이 급진적인 체제전환에 비해 경제적 성과가 비록 더디게 나타날 수는 있으나 성과의 정도면에서는 急進的인 轉換에 뒤지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오히려

급진적 개혁일수록 개혁의 효율성이 증대되나, 사회적인 부담은 오히려 커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헝가리와 같은 체제전환이 점진적인 체제전환을 추진하는 모든 국가에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을 看過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중요한 것은 급진적이든, 점진적이든 각 국가가 처해 있는 상황에 상응한 체제전환을 추진하되, 체계적이면서 주도 면밀하게 실행에 옮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이다.

다. 西獨의 貨幣改革

1929년 10월 24일 뉴욕 증권시장의 붕괴로 시작된 세계경제공황은 실업자를 대폭적으로 증가시키면서 독일경제를 극도의 침체속으로 빠져들게 하였다. 독일경제의 대혼란은 마침내 히틀러를 등장시키는 빌미를 제공함으로써 시장경제와 議會民主主義가 중단되고,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 일당독재와 중앙통제체제의 지배를 받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후 독일은 1949년 독일 연방공화국이 출범하기 전까지 독일은 연합군의 점령하에 있었다. 연합군 점령 기간 동안 서방 전승국에 의한 점령지역내에서의 貨幣改革이 초대 경제장관이었던 에르하르트(Ludwig Erhardt)에 의해 단행(1948년)되었다. 사회적 시장경제체제가 도입되고 사회 전부문에 걸친 급진적 체제전환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에르하르트에 의한 서독의 體制轉換은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4단계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졌다고 할수 있다.[37]

첫째, 기능면에서 독립적인 중앙은행을 먼저 설립하여 통화가치를 안정시켰다.

---

37) Dieter Lösch, "Marktwirtschaft für die DDR? Chancen und Probleme der Systemtransformation," HWWA, *Wirtschaftsdienst*, 1993/X, pp.22~29, Erhard의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에 대해서는 Rüdiger Altmann und Dieter Erb, "Soziale Marktwirtschaft als gesellschaftliche Ordnungspolitik," Ludwig-Erhard-Stiftung e.V., *Ludwig Erhard und seine Politik* (Stuttgart · New York : Gustav Fischer Verlag, 1985) pp.9~26 참조.

둘째, 화폐개혁(1948.6.20)을 단행하여 3천억에 달하는 제국마르크(Reichsmark)의 화폐공급초과량을 제거하여 화폐량을 감축시켰다. 모든 제국마르크는 10분의 1로 평가절하되었으며 저축성 예금의 경우에는 10 : 1의 비율을 적용하고, 이의 50%만을 지불되게 하였다.

셋째,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을 위해 먼저 基礎生必品, 유류, 비료, 철강제품, 임대료 등을 제외한 품목은 모두 가격자유화를 실시하였으며, 임금상승 억제정책도 竝行·推進하였다.

넷째, 대외경제에서의 개방화를 추진하였으나 서독은 이를 한꺼번에 추진하지 않고 몇 단계로 나누어 점진적으로 실시하였다.[38] 먼저 소수국가에 대해서만 개방화 조치를 단행하고, 그 다음으로는 國家數를 확대시키는 방법을 채택하였다.

국제 원자재 가격의 상승(한국전쟁의 영향 등)으로 무역적자폭이 커짐에 따라 해외무역의 자율화 조치를 상당 부분 철회하기까지 하였다.[39] 1949년 말에는 輸入數量制限 조치를 철회하였다. 그 후 미국의 계속적인 관세인하요구에 따라 1950과 1951년에 새로운 관세율을 적용하였다.

1951년 후반들어 서독의 수출이 급격히 증대됨에 따라 대외경제의 개방을 확대 실시하고 1951년 10월 1일 GATT에 가입하였다. 무역의 자유화는 외환거래 규제를 緩和시키는 방향으로 진행시켜 나갔다. 1952년부터 우선 財貨와 用役去來에 대해서만 고정환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마르크화가 태환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 후 시간적인 간격을 두고 자본거래에 대해서도 마르크화가 태환성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같은 개혁조치가 약 4년간에 걸쳐 이루어짐으로써 서독의 경제체제는 시장경제체제로서 완전히 기능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체제전환이 아무 문제점없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체제전환 과정에서 가격수준의 불안정이 장기간 계속되는 상태가 빈번히 발생한다든

38) Dieter Lösch, *op. cit.*, p.23

39) 수입수량 制限措置(Quater System)를 다시 부활시킨 점이라든가 수입에 필요한 외환액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유지시키는 것을 의무화(Bardepot-Pflicht)시켰으며, 輸入許可書(Importlicence)의 發給을 限時的으로 중단시키는 조치까지 취하였다.

가, 실업자수가 증가하거나 국제수지의 적자가 누적되는 등 經濟均衡이 파괴되는 현상이 나타났었다. 이러한 경우 서독은 비교적 짧은 시간내에 國際收支赤字에 대한 제한조치 등을 취함으로써 경제안정을 도모하였다.[40]

서독이 1948년 실시했던 급진적 체제전환 결과적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던 요인은 다음과 같은 데서 찾아볼 수 있다. 첫째, 戰後 서독의 기간산업시설과 생산설비가 비록 파괴되기는 하였으나 독일의 기술과 경쟁력은 유럽국가들 사이에서 최고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41] 둘째, 1948년 당시 서독에는 경쟁시장에 걸맞는 産業構造와 組織을 갖추고, 기업경영 전문가가 독자적인 경영을 해 나가는 수많은 기업체가 존재하였다. 이는 통일전 동독지역에 中央統制를 받는 국영기업집단인 콤비나트가 형성되어 각 분야마다 독점적으로 생산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었던 것과는 달랐다. 따라서 화폐개혁 당시 서독의 전체산업은 어느 정도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 셋째, 전후 서독에는 시장경제를 운용해 나가는 데 있어 필수적인 각종 경제기관 및 단체들이 존재하여 각종 經濟政策을 비롯한 경제질서, 금융체계, 사회보장 등의 법과 제도적인 질서을 구축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여건은 동독이 서독과의 통일에 따라 행정적인 인프라 시설과 기반을 새로이 구축하고, 서독으로부터 지식과 노하우를 이전 받아야 하는 상황과 비교할 때, 체제전환에 있어 훨씬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점들은 체제전환의 효율성을 위해 그와 같은 제반 여건이 먼저 造成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고 하겠다.

---

40) Lösch는 이와 같은 조치가 임기 응변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면 서독의 시장경제 체제가 효율적으로 기능할 수 없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Dieter Lösch, *op. cit.*, p.25.

41) 이와 같은 점에서 볼 때, 당시 경제적 與件은 통독후 구동독 상황보다 훨씬 유리했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구동독 生産設備는 노후화되어 자본량(capital stock)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V. 合理的 體制轉換 方法

사회주의 체제의 시장경제 체제로의 전환은 현재 동유럽을 포함한 여러 나라에서 진행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연구가 미진한 관계로 바람직한 모델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국가들은 모두 제 나름대로의 방법을 동원하여 經濟體制轉換을 추진하고 있기는 하나, 그 과정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이것은 이들 국가들이 처한 역사적 상황과 사회적 조건이 상이할 뿐만 아니라 경제체제의 轉換을 위해 원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이론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42]

이하에서는 앞서 고찰한 내용을 중심으로 사회주의 경제체제가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는 경우, 특히 社會主義 체제가 시장경제체제와 통합함으로써 체제전환을 이루어야 하는 경우를 중심으로, 어떤 과정을 택하는 것이 체제전환에 가장 유리할 것인가를 제시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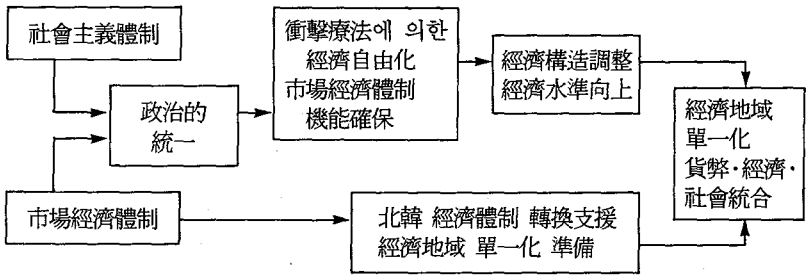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체제전환의 急進, 漸進을 막론하고 양 체제간의 통합이 정치적으로 가시화 된 후, 사회주의 경제체제에 충격을 가해 경제부문의 자유화를 추진하고, 그 다음 일정기간 동안 市場經濟體制로 구조조정이 된후 경제지역 單一化를 이루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도해화 하면 다음과 같다.

---

42) Christian Wartin, "Der schwierige Weg von der sozialistischen Planwirtschaft zur marktwirtschaftlichen Ordnung," J. Matias Graf von der Schuldenburg, Hans-Werner Sinn(ed.), *Theorie der Wirtschaftspolitik, Festschrift zum 75.* Geburtstsag von Hans Moller (Tübingen : 1990), p.28.

도해 : 사회주의 체제의 합리적 전환 과정



이를 정치적 통일이 가시화 된 이후부터 단계별로 나누어 정리하면,[43]

첫번째 단계에는 시장경제로 전환하려는 지역의 경제전반에 걸친 내부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①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과 관련된 法規의 新設이나 變更을 통하여 전환될 경제의 未來像을 분명히 제시하고,[44]

② 국가가 가격결정에 개입하여야 하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경쟁가격이 형성될 수 있도록 기능적인 價格體系를 구축한다. 그러나 기본 소비제품의 가격은 가격자유화 대상에서 제외시켜 일정 기간동안 국가에서 지원하는 형태를 띰으로써 시장가격과 실물가격의 차이를 보전한다. 그 후 소득이 증가하는 데 따라 단계적으로 引上한다.

③ 이윤동기를 부여하고, 기업활동의 극대화를 유도하기 위해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화와 생산수단의 거래 및 처분의 자유화 조치를

43) 이 부분은 동서독 통일과 관련하여 필자가 정리한 시사점에서 많은 부분을 인용하고 있다. 金瑩允·余仁坤·黃炳憙,「統一獨逸의 分野別 實態硏究」(서울 : 民族統一硏究院 1992), pp.366~369 참조.

44) 이와 관련하여 Hedtkamp는 정신적인 면을 크게 강조하고 있다. 체제전환을 위한 確固하고 분명한 意志가 필수적이며 이와 같은 의지를 체제전환을 위한 정신적인 Infrastructure로써 언급하고 있다. G. *Hedtkamp, Probleme beim Übergang von der Planwirtschjaft zur Marktwirtschaft aus theoretischer Sicht*, Wissenschaftliches Kolloqium 5~6. April 1990, München, ifo Institut.

실시한다. 그러나 국가기간산업(선박, 비료, 화학, 자동차, 철강 등)은 건설초기에 요구되는 대규모 자본투자의 필요성과 운용의 효율성을 고려, 일정 기간 동안 國營企業體로 유지하되 시장경제의 원리에 입각한 기업경영형태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④ 시장에의 참여와 이탈, 직업선택과 기업설립 및 영업활동의 자유와 계약체결의 자유를 保障한다.

⑤ 시장경제질서에 기초한 금융제도를 확립한다.

위와 같은 조치들은 되도록이면 짧은 시간 내에 병행하여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체제전환을 위해 효율적임을 체제전환 사례를 통해 인식할 수 있다. 위 첫번째 단계조치가 실시되고 그 효과가 가시화될 경우, 둘째 단계의 조치들을 취한다.

둘째 단계에 있어서는, 시장기능과 가격결정 메카니즘을 확보하고 국제시장에서의 활동을 진작하기 위하여 對外貿易을 자유화한다. 여기에는

① 대외경제부문에 있어 먼저 자본이동의 자유화를 실시한다. 여기에는 동서독의 경우와 같이 화폐가치가 평가절상된 형태의 고정환율제를 도입하기 보다는 購買力 評價에 따른 교환비율이 형성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45]

② 자본이동의 자유화 이후 재화나 용역이 자유롭게 이동될 수 있도록 한다.[46] 이 경우 국외생산에 대한 급격한 수요증가, 이로 인한 국내생산감소와 고용수준의 감소현상이 발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분간 保護貿易 조치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47]

---

45) Walter Eucken, *Grundsätze der Wirtschaftspolitik, 6. Aufl.* (Tübingen : 1952/1990) ; Deutsche Bundesbank, *Die Bilanz des Zahlungsverkehrs der Bundesrepublik*, Monatsbericht (Frankfurta. M. : 1990), p.20.

46) Edwards는 국내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資本市場의 자유화가 재화 및 용역시장의 開放보다 앞서야 함을 역설하고 있다. S. Edwards, *Order of Liberalization of the Balance of Payments : Should the Current Account Be Opended up first?*, The World Bank Staff Working Paper No. 710, 1985.

47) 이에 대해서는 *幼稚産業*의 발전을 위한 보호관세를 주창한 Friedrich List와의 견해와 일치한다. Friedrich List, *Das nationale System der politischen okonomie* (First Publication 1841), (Tübingen : 1959).

세번째 단계에서는 양 지역간의 경제단일화 이루고 이를 위한 보완적 조치를 시행한다. 이와 관련된 조치로는,

① 화폐, 금융, 국가재정에 관한 정책을 추진하여 실물경제시장과 화폐시장이 균형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며, 경제단일화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인플레이션을 염두에 두어 통화를 緊縮的으로 운용, 통화가치의 안정을 기한다.

② 각종 세제를 통하여 기업의 영업활동을 지원하고,

③ 사회보장제도의 구축, 사회간접시설의 확충 및 개선, 소득분배구조의 개선, 독점기업의 관리, 각종 경제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단체 및 연구소 설립, 기업의 합리화와 생산성 향상을 위한 활동 및 인력개발 지원, 市場失敗(market failure)에 대한 보완적 조치를 강구한다. 더 나아가 각종 公共材(public goods, 예 : 교육, 신문방송, 위생, 문화 등과 관련되는 기관의 설립과 행사)를 확충하여 시장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세번째 단계를 원만히 추진시키기 위해서는 두번째 단계를 거친 후 양지역간 과도기적인 계약공동(Vertragsgemeinschaft)[48]를 이루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후 양지역은 계약공동체를 존속하면서 적당한 시점에서 통화·경제·사회통합을 이룸으로써 체제 단일화를 완성할 수 있다.

48) 契約共同體는 동서독이 통일되기 전 동독수상 모드로우(Modrow)가 동서독 통합방안의 하나로 제안한 것이 시초이다. 동서독의 계약공동체는 동독이 서독과의 통일을 위해 동독 憲法을 고쳐 사회주의 이념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私有財産制의 도입과 동시에 외국인의 企業參與, 勞動者들의 團結과 파업권부여, 직장폐쇄 금지, 병역의무의 민간병무(Zivildienst) 허용, 자유, 民主選擧 保障, 민주화 추진을 통해 서독과의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 과도기의 헌법적 기반을 만들고 이 기간 동안 서독과 共同體를 형성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은 案은 동독의 평화혁명을 주도했던 改革勢力(Reformflügel)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Der Verfassungsentwurf des Runden Tisches, "Kurzkommentare von Autoren und Beratern," B. Guggenberger · T. Stein(ed.), *Die Verfassungsdiskussion im Jahre der deutschen Einheit*, 1991 참조.

Ⅵ. 北韓의 體制轉換

1. 體制轉換 方法과 轉換上의 問題點

북한의 경제체제 전환도 위에서 제시한 체제전환 방법을 準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즉 남북한은 정치적인 통일이 이루어지고 난 후 완전한 경제·사회 및 화폐통합을 이루기 전, 위에서 언급한 두번째 단계까지는 경제적으로 각각 독립된 지역을 확보·유지할 필요가 있다.

그 후 남북한 경제가 어느 정도 同質性을 확보한 이후, 남북한 경제지역 단일화를 이루는 것이다. 북한지역에 첫번째와 두번째 단계가 진행되는 동안 남한은 세번째 단계에서 이를 북한과의 경제·사회적 통합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는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49]

한편, 북한 사회주의 경제체제가 남한의 資本主義 시장경제체제와 실질적으로 통합되는 세번째 단계에서 북한지역이 당면하게 될 주요 경제적 과제로는, ① 남북한 경제전체를 고려한 경제구조 調整, ② 북한경제가 시장경제하에서 그 수준을 향상시키는 문제 등일 것이다.

남북한 경제구조 조정과 관련하여 제기될 문제로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지역에서의 失業者 발생이며, 기존의 북한경제가 시장경제하에서 그 수준 제고를 위한 실천적 과제로는 ① 낙후된 社會間接施設의 확충, ② 생산성 향상과 노동력의 질적인 향상, ③ 파괴된 환경재건 등일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는 통일비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남북한이 경제·사회 및 통화통합을 이루기 전인 첫번째와 두번째 단계부터 충

49) 물론, 체제전환이 위의 방식 보다는 狀況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도 있다. 그러나 북한 체제전환의 原則的인 방법을 마련하고 상황발생에 대처하는 것이 훨씬 더 效率的일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함께 세번째 단계에서 북한지역에서 발생할 문제점에 대해서도 미리 對備하는 것도 요구된다.

분한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준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시 말해 남북한간 제도적인 통합이 이루어지기 전 社會間接施設에 대한 투자 분야와 비용조달, 자원이전, 환율조정, 기업파산에 따른 실업자 문제 등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과 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위의 세번째 단계가 이루어지는 동안 남북한은 화폐·경제·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한 「契約共同體」的인 상태에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그 때까지 남북한은 경제지역적으로 아직 구분된 상태[50]라고 할 수 있다.

2. 體制轉換上의 考慮事項

북한 경제체제의 전환과 관련하여 최우선적으로 인식해야 할 사항은 통일후 북한지역에 야기될 문제가 일시적이며 예외적인 현상에서 발생되는 문제가 아니라, 체제전환과 관련하여 필히 발생하게 되는 문제로서 파악하는 것이다.[51] 그 밖의 구체적인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첫번째 단계에서 실시하는 조치는 북한 경제체제에 충격적인 방법을 통하여 빠른 시간내에 市場經濟體制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앞서 고찰한 체제전환의 효율적인 진행과정을 제시하고 시사하고 있으며 북한지역에 신속한 投資가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특히 企業民營化와 土地私有化와 관련하여 제기될 수 있는 재산권 소유문제가 조기에 해결되어야 시장경제질서가 비교적 더 원활하게 기능할 수 있다고

50) 이와 같은 맥락에서 독일의 경우에서도 계약공통체 형성을 바람직한 형태로 파악하고 있다. Friedrich Ebert Stiftung, *Strukturwandel und Beschaftigungskrise in den neuen Bundeslandern*, Reihe Wirtschaftspolitische Diskurse No. 5., (Bonn : 1990) 참조.

51) 이와 관련하여 Mötschel은 동독지역 발전을 위한 최고 目標는 지난 40여년동안 동독정부에 의해 저질러졌던 경제적 비효율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는 非效率性 제거가 특정 지방이나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동독전역에 걸쳐 역사적으로 유례없는 총체적 改革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고, 競爭原則에 입각하여 시장활동을 할 수 있는 경제구조하에서만 체제전환이 成功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W. Mötschel, "Treuhandanstalt und Neuordnung der früheren DDR-Wirtschaft," *Zeitschrift für Unternehmens und Gesellschaft* (Bonn : 1991), p.177.

판단된다.

둘째, 기업민영화와 관련하여 기업 구조개편을 과감히 이룩할 수 있도록 하되, 조속한 私有化가 이루어지기 불가능한 기업으로서 경쟁력을 가진 기업은 일정 기간 동안 국가기업 형태로 존속시키면서 기업을 再活性化하는 방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기업민영화 과정에서 경쟁력을 상실하여 회생불가능한 기업은 조속히 정리할 수 있도록 하되, 이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재정을 낭비하는 것은 억제되어야 할 것이다. 회사의 부채 및 환경오염 처리에 대한 부담을 국가가 진다고 하더라도 회사를 아무도 인수하고자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감히 도산시키는 방향으로의 政策設定이 필요하다.

셋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업에 대해 지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투자지원보다는 임금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독일의 경우에서 알 수 있듯이 賃金補助金(wage subsidy)이 갖는 장점은 기업민영화가 이루어지는 동안 기업을 외부 경쟁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으며 노동자의 賃金水準이 노동생산성보다 다소 높더라도 기업 경쟁력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된다. 자본에 대한 투자지원(investment subsidy)이 자본집약적인 시설투자를 촉진시킬 우려가 있으나 임금보조는 노동집약적인 투자를 촉진시킴으로써 실업을 저하시키는 효과가 있다. 그 밖에도 기업의 收益性을 증가시키고 기업가치를 증대시켜 민영화에 따른 기업매각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52]

넷째, 북한 체제전환과정에서 실업자가 발생함으로써 이들을 포함한 북한주민들이 남한으로 이주할 가능성이 많다.[53] 이 경우 실업 노동력을 남

52) 이의 자세한 논의에 대해서는 金瑩允, "統獨의 敎訓과 南北韓 勞動市場統合 : 勞動市場統合에 따른 舊東獨지역의 失業問題와 對策을 中心으로," 韓國勞動經濟學會 1994년 추계세미나 發表論文集(1994), pp.31~52 참조.

53) 동서독의 통일에 있어서도 임금격차가 구서독으로의 移住를 유발한다기 보다는 구동독지역에서의 失業狀態가 구동독지역 노동자들의 이주를 결정하는 주된 요인이었다. 이에 대해서는 George A. Akerlof & Andrew K. Rose, *East Germany in from the Cold : The Economic Aftermath of Currency Union*," Brookings Papers on Economic Activity, Vol. 1. 1991, p.48.

한의 사회보장체제로 완전히 흡수함으로써 남북한 통합초기 國家財政을 압박시키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통일후 북한지역에 거주하는 노동자에 대해서는 기업을 통해 고용보장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되, 자유의사에 의해 남한으로 이주하는 노동자에 대해서는 그와 같은 사회혜택을 배제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그 대신 정부는 실업자에 대해 직업훈련을 비롯하여 就業情報를 제공하여 인력수급이 원활히 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체제전환 과정상 대두되는 북한 노동자의 임금은 시장기능에 대부분 맡기고 생산성 향상이 임금인상의 전제조건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동서독통일의 否定的 경험에서 알 수 있듯이 정부가 그릇된 공약으로 소득수준의 향상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비현실적인 기대를 조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의 신뢰성이 문제시되면 개혁저항세력이 일어날 수 있으며, 개혁저항세력은 改革政策을 붕괴시키고 과거상황으로 돌아갈 것을 강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섯째, 대외경제와 관련, 앞서 제시한 두번째 단계까지 북한지역 화폐를 그대로 통용케 하거나 별도 신규 화폐를 발행하고 남북한간에는 시장가치에 준한 환율을 책정하여 교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환율에 있어서는 먼저 여행이나 국경통행시 예외적 교환비율을 적용하고 이를 대외무역과 외환거래에 연장 적용한 후, 생산성이 향상되었을 때 차츰 평가절상하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요망된다. 즉 輸出競爭力이 강하게 나타날 수 있는 초기의 저환율정책에서 점진적으로 평가절상을 시도하는 것이다.[54]

끝으로 북한의 경제체제전환과 관련하여 한가지 인식해야 할 사실은 경제체제전환이 다른 사회적인 체제전환과 시간적으로 분리되어 진행됨으로써 야기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대비이다. 동서독의 통일에서도 보았듯이, 통독이후 독일이 안고 있는 사회적인 문제, 예를 들어 동독지역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이등 국민의식이라든가 외국인에 대한 敵對感情, 지난 40년이상 획일적이고 경직된 사회주의 체제에 익숙해져 있는 동독주민의 비타협성과 비적극성 등은 통화통합이나 경제통합과 같은 경제체제적인 전환보다

54) Walter Eucken, *op. cit.*

훨씬 더 느린 속도로 전환되는 사회체제적인 문제이다.[55] 다시 말해 구동독의 경제적인 질서는 통화통합을 통해 일시에 전환될 수 있었으나 동독의 사회적인 질서(사회적인 慣習, 體制, 構造 등)는 통합이후에도 일정기간동안 그대로 존속, 새로운 제도나 이념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데서 기인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도 지난 40년 이상을 견지해 온 사회주의 체제하의 가치판단기준이나 행동양식은 체제가 바뀌어도 오랫동안 그대로 남아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기업의 經濟活動에 있어 창조적 정신을 즉각 기대하기 어려우며 경제적 자립에 있어서도 비적극적일 것임이 분명하다. 그 밖에 능력과 업적에 따른 상이한 평가 및 補償에 대한 거부감, 사업의 재정적 부담에 대한 불확신, 특히 부채성 자금으로 사업을 운영하는데 따른 위험부담 및 자신감의 결여 등도 예상외로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사회주의 체제하에서 행해진 장기간의 교육과 관습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성격상 일시에 변화시킬 수 없으며, 점차로 동화되어 가는 형태를 띨 수 밖에 없다. 한 사회질서가 주어진 시간내에 다른 한 질서로 전환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요소들이 상호 의존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이나 계층만이 변한다고 해서 사회전체가 동시에 變化하지 않는다. 따라서 경제체제전환과 같은 단편적인 변화를 통하여 전체적인 사회질서의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데에는 장시간이 소요된다. 과도기가 필요한 것이다. 북한의 경제체제전환과 관련하여서는 이와 같은 점들을 염두에 둔 사회 및 정치교육 등의 대책이 미리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

55) Fred Klinger, "Soziale Triebkr fteaund Hindernisse des wirtschaftlichen Integrationsprozesses," Forschungsstelle für gesamtwirtschaftliche und soziale Fragen, *Gesamtdeutsche Er ffnungsbilanz*, Teil II, 16. Symposium der Forschungsstelle (Berlin : 1990), p.67.

Ⅵ. 結 語

최근 남북한 統一과 관련된 논의에서 북한체제의 갑작스런 붕괴로 인하여 남북한이 통일되었을 경우, 남북한간 '필요이상의 주거이동을 制限'시키고 북한의 국가소유 토지를 國有化하며, 북한전역을 하나의 「經濟特區」로 지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56] 이는 독일식의 급작스런 통합이 오히려 남한경제를 파탄으로 내몰 수 있다는 판단아래 일시적인 통합의 後遺症을 미연에 방지한다는 의미에서 상당한 설득력을 지니고 있다고 보여진다. 또한 이론상으로도 헝가리나 폴란드 또는 체코 등의 경우와 같이 북한이 스스로 체제전환을 시도해 나간다는 점에서도 意義를 크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이는 일정기간동안 북한이 기존의 체제를 계속 유지하면서 점진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체제전환을 시도하는 것과는 별도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 남북한이 정치적인 통일을 이루었을 경우에는 북한지역은 동유럽의 폴란드나 헝가리와 같이 자체적인 개혁을 통해 스스로 체제를 전환하는 과정을 밟게될 것이 아니라 남한이 북한과의 體制 單一化를 위해 서독이 동독에 행하는 것처럼 대규모의 경제적인 지원이 제공될 것으로 본다. 따라서 통일 후 일정기간동안 「經濟特區」적인 성격을 띠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그 기간이 너무 길어서는 북한체제를 시장경제체제로 轉換시키는데 효율적이지 못하다. 체제전환을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조치들을 신속하게 또한 체계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북한지역의 빠른 경제회복과 남한과의 실질적인 통합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 「經濟特區」로 설정된 기간 동안 人口移動을 억제한다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한 일인지 모르나 장기간 인구이동이 물리적인 방법에 의해 억제된 상태로 둔다는 것은 오히려

56) 이에 대해서는 「中央日報」 1992.2.9. 및 安斗淳, "북한경제 흡수통합의 위험성"; "통일후 경제통합과 경제체제," 구영록·임용순 공편 「한국의 통일정책」(서울, 나남 : 1993), p.249~276 참조.

대규모의 인구이동을 誘發시킬 소지가 많다. 또한 실제로 일정 규모라도 인구이동이 감행될 경우,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인도적 차원에서 극히 제한되어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고찰한 내용을 요점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經濟體制轉換의 기존의 經濟秩序가 무효화되고 다른 질서가 적용됨을 의미한다.
2. 社會主義 체제가 市場經濟體制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 價格 自由化 ▲ 競爭市場의 성립 ▲ 私有財産制 보장 ▲ 對外經濟 開放이 선행되어야 한다.
3. 체제전환의 방법에는 衝擊療法과 漸進的 방법이 있으나 어느 방법이 체제전환을 위해 효율적인가에 대한 決定은 각국의 경제가 처한 현실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다만, 市場經濟秩序의 신속한 확립을 위해서는 기존체제에 충격을 가하는 방법이 더 효율적이다.
4. 경제체제전환 事例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① 어느 경우의 체제전환에 있어서도 體制轉換과 관련된 副作用(물가상승, 실업자 증가 등)이 발생하며 ② 國營企業의 民營化와 土地 私有化는 될 수 있는 限, 신속히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③ 체제전환을 위한 경제내적 環境造成이 중요하다는 점들이다.
5. 사회주의 체제가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와 統合을 이룸으로써 체제전환이 되는 경우에는 ① 社會主義 기존 經濟體制에 충격을 가하는 방법을 통해 경제 전 부문에 걸쳐 自由化를 추진한 후, ② 일정기간 동안 市場經濟秩序하에서 경제의 구조조정이 이루어진 다음, ③ 경제지역 單一化를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6. 경제지역 단일화는 먼저 양 체제간 「契約的 共同體」를 형성시킨 후 貨幣·經濟·社會統合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7. 북한 사회주의 體制轉換 과정상 제기될 문제점으로는 南北韓 전체를 고려한 經濟構造調整, 북한경제의 질적 수준 향상과 기타 북한지역 실업자의 南韓移住, 북한 노동자의 賃金調整, 남북한 화폐의 적정환율결

정 등이 있다. 그 밖에도 사회적인 측면과 관련하여 중요하게 인식해야 할 사실은 經濟體制轉換이 사회체제 전환과 시간적으로 분리되어 진행됨으로써 야기되는 양지역 주민간의 이질성 문제의 해소이다.

8. 급진적인 통일시 북한지역을 「經濟特區」로 설정하고 인구이동을 억제하는 것은 후유증 방지를 위해 필요하나, 이것이 북한경제의 점진적 체제전환을 지향하기 위한 것이라면 再考되어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북한경제의 효율적인 轉換에 逆效果를 나타낼 수 있으며, 점진적인 체제전환 기간동안 실제 人口移動이 있을 경우, 이를 억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빈 면

사회주의체제 쇠퇴기의 신좌파의 이론적 좌표 : 밀리반드, 라클라우 및 무페의 사회변혁이론을 중심으로

金 聖 哲*

◁目 次▷

Ⅰ. 서 론
Ⅱ. 밀리반드의 '밑으로부터의 계급 투쟁'
1. 변혁 주체로서의 노동계급
2. 신사회운동
Ⅲ. 라클라우와 무페의 '급진적 민주주의'
1. 이론적 배경
2. 주체의 비고정성과 다원성
3. 신민주적 투쟁
Ⅳ. 사회주의권의 몰락과 신좌파의 진로
Ⅴ. 결 론

Ⅰ. 서 론

1989년의 동구 사회주의권 붕괴와 1991년의 소비에트연방 해체는 21세기를 눈앞에 둔 인류역사에 있어서 가장 커다란 사건이었다고 할 수 있다. 사회주의 대변혁이라고 불리우는 이 역사적 사건이 국제질서에 미친 영향 못지않게 지식인들에게 준 충격은 대단히 컸다. 서구의 자유민주주의 옹호

* 民族統一研究院 責任研究員

자들은 동구 및 소련의 몰락이야말로 자본주의에 바탕을 둔 서구식 민주주의체제가 마르크스 레닌주의에 바탕을 둔 사회주의체제에 대해 승리한 사건이라고 간주하였다. 그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자유민주주의가 인간이 성취할 수 있는 가장 최종의 체제인 것으로 파악하였다.

그러나, 사회주의 대변혁에 대한 서구의 신좌파 지식인들의 해석은 사뭇 달랐다. 이들은 사회주의 대변혁을 충격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오히려 역사적 필연 또는 예정된 사건이라고 보았다. 이들이 추구하는 사회주의의 이상은 기존 사회주의체제가 경험적으로 보여주었던 것과 너무나 거리가 먼 것이었기 때문이다. 마르크스·레닌주의의 현실적 한계를 딛고 새로운 사회변혁을 주창하는 신좌파 지식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억압과 비효율로 일관한 동구 및 소련 사회주의체제는 사회주의라는 개념을 왜곡시키는 실체들이었으며, 따라서 사회주의 대변혁은 지금까지 자신들에게 씌워졌던 '오해의 멍에'를 벗겨주는 좋은 계기였는지 모른다.

실제로 급진적 지식인들은 이미 1960년대 말부터 시작된 인권운동, 학생운동, 반전운동 등 서구 사회의 소용돌이 속에서 『신좌파 평론』(New Left Review)을 중심으로 새로운 사회변혁이론을 추구하였다. 물론 신좌파는 이론의 전개과정에서 다양한 분파를 낳았다. 그 중에서 두드러진 하나의 분파로는 마르크스식의 생산관계에서의 계급적 착취와 이를 둘러싼 계급투쟁 개념을 바탕으로 노동계급이 사회변혁의 주체일 수 밖에 없다는 논리를 전개한 밀리반드(Ralf Miliband) 중심의 학자들이 있다. 이와 대조되는 분파로는 1980년대에 이르러 마르크스주의의 경제주의적 또는 계급환원론적 해석을 본격적으로 비판하면서 다양한 정치세력에 의한 사회주의 운동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일단의 학자들이 있다. 이 분파의 입장은 흔히 '후기 마르크스주의'라고 불리우며,[1] 라클라우(Ernesto Laclau)와

1) 이들은 다른 측면에서 '새로운 진정한 사회주의'(New True Socialism)라는 이름 아래 영국의 좌파 이론지인 『오늘날의 마르크스주의』(Marxism Today)에서 활동한다. 원래 진정한 사회주의는 1840년대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계급분열을 무시하고 인간 일반에 촛점을 맞춘 사회주의라고 맹렬히 논박했던 지적 흐름으로서, 1980년대에 서구의 신좌파 지식인들이 이를 부활했다는 의미에서 '새로운' 진정한 사회주의라고 불리우게 되었다. Ellen Meiksins Wood, *The Retreat from Class : A New 'True' Socialism* (London : Verso, 1986), pp.1-2.

무페(Chantal Mouffe) 등으로 대표된다.

본 연구는 두 분파의 신좌파 학자들, 즉 밀리반드와 라클라우 및 무페의 새로운 사회변혁이론을 살펴보고자 한다. 밀리반드가 사회주의권의 붕괴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였던 것과는 달리, 라클라우와 무페는 직접적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이들 모두의 논의는 사회주의권 몰락 이후의 자유민주주의 이론가들의 승리감에 가득찬 주장과 매우 대조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 역사적 사건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 여부에 상관없이 이들 세 이론가들의 사회변혁이론은 충분히 논의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이들 두 그룹의 신좌파를 대비시키는 이유는 신사회운동(new social movements)에 대해 논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닌 반면, 이론적 출발점이 매우 상이한 까닭에 변혁의 주체에 대한 논의가 다를 뿐만 아니라 전략적 측면도 상이하다는 점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회주의 대변혁을 염두에 두고 이들이 논하는 투쟁 또는 적대의 발생원인, 주체, 그리고 내용을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Ⅱ. 밀리반드의 '밑으로부터의 계급투쟁'

밀리반드는 노동계급 중심의 밑으로부터의 투쟁을 통한 사회변혁을 주장하였다. 그의 주장은 동구 및 소련 사회주의체제의 몰락 이후에도 지속되는 바, 본 절은 그가 어떤 이론적 맥락에서 변혁의 주체를 그렇게 파악하고 있는가, 새로운 요구들을 표출하는 신사회운동을 보는 그의 시각은 무엇인가 그리고 노동운동과 신사회운동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가에 촛점을 맞추어보고자 한다.

1. 변혁 주체로서의 노동계급

밀리반드의 이론적 논의의 출발은 무엇보다도 다원론적 민주주의의 허구

성을 지적하고 자본주의적 생산관계를 둘러싼 자본가와 노동계급간의 계급투쟁을 경험주의적 시각에서 조망하려는 것이었다. 그는 이런 논의에 바탕하여 1960년대 이후 전개된 소위 신정치(new politics) 또는 신사회운동을 분석하는데 있어서 노동계급이 사회변혁의 주체임을 강조하였다.[2)]

먼저 밀리반드는 다알(Robert Dahl)로 대표되는 다원주의적 민주주의론이 상정하는 엘리트 그룹의 다원성에 대한 주장을 비판하였다. 다원주의에 의하면, 어느 사회나 복수의 엘리트 그룹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들 사이의 상호견제와 권력분산에 따라 한 엘리트 그룹이 다른 영역을 지배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밀리반드는 다원주의적인 사회현상에 대한 분석이 특정계급의 존재와 이 계급의 이익수호를 위한 특수한 제도로서의 국가의 역할을 무시하고 있다고 논박하였다.[3)] 이 점에서 밀리반드는 자신의 논리를 전개하는데 있어서 충실한 마르크스주의자임을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그는 특히 마르크스의 계급개념을 그대로 수용하여,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통제하며 경제적 권력을 바탕으로 국가를 도구로 사용하는 지배계급이 분명 존재한다고 파악하였다.[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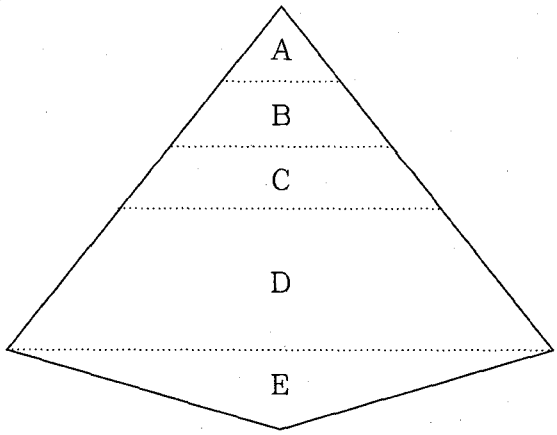
밀리반드는 후기에 이르러 이러한 마르크스식의 계급개념을 보다 구체적으로 그리고 명료하게 다음의 '계급지도'(class map)를 통해 묘사하였다.

우선 지배계급에는 계급적으로 최고 상층부를 차지하는 권력 엘리트(A)와 그 밑에 위치하는 자본가 집단(B)이 속한다. 자본가 집단은 다시 둘로 나뉘어 지는데, 하나는 재벌을 형성하여 여러 기업체를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자본가들이며 다른 하나는 법조인, 공무원, 장교, 교육기관과 같은 전문기관에 종사하는 고위 당국자들이다. 권력 엘리트에 속하지 않는 이들은

2) 국가가 무엇이며 자본주의체제 하에서 그것의 역할은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는 밀리반드의 도구적 국가론과 풀란차스의 국가의 상대적 자율성 사이의 논쟁에서 자세히 논의되었다. 이 논쟁에 대한 국내의 편저로는 박상섭, 『국가권력과 계급권력 : 현대 마르크스주의 국가론 논쟁』 (서울 : 한울, 1985).

3) Ralf Miliband, *The State in Capitalist Society* (New York : Basic Books, 1969), p. 23.

4) Ralf Miliband, *Divided Societies : Class Struggle in Contemporary Capitalism* (Oxford : Oxford University Press, 1989), pp.19, 21-3.



오늘날 자본주의사회의 부르조아로서 흔히 상위중간계급 혹은 중간계급이라고 불리운다. 이들은 경제적인 수혜계급일 뿐만 아니라 고명하고 영향력있는 의견선도자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지배계급에 속한다.

부르조아 밑에는 쁘띠 부르조아 혹은 하위중간계급(C)이 위치한다. 이 계급 역시 크게 두 집단으로 나뉘어지는데, 하나는 소규모의 자영업자들로서 일정 수의 고용인을 채용하고 있는 집단이며, 다른 하나는 마르크스가 『자본론』에서 구분한 것과 같이 노동과정에서 자본가의 요구에 따라 움직이는 관리직 계통의 산업 노동자 집단이다.

노동계급(D)은 선진 자본주의사회에서 전체 인구의 2/3~3/4를 차지하는데, 여기에는 임금 노동자뿐만 아니라 이들과 함께 생활을 영위하는 배우자까지 포함된다. 한편, 계급 피라미드의 맨 밑에 위치하는 하층계급(E)이라고 불리우는 사회계급은 실업자, 지체부자유자 등으로서 공공복지에 의존하는 사람들이다.

밀리반드가 이상과 같이 계급구분을 시도한 목적은 결국 왜 노동계급이 변혁의 주체가 될 수 밖에 없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였다. 우선 그의 논의는 쁘띠 부르조아가 주체가 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시작된다. 쁘띠 부르조아는 부르조아와 노동계급의 중간적 위치에 놓임으로 말미암아 사회에 대한 자율적인 비젼을 제시할 수 없는 계급이며, 따라서 사회변혁에 대

한 포괄적인 프로젝트를 가질 수 없는 계급이라는 것이다. 밀리반드는 더 나아가서 이 계급이 때때로 반동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데, 특히 첨예한 사회·정치적 갈등이 노출될 때 권력 엘리트와 부르조아의 편에 서서 보수주의의 내부 핵심이 된다고 기술하였다.[5]

그러나 유의할 것은, 쁘띠 부르조아가 보수주의적 성향을 갖는다고 해서 곧 노동계급이 사회변혁의 주체가 된다는 논리로 이어질 수 없다는 점을 밀리반드도 이해하고 있다는 점이다. 밀리반드는, 생산과정에서 부르조아에 의해 노동력을 착취당하는 노동계급이 수적인 우세를 이용하여 자본주의적 생산관계를 전복하고 급기야는 새로운 생산양식을 구축할 것이라는 고전적 마르크스주의의 입장을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기존의 많은 마르크스주의 비판가들과 마찬가지로, 밀리반드도 오늘날의 선진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노동계급이 단합된 힘(마르크스가 생각한 만큼)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 즉, 그는 노동계급이 성별, 종교, 인종 등 다양한 사회적 균열(cleavage)을 따라 분화되는 경향을 보이는 동시에 기술진보, 노동의 국제적 분업, 화이트 칼라의 숫적 증가와 역할 증대 등으로 쇠퇴하고 있음을 시인한 것으로 보인다.[6]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리반드는 이상과 같은 노동계급 분열의 형식적 요인들이 노동자들로 하여금 서로 연결할 수 없는 골(unbridgeable gulf)을 형성하리라고 파악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광부, 철도원, 교사, 간호사 등은 각기 자신들의 직업 부문에서 노동조합을 형성하여 더욱 강력한 연대의식을 가지게 되었으며, 때로는 쁘띠 부르조아를 포용하여 부르조아에 대한 계급투쟁에 연합을 형성하기도 한다는 것이다.[7] 즉, 밀리반드는 수직적 연대로서의 직업집단내의 노동운동을 바탕으로 노동계급이 하나의 결속된 또는 통일된 계급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에 근거하여 밀리반드는 노동계

5) *Ibid.*, p.51.

6) 현대 자본주의사회에서 노동계급의 분열에 대한 주장은 후기 마르크스주의자들 사이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되는데, 특히 노동계급이 하나의 보편적 계급(universal class)이 아니라는 주장에 그 특징이 있다.

7) Miliband, *Divided Societies*, p.47.

급 중심의 '밑으로부터의 계급투쟁'(class struggle from below)를 주창하게 되었다.

밀리반드는 사회주의운동에 있어서 사회민주당의 역할을 주의깊게 관찰하면서 사회변혁운동에서 노동계급의 주체적 역할의 불가피성을 재확인하였다. 그에 의하면, 사회민주당은 부르조아 민주주의 혹은 자본주의적 민주주의가 추구하는 온건한 점진적 개혁과 공존하는 기구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밀리반드가 지적하는 사회민주당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은 두가지이다. 한편으로, 사회민주당 지도부는 스트라이크나 사보타주 같은 산업투쟁을 반대하는 한편, 협상을 통한 개혁을 주장하며 정치적 교환(political exchange)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수행하는데 그치고 만다는 것이다. 물론 사회민주당이 제시한 협상을 통한 개혁이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등 북유럽 국가들의 경우처럼 노동자들의 생활조건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한 역사적 사례도 있다. 또한 사회민주당이 평등, 정의, 공평, 협동 등과 같은 가치를 내세우며 고차원적인 새로운 사회질서의 창조를 추구하기도 한다. 하지만 밀리반드는 사회민주당의 이러한 비젼이 부르조아 민주주의가 원하는 점진적인 개혁과 일맥상통한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하였다.[8] 다른 한편으로, 부르조아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중용 또는 온건(moderation)을 고무하는데, 사회민주당 소속의 노동조합 지도자와 의회 지도자들은 이러한 노선에 이끌려 간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 사회민주주의 지도부는 온건한 성향을 가진 노동조합 지도자와 당관료들을 선택할 뿐만 아니라 당내 비판세력을 무책임한 유토피안 또는 분열주의자로 매도하기도 한다. 따라서, 사회민주당은 좌파에 대한 반대세력이며 정치를 非과격화(de-radicalization)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밀리반드는 주장하였다.[9]

밀리반드는 이상과 같이 사회민주당의 한계를 지적하는 반면, '사회주의의식'(socialist consciousness)의 확산과 계급투쟁의 전개를 위해 서구의 공산당이 수행한 역할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공산당

8) *Ibid.*, pp.72-73, 77.

9) *Ibid.*, pp.77, 84.

도 사회민주당과 마찬가지로 부르조아 민주주의의 제도적 틀안에 존재하지만[10] 노동계급에 대한 교육적 기능을 끊임없이 수행해왔으며 앞으로도 수행해야 할 것으로 그는 보았다. 밀리반드는 노동계급 스스로는 혁명의식에 대조되는 노동조합의식(trade union consciousness)밖에 발전시킬 수 없다는 레닌의 이론을 따르면서, 공산당이야말로 노동자들에게 사회주의 의식을 '외부로부터' 부여해준 세력이라고 간주하였다. 그는 특히 공산당이 적극적 행동주의자들을 교육시키는 중요한 기구라고 보았다.[11]

결국, 밀리반드가 사회변혁에 있어서 노동계급의 주체적 역할을 주장하는 동시에 공산당의 교양적 역할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점은 사회변혁운동에 있어서 노동계급이 지닌 능력의 한계를 사실상 어느 정도 인정한 셈이 된다. 이러한 한계때문에 그는 우리가 다음에서 논하고자 하는 신사회운동을 또 다른 형태의 '밑으로부터의 계급투쟁'으로 수용하지 않을 수 없었다.

---

10) 밀리반드가 예로 든 프랑스 공산당의 경우를 살펴보자. 여타의 서구 공산당처럼 프랑스 공산당은 제2차세계대전 전에 혁명 개념을 포기하고 자본주의체제 안에서 존속하는 한편 소련 정책을 지지하는 입장을 취하였다. 프랑스 공산당은 1939년 8월 독·소불가침조약(Nazi-Soviet Pact)이 체결된 직후인 9월에 있었던 프랑스·영국 연합군의 독일공세를 제국주의 전쟁으로 보는 소련의 입장을 지지하였다. 이에 프랑스 정부는 공산당을 해체시키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수세에 몰렸던 프랑스 공산당의 입지는 1941년 6월 독일의 소련 침공으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기회를 맞게 되었는데, 이는 공산당원들이 지하에서 독일군에 항전하는 전위대의 역할을 수행하였기 때문이다. 전후에는 프랑스 공산당의 구국항전의 공헌이 인정되어 상당한 대중적 지지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연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물론 이러한 공산당의 입지회복과 연정에의 참여는 프랑스 정부의 대식민지 정책(즉, 식민지 독립운동의 억압)과 같은 극히 보수적인 정책들을 옹호하였기 때문에 가능하였으며, 이런 의미에서 프랑스 공산당은 전쟁으로 손상된 부르조아적 사회질서를 회복시키는데 기여했다고 말할 수도 있다. 그러나, 프랑스 공산당의 이같은 입장, 즉 체제 옹호세력으로서의 노선은 1968년 5월 위기때 학생과 노동자들의 연대 투쟁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취했던데서 더욱 명료하게 드러났다고 할 수 있다. *Ibid.*, pp.87-90 ; Philip Armstrong, Andrew Glyn and John Harrison, *Capitalism since 1945*, 김수행 역, 『1945년 이후의 자본주의』(서울 : 동아출판사, 1993), pp.295-304.

11) Miliband, *Divided Societies*, pp.91-2.

2. 신사회운동

밀리반드는 반인종운동, 평화운동, 학생운동 등 사회운동이 이전에도 존재하였지만 왜 오늘날 급속히 확대되었으며 '새로운' 사회운동이라는 모습으로 전개되기에 이르렀는가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노동계급과 사회주의 정당(때로는 공산당까지 포함)의 능력의 한계때문이다. 이것들은 신사회운동에 의해 제시되는 여러가지의 요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하였다. 다시 말하자면, 노동계급은 인간 해방을 위한 요구들을 다 수용할 만큼 보편적 계급이 되지 못했으며, 노동운동이 그런 목표를 성취하는데 적절한 도구도 아니었다는 주장이다.[12]

밀리반드는 현존 선진 자본주의사회를 변혁시키는 과정에서의 신사회운동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한편으로, 노동계급 중심의 노동운동과 신사회운동 사이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밀리반드는 선진 자본주의사회의 사회적 구분이 계급(주로 생산수단의 소유여부에 따른)외에도 성별, 인종 등 여러가지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여성 혹은 흑인노동자가 부르조아에게 착취당하는 정도가 남자 혹은 백인 노동자의 경우보다 더욱 심하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결국 그들의 권익을 위한 신사회운동은 노동운동과 성격을 달리하는 측면을 가지면서도, 노동계급의 지배계급에 대한 압박 또는 투쟁의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하며 그것의 독특한 형태(distinct form of pressure or struggle)라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13]

다른 한편으로, 신사회운동에는 노동계급뿐만 아니라 부르조아와 쁘띠부르조아도 참여한다는 점이다. 이 점은 계급을 초월한 운동이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밑으로부터의 투쟁을 희석시키는 효과를 낳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리반드는 신사회운동이 현존하는 권력구조, 특권과 지위 배분의 불공정성, 전통적 사고방식 등을 부정하는 운동세력의 범위

12) *Ibid.*, p.98.

13) *Ibid.*, p.97.

안에 다양한 계급적 성분을 수용한다는 점에서 사회변혁의 한 추진력으로 파악하였다.

신사회운동의 확산을 목격하면서 밀리반드가 가장 중요한 논의의 대상으로 삼았던 것은, 그것이 이념적인 측면에서 왜 반드시 사회주의적(socialist)이어야 하는가를 정당화시키는 작업이었다. 그가 예로 든 여성운동에서의 자유주의적, 급진적, 사회주의적 운동을 비교하면서 그의 주장을 살펴보기로 하자.[14]

첫째, 자유주의적 여성운동(liberal feminism)은 법 앞에서 평등이라는 형식적 가치에 근거하여 가정과 직장에서 일의 분담과 공평을 주장한다. 여기에 속하는 운동가들은 출산휴가, 탁아소, 직업기회의 균등 등 매우 현실적인 주장을 펼친다. 그러나 자유주의적 여성운동의 한계는, 남녀불평등의 근원을 전통과 편견에서 찾으며, 다른 이슈에 대해서는 자유주의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체제 자체를 의문시하기보다 그 틀안에서 해결점을 찾으려 한다는 점에 있다. 따라서, 그들이 고민하는 불평등의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생산관계에서의 지배와 착취는 그대로 존속하게 된다는 것이 밀리반드의 지적이다.

둘째, 급진적 여성운동(radical feminism)은 어떠한 사회적 균열(cleavage)보다도 성별에 의한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며, 성차별은 생산양식의 종류에 관계없이 사회의 구조적 불평등의 근원이라고 파악한다. 더 나아가서 이 여성운동은 인류의 역사란 남성이 여성을 공격적이고 폭력적으로 지배해온 것으로 점철된다고 말한다. 급진적 여성운동에 의하면, 남성 지배의 사회적 구조를 해체시켜야 불평등 구조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그러나 밀리반드는, 남성 지배의 전형인 가부장제가 붕괴되고 남녀불평등이 완화된 사회에서도 불평등이 다른 사회적 균열에 의해 여전히 지속된다는 점을 급진적 여성운동이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셋째, 밀리반드가 여성운동 중 가장 선호한 사회주의적 여성운동(socialist feminism)은 이상의 두가지 운동과는 달리 경제, 사회, 정치구조 속에

14) *Ibid.*, pp.100-3.

서 문제의 근원을 찾으면서 사회주의에서는 성차별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본다. 이 여성운동은 성별에 의한 불평등을 계급적 불평등과 연관시킬 뿐만 아니라 후자가 전자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라고 설명한다.

밀리반드는 다음과 같은 설명을 통해 이를 입증하고자 노력하였다. 즉, 여성에 대한 차별의 정도는 계급적 위치(class location)에 따라 다르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부르조아 여성과 노동계급의 여성이 남성 고용인으로부터 받는 성적 불평등의 정도가 다른데, 그 이유는 후자가 전자보다도 더 열악한 생산관계에 놓이게 되며 부르조아 남성이 남성으로서가 아니라 고용인으로서 더욱 큰 착취와 억압을 가하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밀리반드는 계급적 관계의 해소가 성차별의 근본 해결책이라고 간주하였다. 또한 그는 계급적 위치를 중심으로 하는 이상과 같은 설명이 성별뿐만 아니라 인종, 종교 등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보았다.

이상과 같은 밀리반드의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계급중심적 분석은 곧 신사회운동이 노동운동의 우위(primacy)라는 맥락에서 또는 적어도 노동운동과 연대(alliance)하여 전개되어야 한다는 논리로 연결된다. 여기서 노동운동의 우위란 노동운동이 밑으로부터의 투쟁의 주된 수단이라는 것을 뜻하지만 결코 신사회운동에 대한 지배 또는 그것의 흡수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15] 따라서, 밀리반드가 의도하는 바는 노동운동을 중심으로하는 사회변혁을 위한 연합에 신사회운동이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Ⅲ. 라클라우와 무페의 '급진적 민주주의'

밀리반드는 불평등, 착취, 억압 등 모든 사회적 악의 근원을 자본주의체제의 생산관계와 계급적 위치에서 빚어지는 것으로 설명하는 동시에, 신사회운동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은 새로운 사회적 요구의 증대가 노동운동을

15) *Ibid.*, p.110.

중심으로 한 '밑으로부터의 압박 또는 투쟁', 즉 계급투쟁의 맥락 속에서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반하여 라클라우와 무페는 매우 상반된 주장을 하였다. 즉, 이들은 소위 계급환원론(class reductionism)을 반박하면서 사회적 지위는 생산관계 뿐만 아니라 다양한 관계 속에서 형성되며 따라서 계급적 적대는 여러가지의 사회적 적대관계 중의 하나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전개하였다. 본 절은 라클라우와 무페의 이상과 같은 주장의 이론적 배경과 이들에 의해 주장되는 '신민주적 투쟁'(new democratic struggle) 또는 '급진적 민주주의'의 내용을 밀리반드의 것과의 비교를 염두에 두면서 분석하고자 한다.

1. 이론적 배경

라클라우와 무페가 신민주적 투쟁 또는 급진적 민주주의 전략을 논하게 된 데에는 1960년대와 1970년의 세계 자본주의체제의 변화라는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제2차세계대전 이후 자본주의의 성장과 함께 노동계급의 혁명적 성격이 퇴색해지면서 그람시의 진지전 개념과 헤게모니 개념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신좌파 이론이 성장하였다. 그러던 중 중요한 역사적 계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1979년 영국 선거에서 승리한 대처가 기존의 복지국가 정책을 비판하는 반면 자유시장원칙을 주장하는 동시에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강력한 국가를 내세우게 되었다는 점이다. 더욱이 대처는 이데올로기적 측면에서 가족, 책임, 권위, 전통 등의 개념을 내세워 신보수주의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노력하였다.[16] 신좌파는 이러한 신보수주의의 약진이 계급정치의 퇴조를 의미하는 동시에 담화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다시 말하자면, 신좌파의 이론적 논의도 이제 계급적 적대를 통한 헤게모니의 장악이라는 논리에서 벗어나 담화를 통한 민주주의와 사회주의의 실현이라는 논리로 바뀌어야 된다고 보았다. 이러한 지적 흐름의 선봉에 선 학자가 바로 라클라우와 무페이다. 이들은 신민주

16) 구도완, "포스트 마르크스주의와 민주주의 : 라클라우와 무페를 중심으로," 한상진 편저, 『마르크스주의와 민주주의』 (서울 : 사회문화연구소, 1991), p.129.

적 투쟁 또는 급진적 민주주의라는 기치아래 사회변혁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소위 '계급으로부터의 후퇴'를 주장하면서 계급환원론을 비판하였다.

라클라우와 무페의 등장은 이상과 같은 역사적 배경 외에도 풀란차스(Nicos Poulantzas)에 의한 신좌파 내부의 이론적 균열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풀란차스는 다음과 같은 세가지 점에서 생산관계 중심적이고 계급중심적인 고전적 마르크스주의에서 이탈함으로써 라클라우와 무페로 하여금 적대관계의 다원성을 설명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고 할 수 있다.[17]

첫째는 풀란차스가 계급투쟁에 많은 관심을 가진 것은 사실이지만 계급구분이 생산관계보다는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요소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설명하였다는 점이다.[18] 그에 의하면, 국가에 의해서 조직되는 파워블럭에 대항하는 민중동맹에는 생산직 노동자와 신쁘띠 부르조아가 속하는데, 생산관계에 의해 신쁘띠 부르조아를 구분해내는 작업이 용이하지 않다는 것이다. 즉, 산업화로 인해 회사원과 같은 사무직 노동자와 전문기술자 또는 감독진과 같은 전문직 종사자 등 신쁘띠 부르조아인 화이트 칼라가 대량으로 발생하게 되었는데, 화이트 칼라를 노동계급과 구분짓는 결정요인이 문제가 된다. 화이트 칼라와 생산직 노동자는 다같이 생산수단으로부터 소외되어 있어서 부르조아로부터 착취를 당하며, 이들은 공히 생산관계에서 부르조아를 위해 잉여가치를 생산한다. 따라서, 생산관계가 이들 두 계급을 구분하는 요소인 것으로 보는 주장은 설득력을 잃게 되는 한편, 정치적 그

17) 여기서 필자는 이들, 특히 무페가 그람시를 탈(脫)계급환원론의 선구자로 보았다는 점 또한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것에 유의하고자 한다. 실제로 무페는 그람시의 헤게모니와 이데올로기 개념을 분석하는 대목에서 그가 탈경제주의적 해석의 선구자적 역할을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무페는 그람시가 이데올로기를 단순히 허위의식으로 간주하는 고전적 마르크스주의의 입장에 반기를 들었으며 이데올로기의 능동적 역할을 파악하면서 그것의 계급귀속성을 논박했다고 분석하였다. 또한 그녀는 이러한 그람시의 입장이 풀란차스에게 심대한 영향을 끼쳤던 것으로 보았다. Chantal Mouffe, ed., *Gramsci and Marxist Theory*, 장상철 이기웅 역, 『그람시와 마르크스주의이론』(서울 : 녹두, 1992), pp.199-241 참조.

18) Nicos Poulantzas, *Classes in Contemporary Capitalism* (London : NLB, 1975), p. 224.

리고 이데올로기적 요소가 계급을 구분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이 풀란차스의 논리이다.

풀란차스가 말하는 신쁘띠 부르조아의 정치적 그리고 이데올로기적 요소란 자신들의 사회적 위치에 따른 독특한 이익옹호를 위해 때로는 노동계급의 편에 섰다가 때로는 부르조아의 입장을 취하는 점일 것이다. 따라서, 설사 신쁘띠 부르조아가 노동자의 편에 선다고 하더라도 노동계급의 일부는 될 수 없다고 한다.[19] 아뭏든 풀란차스가 계급을 구분하는데 있어서 정치적 그리고 이데올로기적 요소를 강조한 것은 경제환원론에 입각한 고전적 마르크스주의로부터의 이탈의 단초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둘째는 풀란차스가 국가론에 촛점을 맞추면서 정치적인 것의 우위를 주장하였다는 점이다. 풀란차스의 이러한 주장은 생산양식을 이루고 있는 층위들의 '상대적 자율성'에 관한 전환기적 논의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에 의하면, 생산양식은 경제, 정치, 이데올로기(그리고 이론적 지식) 층위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층위의 독특한 결합의 특성 혹은 통일성이 각 층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여기서 자연히 제기되는 의문은 생산양식을 구성하는 층위들간의 일반적 관계는 어떤 것인가, 특히 경제가 차지하는 위치는 무엇인가이다. 주지하다시피, 풀란차스는 이 문제에 있어서 고전적 마르크스주의로부터 크게 벗어났다. 전체로서의 사회가 경제에 의해서 결정되며 상부구조가 경제적 관계의 반영이라고 설명했던 마르크스와는 달리, 풀란차스는 각 층위가 상대적으로 자율적이며 경제가 '최종 층위에서' 복합적 전체인 생산양식을 결정한다고 설명하였다.

여기서 풀란차스는 결정한다(determine)는 것과 지배한다(dominate)는 용어를 엄밀히 구분하여 사용하였다. 그는 한편으로 경제가 '최종 층위에서' 복합적인 전체 사회구조인 생산양식을 결정한다고 말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생산양식이 최종 층위에서 경제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 곧 경제가 언제나 지배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20] 풀란차스는 결정한다는 것과 지배한다는 것 사이를 구분함으로써 층위들의

19) *Ibid.*, p.250.

20) Nicos Poulantzas, *Political Power and Social Classes* (London, Verso), p.14.

상대적 자율성 특히 정치 층위인 국가의 상대적 자율성에 대한 그의 논의를 전개할 수 있었으며, 이것은 곧 사회변혁을 위한 투쟁에 있어서 정치적인 것의 우위를 확립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해 주었던 셈이다.

세째는 풀란차스가 사회주의로의 이행과정을 순조로운 민주화의 과정으로 보았다는 점이다. 그는 자본주의적 민주주의에서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로의 변화는 단절이 없는 연속선상에 있는 것이라고 파악하였다. 따라서 풀란차스는, 국가가 어떤 틈도 없는 하나의 블럭이기 때문에 그것은 전적으로 외부로부터 대항하는 세력에 의해 교체되어야 한다는 소위 '이중권력'론을 부정하였다. 그에 의하면, 국가는 계급내 혹은 계급간의 모순이 응축되어 나타나는 장(場)이며, 외부의 세력에 의해 정복되어야 할 대상이라기보다는 민주적인 방법으로 그 내용이 변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민주적인 방법이란 의회, 관료제, 강제적 억압기구, 이데올로기 기구 등에서의 점진적 잠식을 통한 국가의 질적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었다.[21]

이상과 같은 풀란차스의 세가지 주장, 즉 계급구분에 있어서의 정치적 및 이데올로기적 요소의 중요성, 국가론 중심의 정치적인 것의 우위성, 그리고 민주적 변화의 연속성의 강조는 향후 신좌파가 고전적 마르크스주의의 '계급환원론'에서 벗어나는 논리적 틈을 마련해 주었다. 마르크스주의에서의 이러한 변화의 조짐은 사회변혁에 있어서 담화의 역할과 적대의 다양성을 주장하면서 급진적 민주주의론을 편 라클라우와 무페에 의해 무르익게 되었다.

2. 주체의 비고정성과 다원성

라클라우와 무페의 급진적 민주주의론은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직접적인 공박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계급환원론에 대한 비판이었다. 즉, 그들은 계급적 주체가 필연적으로 모든 사회적 주체라는 주장을 반박하였다.[22] 그들은 각 개인이 참여하는 사회적 관계는 복합

21) Nicos Poulantzas, *State, Power, Socialism* (London : Verso, 1980), pp.254-9.

적이며 그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담화에 상응하는 복합적인 주체로서의 위치가 있다고 믿었다.

그렇다면 라클라우와 무페가 계급환원론을 반박하는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첫째, 그들은 제2차세계대전 이후 선진 자본주의의 안정으로 노동계급이 정체성을 상실하게 되었다는 점을 들었다. 노동과정에서 자본의 지배가 점점 공고화되고 기술혁명에 의해 화이트 칼라가 급속히 성장하여 노동자 계급은 하나의 계급으로 불리우기 힘들 정도로 분절화되었다는 것이다.

둘째, 그들은 노동계급이 생산관계에서의 착취에 의해 자동적으로 통일된 정치세력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보았던 마르크스주의의 주장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였다. 그들의 논박은 마르크스보다는 마르크스주의자의 주장을 인용하면서 이루어졌는데, 반박의 대상은 노동계급의 통일성과 그것의 사회주의적 추진력이 외적 개입이 없는 단순한 생산력 발전의 결과라는 마르크스주의의 명제이다. 라클라우와 무페에 의하면, 자본주의적 생산의 경제적 현실 그 자체는 노동자로 하여금 공동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낳지 않으며, 적대관계 또한 생산관계에서 잉여가치의 착취에 의해서가 아니라 생산관계의 바깥에서 나타난다는 것이다.[23] 예를 들어, 저임금의 노동자들은 사회문화적 재화를 접하는 데 있어서 적대를 느끼게 되고, 그들이 관여하는 재화의 영역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권리의 자각과 적대관계도 일정하지 않게 된다. 이 점에서 라클라우와 무페는 노동계급이 통일된 사회주의 세력으로 발전하게 된다는 고전적 마르크스주의 논리에 회의를 품게된 것이다.

세째, 라클라우와 무페가 풀란차스에 의해 구체화된 개념들인 '최종 층위에서 결정' 그리고 '상대적 자율성'을 논박하였다. 그들은 경제에 의한

22) Chantal Mouffe, "Hegemony and New Political Subjects : Toward a New Concept of Democracy," in Gary Nelson and Lawrence Grossberg, eds., *Marxism and the Interpretation of Culture* (London : Macmillan Education, 1988), p.90.

23) Ernesto Laclau and Chantal Mouffe, "Post-Marxism without Apologies," *New Left Review*, 166 (1987)의 번역본, "포스트 맑스주의는 변명하지 않는다," 이경숙 전효관 엮음, 「포스트맑스주의?」 (서울 : 민맥, 1992), p.132.

최종 층위에서의 결정을 논하게 되면 상대적 자율성이라는 개념화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이 의미하는 바는, 국가와 같은 생산양식내 여타의 층위가 경제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다만 논리적으로 양자가 양립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더욱이 라클라우와 무페에 의하면, 층위들간의 상호작용은 결정 범주의 측면에서 사고될 수 없으며, 사회가 인지가능한 구조로 재구성되는 기반에서 최종 층위는 없다는 것이다.[24] 풀란차스 개념에 대한 이러한 논박은 참으로 아이러니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라클라우와 무페의 계급환원론에 대한 비판은 한편으로 풀란차스가 정치적인 것의 우위를 주장하는 논거가 되었던 상대적 자율성에서 출발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라클라우와 무페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계급환원론으로부터 벗어나와 사회변혁에 있어서 주체의 중심부재 또는 비고정성(unfixity)이라는 논리로 옮겨가게 된다. 사회관계가 복합적인 것처럼 사회적 적대도 다원적이라는 것이다.[25] 달리 말하자면, 모든 사회적 관계는 그것이 종속관계로 접어들기만 하면 곧 적대관계로 변하며, 따라서 생산관계에서의 종속으로 인한 적대는 여러 적대관계의 하나에 불과하다는 것이다.[26] 또한 그들에 의하면, 이러한 사회적 적대들을 결합하여 사회변혁을 위한 출발점을 정한다든가 혹은 그 과정을 수정하는 어떤 주체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더욱이 사회적 적대들이 결합되는 형태가 미리 규정되어 있지도 않다고 한다.[27]

라클라우와 무페가 논한 주체의 중심성 부재 또는 비고정성에 대한 주장은 사회변혁을 위한 투쟁에서 노동계급이 중심성 또는 특권을 갖지 못한다는 것을 설명하는데서 보다 구체화된다. 그들은 우선 반자본주의 투쟁에서

---

24) *Ibid.*, pp.115-7.

25) 적대(antagonism), 종속(subordination), 억압(oppression), 지배(domination) 등의 개념은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다. 종속은 고용자에 대한 피고용자의 관계처럼 한 행위자가 다른 행위자의 결정에 따르는 것을 말하고, 종속이 적대로 변형되었을 때 억압관계라고 부른다. 그리고 억압관계이거나 또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종속관계들의 묶음이 지배관계이다. Ernesto Laclau and Chantal Mouffe, *Hegemony and Socialist Strategy : Towards a Radical Democratic Politics*(London : Verso, 1985), pp.153-4.

26) Mouffe, "Hegemony and New Political Subjects," p.91.

27) Laclau and Mouffe, *Hegemony and Socialist Strategy*, pp.168-9, 180.

노동계급이 특권화된 역할을 차지한 적이 없다는 경험적 사실을 들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에 직접적인 적대가 발생하기 보다는 환경오염, 지역불균형, 무기경쟁 등과 같은 문제들을 둘러싸고 광범위한 사람들이 참여한 가운데 적대가 전개된다고 한다. 물론 이러한 문제들이 자본주의의 발달과 관계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단순히 생산관계라는 차원에서가 아니라 전세계적인 정치적 결정에서 비롯된다고 라클라우와 무페는 설명한 바 있다.[28]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들은 사회주의를 위한 반자본주의 투쟁이 민주주의의 확장에 달려있다고 설명했다. 즉, 반자본주의는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 안에 포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자본주의가 붕괴되더라도 또 다른 억압을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라클라우와 무페의 중심성 부재에 대한 논의는 밀리반드가 노동운동 중심의 사회변혁운동을 주장했던 것과 첨예한 대조를 이룬다.

사회변혁에 있어서 주체의 중심부재와 비고정성에 관한 라클라우와 무페의 논의는 담화(discourse) 개념에 의해 뒷받침된다. 이들이 말하는 담화란 말하기 또는 쓰기만이 아니라 모든 종류의 의미화를 포함한다.[29] 특이할 만하게도, 하나의 표현은 수많은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담화에 의해 매개되는 사회적 관계가 객관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 라클라우와 무페의 주장이다. 또한 담화의 대상은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담화적인 것과 비담화적인 것은 적대적이지도 않으며 모든 인간의 역사와 사회가 담화로 인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점은 주체의 개념을 해체하고 객관적 상황을 무시하는 후기구조주의(post-structuralism)의 인식론으로부터 크게 영향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 신민주적 투쟁

라클라우와 무페는 이상과 같은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오늘날 확산되

28) "포스트 맑스주의는 변명하지 않는다," p.134.

29) Ernesto Laclau, "Metaphor and Social Antagonisms," in Nelson and Grossberg, eds., *Marxism and the Interpretation of Culture*, p.254.

고 있는 신사회운동에 대해 언급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이론을 주장하는데 있어서 신사회운동이라는 표현보다는 '신민주적 투쟁'이라는 용어를 즐겨 사용하였다. 신민주적 투쟁이란, 사회변혁을 위한 담화가 정치영역에서부터 경제영역, 그리고 사회영역(성, 인종, 세대, 지역, 종교, 반권위주의, 생태 및 환경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불평등과 종속을 해체시키는 방향으로 전개되는 투쟁을 말한다.[30] 이것들은 분명 계급투쟁으로 간주되는 노동자들의 투쟁과 다르다.

여기서 그들이 중요하게 여긴 것은 적대관계들이 전시효과(demonstration effect) 또는 방사효과, 등가효과를 가지면서 확산된다는 점이다. 즉, 한 영역에서의 적대는 다른 영역으로 급속히 전파되는데 그것은 노동계급과 같은 어떤 특별한 주체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연발생적으로 접합된다는 것이다.[31] 전시효과에 대한 설명은 그들이 인용하였던 토크빌(Alexis de Tocqueville)의 저작 『미국 민주주의』(Democracy in America) 중의 민주주의 혁명에 관한 다음 부분에서 큰 영감을 얻었던 것라고 할 수 있다.

> 궁극적으로 다른 영역에서의 평등이 정치세계에 침투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것은 온당치 않다. 인간이 한 측면에서는 불평등하고 다른 측면에서는 평등한 상태로 영원히 살 것이라고 생각할 수 없다. 인간은 어느날 갑자기 모든 측면에서 평등하게 될 것이다.[32]

말하자면, 자유민주주의가 서구 사회에서 하나의 상식으로 여겨지게 되자 토크빌이 말했던 '조건들의 평등화'(equalization of conditions)에 의해 위계적 질서에 대한 도전이 확산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면 라클라우와 무페는 신민주적 투쟁의 직접적인 발생원인을 어디서 찾고 있는가? 첫째, 그들은 포드주의(Fordism)의 영향으로 자본주의 생산

30) Mouffe, "Hegemony and New Political Subjects," p.91 ; Laclau and Mouffe, *Hegemony and Socialist Strategy*, p.159.

31) Laclau and Mouffe, *Hegemony and Socialist Strategy*, p.181.

32) Mouffe, "Hegemony and New Political Subjects," p.89에서 재인용.

양식이 인간생활의 모든 영역에 확산되었다는 점에서 찾았다. 1940년대부터 박차가 가해진 포드주의는 표준화된 상품을 생산하는 기계적인 체계로서, 이것은 자연히 대규모의 소비를 촉진하여 서구 사회를 광대한 시장으로 변화시켰다. 이는 결국 인간의 삶을 '상품화'시켜 기존의 사회적 관계를 파괴시켰다. 예를 들어, 문화, 레저, 병, 교육, 성, 죽음에 이르기까지 인간은 모든 측면에서 상품화된 삶을 누려야만 했다. 라클라우와 무페에 의하면, 이러한 포드주의의 영향은 결코 벨(Daniel Bell)이 말하는 이데올로기의 종언을 가져오지도 않았고 마르쿠제(Herbert Marcuse)가 두려워한 일차원적 인간을 낳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오히려 포드주의와 상품화 과정 중에서 발생한 자원의 고갈, 환경오염에 대한 저항운동으로서 생태학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으며, 도시화 또는 지역불균형에 대한 저항이 전개되었다.[33] 둘째, 라클라우와 무페는 케인즈적 복지국가 개입의 증대에 따른 관료제의 팽창과 공적영역의 증대를 들고 있다. 이같은 변화는 민주화라는 측면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새로운 종속을 발생하였으며, 사적 영역을 축소시켜 새로운 사회적 권리를 위한 저항이 나타나게 되었다. 아이러니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국가개입의 결과 복지의 영역이 확대되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복지권운동 등 국가에 대한 요구들이 더욱 증대되었다는 점이다.[34]

밀리반드와 라클라우 및 무페 사이에 변혁주체에 대한 설명이 다른 것처럼, 사회변혁의 전략에 대한 주장에도 차이가 있다. 라클라우와 무페는 전시효과에 의해 확산되는 민주주의 혁명을 더욱 촉진시키는데 촛점을 맞추었던 것 같다. 즉, 그들은 민주주의를 '급진적'으로 이룩하고자 하였다. 문제는 누가 과연 헤게모니적 담화를 만들어 내는가 또는 누가 다원적인 적대들을 접합하는 역할을 하느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그들은 명확한 답을 내리지는 않았다. 다만 이 문제에 대해 추론할 수 있는 두가지 답이 있는데, 하나는 아무도 될 수 없거나 또는 누구나 될 수 있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외부의 행위자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전자의 경우 불확정적 다

33) Laclau and Mouffe, *Hegemony and Socialist Strategy*, pp.162-3.

34) *Ibid.*, p.163.

원적 주체인 민중이고, 후자의 경우 지식인이 될 수 있다.[35] 한가지 분명한 것은 그들이 당이나 조직을 헤게모니적 담화를 구성하는 주체로 보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러한 제도적인 것들은 다양한 운동을 접합시키기에는 너무 권위주의적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36]

다만 그들이 성공적인 신민주적 투쟁을 위한 도구로서 확장적 헤게모니(expansive hegemony)와 조직적 이데올로기(organic ideology)가 필요하다고 논하였다. 전자는 등가효과를 발휘하여 다양한 민주적 요구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우파의 방해를 저지하기 위한 것이고, 후자는 투쟁을 단합시키는 후기산업주의(post-industrialism) 이념이라는 것이다.[37]

이상과 같은 전략은, 최근 흔히 논의되고 있는 국가-시민사회라는 이원론적인 구분에 기반을 두고 후자가 전자를 전복시키고자하는 투쟁전략과 판이하게 다르다. 실제로 라클라우와 무페는 국가 자체가 동질적인 매체라기 보다는 수많은 민주적 적대들의 장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38] 이 점은 밀리반드가 말한 노동운동 중심의 '밑으로부터의 압박 또는 투쟁'이라는 전략과 대조된다.

Ⅳ. 사회주의권의 몰락과 신좌파의 진로

사회변혁을 논의하였던 밀리반드와 라클라우 및 무페가 사회주의 대변혁을 어떻게 보았으며, 이 사건에 즈음하여 나타났던 후쿠야마(Francis Fukuyama)식의 '역사 종말론'에 대해 어떻게 대응했는가? 밀리반드는 올해 5월 자신이 사망하기 전까지 이 문제에 대해 비교적 구체적인 답을 제시했던 반면, 라클라우와 무페는 그렇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자

35) Wood, *The Retreat from Class : A New 'True' Socialism*, pp.62-3.
36) Mouffe, "Hegemony and New Political Subjects," p.104.
37) *Ibid.*, pp.99, 103.
38) Laclau and Mouffe, *Hegemony and Socialist Strategy*, p.180.

가 자유민주주의, 즉 신보수주의와 신자유주의에 대해 펼쳤던 경계의 논리를 바탕으로 우리는 이상과 같은 질문에 대한 두 그룹의 이론가들의 반응을 논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밀리반드 중심의 분파는 기존 사회주의권의 몰락을 다음과 같이 파악하였다.[39] 첫째, 그들은 기존 사회주의체제의 붕괴가 자신들이 추구하는 사회주의에 대한 오해의 불명예를 지우는 중요한 계기라고 보았다. 정치적 실체로서 존재하였던 동구 및 소련 사회주의체제는, 단순히 생산수단의 공유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와 평등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는 진정한 사회주의의 의미를 무시했다는 점에서 사회주의 개념을 왜곡시킨 체제였다는 것이다. 둘째, 그들은 특히 소비에트연방의 해체로 세계는 미국이라는 하나의 강대국을 중심으로한 자본주의체제를 형성하게 되었으며,[40] 사회주의체제들은 모두 자본주의체제에 종속되어 주변 자본주의(peripheral capitalism)에 머무르게 되었다고 간주하였다. 셋째, 동구 및 소련 사회주의권의 몰락은 그것에 그치지 않고 중국, 베트남(사실은 북한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임) 등 현존 사회주의권을 자본주의체제의 주변부에 흡수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그들은 파악하였다. 체제의 생존을 위해 중국은 이미 권위주의적 자본주의체제로 전환되었으며, 베트남은 자본주의적 요소를 중국보다 더 많이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주의 대변혁에 대한 이상과 같은 평가는 자신들의 사회주의 개념을 차별화하려는 의도를 반영하는 것인 동시에 우파, 즉 신보수주의 또는 신자유주의로부터의 위협에 대한 우려의 표현이라고도 할 수 있다. 실제로 그 위협은 후쿠야마의 '역사 종말론'에 잘 나타나 있다. 후쿠야마는

39) Leo Panitch and Ralf Miliband, 'The New World Order and the Socialist Agenda," R. Miliband and L. Panitch, eds., *Socialist Register, 1992* (London : Merlin Press, 1992), pp.3-4.

40) 이 점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세계체제론의 입장에선 학자들은 오히려 '팍스 아메리카나'의 해체로 본다. 대사회주의체제를 위한 미국 중심의 구도가 변형되어 자본주의 세계체제 내에서 미국, 일본, 유럽연합이라는 3극체제 간의 갈등이 표면화되었다고 파악한다. 이수훈 · 여현덕, "전환기 세계체제와 한국 정치 · 사회 변화의 흐름,"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편, 『한국 정치 · 사회의 새흐름』(서울 : 나남, 1993), pp.31-3.

사회주의 대변혁으로 묘사되는 최근의 세계적 변화가 인간사회의 진화패턴, 즉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인류의 보편적 조류를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며, 일부 지역에서의 자유민주주의의 실패가 결코 이러한 진화패턴을 부정하는 증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물론 그가 말하는 자유민주주의란 시장경제에 기반한 서구적 전통에 기반한 민주주의를 말한다.[41]

후쿠야마의 견해에 대해서 밀리반드는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양립불가능한 것이라고 반박하였다. 자본주의는 소수의 소유계급이 산업과 재정뿐만 아니라 커뮤니케이션까지 장악한 체제로서, 진정한 의미에서 조건의 평등을 추구하려는 민주주의를 침해할 것이기 때문에 병존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그는 후쿠야마가 말하는 민주주의란 선거에 의한 정부의 선택과 같은 지극히 형식적인 개념의 민주주의라고 보면서, 이런 민주주의는 부르조아의 대변자인 정치 엘리트에 의한 지배를 정당화시켜주는 장치라고 비판하였다.[42] 따라서, 밀리반드는 악의 근원인 자본주의가 존재하는 한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의 대안은 지속적으로 유효하다고 주장하기에 이른다.

한편, 라클라우와 무페는 밀리반드식의 직접적인 평가를 내리지는 않았지만, 신보수주의와 신자유주의를 비판함으로써 이미 후쿠야마식의 논의를 반박해놓은 셈이었다. 이들에 의하면, 신보수주의는 새로운 적대의 출현을 '민주주의의 과잉'으로 이해하면서 국가를 사회로부터 분리시켜 별개의 실체로서 간주하려는 경향을 보였다는 것이다. 라클라우와 무페는, 헌팅톤(Samuel P. Huntington)과 브레진스키(Zbignew Brzezinski)로 대표되는 이런 지적 흐름이 민주주의의 적용 범위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개념 자체를 재규정했다고 비판했다.[43] 이들은 또한 하이예크(F. A. Hayek), 프리드만(Milton Freedman), 노직(Robert Nozick) 등으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가 개입주의적 국가와 그것의 관료제가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한다고 비판하였지만, 이런 관점이 오히려 신보수주의자들에 의해 복지국가를 해체

41) Francis Fukuyama, *The End of History and the Last Man* (New York : Free Press, 1992).

42) Miliband, "Fukuyama and the Socialist Alternative," *New Left Review*, 193 (1992), p.110.

43) Laclau and Mouffe, *Hegemony and Socialist Strategy*, pp.165-6, 173.

하려는 의도로 악용되고 말았다고 주장하였다.[44] 결국 신자유주의든 혹은 신보수주의든 우파의 논리는 결코 종속으로부터의 해방과 평등한 권리의 보장이라는 민주주의의 이념을 보장해주지 못했으며, 따라서 신민주적 투쟁은 지속되어야 한다는 논리이다.

Ⅴ. 결 론

지금까지 충실한 마르크스주의자인 밀리반드의 노동계급 중심의 사회변혁이론과 후기 마르크스주의자로 대표되는 라클라우 및 무페의 비고정적이고 다원적인 주체에 의한 급진적 민주주의론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이들이 제기한 논의를 요약·비교하는 것으로 결론을 맺고자 한다.

밀리반드는 자본주의의 발전으로 인해 노동계급이 보편적 계급으로서의 의미를 잃어가고 있음을 인정하였다. 그는 또한 신사회운동이 새로운 요구를 내세우며 등장하게 된 이유도 노동운동의 한계 때문임을 자인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모든 악의 근원이 자본주의적 생산관계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기 때문에, 사회변혁의 주체는 생산관계에서의 피착취자인 노동계급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밀리반드 주장의 상당 부분이 강령적인 것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신사회운동에 노동계급뿐만 아니라 쁘띠 부르조아가 참여하여 초계급적 성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노동운동의 우위를 주장하는 것은 분명 당위적인 전략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다.

라클라우와 무페는, 한편으로 자본주의 발전과 변화로 인하여 노동계급이 분절화되었다는 경험적인 사실을 입증하고 다른 한편으로 계급환원론의 논리적 모순성을 비판하면서 사회변혁의 주체의 다원성과 비고정성을 주장하였다. 자본주의사회에서 적대는 단순히 생산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

44) *Ibid.*, pp.171-2, 175.

니라 그 외적인 관계에서 이루어지며, 그것들은 담화에 의해 서로 복합적으로 접합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노동계급이 사회변혁의 특권적 위치에 놓일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한다.

이들 두 그룹의 신좌파 이론가들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표에 있어서도 이견(異見)을 보였다. 밀리반드는 밑으로부터의 계급투쟁을 주장했던 만큼, 아무리 점진적인 민주주의적 방법을 논했다고 하더라도 그에게는 자본주의를 극복하는 것이 사회변혁의 궁극 목표이다. 따라서 그에게 있어서 민주주의는 사회주의라는 개념에 포괄된다. 한편 라클라우와 무페는 자본주의가 극복되더라도 새로운 적대와 억압은 지속될 수 있다고 간주하므로 신민주적 투쟁은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전시효과나 등가효과에 의해 신민주적 투쟁은 확산되고 있지만, 급진적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확장적 헤게모니와 조직적 이데올로기가 필요하다고 그들은 주장하였다. 그들은 반(反)자본주의가 민주주의의 확장에 달려 있다고 봄으로써, 전자가 후자에 포괄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밀리반드, 라클라우, 무페는 공히 우파의 논리에 대해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사회주의 대변혁과 그에 따른 우파의 논리(후쿠야마의 역사의 종말론으로 대표되는)에 대해, 밀리반드는 오히려 사회주의 개념에 대한 오해의 불명예를 벗겨주는 것이라고 맞섰다. 또한 라클라우와 무페는 밀리반드와 같은 대응을 하지는 않았지만 일찌기 신보수주의와 신자유주의가 민주주의 개념을 재조정 혹은 축소·왜곡하였다는 역사적 사실을 들어 이를 논박한 바 있다. 결국 그들의 논리는 사회주의권의 몰락에도 불구하고 급진적 민주주의론이 계속 유효하다는 셈일 것이다.

빈 면

Abstract

The Prospect of Nationalism as the Ruling Ideology in Kim Jong-il's North Korea ····· Sang-In Jun ··· 271

Prospects for Kim Jong-il Regime's Economic Policy ····· Sun-Song Park ··· 273

Military Policy Prospects for the Kim Jong-il Regime ····· Young Tai Jeung ··· 275

Prospects for Kim Jong-il Regime's Policy Toward South Korea ····· Hyun-Joon Chon ··· 277

The Succession of Kim Jong-il and the Prospects for the Normalization of Japan–North Korean Relations ····· Dong-jin Chun ··· 279

Social Transformation in North Korea: Focus on the Prospects for the Development of the Second Society ····· Jae-Jean Suh ··· 281

Institutional Problems of the Fundamental Rights Safeguards in North Korea ····· Myoung Bong Chang ··· 283

A Methodological Approach to the Transformation of the North Korean Economic System ····· Youngyoon Kim ··· 287

Socialist Systems Collapse and the Vision of the New Left: With Special Reference to Miliband, Laclau and Mouffe ····· Sung Chull Kim ··· 289

빈 면

The Prospect of Nationalism as the Ruling Ideology in Kim Jong-il's North Korea

Sang-In Jun, Ph.D.(RINU)

Even though North Korea is still in a serious trouble in terms of economic conditions, the communist regime seems finally to have survived the global crisis of Marx-Leninism of the late 1980s and early 1990s. The 1994 US-DPRK Geneva agreement on the nuclear issue not only endorsed a father-to-son succession of power, but also resulted in the international recognition of the North Korean regime in the post-Cold War era. Kim Jong-il's North Korea now expects a fresh new start.

Since the mid-1980s when Pyongyang began to face a series of challenges, domestic as well as international, nationalism was reborn, insisting on the superiority of North Korea's own style of socialism or socialism *a la* North Korea. The idea of Juche (self-reliance) began to encourage the spirit of Korean nationalism at the expense of the Marx-Leninist cliche, and Kim Jong-il, who was officially confirmed as the power successor in 1980, played a key role in this gradual evolution of the ruling ideology. It is expected that this transformation will continue under his regime.

Korean nationalism represents itself most remarkably in the theories of "Koreans first," "socialism *a la* North Korea," "great unity of all Koreans," and the cultivation of "traditional culture." Even though the idea of nationalism has been nothing new because North Korea experienced a "national communism" even from the beginning, nationalism itself was something to be refrained from. Since the late 1980s,

however, especially under the Kim Jong-il regime, Korean nationalism has many reasons to be encouraged.

First, nationalism appears as an ideological alternative to socialism, on its way out worldwide. In addition, it can fill in the blank of Juche ideology caused by the death of Kim Il Sung. Second, as emphasis on Korean nationalism, especially the idea of "pan-Korean unity," will prevent a German-style unific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Third, by underlining traditional cultural heritage, the Pyongyang leadership expects to direct attention from for the current economic hardship.

Finally, when we regard the opening of the nation to the capitalist world economy as inevitable and imminent, the North Korean regime may expect, in the name of nationalism, an inflow of capital and technology from South Korea and Koreans abroad.

Prospects for Kim Jong-il Regime's Economic Policy

Sun-Song Park, Ph.D.(RINU)

The main proposition of this paper is that the reform and opening policy initiated at the end of the Kim Il Sung era will be limited for the moment, but Kim Jong-il will sooner or later return to his father's economic policy.

As a result of the economic crisis beginning in the early 1990s, Kim Il Sung set the three years 1994–1996 as a readjustment period and began to reform and open the North Korean economy by putting priorities on agriculture, light-industry and trade. The principle of economic policy would turn from autarkic and uneven to an opened and balanced development, according to which policy investment should be concentrated on agriculture and light industry. In order to find investment resources, trade should also be expanded. Economic organization and management would then begin to be decentralized so as to heighten economic efficiency. In addition, political and ideological control was reinforced to minimize the effect of economic reform on North Korean society. In a word, the economic reform in Kim Il Sung's final period is characterized on the one hand by the introduction of modern rationality to the economic domain, on the other hand by the reinforcement of political and ideological controls.

Kim Il Sung's transformation of economic policy was a response both to the long-term economic depression of North Korea and to the global trend of system transition from socialist to capitalist. From this

point of view the base of economic reform in the last period of Kim Il Sung's rule can be appreciated as reasonable.

Kim Jong-il's regime seems to be continuing the reform and opening policy. But for the moment to maintain the regime and the socialist socio-economic system *là nôtre*, he may stiffen economic policy and reinforce political control in the economic domain with emphases on consciousness and morality under Juche ideology to compensate for his lack of political charisma.

Controlled and limited reform, however, will be unable to ameliorate North Korea's economic crisis, and Kim Jong-il should return to the more enlightened reform policy as soon as his regime stabilizes. In such case, North Korea will cope with the problem of system transition and a reform policy will replace the current transition policy.

Military Policy Prospects for the Kim Jong-il Regime

Young Tai Jeung, Ph.D. (RINU)

If the logical structure of state security consists of the subject, object and threatening factors, all these three factors are focussed in North Korea upon the maintenance of the Kim Il Sung unitary regime. The subject of the national security is Kim Il Sung, the object is the Kim Il Sung unitary system and the threatening factor is any foreign affairs that might influence the unitary system. North Korea's military policy is also based on such logic. North Korea has been excessively building up its military and has been taking the offensive position. This can all be understood in light of holding on to the Kim Il Sung unitary system and expansion of the system for regime security. In fact, North Korea has been building up regime security in order (1) to achieve forceful communization of South Korea and to maximize the duration of the Kim Il Sung regime, (2) to enhance internal unity by regimentation of the whole society, and (3) to secure autonomy from China and the Soviet Union and build up defense capability against the US military threat.

Since Kim Jong-il has replaced his father, there has been no change in the fundamental security logic. Then what military policy will Kim Jong-il adopt to consolidate his regime? Since the 1990s, North Korea has been facing environmental changes such as the acceleration of reform and opening in China, East European socialist countries and the Soviet Union. In the face of and the fall of the such circumstances, it is upholding "our-style of socialism" and emphasizing ideological, po-

litical and military armament against the wind of reforms blowing into the country. Therefore, to maintain his regime Kim Jong-il will try to stop the destabilizing factors from outside by emphasizing the Juche ideology rather than by actively implementing reform and opening policies. In this context, although Kim Jong-il will for the time being restrain from pursuing adventurous military hardline policy, he will not renounce the policy priority on the military that is a precondition for maintaining his regime. Instead of its past exhaustive military buildup, North Korea will now try to sustain its military superiority by acquiring offensive arms such as nuclear weapons and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t the same time, it will play a double-sided policy, simultaneously easing tension on the peninsula by proposing talks in arms reduction. By keeping the ambiguity of its nuclear weapon developing capability, North Korea will militarily check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while continuing its reconciliatory peace offensive to put the South into a dilemma and bring about confusion in its economy. In the future, therefore, Kim Jong-il will persistently demand the signing of the US-DPRK peace treaty, withdrawal of US troops from South Korea and arms reduction to foster a quasi-peaceful mood on the peninsula.

Prospects for Kim Jong-il Regime's Policy Toward South Korea

Hyun-Joon Chon, Ph.D. (RINU)

Since the liberation, North Korea has set up as its state goal socialism over the whole peninsula, so South Korea and its ally the United States have been North Korea's enemies. Due to the depression of the North Korean economy and degeneration of the socialist ideology, Pyongyang's goal to communize the Korean peninsula is now fading away. The collapse of the socialist countries in 1989 in particular forced North Korea to change its fundamental policy. However, it is still setting up South Korea as its enemy state for the maintenance of its regime, meanwhile attempting reconciliation with the United States. Despite the death of Kim Il Sung, therefore, there seems to be no foreseeable policy change toward South Korea. Kim Jong-il has emphasized that he will follow the teachings of the departed Kim Il Sung. Then what will be the concrete content of North Korea's policy toward South Korea?

First, in order to reinforce the weakened antagonism that is coming from the attempts to improve relations with the United States, North Korea will increase the denunciation against South Korea as its main enemy because North Korean solidarity has always been maintained through the people's view of a common enemy. Sudden disappearance an enemy would weaken the unity and result in political and psychological anomie among the people, which in turn would lead to the collapse of the system as a whole.

Second, as was the case in the Kim Il Sung era, Kim Jong-il will

emphasize its "united front for the national unification." It is predicted that he will strongly denounce the South while applying, based on the theory of nationalism, Pyongyang's united-front strategy and playing upon the economic and social class oppositions in the South. Such united front strategy presupposes the realization of unification by federation in accordance with the teachings of Kim Il Sung, and it will consolidate the Kim Jong-il regime.

Third, Kim Jong-il seems to be relieved of the US onslaught against North Korea that threatened him following the collapse of the socialist countries in 1989. He has regained confidence in regime maintenance by reaching an accord with the United States in high-level talks. He will now try to procure economic gains through activating a controlled economic opening in special economic zones and use the profits to enhance military capability and to raise the living standard of his people, thereby fulfilling the dual goals of military and economic growth. Although he knows that the North Korean economy needs South Korea's capital to vitalize the economic special zones, based on the united front strategy he will try to exclude the participation of the ROK government and make direct selective contact with South Korean enterprises.

The Succession of Kim Jong-il and the Prospects for the Normalization of Japan–North Korean Relations

Dong-jin Chun, Ph.D.(RINU)

After the death of Kim Il Sung on 8 July 1994, the transition of power to designated heir Kim Jong-il appears to have proceeded smoothly in North Korea. But North Korea under Kim Jong-il's reign is confronted with enormous challenges. North Korea's economy shrank by more than twenty percent over the past four years. Resulting hardship in ordinary life and severe food shortages among North Korea inhabitants could lead directly to a regime crisis. North Korea is thus obliged to open its economy attentively to the other Western countries including Japan in order to procure their economic assistance and solicit their investments.

On the other hand, Japan welcomes the Geneva accord signed on 21 October 1994 between the US and North Korea regarding the nuclear issue and the diplomatic normalization as an event that will facilitate the negotiation for diplomatic normalization between Japan and North Korea. Japan under socialist Prime Minister Tomiichi Murayama is eager to normalize diplomatic relations with North Korea in order to extend Japanese influence to the entire Korean peninsula.

There are some elements, however, that limit any sudden normaliz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First, they have to resolve various problems through negotiation such as the suspicion over past North Korean nuclear activities. There also needs a Japanese apology and

compensation for violence during the colonial period. Second, Japanese political parties are forming groups of two or three for the election anticipated in 1995 under the new electoral system passed 21 November 1994. Japanese coalition government is so unstable that no political leader would be determined to take an active role in the negotiation process.

Third, Japanese cooperative relations with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in the political and strategic realm will restrain the rapid progress of negotiation.

Negotiations over the normalization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Japan and North Korea, interrupted after the eighth round in November 1992, will thus be reopened at the beginning of next year, but it will take some years for the two countries to achieve full diplomatic relations.

Diplomatic normalization and resulting Japanese economic assistance to North Korea will in the short term improve North Korean economic difficulties, but it will not be able to resolve all the economic problems due to the lack of reform in the North Korean politico-economic system. Normaliz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will allow Japan to increase not only its economic role but also its politico-security role on the Korean peninsula.

Social Transformation in North Korea: Focus on the Prospects for the Development of the Second Society

Jae-Jean Suh, Ph.D. (RINU)

North Korean society is generally understood as a typical totalitarian society. It functions through Juche ideology and a command economic system that is under a uniform structure and single-value system. If the Soviet Union and the East European socialist countries collapsed due to the growth within of a second society, at which stage of development of such a second society can we say North Korea may be at present? Or is it completely different from the other socialist countries?

This article analyzes the social mobilization capacity, population composition, class structure, personality structure, elite structure and economic structure in North Korea to look into the development of a second society. As a result of the analyses of these six factors, North Korea is assessed to be a Stalinist, power-centralized social system, but it is experiencing structural diversifications of society. Besides the official social sectors, unofficial sectors are developing in North Korea.

Such structural diversifications were the main factor of the collapse of the Soviet Union and the East European socialist countries. Therefore this has quite an implication for North Korea as well. It is no longer valid to view North Korea as a uniform society. The sudden collapse of the Soviet Union, which had apparently been stable, was due to the intensification of this dual structure. A second society is also developing in North Korea, though it is still weak. Irrespective of

the will of the leadership, structural diversification is under progress in North Korea and is resulting in changes in the consciousness of the people.

Such fact implies that the private sphere is developing in the dominant collective society of North Korea. This means that North Korean society, formerly dominated by the political initiative of Kim Il Sung and Kim Jong-il, is rendering room for the expansion of the private sphere.

Institutional Problems of the Fundamental Rights Safeguards in North Korea

Myoung Bong Chang
Professor, Kookmin University

The small number of people who have escaped from North Korean detention camps, including workers in the Russian Far East logging camps, have provided evidence that tens of thousands of people have been detained under various forms of arbitrary arrest in extremely harsh conditions, and that thousands more appear to have been victims of unacknowledged imprisonment, torture and summary execution. In addition, international human rights organizations such as Amnesty International (AI), Asian Watch and the Minnesota Lawyers International Human Rights Committee (MLIHRC) have also pointed out that North Korea is the world's worst example among human rights situations today.

In particular, according to recent AI reports (24 March 1993, 24 March 1994), capital punishment has been widely used in North Korea as a penalty for a variety of crimes including political offenses. Prisoners sentenced to death are displayed and executed at public meetings or in front of assembled inmates. In addition many political prisoners appear to have been detained without charge or trial. Trials, if they are carried out, appear to be grossly unfair.

In a democracy these violations of fundamental rights are beyond imagination, but in North Korea formal human rights safeguards appear to have been institutionally disregarded in various aspects.

This article thereupon analyzes the institutional problems of human rights safeguards in North Korea's internal and international law, and

seeks improvement measures. It is also hoped that this article can render an outlook on the human rights situation under the Kim Jong-il regime.

Even though North Korea ratified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ICCPR) and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CESCR) in 1981, these Covenants appear not to have been fully put into practice. North Korea has reserved the so-called optional clause (Article 41 of ICCPR) and optional protocols of ICCPR, which provided implemental measures of the Covenants. Moreover, it has so far failed to submit its second report on its implementation of the ICCPR to the Human Rights Committee—this has been overdue since 1987. No organizations within North Korea are permitted to monitor human rights conditions or to observe violations. North Korea does not belong to any international human rights organizations, and has ignored visit offers of organizations such as AI, Asia Watch, and others.

In the light of law and in practice, it is necessary to maintain a positive attitude toward violations of fundamental rights in North Korea. Some suggestions to improve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North Korea are the following.

First, ways of exploring improvements of human rights in North Korea would be possible through mutual contacts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As yet there is no agreement between them regarding human rights problems. "The Agreement on Reconciliation, Nonaggression, Cooperation and Exchange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signed in December 1991 and effected in February 1992, does not contain any clauses concerning human rights. Henceforth, it is desirable that some agreements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be reached on human rights problems; for instance the so-called Charters

of Korean Commonwealth, which would assume the second stage of the "Unification Formula for the Korean National Community" affirmed by President Kim Young Sam on 15 August 1994 could contain such measures.

Second, endeavors to improve human rights should run parallel with measures of international nuclear safeguards. In this respect, it is hoped that a regional convention concerning human rights be adopted in the Asia-Pacific area, similar to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 and the Americ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It is necessary for all regional nations to persuade North Korea to be take part in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to play an active role in the improvement of human rights.

Third, on a long-term basis it is consequential for North Korea to increase openness in policies, and to democratize its isolated society more effectively. This will ultimately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North Korea. On that account, it would be quite desirable to activate economic exchange and cooperation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which will eventually open and reform North Korean society.

At present the Kim Jong-il regime confronts an economic crisis and international isolation due to changing domestic and foreign environments. To find a way out of these difficulties Pyongyang will extend its controlled and partial open-door policies. To maintain its regime Kim Jong-il regime will have to adopt more realistic policies, even while it does have a need for ideological control over its people. It is thereby prospected that the Kim Jong-il regime will continue to repress and subject its citizens to rigid controls, under its policy of "our-style socialism."

빈 면

A Methodological Approach to the Transformation of the North Korean Economic System

Youngyoon Kim, Ph.D.(RINU)

Since German unification, discussion of the issue of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can be said to be focussed on whether to carry out a gradual or rapid unification. Despite the importance of how, after unification, to transform the North Korean economy to a market economy, there has as yet been no systematic discussion on the matter. In this article, based on the assumption that the two Koreas will have achieved political integration, attempts are made to examine a rational way to integrate the two economic systems. The focus is placed on the question, if North Korea's "our-style socialism" is to undergo system transformation to a market economy as did East Germany, the East European socialist countries, China and the Soviet Union, which method and process would be desirable.

The article first presents its concept, condition and method of system transition, and examines the cases of East Germany and Hungary as well as the monetary reforms of West Germany that were implemented in 1948.

For a socialist economic system to change to a market the following legal and institutional devices should be adopted and enforced. First is price liberalization. Second, free market entrance by both producer and consumer, as well as market withdrawal, should be legally and institutionally guaranteed. Profit and surplus acquired in market activities should be ascribed to the producers and consumers them-

selves. Third, an open economy should be realized that permits free foreign trade and capital transfer.

Two methods can be considered. First would be the application of shock therapy (as in East Germany); the other would be a gradual approach (as in Hungary and some other East European socialist countries).

Shock therapy implies an overall enforcement of the main policies required in establishing market economy and liberal democracy. In contrast, gradualism suggests step-by-step system transition through reform under the existing central planning mechanism.

To integrate a socialist system into a market economy it would be rational, first, to achieve economic liberalization after political integration through applying shock to the socialist economy. After the socialist economy had acquired some capacity within the market, then integration of the two economies would be the next step. Transformation of the North Korean economy would follow.

The following factors should be taken into consideration in transforming the North Korean economic system. First, shock therapy should be utilized. Second, enterprises impossible to be privatized but which are yet competitive should be vitalized by running them as state enterprises. Third, rather than investment subsidy, wage subsidy should be provided to firms that are competitive but which require support. Fourth, after unification, workers in the northern region should be guaranteed employment security through the enterprises concerned. Such security, however, should be excluded for workers who wish to emigrate south. Fifth, the issue of North Korean wages should be put under the function of the market mechanism, thus making an increase in productivity a precondition for wage hikes. Sixth, for exchanges between the two Koreas it would be desirable to set the exchange rate in accordance with market value.

Socialist Systems Collapse and the Vision of the New Left: With Special Reference to Miliband, Laclau and Mouffe

Sung Chull Kim, Ph.D. (RINU)

The collapse of socialist systems of the East European countries and the Soviet Union was one of the most significant events in contemporary human history. On the one hand, it brought about the emergence of a new world order by which the old communist block has been incorporated into the capitalist system. On the other hand, it surprised social scientists and intellectuals, who had not been able to predict such a historical event. How the leftist intellectuals have responded to that event, however, is also our important concern. This paper compares Ralf Miliband, Ernesto Laclau and Chantal Mouffe, who have presented theories of radical social transformation, and then examines their views on the collapse of the socialist systems and on the intellectual trend that followed.

Miliband, as a faithful Marxist, emphasized the social transformation by the working class. Of course, he did acknowledge that due to the development of capitalism, the working class has lost its meaning of the 'universal class' representing the demands of various segments of a society. He also admitted that this is why the new social movements have spread in advanced capitalist societies. However, he argued that the main driving force for social transformation still has to be the working class, because production relations in which workers are exploited by the bourgeoisie is the main source of evil.

Unlike Miliband, Laclau and Mouffe criticized the classical Marxist

'class reductionism' on the ground that the working class in contemporary capitalist societies has been divided due to the emergence of white collar workers. They maintained that the driving force for social transformation is unfixed and plural. This is not only because antagonism is diverse in contemporary society but also because it occurs in production relations as well as in various other aspects of social life. Accordingly, the working class can no longer stand as a privileged segment for social transformation.

Despite the differences between Miliband, Laclau and Mouffe, they have in common been critical to the scholars of the New Right, who support liberal democracy based on market economy and cheer on the collapse of the socialist systems. Miliband denounced Francis Fukuyama's theme of the 'end of history' through the decay of socialism; he sought to differentiate between his own conception of socialism and the socialist systems of history. On the other hand, even though Laclau and Mouffe have not responded to the breakdown of socialism or to Fukuyama's theme, they have indeed denounced neoliberalism and neo-conservatism in that these intellectual trends distort and limit the concept of democracy.

統一硏究論叢

第3卷 2號, 1994

發行處 民族統一硏究院
編輯人 民族統一硏究院 編輯委員會
서울 중구 장충동 2가 산 5-19
전화 : 232-4725, FAX : 232-5341

印刷處 韓國컴퓨터産業(株) TEL 273-8111
印刷日 1994년 12월 20일
發行日 1994년 12월 25일